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이윤진·유해미·조혜주



연구보고 2019-13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연구책임자 **이 윤 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 혜 주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9-13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백선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정인에드 02) 3486-679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11-1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은 사회정책의 집합체라 할 정도로 모든 사회 현상을 담고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40년은 인구 및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현상이 반영된 육아정책 또한 인구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사회의 변화는 당연히 사회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사회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인 육아정책의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2040년을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다양한 국내외 보고서가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하여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을 초래한 중요 요소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육아정책의 또 다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노동인력의 충원과 근로 형태의 다양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 또한 육아정책에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2040년의 미래는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동시장의 기능과 역할, 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보편화 등의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 육아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육아 정책에 중심을 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육아정책의 미래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부재함에 따라 연구 진행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그려보고 육아정책이라는 핵심적 요소를 담게 됨에 따라 차후 미래 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큰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문가조사 뿐 아니라 2040년도에 육아의 주체가 될 미래세대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욕구를 탐색하였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육아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들이 진행되길 바란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

2019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요약	1
I.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2. 연구의 내용	19
3. 연구의 방법	20
II. 2040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육아지원정책에의 과제	41
1. 2040 미래사회와 육아지원정책 관련 과제	43
2. 2040 인구사회환경 변화 예측	46
3.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주요 영향요인	83
III. 육아지원정책의 현황 및 주요 계획	93
1. 육아지원정책 현황 및 진단	95
2. 육아지원 관련 주요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핵심 과제	110
IV.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방향 탐색: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125
1.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영향 요인	127
2. 시기별 육아지원 정책환경의 개선 정도와 목표 수준	142
3. 2040 육아지원정책의 예상 및 바람직한 방향	147
4. 소결: 육아지원정책 영향 요인의 영향력 변화 예측	155
V. 정책수요자 욕구 분석: 설문조사 및 숙의토론	159
1. 정책수요자 설문조사	161
2. 2040 육아지원정책 숙의 토론: 정책 연구에서의 공론화 필요성	201
3. 2040 육아지원정책의 시나리오 구성과 평가	227

VI. 결론	235
1. 결론	237
2.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과제	240
참고문헌	250
영문초록	255
부록	257



표 목차

〈표 1-3- 1〉 미래예측이 적용되는 영역과 특징	21
〈표 1-3- 2〉 미래예측을 위한 정보의 분류	22
〈표 1-3- 3〉 미래 시나리오 플롯	24
〈표 1-3- 4〉 델파이 기법과 AHP 분석의 비교	28
〈표 1-3- 5〉 정책속의제와 유사 방법론 비교	29
〈표 1-3- 6〉 정책속의제 주요 특징	29
〈표 1-3- 7〉 TIDA 단계	31
〈표 1-3- 8〉 본 연구의 연구진행절차	32
〈표 1-3- 9〉 STEEPER와 STEEP 비교	33
〈표 1-3-10〉 설문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35
〈표 1-3-11〉 전문가 특성	36
〈표 II-1- 1〉 각 연구에서 도출한 육아정책 관련 미래 과제	45
〈표 II-2- 1〉 출산율(중위) 및 출생아수	47
〈표 II-2- 2〉 출생아수	48
〈표 II-2- 3〉 인구성장률	50
〈표 II-2- 4〉 총인구	51
〈표 II-2- 5〉 인구구성비	53
〈표 II-2- 6〉 가족형태 변화	55
〈표 II-2- 7〉 가족형태 변화	57
〈표 II-2- 8〉 대통령 선거 선거투〈표율	58
〈표 II-2- 9〉 연도별/연령별 선거율	59
〈표 II-2-10〉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60
〈표 II-2-1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62
〈표 II-2-12〉 출산, 육아휴직 현황	64
〈표 II-2-13〉 직업 대분류별 취업자 전망	66
〈표 II-2-14〉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67
〈표 II-2-15〉 미혼남성 결혼의향	71
〈표 II-2-16〉 미혼여성 결혼의향	72
〈표 II-2-17〉 남녀불평등지수	73
〈표 II-2-18〉 성격차지수	74

〈표 II-2-19〉 양성평등지수	75
〈표 II-2-20〉 에너지원 변화 및 추이	77
〈표 II-2-21〉 발전량 비중 전망	78
〈표 II-2-22〉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전망	79
〈표 II-2-23〉 2040년 인구사회변화와 육아지원정책 환경 예측	83
〈표 II-3- 1〉 육아지원정책 핵심 요인으로 예상되는 지점	89
〈표 II-3- 2〉 육아지원정책의 범주	90
〈표 III-1- 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2019) ..	98
〈표 III-1- 2〉 교육비 세액공제내용(2019)	98
〈표 III-1- 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2019)	99
〈표 III-1- 4〉 만 0~5세 보육료 지원단가(2019)	100
〈표 III-1- 5〉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104
〈표 III-1- 6〉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안)	119
〈표 IV-1- 1〉 저출산 현상	128
〈표 IV-1- 2〉 결혼 및 가족구조 변화	129
〈표 IV-1- 3〉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주된 요인 및 그 사유: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 감소	130
〈표 IV-1- 4〉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결혼 및 가족구조의 변화	131
〈표 IV-1- 5〉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현실화	132
〈표 IV-1- 6〉 경제적 여건 및 사회보장 수준의 변화	132
〈표 IV-1- 7〉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	134
〈표 IV-1- 8〉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제 여건과 사회보장 수준	134
〈표 IV-1- 9〉 환경변화	135
〈표 IV-1-10〉 과학기술	135
〈표 IV-1-11〉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의 변화	136
〈표 IV-1-12〉 정치적 관심	137
〈표 IV-1-13〉 대내외 환경 변화	137
〈표 IV-1-14〉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 ..	138
〈표 IV-1-15〉 성평등 목표 달성 가능성	139
〈표 IV-1-16〉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 목표 달성	139
〈표 IV-2- 1〉 저출산 현상 지속 예상 시점	142
〈표 IV-3- 1〉 2040년 예상되는 아동돌봄서비스	145
〈표 IV-3- 2〉 2040년 아동돌봄서비스의 바람직한 모습	146

〈표 IV-3- 3〉 2040년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149
〈표 IV-3- 4〉 2040년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150
〈표 IV-3- 5〉 2040년 예상되는 육아휴직제도	152
〈표 IV-3- 6〉 2040년 바람직한 육아휴직제도	154
〈표 IV-3- 7〉 2040년 바람직한 기타 육아지원제도	155
〈표 IV-3- 8〉 전문가 조사 결과 요약	157
〈표 V-1- 1〉 조사대상 인구학적 특성	161
〈표 V-1- 2〉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163
〈표 V-1- 3〉 미래 삶에 대한 예상 만족도	164
〈표 V-1- 4〉 현재의 영역별 삶의 질	167
〈표 V-1- 5〉 20-30년 후로 예상하는 각 영역의 삶의 질 전망	169
〈표 V-1- 6〉 2040 미래 예상	174
〈표 V-1- 7〉 2040 사회/경제적 측면 미래예상	177
〈표 V-1- 8〉 미혼 남녀 동거에 대한 생각/공동체 의미의 가족 형성에 대한 생각/ 국제결혼 고려 경험 유무	182
〈표 V-1- 9〉 자녀 출산의향	183
〈표 V-1-10〉 결혼과 무관한 자녀 출산 의향	184
〈표 V-1-11〉 입양등을 통한 자녀 양육 의향	184
〈표 V-1-12〉 출산 의향(무자녀 기혼자)	185
〈표 V-1-13〉 자녀를 낳거나 더 낳을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기혼자)	186
〈표 V-1-14〉 본인의 삶에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영향	188
〈표 V-1-15〉 안심출산이 가능한 사회 구현에 필요한 조건	190
〈표 V-1-16〉 2040 미래육아정책 정책숙의제 일정	203
〈표 V-1-17〉 정책숙의제 참여자 인구학적 배경	223
〈표 V-3- 1〉 시나리오별 특징 및 변화방향	232
〈표 VI-2- 1〉 2019년 현재와 2040년의 정책 방향의 비교	243



그림 목차

[그림 Ⅰ-2- 1] 연구 절차 및 연구 내용	20
[그림 Ⅰ-3- 1] 다양한 시나리오 방법론들	25
[그림 Ⅰ-3- 2] 시나리오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26
[그림 Ⅰ-3- 3] 시나리오 단계	27
[그림 Ⅱ-2- 1] 출산율(중위기준)	48
[그림 Ⅱ-2- 2] 출생아수(중위기준)	49
[그림 Ⅱ-2- 3] 인구성장률	51
[그림 Ⅱ-2- 4] 총인구	52
[그림 Ⅱ-2- 5] 인구구성비	53
[그림 Ⅱ-2- 6] 아동/노인 인구 구성비	54
[그림 Ⅱ-2- 7] 가족형태 변화	56
[그림 Ⅱ-2- 8] 가족형태 변화	57
[그림 Ⅱ-2- 9] 선거투표율	58
[그림 Ⅱ-2-10] 경제활동인구(전체/연령별)	61
[그림 Ⅱ-2-1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62
[그림 Ⅱ-2-12]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64
[그림 Ⅱ-2-13]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	66
[그림 Ⅱ-2-14] 성인 시간활용 변화	68
[그림 Ⅱ-2-15] 청년층/고령자 시간활용 변화	69
[그림 Ⅱ-2-16] 미혼남성 결혼의향	71
[그림 Ⅱ-2-17] 미혼여성 결혼 의향	72
[그림 Ⅱ-2-18] 국가별 남녀불평등지수	73
[그림 Ⅱ-2-19] 양성평등지수	76
[그림 Ⅱ-2-20] 미세먼지 현황	78
[그림 Ⅱ-2-21] 미래 과학기술 주요 키워드	80
[그림 Ⅱ-2-22] 초등학교 예상 학생수	81
[그림 Ⅱ-2-23] 공립초등학교 예상 교사 당 학생 수	81
[그림 Ⅱ-2-24] 필요어린이집 전망	82

[그림 II-2-25] 필요유치원 전망	82
[그림 III-1- 1]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2003~2018)	109
[그림 III-1-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수 증가 추이(2011~2018) ..	110
[그림 III-2- 1]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안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112
[그림 III-2- 2]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개요	113
[그림 III-2- 3]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향후 방향	114
[그림 III-2- 4]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중점사항	115
[그림 III-2- 5] 제3차(2018~2022)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과제 ..	116
[그림 III-2- 6]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의 추진 방향 및 과제	117
[그림 III-2- 7]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	118
[그림 IV-1- 1] 결혼 및 가족구조 변화	129
[그림 IV-1- 2]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의견	133
[그림 IV-1- 3] 환경 및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의견	136
[그림 IV-1- 4] 정치 및 지역구조 변화	138
[그림 IV-1- 5] 2019/20140 년에 미칠 영향	140
[그림 IV-1- 6] 2040년에 일어날 가능성/2040년의 육아지원정책에 가장 큰 영향 미치는 요인	141
[그림 IV-2- 1] 2019년 시점에서 평가한 시점별 삶의 모습/육아환경 평가 ..	143
[그림 IV-3- 1] 2040년 시점에서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 달성수준	144
[그림 IV-3- 2] 2040년 육아 관련 현금지원의 바람직한 형태 평가	148
[그림 IV-3- 3] 2040년 육아휴직의 바람직한 형태	151
[그림 V-1- 1]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좌:기+미혼, 우: 미혼)	165
[그림 V-1- 2] 혼인 상태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165
[그림 V-1- 3] 혼인 상태별 미래 삶에 대한 만족도	166
[그림 V-1- 4] 개인적 차원	171
[그림 V-1- 5] 국내적 차원	172
[그림 V-1- 6] 국제적 차원	172
[그림 V-1- 7] 결혼여부 이유	182
[그림 V-1- 8] 자녀 출산을 위한 필요 조건(기타 응답)	187
[그림 V-1- 9] 현재와 비교한 2040년 예상되는 중요도 전망	193

[그림 V-1-10] 2040년 영유아부모의 육아형태 전망	195
[그림 V-1-11] 영유아 부모 대상 2040년 육아형태 전망	195
[그림 V-1-12] 2040년 육아지원정책 방향성	196
[그림 V-1-13] 2040년 일가정 양립분야 정책의 방향성	197
[그림 V-1-14] 2저출산 정책과 육아지원정책	198
[그림 V-2- 1] 현장 스케치 모습	204
[그림 V-2- 2] 2040 육아형태 전망	225
[그림 V-2- 3] 정책 필요도	226
[그림 VI-2- 1] 2040 육아지원정책 영향요인 및 방향성	241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미래 정책 연구는 불확실함에 대하여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정책의 개괄적 방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세부적 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특징을 가짐
- 따라서 방법론의 옳고 그름에 따라 연구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고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것에 특징이 있음
- 그 중에서도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미래 연구는 현재까지 다각도로 진행된 바 없으며 경제사회현상의 모든 부분의 영향을 받는 육아지원정책의 특성상 큰 그림을 그리고 이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가짐
- 본 연구는 2040년의 육아지원정책의 모습을 큰 틀에서 그려봄으로서 향후 세부적 정책 과제를 제시함에 있어 참고자료를 생성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 본연구의 절차와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연구 절차	연구 내용
미래 연구 문헌고찰	문헌연구를 통하여 미래 사회의 주요 키워드 도출
2040 인구사회 변화 모습 파악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미래 사회의 변화 모습 탐색
육아지원정책 범주 확립 및 2040 육아지원정책 영향요인과 방향성 추출	전문가의견조사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1) 2040 육아지원정책 영향요인, 2) 2040 육아지원정책 목표 및 과제 도출
정책수요자 육구 조사 및 정책속의제를 통한 과제 도출	청년층 및 현 육아정책 수요자 설문조사 및 정책속의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정책의 우선 과제 도출

3)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여러 가지 미래연구 방법 중 1) 전문가 조사와 2) 일반인 설문조사, 3) 정책숙의제 등을 통해 2040년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TAIDA 기법을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도출함

4) 연구의 의미와 한계

- 본 연구는 여러 주제의 미래 연구 중 육아지원정책의 2040년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본다는 점에서 유의미함
- 특히 기초연구로서 육아지원정책의 2040년 모습을 살펴보고 향후 기초적 자료를 생산해 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단 2040년도를 예상하는 육아지원정책 분야의 연구가 부재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를 예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임

2. 2040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육아지원정책의 과제

1) 2040 미래사회와 육아지원정책 관련 과제

- 현재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 접근에서는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가 첫 번째 이슈로 등장함.
- 육아 미래 환경과 관련된 유관 연구들에서는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가족구조 다각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있음.

2) 2040 인구사회환경 변화 예측

- 인구 및 가족은 출산율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인 인구수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가족형태의 모습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
- 정치 측면에서는 20-30대의 정치 참여율은 저조하거나 강화될 수 있는 가변성이 큰 요인임.
- 노동 및 경제에서는 저성장을 유지하게 되며, 근로시간은 축소될 것으로 보임. 일자리는 다양화되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에너지 및 환경은 원자력이나 석탄 에너지 개발은 감소하게 되며, 다양한 대체

에너지원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환경은 미세먼지 증가로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다양한 과학기술 진보로 직업군이 다양화되며, 육아 등의 돌봄사업에 AI 기술의 접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결혼에 대한 인식수준은 더 낮아지며, 양성평등 인식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임.

3) 육아지원정책의 주요 영향요인

-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는 육아지원 정책 주요동인은 다음과 같음.
 - 저출산 지속으로 아동 중심 복지서비스 실현과 돌봄 서비스 체계 수립 마련이 필요함.
 - 향후 영유아 양육가구 지원에 대한 중장기 대응과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변화의 영향력에 유의해야 함.
 - 가족 및 여성정책은 육아지원정책과 접점이 크므로 함께 검토해야 함.
 - 노동시장 변화는 필연적으로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며, 교육의 변화도 미래사회의 주요의제이므로 주요 동인으로 볼 수 있음.
 - 과학기술과 육아의 연결고리를 통해 발전적인 육아 환경 마련의 토대를 고려해야 함.

STEEP 및 STEEPER에 의한 구분	본 연구의 동인 구분	2040년 예상되는 육아지원정책 환경의 모습
사회(society)	인구 및 가족	- 저출산 현상 심화되다가 출산율은 2030년 이후 다소 반등 - 전체적인 인구수는 감소 예상 - 다양한 가족형태의 모습 확산: 1인가구 증가, 한부모 가족의 증가 예상
	가치관 및 생활방식	- 결혼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 - 청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여가 활용 시간이 적음 - 양성평등 인식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
	보육 및 교육	- 영유아 기관 재원생 수 및 초등학교 학생 수 급감
정치(politic)	정치	- 20대, 30대 정치 참여 저조 현상 강화 혹은 약화(정확한 예측 불가능)
경제(economy)	노동 및 경제	- 일자리 다양화 - 여성 경제활동 참가 증가 예상

STEEP 및 STEEPER에 의한 구분	본 연구의 동인 구분	2040년 예상되는 육아지원정책 환경의 모습
		- 저성장 유지 - 근로시간 축소
환경과 자원(ecology)	에너지 및 환경	- 원자력 증대, 석탄 에너지 개발 감소 - 미세먼지 증가로 감소 대책 강화
기술(technology)	과학기술	- 다양한 기술의 진보로 직업군이 다양해짐 - 육아 방식에 있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의 육아지원정책 범주

- 본 연구는 육아지원정책의 범주를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시간지원, 기타로 구분하고 영유아를 대상으로 각 범주에 속하는 주요 내용만을 선별하여 살펴보고자 함.

3. 육아지원정책의 현황 및 주요 계획

1) 육아지원정책의 현황 및 진단

□ 현금지원

-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2009년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며,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 및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양육비가 지원됨.

□ 세제지원

- 2009년부터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 개편을 거쳐, 2011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부터는 이들 추가공제가 기본공제와 통합되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개편되어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는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는 연 70만원임.

□ 서비스 지원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
-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

-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함.
- 돌봄시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 근로자가 출산 시에 90일 동안 사업주로부터 제공 받는 휴가임.
 -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에 지급됨.
 -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연간 최장 90일을 휴직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의 급여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음.
- 성과 진단
 -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수당 지원 강화는 주된 성과로 파악되며, 아동수당제도는 향후 지원대상 아동연령의 확대, 자녀수와 소득기준의 적용 등 효과성 제고를 제도 발전 노력과 더불어 가정양육수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편이 요구됨.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위한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신축 지원단가 2배 이상 인상과 설치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격차 완화는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함.
 - 2018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율은 46.7% 증가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경우는 민간부문에서 3,820명으로 작년 대비 35.4%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남성은 14.4%(550명) 차지하여 작년 대비 71.3% 상승하였으나, 대기업 위주 제도 이용이 지속되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함.

2) 육아지원 관련 주요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핵심 과제

□ 주요 계획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포용국가 아동정책,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비전, 목표 및 전략을 살펴봄.

□ 세부 정책과제

-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의료비 제로화, 출산후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다자녀 지원, 교육비 경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과 가족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 가정내 돌봄지원 및 보육서비스 질 제고가 강조됨.

4.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방향 탐색: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1) 육아지원정책의 변화의 영향 요인

-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을 1)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미치는 영향력, 2) 2040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3)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5점 척도로 평가함.

-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및 지역사회 변화, 경제적 여건 및 사회안전망 수준의 변화, 에너지 및 대기환경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정치적 대내외환경의 변화, 성평등 여건 및 인식의 변화의 영향을 각각 살펴봄.

2) 시기별 육아지원 정책환경의 개선 정도와 목표 수준

- 2040년에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에 대해 예상해 보도록 질문한 결과, 평균 1.1명으로 현재 시점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2025과 2035년에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항목의 개선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함.

- 2045년에는 양성평등 정책 환경의 개선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여성고용,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관련 육아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3) 2040 육아지원정책의 예상 및 바람직한 방향

- 2040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성되면 바람직할지에 대해 0-20점 사이로 평가한 결과는 양성평등, 보육서비스 질, 여성고용,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가 20점 만점에 17점대가 바람직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됨.
- 돌봄서비스
 - 2040년에 예상되는 아동 대상의 돌봄서비스의 양상으로는 대상규모의 축소로 재정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가 이루어지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 격차와 기관 수의 감소에 따른 지리적 접근성 저하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며, 보육과 유아교육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가족의 다양화 등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40년에 바람직한 아동돌봄서비스로는 영유아 전반을 종합적인 틀에서 설계하되, 아동연령별로 차별화된 욕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자녀돌봄이 가능한 노동환경의 조성이 선행되며,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하여 양육방식을 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현금지원
 - 2040년 바람직한 현금지원 방식으로는 통합급여체제로의 전환, 바우처 방식으로의 전환, 지원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됨.
 -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의 통합급여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높고, 이 과정에서 서비스 지원과의 정합성 제고 노력이 강조됨.
- 자녀 돌봄시간 지원
 - 2040년에 육아휴직에 대한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분할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형태가 5점 만점에 4.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은 '부모가 의무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에 대한 평가가 높음.
 - 2040년에 예상되는 육아휴직제도의 양상으로는 지원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어 보편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즉 현재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부모의 권리로써 제도 이용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 2040년에 바람직한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남성의 이용율 제고 노력이 강조됨.

4) 소결: 육아지원정책 영향 요인의 영향력 변화 예측

-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영향 요인으로는 5척도 척도 기준으로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와 가족유형의 다변화가 공히 평균 4.3점으로 가장 주된 영향 요인으로 지목됨.
- 아동인구 감소, 가족유형의 다변화,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이 평균 4.0점 이상으로 2040년에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됨.
- 2040년 육아지원정책은 정책대상 인구의 감소,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 양극화와 실업 증대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해 일차적으로 주목하고, 성평등 여건과 노동시간 감소,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육구의 다양화, 로봇의 돌봄 기능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40 주요 부문별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으로는 다음이 고려될 수 있음.
 -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 노력이 강조되어 지리적 접근성과 계층별 격차 완화가 주된 과제로 제시되며, 가족유형과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다양화, 남북 통일에 대비한 통합 체계의 모색이 요구됨.
 - 현금지원은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제도의 통합체계 구축을 토대로 아동수당제도의 지원대상 연령 확대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체계의 모색이 제기됨.
 -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 조정과 더불어 남성의 제도 이용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제도를 영아기에 보다 집중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가정내 양육가구를 위한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의 확대 방안을 모색함.

5. 정책수요자 욕구 분석

5-1. 수요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2040년을 전망하고 육아지원정책의 모습과 욕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함

1) 2040년 미래 사회의 모습 예측

□ 2040년에 대한 미래 예측은 다음과 같음

○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기혼과 미혼, 자녀 유무에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낙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본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개인적 차원에서는 경제적인 능력,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국제적인 요인으로는 환경 및 기후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조사됨

2) 2040년 한국 사회에 대한 전망

□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전망과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전망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결혼율 감소, 여성 경제활동참가 증가, 일가정양립에 대한 욕구 증가, 소득양극화 심화, AI 및 로봇의 발달 등을 예상함

3) 2040년 육아지원정책 욕구 분석

□ 2040년 한국사회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2040년 육아형태와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등을 조사하였음

□ 현재와 비교하여 2040년에는 성평등한 문화 확산으로 남성의 육아휴직의 중요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또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 외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의 욕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과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등의 중요도 또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2040년의 육아형태는 아버지 양육의 증가, 육아지원기관 이용률이 보다 상승, 남녀 가사노동의 분담 중요도 상승, 육아 관련 비용 상승 등의 모습으로 예상됨
- 2040년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육아정책의 방향성을 육아지원분야, 일가정양립, 저출산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함
 - 육아지원정책분야 전반적으로는 영유아 공교육과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컸고, 일가정양립분야에서는 유연한 근무시간제 확대, 저출산 분야에서는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혼란을 예상하며 육아지원정책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예상함
-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2040년 육아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음
 - 가정내 양육을 위한 전반적 지원 확대, 국공립 보육교육기관 확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한부모 가정 지원 확대, 나홀로 아동 지원 확대, 일가정양립 제도적 지원 정착 등임

5-2. 2040 육아지원정책 속의 토론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조사와 일반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40년 육아지원 정책에 대하여 설정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정책숙의제를 통해 일반인들의 정책요구를 재차 수렴하였음
- 그 결과 일반인 설문조사와는 다소 그 중요도에 차이를 발견하였음
 - 우선, 아버지 육아참여에 대한 전망이 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비혈연 아이 돌보미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크게 나타남
 - 2040년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의 우선순위는 저소득아동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부모교육의 강화, 현금지원 확대 등이 중요하게 나타남
- 여러 연구 방법을 통해 확정된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시나리오는 저출산의 지속과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아이 낳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닌 것으로 다수가 판단함
 - 따라서 여전히 육아지원정책의 중요성은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 아동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6. 결론

- 2040년 인구 변화는 인구의 감소, 아동수의 감소, 가족 형태의 다양화 등이 주로 예상되었고, 2040년의 주요 사회적 변화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이 예상됨
- 2040년 육아지원정책 방향성
 - 이 중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는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2) 아동수 감소, 3) 가족형태 다양화 등으로 의견이 수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

인구 사회 변화를 고려한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의 중요 영향요인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문화 분위기 확산
저출산과 아동수 급감		아동에 대한 투자 증대
노동시장 다변화		유연한 일자리에 대응하는 보육서비스
소득양극화		육아를 위한 현금지원 확대
성평등한 문화 확산		아버지 육아휴직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 증가		보육 기관의 다각화

- 2040년 육아지원정책은 체계 내 정합성을 재고하면서 시간지원, 서비스지원, 현금지원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임
- 육아휴직의 강화는 육아휴직기간의 축소와 임금대체율 확대 또는 육아휴직기간의 유연한 사용 등으로 발현 가능
- 보육기관의 다각화는 근로시간 축소, 재택근무 강화 등 노동시장 일자리의 다양화로 다양한 보육 시간 수요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아동수당의 보편화는 가장 최단기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보이며 2040년에는 모든 아동 관련 수당이 아동수당으로 통합될 여지도 예상됨. 현 제도의 선택적 집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다음으로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학 기술의 발달을 통해 돌봄서비스 관련 기술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를 접목시켜 아이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자동안전장치 등을 통해 학교 앞 보호 구역에서는 속도가 자동으로 줄어드는 자동차 기술 등임
- 돌봄 로봇은 아동 돌봄의 경우 휴머니즘이 동반되는 노동으로 온전히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가사, 분유타기, 정리 등의 일정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육아지원 산업의 발전과 연관될 것임
- 지역사회의 역할 또한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의 확대도 현재보다 더욱 공유할 수 있는 육아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
 - 다양한 범위의 육아공동체와 지역사회 역할 강화 논의가 심화되어야 할 것임

I

서론

- 0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02 연구의 내용
- 03 연구의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래라고 함은 불확실성(uncertainty) 을 특징으로 한다. 그 만큼 복합적인 상황과 돌발적인 변수가 다양하게 포진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준비’ 하기 위함이다. 특히 국가 정책은 단기의 근시안적인 시각만 가지고 접근할 경우 장기적인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그 영향력의 규모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지향 정책과 미래비전 제시는 국가의 향후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책적인 견지에서 미래 방향 제시는 해당 연구와 정책간의 연계성과 관련하여 효용성, 실효성의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면서도 통섭적인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육아지원정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육아지원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과 문제 개선이 국가 정책의 중심 축에 자리 잡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인 측면을 가진다. 육아지원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필연적인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향후 정책 설계를 함에 있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욱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우선 육아지원정책은 광의의 가족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 노동시장정책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래 과학기술의 변화가 육아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원 정책의 내용이 변화할 것이라는 점, 나아가 통일을 맞이할 경우 이에 대한 육아지원 방식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등 무궁무진한 개방성을 통해 동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방향은 인구사회적인 변화를 큰 전제로 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는 민간 합동으로 ‘함께하는 희망한국 비전 2030’을 제

시한 바 있다. 참여 정부의 국가 미래전략을 제시한 본 보고서는 대내적 환경 변화에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고 이러한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 저해,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언급하였다(정부민간합동작업단, 2006). 이렇듯 인구구조의 변화는 성장동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더불어 세계화와 정보화의 급진전은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된다.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역시 이와 분리될 수 없다. 다층적인 인구 사회 변화는 국민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복지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기에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역시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변화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일례로 국민의 삶의 방식 변화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대대적인 육아지원정책의 전환에 이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지원 형태의 변화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고, 사회에서의 불평등 확산은 구체적으로 교육 기회 불균형을 초래하여 선별적으로 지원되던 무상 보육과 교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다면 미래의 육아지원정책은 어떠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현 시점에서 다시금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어 온 아동에 대한 지원은 결국 육아지원정책의 한 분야라는 것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육아지원정책은 대상적 측면에서 아동 뿐 아니라 여성, 근로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부류를 면밀히 살펴 시행되어야 할 것이기에 육아지원정책의 미래의 모습과 방향성을 정책수요자 및 정책대상별로 고찰할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

기존에 여러 미래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고 미래에 대한 탐색이 정책적 방향 제시로 연결된 바 있으나 ‘육아지원정책’이라는 거대 담론을 둘러싼 연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관련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미래에 대한 탐색이 우선적일 수 있으나 무엇보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육아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현 주소,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점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목적을 가진다. 첫째,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의 범주를 설정한 후 이러한 사회 변화의 모습을 예측하고, 2040년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영향요인을 추출한다. 둘째, 이러한 변화들이 육아지

원정책에 구체적으로 미친 영향을 통해 2040년의 육아지원정책의 모습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셋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육아지원정책을 둘러싼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함과 동시에 현재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정책적 목표와 예상 과제를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사회의 주요 인구사회 환경 모습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에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도출한다.

둘째, 육아지원정책의 범주를 확립한다. 육아지원정책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육아지원정책의 범위와 수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구사회변화 예측을 통해 2040 미래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한다. 특히 인구의 구조 변화는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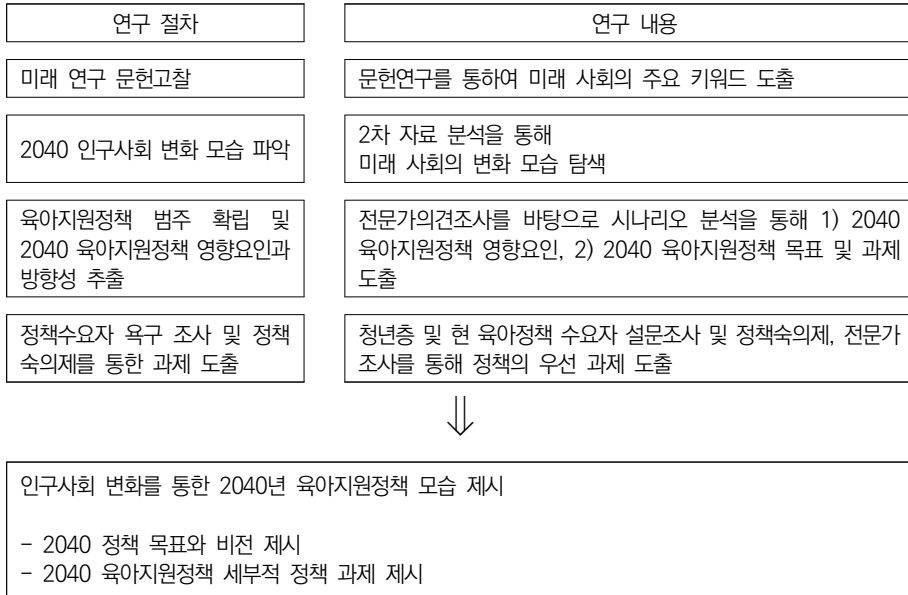
넷째, 미래 환경 변화를 통해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다.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차원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어떠한 요인들이 동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탐색함으로써 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섯째, 미래 2040세대 육아를 직접 행하게 되는 현재의 청년층 및 현 수요자를 대상으로 미래 육아지원에의 욕구를 조사 및 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파악하여 구체적인 정책 과제 제시에 반영한다.

여섯째,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미래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과 비전 설정 및 세부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현 수요자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미래의 육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후 이를 정책 과제 제시에 반영한다.

본 연구의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2-1] 연구 절차 및 연구 내용



3. 연구의 방법

가. 미래연구 방법론

미래연구는 미래에 대한 추상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비과학적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세계 각국의 경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미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함께하는 비전 2030’을 제시한 이후 각 행정부처별로 단기, 중장기의 국정과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미래 비전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정책기획위원회의 ‘미래비전 2045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전략 2045’ 등은 2040년 이후의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과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연구의 예로 분류할 수 있겠다.

〈표 I-3-1〉 미래예측이 적용되는 영역과 특징

영역	미래연구 내용	분석 방법	초점 기준
과학, 기술교육, 비즈니스 및 산업	국가적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한 미래 사회 예상	양적, 질적 정보의 결합이 쉬움	기술의 발달, 시장 형성 및 기회, 사회적 필요
거버넌스, 사회	활동 영역에 집중	질적 접근으로 대부분 해결	인구, 이동성, 소속감, 시민의식, 교육, 훈련, 건강, 인간 발달 등
예술, 종교	아직까지 생소한 주제, 국가와 지방정부, 기업 등에 의해 이루어짐	질적 접근으로 해결	-
국방, 재난	응급대응적 측면에서 이루어짐		중앙정부의 정보 양으로 선택 폭 확장, 국제적 이슈와 경향성간의 상호작용

자료: 김영형 외(2013)가 Ian Miles 외, 2002:15 내용을 재인용한 부분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이렇듯 미래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미래연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우선 필요하다. 대표적인 미래연구의 방법론으로는 델파이 방법, 시나리오 방법, 시뮬레이션 기법 등이 있다. 우선, 델파이 방법은 일정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판단을 설문 또는 인터뷰 형태를 통해 모으는 것으로 미래 예측 방법에 대하여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즉, 여러 전문가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하고 교환함으로써 이를 발전시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김유빈 외, 2019). 이는 일반인에 비하여 전문가들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기법은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을 모델링한 후에 해당 모델에 여러 가지의 변수들을 투입하여 미래의 상황과 변화를 예측해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기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미래 연구 방법론인데 모든 방법들이 미래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전체 할 때 미래연구 방법의 주요 지향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서용석 외(2011)의 연구에서는 미래의 가족환경변화를 살피기 위해 ‘환경스캐닝(environmental scann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환경스캐닝이란 일반적인 환경을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과 자원(ecology), 정치(politic)의 STEEP 범주로 나누어서 해당 영역에 대한 관찰 이후 변화 및 전략,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환경스캐닝

의 목적은 현재의 환경 변화 및 트렌드, 그리고 미래의 트렌드를 함께 찾아내기 위함이다. 한편, 미래의 트렌드는 ‘이머징이슈’ 라고 정의되는 데 트렌드가 어떤 이슈가 일정 기간 지속되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사회의 큰 흐름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일컫는 데 반하여 이머징이슈는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 현재에도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혹여라도 트렌드가 된다면 매우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고서, 통계, 전문가 인터뷰, 토론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구분하고 전체를 모형화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인과지도를 활용한다. 인과지도는 시스템의 각 변수 간의 피드백 구조를 시각화하여 상호 연결 및 전체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체계적으로 그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각 동인들 간 관계성을 살피고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다. 연결고리 파악 후에는 미래 사회에의 정책적 시사점과 정책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환경스캐닝은 미래의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현재 환경부터 분석하여 추정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분석의 기본 개념과도 유사하며 여러 상황의 시나리오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표 I-3-2〉 미래예측을 위한 정보의 분류

트렌드(Trend)	이머징이슈(Emerging Issue)
어떠한 이슈가 사회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정착하여 현상 자체가 명확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집적되어 있음. 누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면 즉각적으로 동의할 수 있음	이슈의 존재가 아주 희미하여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음. 이슈가 희미하기 때문에 정보와 데이터 자체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매우 많고 어리석거나 터무니 없는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음

자료: 서용석 외(2011) '미래환경스캐닝을 통해서 본 가족환경 변화' 중 18 페이지 수정 인용함

본 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미래연구 방법론 중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활용하되 환경스캐닝에서 사용한 요소를 일부 차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시나리오 분석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나. 시나리오분석

미래연구 방법론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은 시나리오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시나리오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과 연관된 사건들, 그리

고 그에 맞는 상세한 계획과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김형영 외, 2013). 과거를 통한 미래 전략 계획은 일정부분 한계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하지만 시나리오 분석 방법은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현재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 새롭게 미래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인정되어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21).

한편, 사회 현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기에 주로 산업계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를 주축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또한 이러한 미래를 예측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그 이후 장래에 가능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의 예상(possible) 과 더불어 미래의 상황에서 일어날법한 관련성이 있는 것(relevant)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현상파악 이후에는 이러한 시나리오의 목적을 세울 것이 요구된다(장종인, 2006).

시나리오 방법의 절차는 ‘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가’, 즉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 이후 사건을 야기하는 영향요인 내지 동인에 대해 탐색할 것이 필요하다. 트렌드와 원인분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 시나리오 작성이 이루어진다. 이 시나리오에는 사회의 변화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하고, 그 시나리오에 결과물이 함께 담겨야 한다(장종인, 2006). 또한 미래 전략으로서의 시나리오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동인들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하게 미래 모습을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현 외, 2013). 이에 동인탐색과 트렌드 분석에 이어 이러한 동인들의 조합과 배치를 통해 미래에의 영향력 순위를 탐색하는 것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나리오 기법은 궁극적으로 미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몇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과거에의 영향요인이 미래를 구성하는 데 있어 어떻게 조합이 될 것인지를 묘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최항섭, 2006: 32). 즉, 가장 고려할만한 각본에 근거하여 몇 가지의 대안을 마련한다. 몇가지 대안을 도출할 때에는 가장 낙관적인 미래와 가장 비관적으로 예상되는 미래, 그리고 현상을 유지하거나 중간정도 지점으로 분류되는 미래의 네 가지를 적절히 골라서 섞어야 하는데 각 플롯은 서로 동일한 동인에 기초한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최항섭, 2006: 32). 이때, 시나리오의 플롯은 대략 6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이러한 6가지 플롯 중에 도출되는 시나리오는 2-4개가 가장 적당하며 발생할 가능성, 내

재적 일관성이 필요하다. 한편, 시나리오 방법은 귀납적 방법, 연역적 방법 중에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귀납적 방법은 미래의 개연성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시나리오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연역적 방법은 전체의 구조적 그림을 그린 후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의 불확실성을 가진 축을 설정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거친다(최항섭, 2006; 39). 연역적 방법의 경우 개연성을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적이고 통계적 데이터로 그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는 특징을 가진다.

〈표 I-3-3〉 미래 시나리오 플롯

구분	내용
승자와 패자 플롯	한쪽이 풍부해지면 다른 한 쪽은 고갈 ex) 어린이집 공공화로 민간 시장 흡수
도전과 반응 플롯	빠른 상황 변화 안에서 도전에 반응하면서 시스템이 진화 ex) 어린이집 감소로 기존 기관을 다른 돌봄 시설로 활용
진화 플롯	성장이나 하락 중 하나의 방향을 정해 느리게 변화하는 것 ex) 육아휴직 일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총 8년으로 확대
대변혁 플롯	예측하기 힘든 드라마틱한 변화 ex)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이 육아를 대체
순환플롯	반복적인 주기에 집중하는 플롯. 승자와 패자를 뒷받침하는 플롯으로 주로 사용함.
무한가능성플롯	현재의 세계가 무제한적으로 팽창하고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

이러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서 변수를 도출하는 과정은 핵심적이다. 이를 위해 델파이 조사를 활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2040년 육아지원 정책 변화 모습의 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통해 영향요인 변수와 그 변수의 흐름을 예측하고 정량화 하여 시나리오를 최종적으로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I-3-1] 다양한 시나리오 방법론들

기관	Kairos Future (스)	Battelle(미)	European Commission	국립예술과학원 (프)	The Futures Group(미)	GBN(미)	
시나리오 명칭	T.A.I.D.A.	B.A.S.I.C.S.	Shaping factor Shaping actors	MICMAC	명칭없음	The art of the long view	
주요 방법론	workshop brainstorming	Computering Probability program	Delphi Method	Computer Probability program	workshop brainstorming	workshop brainstorming and networking	
시나리오 도출 과정	준비작업 (Preparation)	이슈 정하기 (Identifying issues)		자료수집 (Building database)	문제인식 (Define focus)	이슈 정하기 (Identify total issue of decision)	⇒ 준비작업 (질문, 시간지경)
	↓	↓		↓	↓	↓	
	트렌드 파악 (Tracking the trends)	트렌드 분석 (Trend analysis)	트렌드 파악 (Shaping factors and actors → trends)	Variable trend 도출	원인분석 (Chart driving forces)	주요 동인 분석 (Key forces and Driving forces)	⇒ 주요 동인들을 찾아 이를 토대로 트렌드 분석
	↓	↓	↓	↓	↓	↓	
	Analysing	Cross-impact analysis	Identify actor-factor linkage	Scanning range of possibility and reducing uncertainties	Construct Scenario space	Rank by importance and uncertainty	⇒ 고차분석 등을 통한 동인들을 배치·조합
	↓	↓	↓	↓	↓	↓	
Scenario	Scenario	Scenario	Scenario	Scenario	Scenario	Scenario	⇒ 시나리오 도출 및 설명
↓				↓			
비전도출 Imaging					Scenario contingent forecasts		⇒ 이후 비전으로 연결
↓							
Deciding							
↓							
Ac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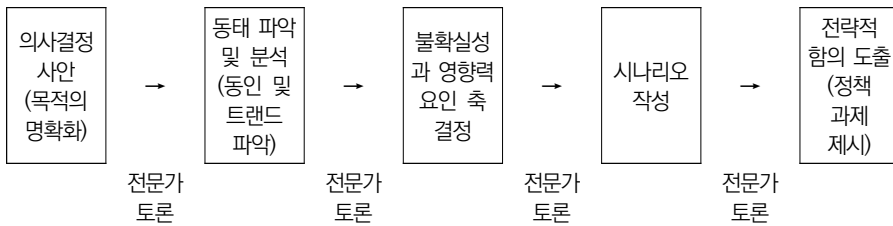
자료: 장종민(2006). 미래연구 방법론: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나리오 방법론, p.5

여러 가지 시나리오 분석방법 중 스웨덴 미래연구소(Kairos Future)에서 사용하는 TAIDA 기법은 미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여러 요소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시나리오를 구성한 이후 단순히 시나리오 구성에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시나리오의 비전을 설정하고 해당 비전에 맞는 정책적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덧붙여진다는 측면에서 다른 시나리오와 차별성을 가진다(최영준 외, 2016). 즉, 단순한 미래의 예측이 아닌 예측한 미래의 정책 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나아가 바람직한 방향과 전략을 도출하는 측면에서 여타의 시나리오 기법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은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스토리를 통해 현재의 사건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예측일 경우 다른 미래연구 방법들보다 정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미래기획위원회, 2009). 성공적인 시나리오라 함은 최대한도로 미래의 변화들을 묘사하여야 할 뿐 아니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여 세부 정책과 행동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설득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때문에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벌이거나 델파이 조사를 하여 의견을 모으는 것이 전제된다. 그 이후 사회의 주요 문제를 인식하고 이슈를 선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된다. 시나리오 분석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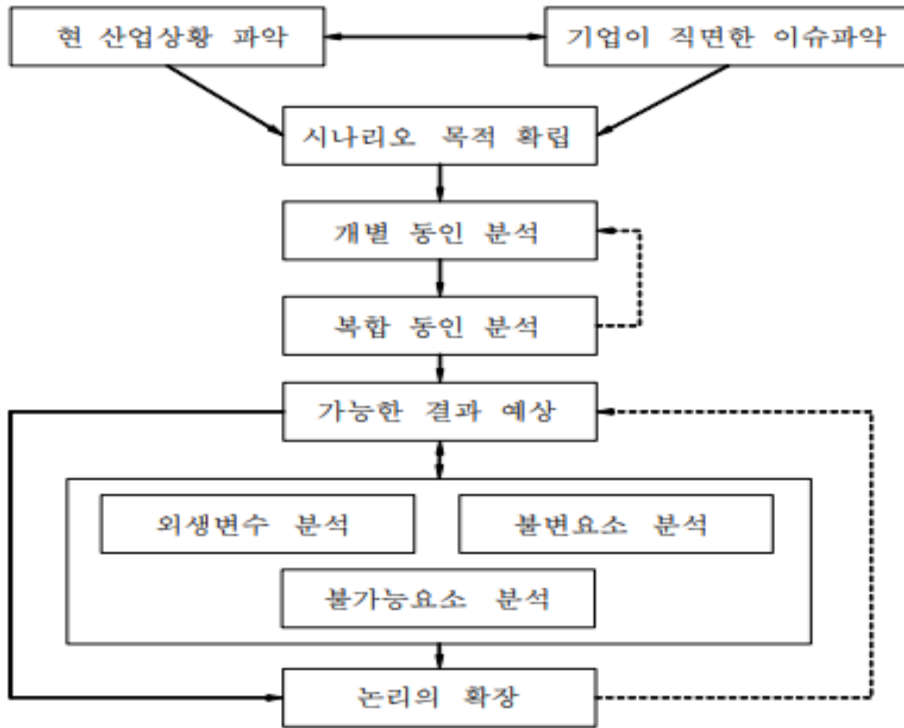
[그림 1-3-2] 시나리오 분석의 일반적인 절차



자료: 미래기획위원회, 2009:34, 연구자 재구성

종합하면, 미래연구 방법으로서의 좋은 시나리오란 도출된 시나리오가 얼마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느냐가 아닌 관련 조직의 학습, 적응 혹은 효율적 행동 등을 이끌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박형중 2009:121). 즉, 미래를 단순히 예측하는 것에서 나아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위험한 요소를 밝혀내고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시나리오인 것이다.

[그림 I-3-3] 시나리오 단계



자료: 장종인(2006). 미래연구 방법론: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나리오 방법론 3페이지 인용

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미래의 모습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변수들 중에 일정한 변수를 선별하여 시나리오 작성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데에서 비롯되는 데 델파이 방법을 통하여 발생가능성과 중요성을 척도로 하여 선별할 수도 있지만 변수들을 서로 1:1로 매칭시켜 중요성을 비교할 수도 있다. 즉, 기존 델파이와 달리 설문 문항을 매칭시켜가면서 매치된 두가지의 사안들에 대하여 상대적인 중요성을 물어보는 방법을 의미한다(최향섭 외, 2006:53). 특히 상호배타적인 변수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다. 델파이 방법과 AHP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I-3-4〉 델파이 기법과 AHP 분석의 비교

구분	델파이	AHP
목적	전문가 의견 수렴	좌동
시작	전문가 각각에게 자유로운 의견을 오픈형으로 응답하도록 함 예시) 미래 한국의 중요한 정책 사안은 무엇인가?	연구자가 사전스터디를 통해 AHP에 적합한 1:1 mach 설문지 작성 예시) 한국 미래에 있어 다음 정책들의 상대적 중요도는? 양극화정책-고령화정책 고령과정책-통일정책 통일정책-교육정책
과정	취합한 의견을 구조화된 설문으로 만들어 다시 전송 후에 응답하게 함 예시) 다음 10가지 한국 미래에 정책 사안 중 중요한 5개를 뽑아주세요. * 2-3차례 반복적으로 묻는 특성	객관식으로 설문지 개별 전송 후 응답
결과	예시) 한국 미래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3가지 변수 도출	예시) 한국 미래에 우선적으로 중요한 3가지 변수 도출

자료: 최항섭 외(2006) 디지털 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p. 54 표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인용함

AHP 기법은 일반 델파이가 중요한 것 하나, 혹은 제일 중요한 것 두 개를 선택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어느정도 모두 중요한 것 같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힘들 경우 응답자가 보다 진지하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르도록 하는 데 장점을 가진다(최항섭 외, 2006; 54).

라. 정책숙의제: (시민)참여형 정책진단모델¹⁾

정책형성과정(수립-시행-평가)에 시민과 이해관계 계층(stakeholder)의 생활세계(life-world) 관련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정책 시행의 효과성과 수용성이 제한되고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책시행 전후에 정책의 효과성을 시민과 이해관계 계층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기대가 존재하나, 적절한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미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등과 같은 공론화조사는 시행된 바가 있으나 예산과 기간 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집단심층면접조사(FGD)는 정책진단 모델로는 제한점이 있다. 이때 정책숙의제를 활용할 장점이 있는 것이다. 유사 방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당 내용은 한국리서치가 육아정책연구소 브라운백세미나(2019.5.7.)에서 발표한 자료집을 참고하여 서술함

〈표 I-3-5〉 정책숙의제와 유사 방법론 비교

구분	특징	제한점
공론화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 시민의 참여를 전제한 대표성 보증 모집자 선정 및 숙의기간 확보 등을 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 발주기관 부담 언론 등을 통한 공개성·투명성 보장 명쾌한 결론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비용 오랜 기간 정책결정과 판단의 자율성과 탄력성 제한 정책당국의 책임성 논란 정량 위주 결과 도출
집단심층 면접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집단 동질 집단 내 감성 파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성 제한 정책관련 숙의성 제한 정책대안 도출의 제한 정성 위주 결과 도출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의토의조사와 집단심층면접조사의 절충형 마케팅에서 신제품 컨셉 도출에 주로 활용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기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화된 모델이 없음 진행자의 역량 및 자의성 관련 이슈 정책진단에 적용하지 않음

자료: 한국리서치 자료(2019) p. 3 표 인용함

정책숙의제의 목적은 △적정한 예산과 조사 기간, △시민과 이해관계 집단의 니즈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 진단, △정책결정이나 선택이 아닌 대안을 도출할 실효성 있는 정책진단 모델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에 있다. 정책숙의제 모델은 기존 유사 방법론의 특징과 제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극복하고, 정책진단의 목적을 고려한 것으로 다음의 특징을 가진다.

〈표 I-3-6〉 정책숙의제 주요 특징

구분	내용
조사대상	일반시민과 정책 stakeholder
참여인원	30-50명(3-5개 원탁테이블, 필요에 따라 증감 가능)
프로그램	사전조사→정책설명→전체 질의응답→분임토의→전체 질의응답→사후조사(사전 사후 입장변화 이유와 대안 파악)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구성시 대표성을 고려함: 다양성 확보 참여자에게 사전 태스크를 부여함: 토의 활성화와 숙의성 강화 참여자의 아이디어를 활성화할 기제(메모장, 질문주차장, 필요시 일러스트레이터 등)를 활용함 모든 과정을 녹취하여 정성적 내용(입장 변화의 이유)을 파악함 전문가 정책설명과 자료집은 주장과 설득이 아닌 설명과 지원이 목적임 사회자와 모더레이터는 정책진단 목적 및 정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여야 함

자료: 한국리서치 자료(2019) p. 3 표 인용함

정책속의제 방법(시민참여형 정책진단 모델)은 정책형성 전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타당성(대표성과 속의성 실효적 보증), △현실성(적정 비용과 기간), △내용성(정책 선택이 아닌 정책대안 도출), △탄력성(정책 당국의 결과활용 여지)을 특징으로 하며 정책 시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 본 연구의 방법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모습을 예측하고 전략, 즉 정책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예측 관련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상황과 정책 분석, 그리고 미래 예측을 함께 시도한다. 즉, 본 연구의 주목적은 2040년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모습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헌과 통계자료를 통해 2040년 사회 환경을 예측하고, STEEP(인구사회문화, 과학기술, 경제산업, 자원환경, 정치제도)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구분하여 미래의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핵심동인을 파악한 이후에는 해당 동인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정책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조사, TAIDA 시나리오분석, 정책속의제 등이다.

본 연구는 미래의 육아지원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어떠한 이슈들이 문제될 수 있을지를 바탕으로 가능한 미래(possible future)와 바람직한 미래(desirable future)를 함께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미래로의 이행을 위한 쟁점 및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한편,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모습을 단순히 예측하고, 예측된 상황에 의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요소 자체가 육아지원정책의 2040년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여러 가지 시나리오 기법 중 정책적 비전, 과제 도출이 용이한 TAIDA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Lindgren and Bandhold(2003)에서 제시한 TAIDA 기법의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I-3-7〉 TIDA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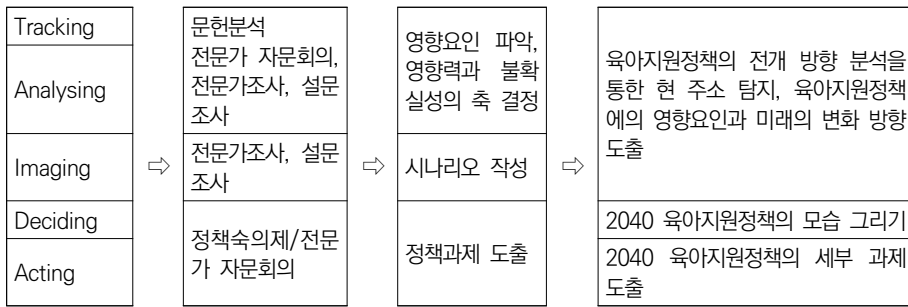
1. Tracking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재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변화를 추적
2. Analysing: 앞 단계를 통해 도출된 트렌드들을 분석하여 미래에 벌어질 시나리오를 보여줌
3. Imaging: 도출된 시나리오 중에 가장 희망적인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도출
4. Deciding: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도출
5. Acting: 도출된 전략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

우선, 1단계 및 2단계 과정을 통해 2040 육아지원정책 변화 모습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때의 시나리오를 구체화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3,4단계를 통해 도출할 것이다. 1,2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3, 4단계는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마지막 5단계는 전문가 조사 결과 및 수요자 조사 결과, 정책속의 제 결과를 함께 활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4단계 전략의 도출과 비전은 미래의 바람직한 비전(want)에 기초하면서 현재의 장점을 고려(utilize)하여야 하며 미래 환경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should) 이어야 한다(WUS 모델)(최영준 외, 2016). 5단계는 정책속의제를 통해 향후 반드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할 시나리오의 전체적인 도출 절차와 모습은 다음과 같다. 이를 기본 맥락으로 하여 TAIDA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한편 이때 시나리오를 도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최항섭 외, 2005:34). 이를 위해 연구진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속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며 토론을 통해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논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I-3-8〉 본 연구의 연구진행절차

의제: 2014년 육아지원정책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부사안: 1) 시간 정책은 어떻게 변화한 모습인가? 2) 현금지원정책은 어떻게 변화한 모습인가? 3) 서비스 정책은 어떻게 변화한 모습인가?	
영향요인 파악 (동인파악 및 분석): 1단계 및 2단계	2040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주요 동인은? (문헌연구, 설문조사)
영향력과 불확실성 축 결정: 2단계	변화의 주요 동인과 그로인한 결과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전문가조사)
시나리오 작성 : 3단계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내지 전체적인 모습 4가지 도출
전략적 함의(정책 전략 및 과제) 제시: 4,5단계	전략 도출 (정책속의제)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첫 단계로 기존 국내외 주요 문헌을 통해 2040년 변화한 사회환경의 모습을 예측하고, 육아지원정책의 이슈와 쟁점을 명확히 한다. 문헌연구는 연구의 앞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연구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 문헌연구의 초점은 첫째, 인구 및 가족 변화, 정치, 노동 및 경제, 문화 및 가치관, 에너지 및 환경, 과학기술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았다. 서용석 외(2011)의 연구에서는 미래의 환경을 분석함에 있어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과 자원(ecology), 정치(politic)의 STEEP 범주를 통해 고찰하였고 카이스트 미래전략 연구(2019)에 의하면 Society, Technology, Environment, Population, Politics, Economy, Resources의 STEEPER 범주로 미래를 진단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두 연구의 미래 사회 변화 환경 범위를 육아지원정책 환경 변화 분석 단위

로 삼고 이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분석 후 육아지원정책과 연관하다고 판단되는 5개의 범주로 집약하여 미래의 모습을 구분하여 살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생산되어 있는 여러 통계자료를 재가공하여 인구사회변화 예측을 함께 진행한다. 참고로 STEEPER와 STEEP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표 I-3-9〉 STEEPER와 STEEP 비교

구분	STEPPER	STEEP
Society	문화, 노동, 복지, 교육, 양극화, 사회이동성	사회 전반
Technology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자율주행, 공존현실, 드론, 지능형로봇, 생체인식	기술 전반
Environment	환경생태, 기후변화와 저탄소사회 전략, 스마트시티, 사이버보안	환경과 자원
Population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미래세대, 사람을 위한 4차 혁명	society 영역에 포함
Politics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통일외교, 군사전략	정치제도 및 거버넌스
Economy	금융, 핀테크, 공유경제, 창업, 자동차산업	경제 환경 전반
Resources	에너지전환, 자원,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토교통 전략, 농업 및 농촌, 해양수산	environment 영역에 포함

둘째, 유사 영역의 미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유사 연구의 범주는 육아지원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연구에서 언급한 것으로 선정하였고 해당 연구에서 미래 사회의 변화 방향을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의 동인 분석을 위해 기존의 육아지원정책 흐름과 관련 국가 계획을 분석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현재의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편, 기존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질 독창성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며 기존 연구들에서 나온 논의와 어떠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2)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분석은 앞 절의 연구 방법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TAIDA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서 STEEP 범주를 통해 미래의 환경 변화를 그려본다. 시나리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래에 가능한 여러 상황을 복수로 제시하면서 하나의 상황만을 가정하고 전략을 수립했을 때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최항섭 외, 2006). 특히 본 연구는 현재로부터 20년 이후인 2040년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하여 살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나리오만으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한 시나리오 도출 및 정책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와 수요자 설문조사를 별도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하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18세 이상-34세 남녀 500 사례를 실시한다. 아동 복지법상 아동의 범위를 고려하여 18세 이상을 일반인 설문조사 대상의 시작 연령으로 설정하였고, 출산 평균 연령을 고려하여 34세를 최종 연령으로 설정하였다.²⁾ 조사 방법은 전문조사업체가 구출한 패널을 바탕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조사한다. 전문가 조사 이후 문항을 보완하여 정책숙의제 이전에 실시하며 1) 미래의 육아상, 2) 정부에 바라는 육아정책, 3)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한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수요자욕구에 부합하는 시나리오 선정 및 정책 우선 순위 제안에 활용한다.

2) 2017년 통계청 출생 통계 결과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첫째아는 31.6세, 둘째아는 33.4세, 셋째아는 34.8세로 나타남(통계청, 2018).

〈표 I-3-10〉 설문조사 대상 및 조사 내용

조사대상	조사규모	조사내용
2019년 현재 18살 이상~34세 이하 일반 국민	500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 인적 사항 2. 삶의 주관적 만족도 3. 주관적 건강 인식 4. 출산에 대한 인식 5. 한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적 요인 전반 - 대내적 요인 전반 - 직업 및 노동시장, 근로형태의 변화 등 - 가족의 형태 변화 - 일가정 양립 관련 - 교육 관련 - 과학기술 관련 -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 관련 - 정치 참여 관련 6. 육아지원 정책의 미래에 대한 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의 방향성 - 필요한 정책 순위 -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본인이 바라는 양육 형태/현재 하고 있는 형태 - 육아에 대한 인식 - 현재 육아정책이 미래 사회에서는 반드시 바뀌어야 부분 7. 기타 의견

4) 전문가 조사

미래 연구에서 전문가 조사를 포함한 델파이방법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래에 대한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한다(최항섭 외, 2006). 예측하고자 하는 영역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질문지에는 최대한 양적인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최항섭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에 전문성을 확보한 사회복지학자들을 중심으로 여성 전문가, 노동 전문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교육 전문가, 아동 및 보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1) 미래 육아지원 정책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2) 육아지원정책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파악, 3) 육아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정책 비전 제시 및 정책 방향 제시에 활용한다.

전문가 조사는 간단하게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환경을 설명하고 이러한 미래 환경 하에서 육아지원정책의 역할을 물은 후 각 항목별 영향력과 예측 가능한 상황을

판단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전문가 30명에게 응답을 요청하였고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3-11〉 전문가 특성

순번	성별	연령대	전공
1	여	40대	사회복지학
2	여	50대	아동학
3	남	40대	행정학
4	남	50대	사회복지학
5	여	30대	행정학
6	남	40대	보건학
7	여	30대	사회복지학
8	남	50대	인구학
9	여	50대	경제학
10	남	50대	경제학
11	여	50대	경제학
12	여	50대	사회복지학
13	남	50대	행정학
14	여	50대	여성학
15	남	50대	사회복지학
16	남	30대	사회복지학
17	여	40대	사회복지학
18	남	50대	미래학
19	남	50대	사회복지학
20	여	30대	사회복지학
21	남	50대	미래학
22	여	50대	사회복지학
23	여	30대	사회복지학
24	남	30대	사회복지학
25	여	30대	사회복지학
26	여	50대	사회복지학
27	여	50대	사회복지학
28	여	40대	사회복지학
29	여	40대	사회복지학
30	여	30대	사회복지학

5) 정책숙의제

설문조사는 한 자리에 모여서 논쟁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생략된다. 일방향적인 조사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 예측의 구체성을 더하기 위해 정책숙의제를 실시한다. 이는 양적 방법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최항섭 외, 2006).

정책숙의제는 정책당국자와 전문가 중심의 정책수립 및 시행으로 인해, 탁상행정 논란과 국정운영에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정책집단 모델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을 반영한 연구방법이다(한국리서치, 2019)이는 집단적 미래예측의 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시간과 규모의 한계 상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 24여명을 대상으로 4개 토론조로 나누어 정책숙의제를 실시한다. 전문가 조사를 통해 도출된 미래 육아지원정책 키워드를 바탕으로 청년, 영유아 양육중인 부모 등을 몇 개의 조로 구분하여 정책숙의제를 진행한다. 미래 육아지원정책 비전 제시를 위한 정책숙의제 개최로 정책수요자와 예비수요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2040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6) 전문가 자문회의

그 외에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 진행 초반, 중반, 말미에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내용을 보완한다. 초반에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중반에는 2040 국내외 환경을 분석하며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변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동인을 도출한다. 말미에는 도출한 핵심 동인이 미래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해당 정책의 우선순위 및 정책 과제를 제안한다.

마. 연구의 의미와 한계

미래연구는 서두에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구체화 시키고 실증 근거에 기반하여 미래 사회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 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사회보장 내지 가족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여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육아지원정책 분야에 한정할 경우 기존에 거의 시도된 바 없는 소수의 미래 연구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기초 연구로서 육아지원정책 분야의 미래 그림을 그리고 큰 틀에서 2040년의 육아지원정책을 전망해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편, 모든 미래연구가 그렇듯이 본 연구의 한계도 ‘정확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변화를 모두 고려할 수 없기에 연구의 범위에서 오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아지원정책의 주대상을 영유아로 한정하여 본 연구를 진행한다. 육아의 연령 대상이 영유아에 오로지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논의에서는 초등 저학년까지를 포괄할 수 있으나 연구의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살피고 과제를 도출함에 있어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관 분야의 정책 과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미래 정책 연구의 특성상 현재의 시점에서 정책을 평가하기가 쉬워 미래 정책을 세부적으로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힌다. 이에 미래 연구이지만, 현재 시행중인 또는 향후 5년 내에 시행 예정인 단기적 관점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과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미리 밝혀둔다.

II

2040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육아지원정책에의 과제

- 01 2040 미래사회와 육아지원정책 관련 과제
- 02 2040 인구사회환경 변화 예측
- 03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주요 영향요인

II. 2040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육아지원정책에의 과제

1. 2040 미래사회와 육아지원정책 관련 과제

가. 개요

현재 저출산고령화와 낮은 성장률, 노동시장의 이중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할 여러 사회적 이슈들과 더불어 미래의 모습을 예측한 연구들은 있어서는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가 첫번째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여러 문헌에서는 도시의 변화, 인공지능의 성장, 가상현실의 강화, 일자리의 변화, 양성평등의 진전 등을 다수 예측하고 있다(유기윤 외, 2017). 카이스트 미래전략보고서(2019)에 의하면 현재부터 향후 30년간 기술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적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대내외적 큰 환경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6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1) 저출산고령화 현상 극복, 2) 사회통합과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필요, 3) 평화통일과 국제정치를 위한 점진적 준비, 4) 지속적인 성장과 변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과 분배의 균형 확보, 5) 지속가능한 민주복지국가 수립으로 복지와 민주주의의 선순환 구조 확립, 6)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등이 주요 내용으로 언급되었다(카이스트 미래전략보고서, 2019; 13-17). 특히 과학기술 변화 중 로봇이 서비스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할 것에 대한 대표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카이스트 미래전략, 2019; 358). 미래도시 전망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포용적 성장과 시민참여 등이 스마트도시의 비전에 담겨야 하고(카이스트 미래전략, 201; 399) 이를 육아지원정책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반드시 정확할 것을 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를 점검하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더불어 미래에의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다양한 미래 관련 연구들은 미래를 변화시킬 주요 요인으로 과학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및 환경 변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모습을 5가지 분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이에 적합한 2040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모습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 육아 미래 환경 변화 관련 연구

서용석 외(2011)의 연구는 미래 가족환경 변화의 주요 동인을 탐색하였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 변화, 새로운 가치관 도입과 라이프스타일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 가속화, 금융경제체제의 불안정, 기후변화와 자원고갈, 저성장 기조 유지, 비전통 안보의제 급증, 민주화 현상 강화 등의 대외적 요인과 인구구조 변화, 사회양극화 및 갈등 급증,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가 등의 국내 환경변화를 추출하였다. 특히 동 연구에서는 저성장 시대로 진입, 소득불균형, 복지욕구 증가, 여성경제활동인구 증가, 국가의 시장화, 정치영역에의 시민 참여 증가 등 또한 미래 가족환경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 중에서도 저출산과 저성장, 과학기술 발전,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는 가족환경변화의 핵심동인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13개 정책 과제를 도출한 바 있다.

이명진 외(2011)의 연구는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와 가족의 미래에 대해 살피기 위해 시나리오기법을 사용하여 미래의 가족정책을 탐색한 바 있다. 연구 결과 미래의 가족은 세대 규모가 축소하고, 결혼 긴장 문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았으며 1인가구는 고령층 위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인구수 변화 예측과 가족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도출하였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보고서(2019)에서는 각 분야의 미래상을 도출하면서 인구정책 분야에서 육아지원정책과 관련한 미래의 대응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저출산은 곧 인구문제이고, 해당 의제는 육아와 연관된다는 논리적 흐름 하에 저출산 시대의 여러 과제를 출산 및 보육, 일가정양립, 인력활용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해당 연구들에서 제시한 미래 과제는 다음과 같다.

〈표 II-1-1〉 각 연구에서 도출한 육아정책 관련 미래 과제

구분	내용
서용석 외(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무제도 활성화 • 근로자 육아지원 강화 • 일가정양립형 일자리를 위한 고용서비스 강화 • 다문화, 새터민 가족지원체계 정비 및 인식개선 • 삶의 질을 고려한 의학기술 개발 • 사이버스페이스 확산에 따른 변화대응 • 경제사회 위험관리시스템 활성화 • 세계화 및 지역화에의 적극적 대응 • 여성 고령인력 활용을 통한 인적자본의 고도화 •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환경구축을 위한 대응 • 미래 사회를 위한 국가 인프라의 구축 • 국제공조 및 협력네트워크 강화 • 한반도 통일 준비 및 대응
이명진 외(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인구수와 연령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노령층일자리, 여가활용 기회 창출, 돌봄서비스 및 연금제도 개선 등 • 여성 고용과 보상 평등 및 고용 유연성 확대를 통해 여성의 혼인을 제고 • 남성의 사회진출 시기 촉진 • 국제결혼 지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 기존 부부 임신 출산 지원 확대 및 출산 전후 휴가 및 휴직 확대 • 노년층과 1인가구 지원 정책 확대 • 미혼과 비혼남녀를 위한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 확대 • 1인가구 라이프 스타일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가족구성의 변화에 대응
카이스트 미래전략보고서 (2019)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산은 가정의, 보육은 국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녀 가정 우대 아동수당 방식 설계, 보육 품질 제고, 결혼 비용 및 주택문제 개선, 결혼 연계 주택정책 확대 2) 일가정양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 관련 공공서비스 무료화, 일가정양립 사각지도 파악으로 지원 확대, 보육지원체계 일가정양립 연계 강화, 삶의 질 향상 사회문화 및 고용문화 조성, 정규교육 단계별 국민적 문화 인식 개선 도모 3) 국내 유휴 잠재인력 활용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및 고령자 노동시장 진출 돕는 사회문화 조성 - 일가정 양립 강화로 경력단절 방지 - 양성평등 고용환경 구축 - 시간제 근로자 차별 해소 및 남녀 동등한 처우 보장 법적 정비 - 청년과 고령자간 공생 발전 여건 조성 4) 외국인 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취업 체류기간 연장 - 우수인재 유치
비지 보고서 201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과 공공서비스 접근성 문제 대두 2) 교육정책, 불평등 해소 정책 및 기본소득 3) 웰빙과 건강 및 배우기에 여가시간 투여 4) 여러 가족과 여러 직업 등 하나에 머물지 않는 형태 대두
글로벌 유럽 2030-2050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에너지 문제 가속화 2) 인권지지

구분	내용
보고서	3) 법률에 따른 통치 강화 4) 언론의 확대 5) 스마트 성장 지향 6) 이민자 자녀 통합 교육 강화

자료: 서용석 외(2011), 미래환경스캐닝을 통해서 본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81-114 참고, 이명진 외(2011)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9-119 참고, 카이스트 미래전략보고서(2019) 421-422 페이지 참고. 비지 보고서 2018은 국회미래연구원 요약자료(2018), 1-2페이지 참고. 글로벌유럽 2030-2050은 글로벌 유럽 2030-2050 요약(국회미래연구원, 2018) 자료 1페이지 참조.

2. 2040 인구사회환경 변화 예측

본 절에서는 2040년 인구 사회변화를 예측해본다. 인구 및 사회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육아지원정책과는 차별화되는 지점을 찾고 새로운 정책 대응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기존 문헌과 통계자료를 재분석하여 인구, 정치, 노동 및 경제, 문화, 에너지 및 환경, 과학기술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주요 변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한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경제(economy), 환경과 자원(ecology), 정치(politic), 즉 STEEP 구분에 의거하여 STEEPER의 세부 요소를 적절히 연구자가 구성한 분류 기준이다.

가. 인구

1) 인구 전반

미래에 대한 인구 정보는 추계와 예측에 의거하여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계는 projection을 의미하고 예측은 forecast를 번역한 용어인데 추계는 특정 조건과 가정에 의하여 미래를 바라본 것을 의미하고, 예측은 미래에 실제 일어날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것을 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이명진 외, 2011). 이에 추계는 조건부적인 계산으로 이룬 단시간적의 작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예측과 차이점이 있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여 미래의 인구 변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추계'를 통한 미래 전망을 의미하고 육아지원정책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인구 구조 변화 중 출산율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의 출산율 변화와 장래 전망을 살펴보면 2019년 현재 0.94명인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5년에는 1.00명으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 이후 여러 정책적 환경 변화에 의해 미미하지만 조금씩 증가하다 2040년 이후에는 1.27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계된 바 있다. 결국 2019년 현재의 시점보다는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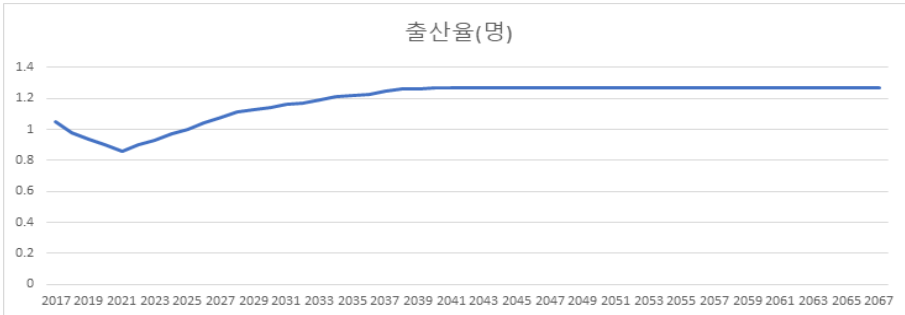
〈표 II-2-1〉 출산율(중위) 및 출생아수

단위: 명

연도별	출산율
2017	1.05
2018	0.98
2019	0.94
2020	0.90
2021	0.86
2022	0.90
2023	0.93
2024	0.97
2025	1.00
2026	1.04
2027	1.08
2028	1.11
2029	1.13
2030	1.14
2031	1.16
2032	1.17
2033	1.19
2034	1.21
2035	1.22
2036	1.23
2037	1.25
2038	1.26
2039	1.26
2040	1.27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그림 II-2-1] 출산율(중위기준)



출처: 표 II-2-1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다른 한편, 출생아수로 살펴본 통계는 다음과 같다. 2019년 현재 출생아수는 309천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040년에는 295천명으로 추계되었다.

<표 II-2-2> 출생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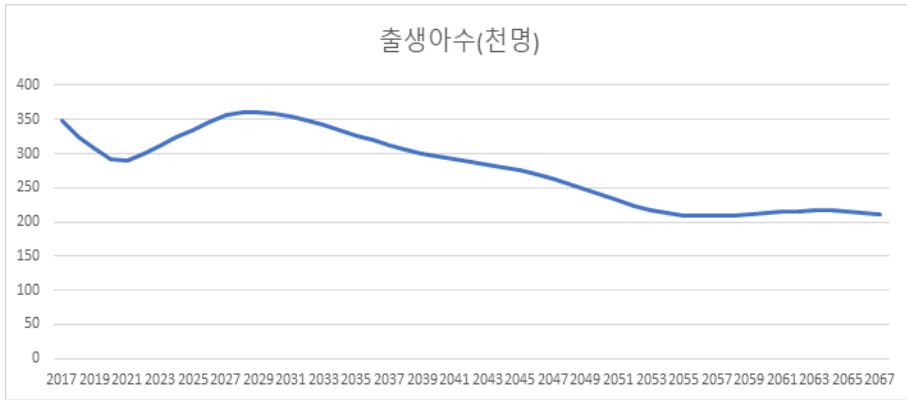
단위: 천명

연도별	출생아수(천명)
2017	348
2018	325
2019	309
2020	292
2021	290
2022	300
2023	312
2024	324
2025	335
2026	346
2027	356
2028	361
2029	360
2030	358
2031	354
2032	349
2033	342
2034	335

연도별	출생아수(천명)
2035	327
2036	320
2037	312
2038	306
2039	300
2040	295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그림 II-2-2] 출생아수(중위기준)



출처: 표 II-2-2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다음으로 전체적인 인구 성장률을 최고, 최저, 현수준 출산율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2019년 이후에는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최고 출산율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2033년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 출산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6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최저 출산율 기준일 때는 2021년 이후에 마이너스 인구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국 출생아 수가 미미할지언정 증가함에 반하여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인 지속과 유관하다고 할 것이다.

〈표 II-2-3〉 인구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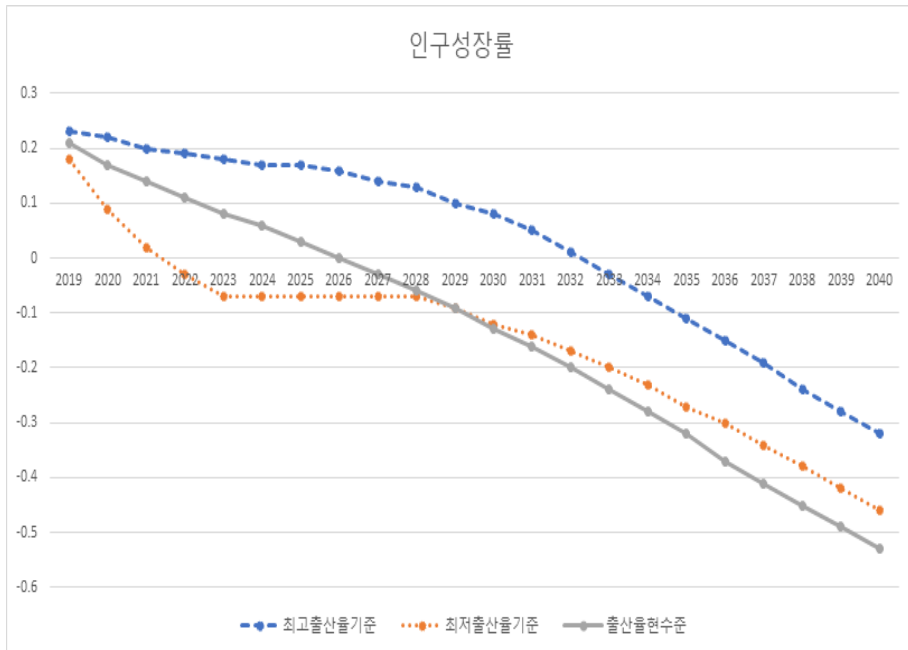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최고기준	최저기준	현기준
2019	0.23	0.18	0.21
2020	0.22	0.09	0.17
2021	0.2	0.02	0.14
2022	0.19	-0.03	0.11
2023	0.18	-0.07	0.08
2024	0.17	-0.07	0.06
2025	0.17	-0.07	0.03
2026	0.16	-0.07	0.0
2027	0.14	-0.07	-0.03
2028	0.13	-0.07	-0.06
2029	0.1	-0.09	-0.09
2030	0.08	-0.12	-0.13
2031	0.05	-0.14	-0.16
2032	0.01	-0.17	-0.2
2033	-0.03	-0.2	-0.24
2034	-0.07	-0.23	-0.28
2035	-0.11	-0.27	-0.32
2036	-0.15	-0.3	-0.37
2037	-0.19	-0.34	-0.41
2038	-0.24	-0.38	-0.45
2039	-0.28	-0.42	-0.49
2040	-0.32	-0.46	-0.53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다음으로 총인구를 최고, 최저, 현수준 출산율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최고 출산율 기준으로 보면, 2033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2040년 총인구는 51,934천명으로 추계되었다. 최저 출산율 기준일 때는 2023년에 인구가 감소하고 2040년 총인구는 49,938천명으로 예측되었다. 현 출산율 기준일 때는 2027년에 인구가 감소하고, 2040년 총인구는 50,110천명이었다.

[그림 II-2-3] 인구성장률



출처: 표 II-2-3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표 II-2-4> 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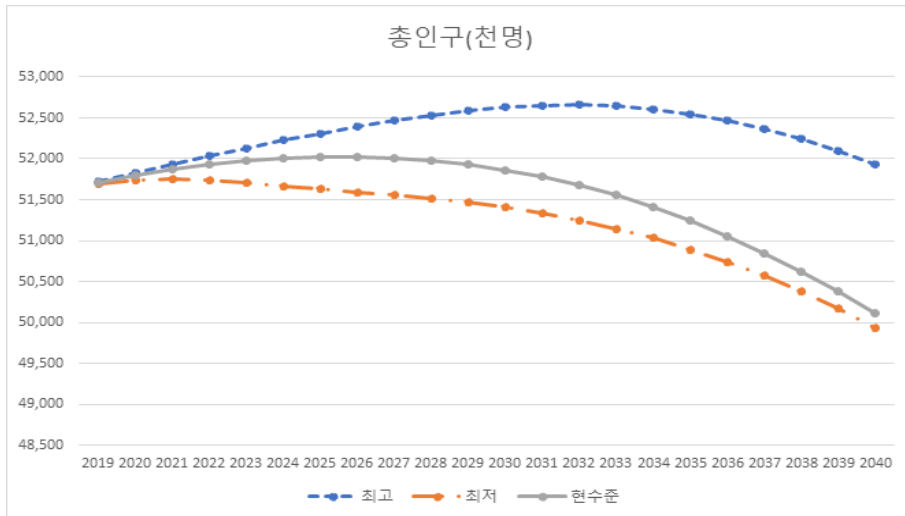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최고	최저	현수준
2019	51,723,480	51,697,932	51,714,848
2020	51,835,166	51,743,564	51,804,408
2021	51,939,488	51,755,848	51,876,648
2022	52,038,375	51,738,174	51,933,287
2023	52,133,147	51,704,098	51,975,701
2024	52,224,199	51,668,969	52,004,445
2025	52,311,097	51,633,093	52,019,445
2026	52,392,856	51,596,653	52,020,345
2027	52,468,134	51,559,686	52,006,711
2028	52,534,623	51,521,286	51,977,168
2029	52,588,150	51,473,692	51,929,072
2030	52,628,082	51,413,166	51,863,696
2031	52,652,060	51,339,416	51,780,132
2032	52,657,971	51,251,838	51,677,398

연도	최고	최저	현수준
2033	52,643,866	51,149,426	51,554,363
2034	52,608,311	51,031,055	51,410,184
2035	52,550,594	50,895,780	51,244,654
2036	52,470,471	50,742,632	51,057,924
2037	52,368,305	50,570,848	50,850,548
2038	52,244,622	50,379,747	50,623,170
2039	52,099,894	50,168,826	50,376,350
2040	51,934,707	49,938,074	50,110,656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그림 II-2-4] 총인구



출처: 표 II-2-4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연령별 인구 구성비를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0-14세를 기준으로 한 인구 구성비는 2019년 현재 12.5%의 평균을 보이고 있으나 2040년이 되었을 때 8.2%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 수가 감소한다는 것의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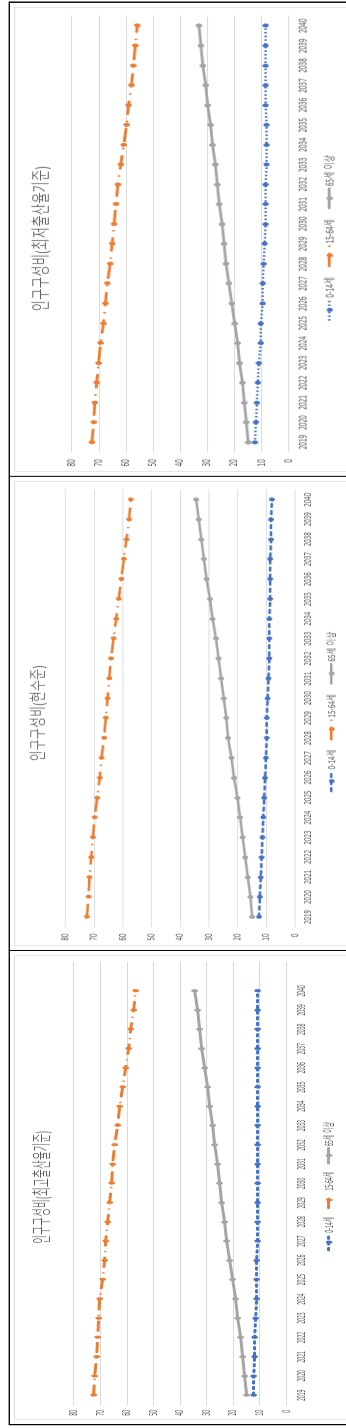
〈표 II-2-5〉 인구구성비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최고	12.5	12.3	12.1	11.9	11.6	11.5	11.4	11.2	11.1	11.0	10.9	10.8	10.8	10.8	10.9	11.0	11.0	11.1	11.1	11.0	11.0	10.9
최저	12.4	12.1	11.8	11.4	10.9	10.5	10.2	9.8	9.5	9.2	9.0	8.7	8.5	8.4	8.3	8.3	8.3	8.4	8.5	8.6	8.6	8.7
현수준	12.5	12.2	12.0	11.7	11.4	11.1	10.9	10.6	10.3	10.0	9.8	9.5	9.3	9.1	9.0	8.9	8.8	8.7	8.6	8.5	8.4	8.2
15-64	72.7	72.2	71.7	71.3	70.8	70.2	69.4	68.6	68.0	67.3	66.7	66.0	65.4	64.6	63.8	62.7	61.7	60.6	59.6	58.6	57.6	56.8
최저	72.1	72.1	71.5	70.9	70.2	69.5	68.5	67.6	66.9	66.0	65.3	64.5	63.7	62.9	62.0	60.9	60.0	59.0	58.1	57.3	56.5	55.9
현수준	72.1	72.1	71.6	71.0	70.5	69.8	68.9	68.1	67.4	66.7	66.1	65.5	64.8	64.1	63.3	62.3	61.4	60.5	59.6	58.8	58.0	57.4
65 이상	14.9	15.7	16.5	17.3	18.3	19.2	20.4	21.5	22.5	23.5	24.3	25.2	26.1	27.0	27.9	29.0	29.9	31.0	31.9	32.8	33.7	34.5
최저	14.9	15.7	16.4	17.2	18.1	19.0	20.1	21.2	22.1	23.1	23.8	24.7	25.5	26.3	27.1	28.1	29.0	29.9	30.8	31.7	32.5	33.2
현기준	14.9	15.7	16.5	17.3	18.2	19.1	20.2	21.4	22.3	23.3	24.1	25.0	25.9	26.8	27.7	28.8	29.7	30.8	31.7	32.7	33.6	34.4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그림 II-2-5] 인구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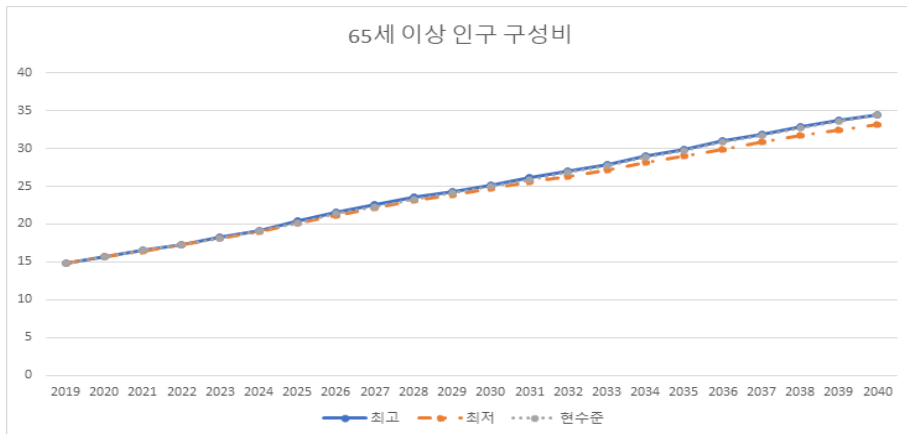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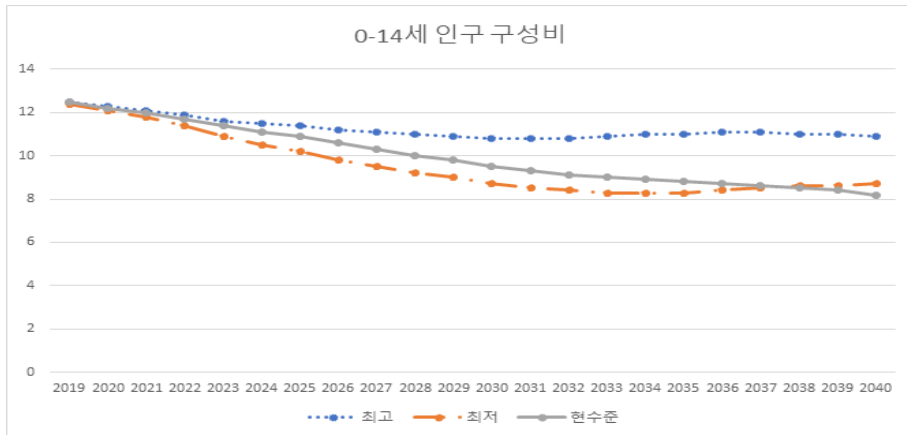


출처: 표 II-2-5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즉, 0-14세, 15-64세 인구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고, 최저, 현수준 출산율을 기준으로 예측하였을 때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0-14세 인구 구성비 감소율보다 65세 이상 인구 구성비 증가율이 더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고령화 현상이 단시간 안에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II-2-6] 아동/노인 인구 구성비



출처: 표 II-2-5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2) 가족형태 변화

가족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부부가구의 경우는 2017년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으나, 조금씩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1인 가구는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35년까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형태는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가구원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저출산 현상과 비혼 지향이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맞물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가구수는 증가하나 1인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부+미혼자녀+형제자매 혹은 부부+미혼자녀+부(모)와 같이 4세대 가족 형태는 2007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II-2-6〉 가족형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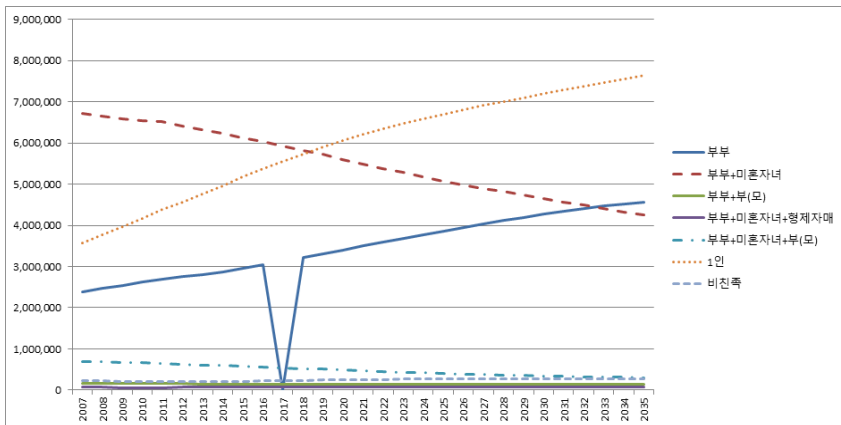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계	부부	부부+미혼 자녀	부부+부 (모)	부부+미혼 자녀+형제 자매	부부+미혼 자녀+부 (모)	1인	비친족
2007	16,601,723	2,391,009	6,712,794	154,572	68,514	690,567	3,571,412	222,584
2008	16,883,417	2,467,739	6,652,767	155,183	64,840	679,133	3,766,306	218,276
2009	17,167,884	2,541,700	6,595,292	155,931	61,181	667,804	3,963,334	214,640
2010	17,494,884	2,629,660	6,544,401	157,776	57,695	657,051	4,174,073	211,972
2011	17,879,317	2,695,485	6,516,478	155,492	62,148	644,883	4,379,916	212,702
2012	18,118,513	2,748,883	6,414,463	151,574	66,022	626,677	4,563,342	212,040
2013	18,388,488	2,811,928	6,315,831	148,514	69,761	609,335	4,756,220	211,941
2014	18,704,975	2,876,380	6,234,012	145,833	73,599	593,549	4,964,662	212,865
2015	19,012,895	2,952,106	6,131,866	143,736	77,257	576,274	5,179,573	213,754
2016	19,284,671	3,044,419	6,032,437	144,629	76,623	557,768	5,381,719	220,605
2017	19,523,587	3,13,072	5,932,704	144,232	76,216	539,720	5,562,048	227,054
2018	19,751,807	3,219,483	5,825,489	144,027	75,719	521,313	5,738,931	233,762
2019	19,971,359	3,308,129	5,720,553	143,768	75,237	503,117	5,907,077	240,450
2020	20,174,317	3,404,157	5,603,371	143,550	74,625	484,815	6,067,878	246,496
2021	20,366,414	3,501,670	5,491,974	143,617	74,097	466,961	6,212,313	252,600
2022	20,545,775	3,586,394	5,386,152	143,230	73,716	450,610	6,350,574	258,471
2023	20,714,305	3,675,917	5,278,319	143,006	73,291	434,507	6,478,761	264,039
2024	20,869,265	3,761,452	5,178,292	142,546	72,938	419,173	6,593,600	269,183
2025	21,013,656	3,849,190	5,074,804	141,800	72,536	404,378	6,700,512	273,762

연도	계	부부	부부+미혼 자녀	부부+부 (모)	부부+미혼 자녀+형제 자매	부부+미혼 자녀+부 (모)	1인	비친족
2026	21,156,816	3,948,447	4,984,646	141,461	72,271	390,919	6,806,351	272,444
2027	21,290,091	4,030,232	4,902,510	141,503	72,189	378,933	6,908,619	272,121
2028	21,414,812	4,113,130	4,820,023	141,544	72,078	367,366	7,005,377	271,254
2029	21,532,010	4,195,095	4,737,539	141,445	71,949	355,938	7,100,099	270,979
2030	21,640,586	4,270,743	4,654,105	141,200	71,741	345,341	7,196,471	270,123
2031	21,738,986	4,348,116	4,572,009	140,509	71,491	334,831	7,285,856	268,766
2032	21,829,822	4,409,002	4,491,772	140,898	71,278	325,393	7,374,312	268,656
2033	21,915,784	4,465,285	4,409,311	141,186	71,034	316,421	7,464,987	268,577
2034	21,995,028	4,519,806	4,328,508	141,641	70,779	308,155	7,549,605	267,815
2035	22,067,468	4,560,491	4,248,456	142,640	70,555	300,772	7,634,774	267,965
2036	22,131,677	4,599,337	4,170,019	143,257	70,296	293,743	7,714,875	267,622
2037	22,188,221	4,634,289	4,093,339	144,899	69,974	286,898	7,784,324	268,589
2038	22,236,438	4,663,830	4,017,144	146,795	69,635	280,585	7,848,000	269,792
2039	22,275,804	4,690,493	3,944,225	148,826	69,270	274,207	7,903,151	270,935
2040	22,306,364	4,707,330	3,868,443	151,857	68,860	268,779	7,953,010	273,867
2041	22,327,706	4,723,303	3,795,083	154,943	68,409	263,600	7,992,625	276,806
2042	22,339,113	4,740,155	3,726,694	158,197	67,895	258,453	8,026,309	279,945
2043	22,341,405	4,747,324	3,663,907	161,808	67,442	254,051	8,051,010	283,537
2044	22,334,151	4,748,104	3,600,262	164,520	66,961	249,795	8,082,054	286,822
2045	22,317,526	4,741,902	3,540,832	168,688	66,465	246,099	8,098,369	290,858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인출일: 2019. 5. 13)

[그림 II-2-7] 가족형태 변화



출처: 표 II-2-6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그에 반하여 한부모 가구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2,158천가구로 집계되었다. 한부모 가구 비율은 2014년부터 전체 가구의 약 10%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이명진 외, 2011). 이혼율의 증가도 가족 형태 변화의 주 요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이명진 외, 2011). 이하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현재까지의 변화 추이를 제시하였다. 가족의 형태는 육아정책의 개별화, 구체화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기초 자료로 살펴보아야 할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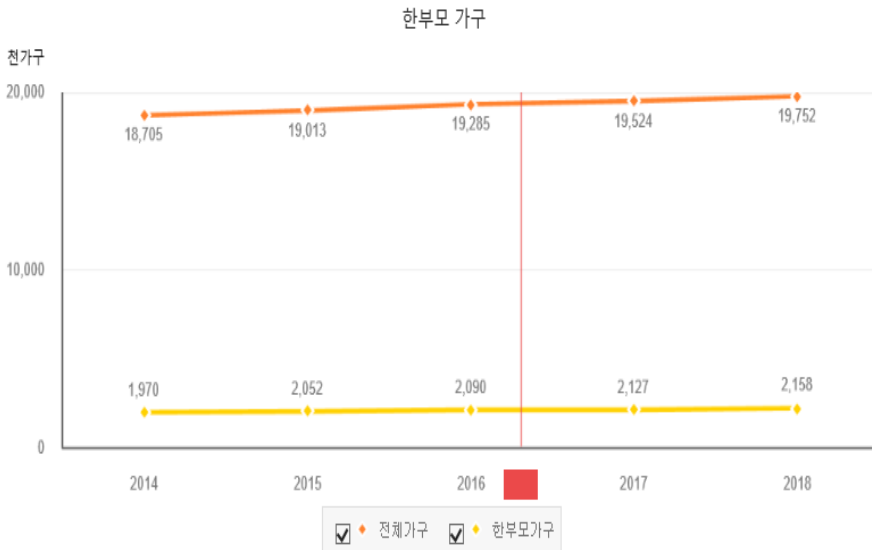
〈표 II-2-7〉 가족형태 변화

단위: 천가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가구	18,705	19,013	19,285	19,524	19,752
한부모가구	1,970	2,052	2,090	2,127	2,158
한부모가구 비율	10.5	10.8	10.8	10.9	10.9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17)

〔그림 II-2-8〕 가족형태 변화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20)

나.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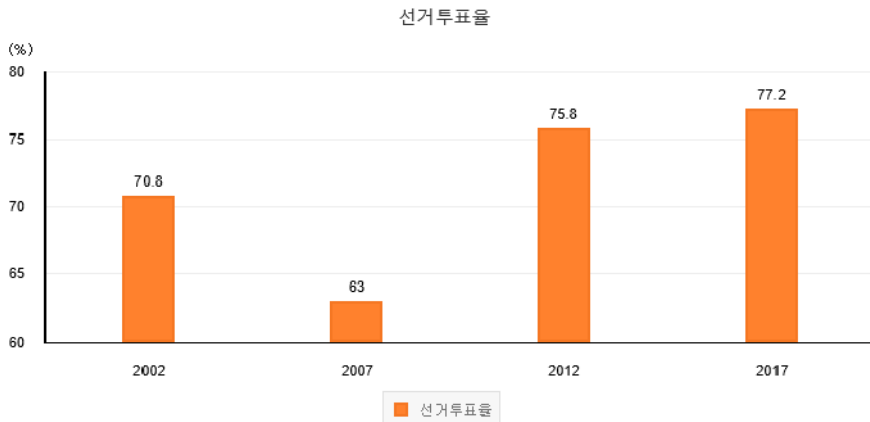
다음으로 정치 영역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2년 대선 이후 2017년 까지의 대통령 선거투표율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60-70%로 높은 편이었다.

〈표 II-2-8〉 대통령 선거 선거투표율

단위: %			
2002	2007	2012	2017
70.8	63.0	75.8	77.2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17)

[그림 II-2-9] 선거투표율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17)

전체적인 대선투표율 뿐 아니라 정책 대상자가 얼마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연도별, 연령별 선거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에서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편이다. 즉, 육아지원정책의 주 수요자인 연령층의 정치적 의사 표명이 타 연령층에 비하여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대, 60대 이상에서는 투표율이 70-8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60% 이상의 투표율을 전 연령대에서 유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는 대체적으로 낮아

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2016년에는 육아정책의 주 수혜 대상자인 20-30대 투표율이 50% 미만인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표 II-2-9〉 연도별/연령별 선거율

단위: %

구분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92	'97	'02	'07	'12	'17	'92	'96	'00	'04	'08	'12	'16	
전체	81.9	80.7	70.8	63.0	75.8	77.2	71.9	63.9	57.2	60.6	46.1	54.2	58.0	
성	남자	82.6	81.3	71.3	63.3	74.8	76.2	72.2	65.3	58.7	63.0	48.4	55.7	58.8
	여자	80.9	80.1	70.3	63.1	76.4	77.3	70.9	62.0	56.5	59.2	44.3	53.1	57.4
연령 집단	19세	-	-	-	54.2	74.0	77.7	-	-	-	-	33.2	47.2	53.6
	20대전반	69.8	66.4	57.9	51.1	71.1	77.1	56.6	44.8	39.9	46.0	32.9	45.4	55.3
	20대후반	73.3	69.9	55.2	42.9	65.7	74.9	57.1	43.8	34.2	43.3	24.2	37.9	49.8
	30대전반	82.1	80.4	64.3	51.3	67.7	74.3	68.5	57.7	45.1	53.2	31.0	41.8	48.9
	30대후반	85.9	84.9	70.8	58.5	72.3	74.1	75.7	68.0	56.5	59.8	39.4	49.1	52.0
	40대	88.8	87.5	76.3	66.3	75.6	74.9	81.1	75.3	66.8	66.0	47.9	52.6	54.3
	50대	89.8	89.9	83.7	76.6	82.0	78.6	84.3	81.3	77.6	74.8	60.3	62.4	60.8
	60대	-	-	-	-	-	84.1	-	-	-	-	-	-	71.7
	70대	-	-	-	-	-	81.8	-	-	-	-	-	-	73.3
	60대이상	83.2	81.9	78.7	76.3	80.9	-	78.2	74.4	75.2	71.5	65.5	68.6	-
	70대이상	-	-	-	-	-	-	-	-	-	-	-	-	-
	80대이상	-	-	-	-	-	56.2	-	-	-	-	-	-	48.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각 연도, 「1996년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주석: 1)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2) 각 선거의 전체 투표율은 실제 투표율이고, 성 및 연령별 투표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 실시하는 투표율 표본조사의 결과임.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17)

다. 노동 및 경제

노동 및 경제 영역은 노동시장 환경이 사회 정책의 중심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유의하여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

1) 경제성장률

우선, 경제성장률 전망을 2017년 한국의 고용구조 기준과 G7 평균 고용구조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30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 수준으로 고정된 경우이다. 2021년에서 2030년까지 경제성장률은 2.0%이며, 2041년부터 2050년까지는 평균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두 번째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남녀 모두 G7 국가의 평균 수준에 있을 경우에도 2021-2030년에는 1.7%의 성장률을 보이고, 이후에는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나리오별 결과, 현재의 고용 구조를 유지할 때, 성장추세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예측 결과이다. 즉, 2040년에는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I-2-10〉 시나리오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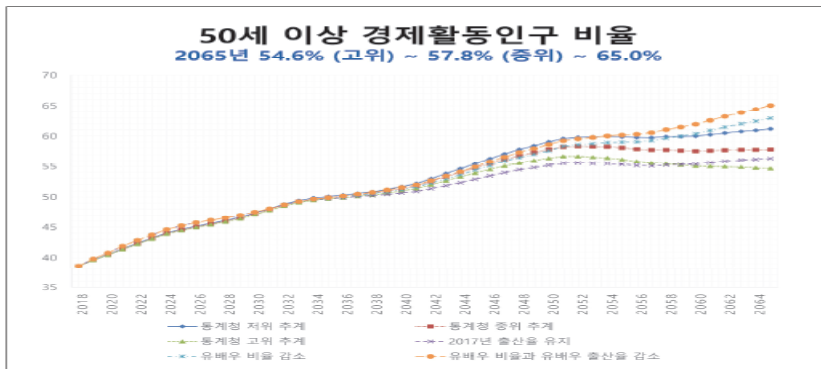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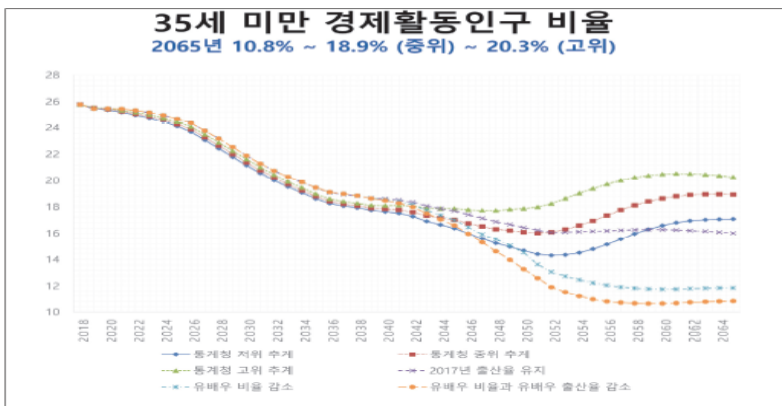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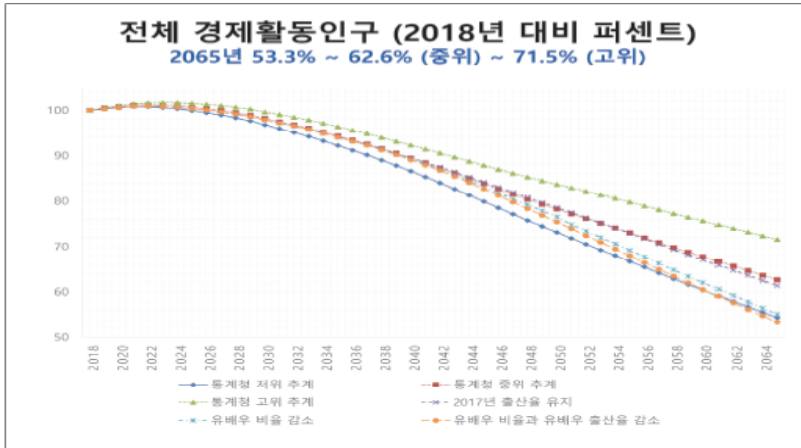
단위: %

연도	2017년 한국의 고용구조 기준	G7 평균 고용구조 기준
2021-2030	2.0	1.7
2031-2040	1.3	0.9
2041-2050	1.0	0.6

출처: 이재준(2019).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KDI 정책포럼, 273, p. 5

2017년 경제성장률이 성별, 연령별 변화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경제활동인구를 추계한 자료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35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비율도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52년부터는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롯된 예측 결과로 보인다. 한편, 30대는 육아정책의 주 수혜자로 이들의 경제활동 상황은 정책 결정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된다.

[그림 II-2-10] 경제활동인구(전체/연령별)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제1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2019. 4. 12일자), p.22-23

2)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본 결과, 2009년 49.3%에서 2010년부터 50%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2012-2013년 일시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으나 다시 증가하여 2018년에는 52.9%이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1,893천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40년에도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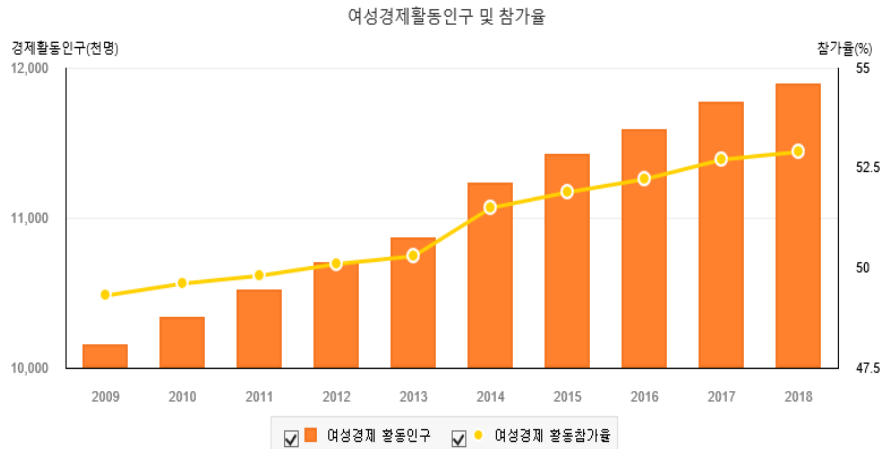
〈표 II-2-1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단위: %, 천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7	2018
참가율	49.3	54.5	50.1	49.2	49.9	50.1	50.0	52.2	52.9
참가인구	10,153	10,335	10,520	10,704	10,862	11,229	11,426	11,583	11,893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인출일: 2019. 5. 20)

〔그림 II-2-1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20)

3)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육아지원정책 중 시간지원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다. 2040년의 정책 이용자 수를 추계할 수는 없으나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흐름을 통

해 미래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우선, 출산전후 휴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2014년에는 조금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6-2017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육아 휴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자수도 여성에 비해 상당히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40년에도 해당 정책을 이용할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더불어 육아휴직에 있어 남성근로자 수의 증가는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과 고려 점을 새로이 준비하고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는 곧 제도의 내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표 II-2-12〉 출산, 육아휴직 현황

구분	단위: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출산전후 휴가자 수	2	22,711	32,133	38,541	41,104	48,972	58,368	68,526	70,560	75,742	90,290	93,394	90,507	88,756	94,590	89,834	81,093
(출산전후 휴가 지원금액)	2	22,602	33,522	41,610	46,041	90,886	132,412	166,631	178,477	192,564	232,915	241,900	235,105	236,845	258,139	247,331	242,588
육아 휴직자 수	2	3,763	6,816	9,304	10,700	13,670	21,185	29,145	35,400	41,733	58,137	64,069	69,616	76,833	87,339	89,795	90,123
여성근로자	25	3,685	6,712	9,123	10,492	13,440	20,875	28,790	34,898	40,914	56,735	62,279	67,323	73,412	82,467	82,179	78,080
남성근로자	23	78	104	181	208	230	310	355	502	819	1,402	1,790	2,293	3,421	4,872	7,616	12,043
계	2	3,087	10,576	20,803	28,242	34,521	60,989	98,431	139,724	178,121	276,261	357,977	420,248	500,663	619,663	625,243	680,430
(육아휴직 지원금액)	5	3,033	10,415	20,477	27,755	33,989	60,249	97,449	138,221	175,582	270,500	348,644	408,557	482,743	592,238	585,186	625,270
남성근로자	4	54	161	326	487	532	740	982	1,503	2,539	5,761	9,153	11,691	17,920	27,425	40,057	55,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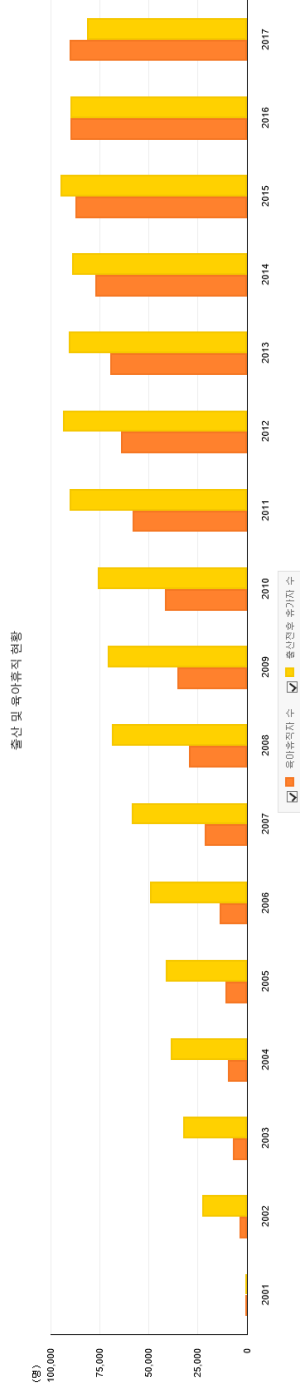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고용보험 DB)

* 출산전후휴가자 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수로 '01.1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

*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를 의미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17)

〔그림 II-2-12〕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17)

4) 근로시간³⁾

한편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법률인 근로기준법이 2018년 3월 20일자로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 방향은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 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큰 변화는 5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며 이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300인 이상은 '18년 7월부터 시행되며, 50-300인 미만은 '20년 1월부터, 5-50인 미만은 '21년 7월부터 적용되게 된다. 둘째,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기한은 '21년 7월-22년 12월까지이다. 셋째,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1주 35시간, 연장근로는 한도 1주에 5시간으로 축소된다. 넷째, 휴일근로 할증률이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일시는 100%가 적용되게 된다. 다섯째,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특례도입 사업장은 '18년 9월 1일부터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여섯째,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받게 되며, 이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게 된다.

향후 이러한 근로시간 축소로 인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근로 형태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근로시간 축소 방향은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여야 하는 가정에게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남녀 육아 참여의 형태, 돌봄 시설 이용에 있어 형태 변화, 기업복지의 변화 등의 수 많은 변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5) 취업자 수 관련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자 비율로 향후 직업의 변화에 대해 거시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고숙련 직업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나, 저숙련 단순 노동자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기술진보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의 전문직의 고용이 증가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대체 가능한 직종(판매종사자, 단순노모 종사자 등)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 2018: 9)

3)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2018). “휴식이 있는 삶,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내용을 요약·발췌함.

〈표 II-2-13〉 직업별 취업자수 전망(2016-2030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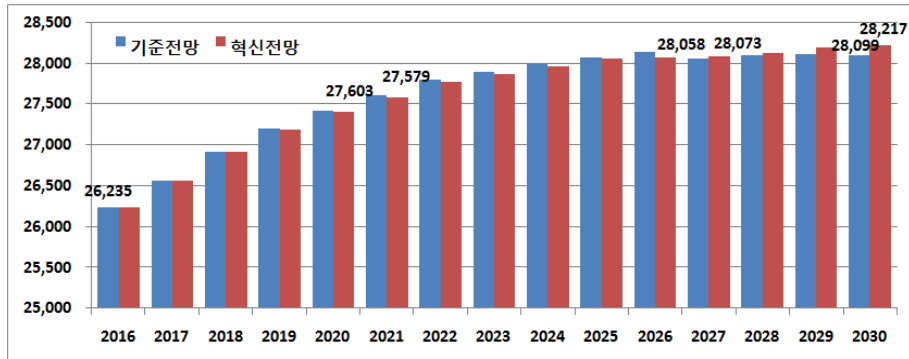
직업 명	취업자			취업자 증감		
	2016년	기준전망	혁신전망	기준전망	혁신전망	혁신-기준
전 체	26,235	28,099	28,217	1,863	1,982	119
관리자	331	321	332	-10	2	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323	6,167	6,754	844	1,431	587
사무종사자	4,519	4,904	4,979	384	460	76
서비스종사자	2,815	3,160	3,194	345	378	33
판매종사자	3,088	3,205	2,971	117	-117	-234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199	951	957	-249	-243	6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365	2,397	2,458	33	94	6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158	3,340	3,151	182	-7	-189
단순노무종사자	3,437	3,653	3,421	217	-16	-233

출처: 고용노동부(2018).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2018. 3.8 보고서). p. 9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취업자수가 증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 결과, 2030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2만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초기 디지탈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취업자수는 기준전망보다 낮을 수 있으나, '27년 이후에는 성장률 효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고용노동부, 2018:6).

〈그림 II-2-13〉 기준전망과 혁신전망 취업자수 변화

단위: 천명, %



출처: 고용노동부(2018).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2018. 3.8 보고서). p. 6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전망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청년층 인구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에 비해 장년층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II-2-14〉 성별/연령별 경제활동 인구

단위: 천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				증감				연평균증가율			
	'11	'16	'21	'26	'11- '16	'16- '21	'21- '26	'16- '26	'11- '16	'16- '21	'21- '26	'16- '26
전체	25,389	27,418	28,865	29,218	2,029	1,446	353	1,800	2	1	0	1
청년	4,229	4,224	4,528	3,990	105	194	-538	-344	1	1	-3	-1
중년	16,106	16,143	15,749	15,127	37	-395	-621	-1,016	0	-1	-1	-1
장년	5,054	4,057	4,922	5,693	-997	865	771	1,636	-4	4	3	3
남성	14,869	15,836	16,452	16,517	966	617	65	682	1	1	0	0
청년	2,054	2,103	2,212	1,946	49	108	-266	-157	1	1	-3	-1
중년	9,807	9,675	9,319	8,878	-132	-356	-441	-797	0	-1	0	-1
장년	3,008	4,057	4,922	5,693	1,049	865	771	1,636	6	4	3	3
여성	10,520	11,583	12,412	12,701	1,062	830	288	1,118	2	1	1	1
청년	2,175	2,230	2,316	2,044	56	86	-272	-186	1	1	-3	-1
중년	6,299	6,468	6,430	6,249	169	-38	-181	-219	1	0	-1	0
장년	2,046	2,884	3,667	4,408	838	782	741	1,523	7	5	4	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EISM 미시모의실험 결과

출처: 이시균 외(2016).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 한국고용정보원, p.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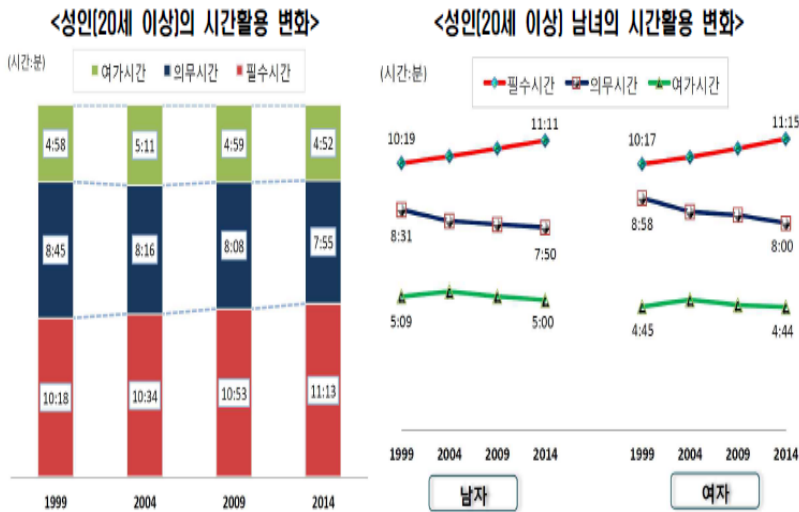
라. 문화: 생활방식 및 가치관

1) 여가생활 시간활용

본 절에서는 통계청이 5년마다 한번씩 실시하는 전국민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시간 중 필수시간은 수면, 식사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시간, 의무시간은 일, 가사 노동 등의 활동시간, 여가시간은 TV, 독서 와 같은 취미 활동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향후 2040년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추정해볼 수 있는 자료로 육아지원정책의 환경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성인 20세 이상의 시간활용 변화를 살펴보면, 1999년에 비해 2014년 필수시간은 55분 증가, 의무시간은 50분, 여가시간은 6분 감소하였다. 필수시간 증가는 식사 및 간식, 외무 및 건강 관리 같은 기타 개인유지시간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통계청, 2016). 남녀별 시간활용 변화는 여전히 차이가 있지만 그 격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2-14] 성인 시간활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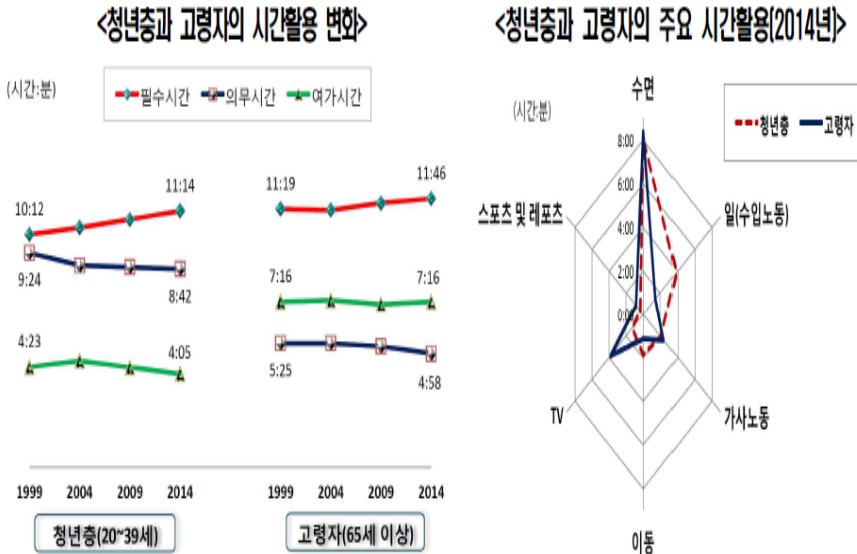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6).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1999-2014년), p.3

다음으로 청년층(20-39세)에서는 1999년에 비해 2014년에 비해 필수시간은 증가하고, 의무시간과 여가시간은 늘어났다. 주로 수면, 식사 및 간식, 기타 개인유지 시간이 늘어나서 필수시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에서도 1999년에 비해 2014년에 필수시간은 늘어난 반면, 의무시간은 감소하였다. 1999년 이후 청년층의 수면시간 증가로 고령층과의 수면 시간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통계청, 2016).

[그림 II-2-15] 청년층/고령자 시간활용 변화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6).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1999~2014년), p.4

이 같은 결과는 청년층의 경우 아직까지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과 여가보다는 노동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기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남성보다 여성이 여가 시간 할애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육아에 남성보다 여성이 참여시간이 길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 현재까지의 변화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우나 남녀간의 여가시간 격차가 줄 것인가, 넓어질 것인가, 일보다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이 많아지거나 동등해질 것인가 등등은 육아지원정책의 변화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큰 틀에서 뿐 아니라 육아의 형태 변화와 유관하기 때문이다.

2) 결혼에 대한 인식

미래의 출산 환경과 양육환경에 대하여 예측하기 위해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참고하였다.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을 물어본 결과, 2015년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74.5%이었으나 2018년에는 58.8%로 감소하였다. 연령별로는 20-24세 미혼남성의 경우 2015년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경우가 79.5%이었으나

2018년에는 61.1%로 줄었으며, 25-29세에서도 79.3%에서 60.1%로 감소하였다. 30-34세의 경우에는 74.1%에서 65.0%로 20대에 비해 감소폭은 적었으나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줄었다.

미혼 여성의 경우 결혼의향을 물어본 결과, 2015년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경우가 64.7%이었으나 2018년에는 45.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24세에서 결혼 의향이 71.6%에서 44.4%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대졸 이상의 여성의 경우 2015년에는 결혼 생각이 있는 경우가 67.3%이었으나 2018년에는 49.3%로 줄었으며, 대학재학의 경우 65.7%에서 39.6%로 대체적으로 대학생 이상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대체적으로 남녀를 불문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낮은 연령대일수록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비중이 큰 폭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2-15〉 미혼남성 결혼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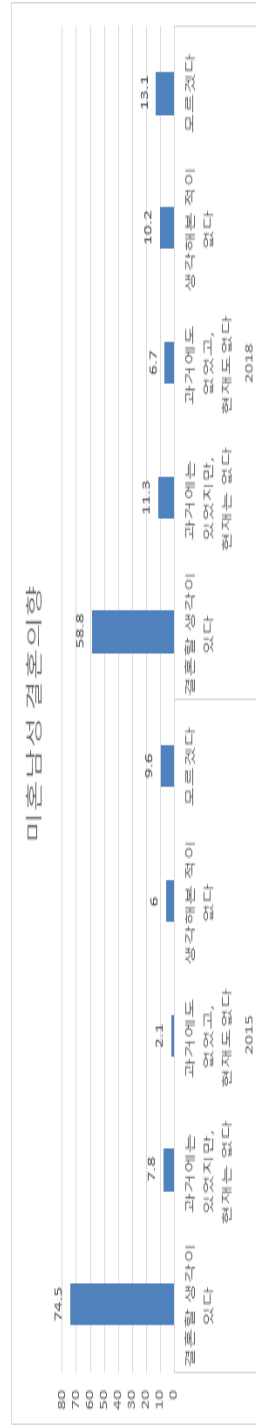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15					2018						
	응답자수 (명)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없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	모르겠다	응답자수 (명)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	모르겠다
소계	1,096	74.5	7.8	2.1	6.0	9.6	1,140	58.8	11.3	6.7	10.2	13.1
20~24세	365	79.5	2.7	2.2	9.6	6.0	351	61.1	5.7	8.3	13.0	11.9
25~29세	285	79.3	4.2	2.5	6.0	8.1	325	60.1	10.5	7.1	11.6	10.6
30~34세	220	74.1	12.7	0.5	3.2	9.5	194	65.0	9.5	4.3	6.2	14.9
35~39세	138	65.9	15.9	2.9	2.9	12.3	153	51.2	15.5	3.8	9.1	20.5
40~44세	89	52.8	16.9	4.5	1.1	24.7	117	47.7	27.7	8.0	5.7	10.8
고졸이하	283	69.3	12.0	1.4	5.3	12.0	312	55.6	15.7	7.5	11.1	10.1
대학재학	289	80.6	2.4	2.8	9.3	4.8	295	60.6	5.5	7.3	12.4	14.2
대졸이상	524	74.0	8.6	1.9	4.6	10.9	533	59.7	11.9	5.8	8.3	14.2
취업	652	74.4	9.7	1.4	4.6	10.0	701	60.6	11.6	7.0	7.8	13.0
여부별	443	74.7	5.2	2.9	7.9	9.3	439	55.8	10.8	6.2	14.0	13.2

자료: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2015, 2018)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20)

〔그림 II-2-16〕 미혼남성 결혼의향



출처: 표 II-2-15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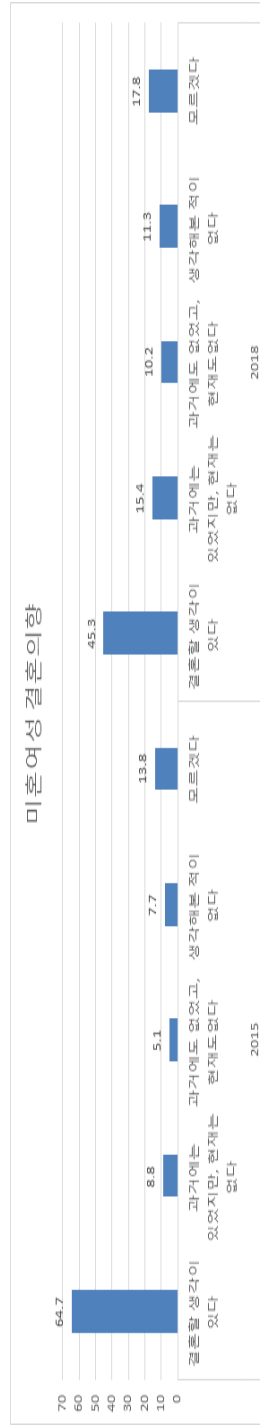
〈표 II-2-16〉 미혼여성 결혼의향

구분	2015					2018						
	응답자수 (명)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없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	모르겠다	응답자수 (명)	결혼할 생각이 있다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	모르겠다
소계	1,287	64.7	8.8	5.1	7.7	13.8	1,324	45.3	15.4	10.2	11.3	17.8
연령별												
20~24세	517	71.6	4.3	2.3	10.8	11.0	477	44.4	13.2	10.7	15.4	16.3
25~29세	378	74.3	8.2	4.8	3.4	9.3	399	55.7	12.9	10.2	7.9	13.4
30~34세	227	54.6	8.4	9.3	5.3	22.5	205	47.4	14.0	5.8	10.7	22.0
35~39세	106	39.6	19.8	7.5	6.6	26.4	149	31.6	24.7	10.9	6.9	26.9
40~44세	59	25.4	33.9	11.9	16.9	11.9	95	23.8	25.3	15.8	12.8	22.2
고졸이하	164	49.4	22.0	10.4	6.7	11.6	182	33.7	18.0	13.0	12.5	22.9
대학재학	274	65.7	7.7	3.6	11.3	11.7	253	39.6	17.3	10.4	17.1	15.6
대졸이상	849	67.3	6.6	4.5	6.7	15.0	890	49.3	14.3	9.6	9.4	17.4
취업	816	64.8	10.3	5.1	5.1	14.6	897	47.5	15.1	9.6	10.6	17.3
여부별												
비취업	471	64.3	6.4	4.9	11.9	12.5	427	40.7	16.1	11.5	12.8	18.9

자료: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2015, 2018)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20)

〔그림 II-2-17〕 미혼여성 결혼 의향



출처: 표 II-2-16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3) 양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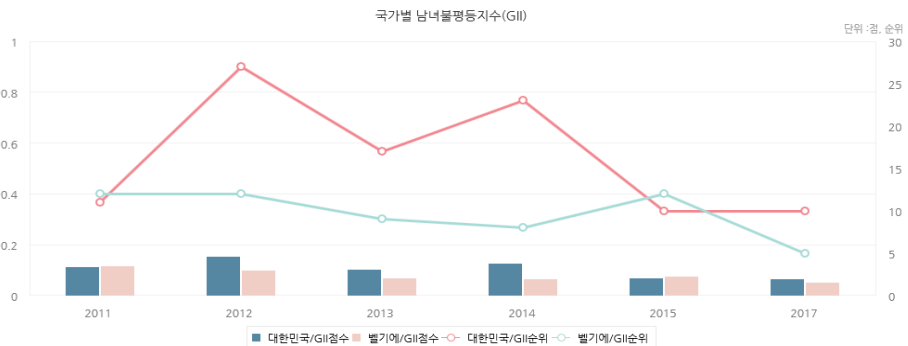
양성평등은 그 국가의 사회전반 문화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이에 국제적으로는 이를 수치화하여 매해 발표하고 있다. 우선 남녀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는 UNDP가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를 통해 2010년부터 발표하는 지수로, ① 생식 건강, ② 여성 권한, ③ 노동참여 영역에서 불평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간개발의 손실을 측정하고 있으며, 기존 여성관련 지수로 발표하던 '여성권한척도(GEM)'와 '남녀평등지수(GDI)'를 대체한 지수이다. 남녀 불평등지수는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한 상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증감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전체 189개 국가 중 10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위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2-17〉 남녀불평등지수

연도	순위/대상	점수
'17	10 / 189	0.063
'15	10 / 188	0.067
'14	23 / 152	0.125
'13	17 / 152	0.101
'12	27 / 148	0.153
'11	11 / 146	0.111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인출일: 2019. 5. 30)

〈그림 II-2-18〉 국가별 남녀불평등지수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인출일: 2019. 5. 30)

성격차지수(GGI: Gender Gap Index)는 2006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로 경제, 정치, 교육, 건강에 대한 성 격차를 통해 성 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지수이다. 점수가 1이면 완전 평등(no inequality),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하며, 성격차지수(GGI)는 각 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수준(Level)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 격차(Gap)만 평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격차지수는 점수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순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표 II-2-18〉 성격차지수

연도	순위	점수
2018	115/149	0.657
2017	118/144	0.65
2016	116/144	0.649
2015	115/145	0.651
2014	117/142	0.64
2013	111/136	0.635
2012	108/135	0.636
2011	107/135	0.628
2010	104/134	0.634
2009	115/134	0.615
2008	108/130	0.615
2007	97/128	0.641
2006	92/115	0.616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인출일: 2019. 5. 30)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지수를 살펴보도록 한다. 양성평등지수는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의 기회, 교육, 건강,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 정치활동의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점수가 0이면 완전 평등한 상태(no inequality), 1이면 완전 불평등 상태를 의미한다. 1995년 우리나라 양성평등지수는 0.28이었으나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0.063으로 평등한 상태로 가까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양성평등한 국가로 알려진 여타의 국가들과도 그 격차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I-2-19〉 양성평등지수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시아	한국	0.277	0.191	0.107	0.095	0.090	0.081	0.076	0.067	0.063	0.063	
	이스라엘	0.244	0.197	0.173	0.143	0.137	0.133	0.124	0.107	0.099	0.098	
	일본	0.156	0.135	0.146	0.118	0.117	0.126	0.127	0.125	0.118	0.106	0.103
	타이	0.631	0.591	0.564	0.418	0.374	0.360	0.348	0.340	0.326	0.316	0.317
북아메리카	캐나다	0.184	-	0.132	0.121	0.113	0.110	0.107	0.104	0.093	0.092	
	멕시코	0.508	0.492	0.430	0.399	0.390	0.367	0.363	0.358	0.348	0.343	
	미국	0.305	-	0.264	0.242	0.237	0.227	0.222	0.206	0.189	0.189	
남아메리카	칠레	0.478	0.435	0.389	0.358	0.352	0.346	0.330	0.327	0.325	-	
	오스트리아	0.186	0.150	0.118	0.103	0.099	0.095	0.086	0.084	0.083	0.077	
	벨기에	0.162	0.122	0.104	0.078	0.074	0.070	0.065	0.057	0.052	0.047	
	체코	0.252	-	0.153	0.135	0.133	0.132	0.137	0.137	0.133	0.129	
	덴마크	0.102	0.076	0.064	0.050	0.047	0.045	0.042	0.042	0.042	0.040	
	에스토니아	0.387	0.282	0.213	0.158	0.163	0.157	0.153	0.156	0.137	0.128	
	핀란드	0.101	0.085	0.088	0.071	0.067	0.065	0.063	0.061	0.061	0.058	
	프랑스	0.220	0.192	0.157	0.124	0.122	0.108	0.107	0.104	0.104	0.100	
	독일	0.156	0.130	0.117	0.092	0.088	0.085	0.078	0.075	0.071	0.065	
	그리스	0.286	0.223	0.181	0.150	0.141	0.129	0.126	0.122	0.121	0.115	
유럽	헝가리	0.322	0.288	0.260	0.256	0.263	0.262	0.263	0.255	0.260	0.259	
	아이슬란드	0.184	0.148	0.125	0.088	0.087	0.082	0.078	0.074	0.067	0.062	
	아일랜드	0.203	0.201	0.192	0.162	0.147	0.144	0.137	0.135	0.131	0.109	
	이탈리아	0.198	0.178	0.175	0.122	0.119	0.116	0.091	0.089	0.090	0.087	
	라트비아	0.411	0.276	0.217	0.201	0.199	0.186	0.183	0.197	0.195	0.196	
	리투아니아	0.326	0.281	0.185	0.159	0.163	0.137	0.135	0.131	0.128	0.123	
	룩셈부르크	0.200	0.175	0.156	0.121	0.103	0.106	0.082	0.078	0.071	0.066	
	네덜란드	0.114	0.096	0.083	0.050	0.047	0.047	0.046	0.046	0.045	0.043	
	노르웨이	0.121	0.108	0.085	0.065	0.062	0.060	0.057	0.054	0.052	0.050	
	폴란드	0.258	0.205	0.164	0.167	0.152	0.150	0.149	0.146	0.138	0.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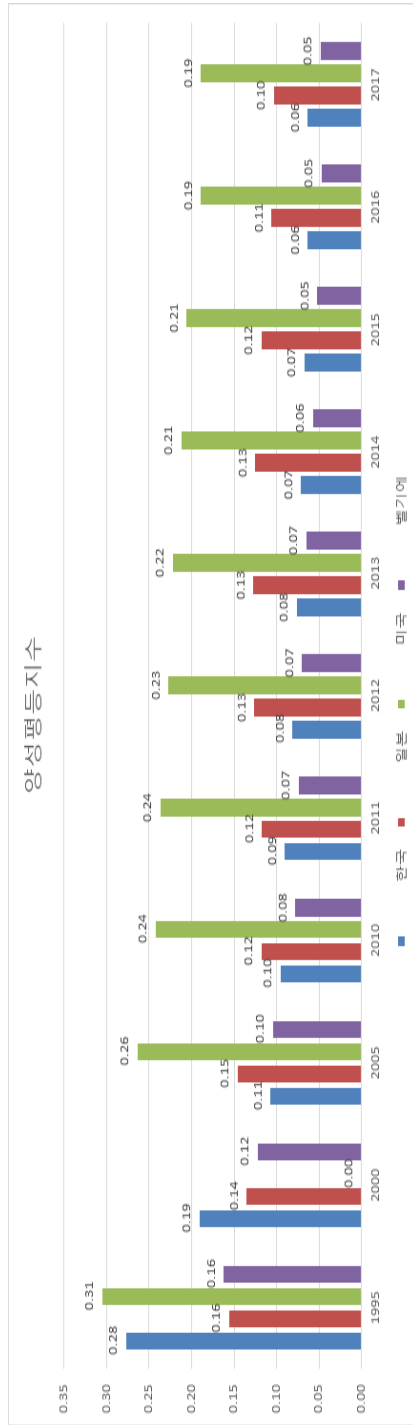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포르투갈	0.244	0.209	0.183	0.132	0.121	0.122	0.108	0.105	0.095	0.088	0.088
슬로바키아	0.248	0.219	0.189	0.198	0.196	0.187	0.186	0.187	0.185	0.180	0.180
슬로베니아	0.246	-	0.139	0.125	0.075	0.070	0.070	0.063	0.061	0.056	0.054
스페인	0.157	0.119	0.117	0.104	0.099	0.095	0.092	0.087	0.083	0.080	0.080
스웨덴	0.090	0.061	0.052	0.048	0.047	0.046	0.045	0.045	0.044	0.044	0.044
스위스	0.117	0.094	0.073	0.057	0.056	0.053	0.048	0.046	0.044	0.040	0.039
영국	0.237	0.215	0.206	0.172	0.164	0.160	0.154	0.148	0.133	0.119	0.116
오스트레일리아	0.180	0.160	0.139	0.133	0.129	0.127	0.122	0.121	0.118	0.111	0.109
뉴질랜드	0.222	0.190	0.188	0.177	0.170	0.167	0.163	0.158	0.152	0.146	0.136

자료: OECD 양성평등지수

출처: 통계청(<http://kosis.kr/index/index.do>)(인출일: 2019. 5. 30)

[그림 II-2-19] 양성평등지수



출처: 표 II-2-19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함.

마. 에너지 및 환경

환경적 요인은 미래 사회 예측에 있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다. 미래 사회 환경에 있어 공기 질 내지 주변의 자연 환경의 상태는 출산 선택과 육아 형태를 결정지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나라 에너지원 변화 추이를 2000년대부터 살펴보면, 원자력은 2000년 이후 에너지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다시 4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석탄은 대체적으로 30%대를 유지하다가 2016, 2018년에 40% 이상으로 약간 상승하였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는 다시 30%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체 에너지는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지속적으로 에너지원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환경 정화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강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II-2-20〉 에너지원 변화 및 추이

단위: %

연도	원자력	석탄	유류	LNG	수력	집단/대체
2000	40.9	36.6	10.0	10.6	2.1	-
2002	39.0	39.0	8.0	13.0	2.0	-
2004	38.0	37.0	5.0	16.0	2.0	1.0
2006	39.0	37.0	4.0	18.0	1.0	1.0
2008	36.0	41.0	2.0	18.0	1.0	2.0
2010	31.0	42.0	3.0	20.0	1.0	3.0
2012	34.0	38.9	3.4	21.2	0.3	2.2
2014	36.6	37.5	1.9	20.5	0.3	3.3
2016	37.5	43.3	0.7	13.6	0.7	4.2
2018	39.0	40.9	0.6	13.0	0.8	5.6
2020	44.0	36.9	0.5	10.5	1.1	6.9
2022	47.1	32.8	0.5	10.4	1.2	8.0
2024	48.5	31.0	0.5	9.7	1.3	8.9

자료: 한국전력「전력통계속보」, 산업통상자원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석:

* 석탄, 유류, LNG는 화력발전에 속함

* 집단/대체(열병합, 신재생에너지)는 2004.1로부터 수력 및 증유로부터 분리됨

* 소수력은 대체에너지로 포함되다 2006년 이후 수력으로 분류

* 2010년까지의 데이터는 전력통계속보(한국전력)를 근거로 함

* 2011년부터의 데이터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망치임(수력은 양수발전량 임)

출처: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인출일: 2019. 5. 30)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LNG 비중은 23.1%(17년) → 34.5%(30년)로 증가하고, 원전·석탄비중은 75.7%(17년) → 64.4%(30년)로 축소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표 II-2-21〉 발전량 비중 전망

단위: %

연도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석유	양수	계
2017	30.3	45.4	16.9	6.2	0.6	0.7	100
2030	23.9	40.5	14.5	20.0	0.3	0.8	100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p.44
 현행 전력시장제도와 '17년 발전용 연료비 기준

최근 공기 질과 관련하여 육아정책과 관련한 대표적인 부분은 미세먼지라고 할 것이다. 한국의 미세먼지 실태를 보면, 2005년까지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OECD 나라와 비교시, 2010년 이후부터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량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미세먼지는 놀이의 방식, 육아용품, 육아 형태 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더욱 주목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그림 II-2-20〕 미세먼지 현황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70215159600009>(인출일: 2019. 5. 30)

최근 들어 더욱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화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2030년까지 미세먼지 오염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먼지의 총량을 약 62%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석탄·LNG발전의 비용격차 축소, 30년 이상된 석탄발전의 보철 가동중단, 석탄→LNG 연료 전환 등 신규대책을 마련하여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방출량을 2022년에는 40%, 2030년에는 6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표 II-2-22〉 연도별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전망

단위: 만톤

구분	'17년	'22년	'30년
미세먼지(PM 2.5)	3.4	1.9 (44% ↓)	1.3 (62% ↓)
오염물질	17.4	9.4 (46% ↓)	6.5 (62%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201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p.45

바. 과학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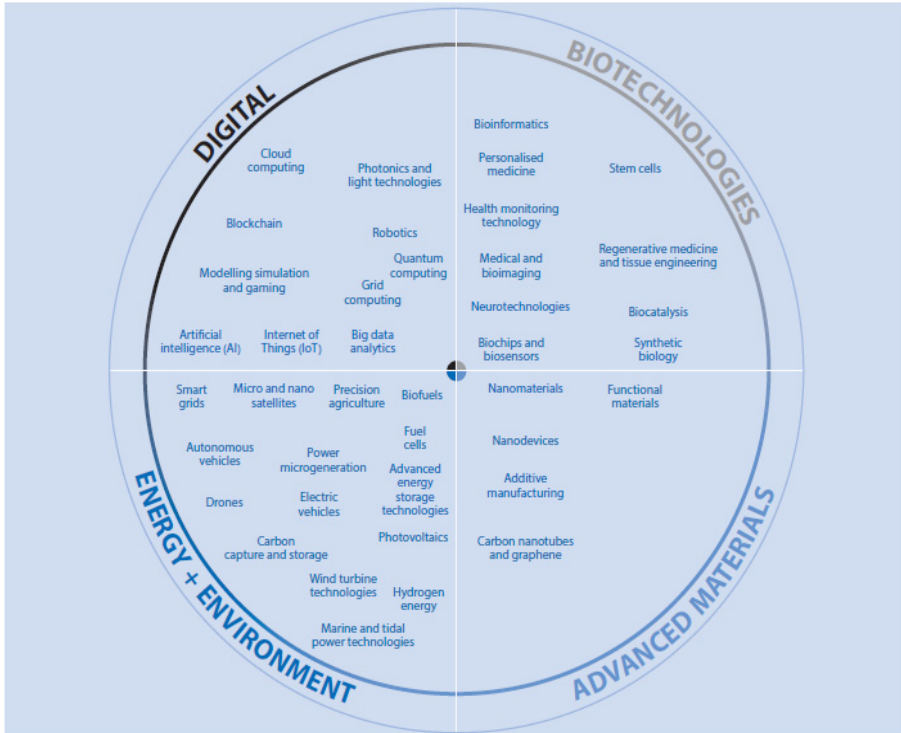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과학기술 분야이다. 과학기술의 변화는 미래 직업의 형태, 교육의 형태, 육아의 방식 등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OECD는 미래사회 기술의 40가지 키워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Digital), 바이오기술(Bio-technologies), 에너지환경(Energy+ Environment), 선재물질(Advanced materials)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네 가지의 항목별로 핵심 기술들을 선정한 바 있다.

그 중 10가지 주요 기술은 인터넷 관련(internet of things), 빅데이터 분석(big data analytic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뉴로기술(neurotechnologies), 나노 소형 위성(nano-microsatellites), 나노물질(nanomaterials), 첨삭 가공(additive manufacturing), 선재 에너지 저장 기술(advanced energy storage technologies),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 블랙체인(blackchain) 인데 현재에도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미래

사회의 직업군을 결정짓거나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생활 방식의 변화를 견인하는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림 II-2-21] 미래 과학기술 주요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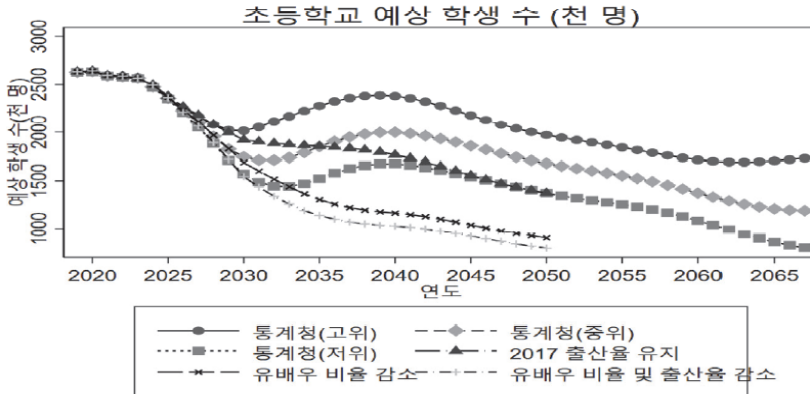


출처: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6, p. 79

사. 보육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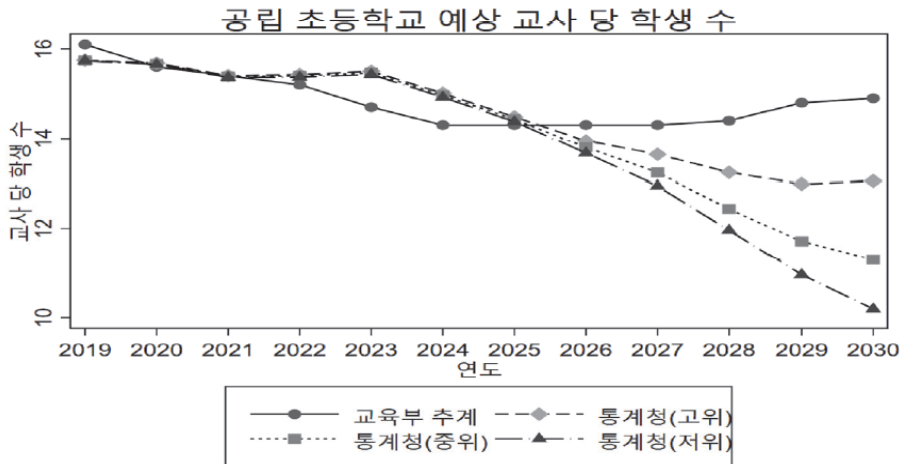
한편, 인구의 감소는 교육에 필연적 영향을 준다. 인구의 감소로 우선 초등학교 학생수는 점차 급감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이철희, 2019). 동 자료에 의하면 미래 인구가 통계청의 저위 추계 그대로 실현된다고 가정할 경우 초등학교 학생수는 2025년에는 235만명, 2030년에는 157만명, 2050년에는 137만명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점차로 감소하여 2030년 12명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 바 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 수 역시 감소 추세로 예상된다.

[그림 II-2-22] 초등학교 예상 학생수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제1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2019. 4. 12일자),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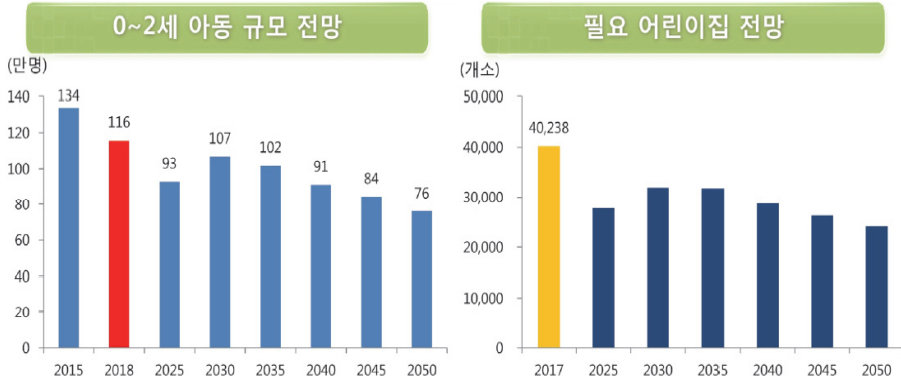
[그림 II-2-23] 공립초등학교 예상 교사 당 학생 수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제1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2019. 4. 12일자), p.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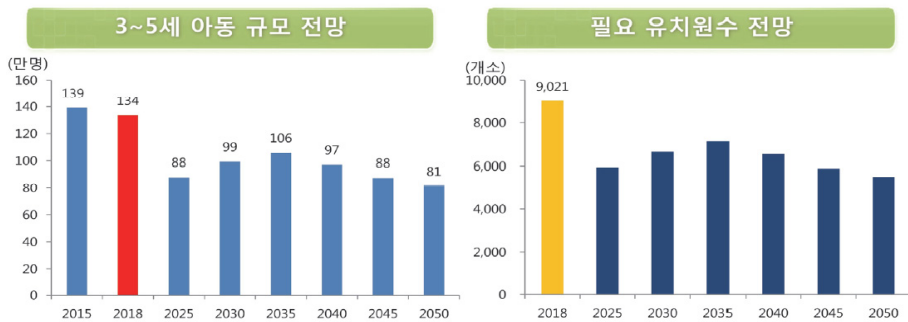
한편, 0-2세 아동 수 추계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수요를 전망한 결과 필요 어린이집 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삼식, 2019). 유치원 또한 마찬가지이다. 3-5세 아동수가 2050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유치원 수요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림 II-2-24] 필요어린이집 전망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제1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2019. 4. 12일자, p. 49)

[그림 II-2-25] 필요유치원 전망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제1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2019. 4. 12일자, p. 49)

아. 소결

본 절에서는 2040년 예상되는 한국 사회 각 분야의 환경을 기존 자료를 통해 예상해보았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각 분야의 미래 전망을 종합하면 저출산 고령화 기조의 심화, 근로 시간 축소로 인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의 증가, 환경 악화로 관련 정책의 다각적 노력, 과학 기술의 급진적 변화로 인한 미래 환경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사회환경적 모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2-23〉 2040년 인구사회변화와 육아지원정책 환경 예측

STEEP 및 STEEPER에 의한 구분	본 연구의 동인 구분	2040년 예상되는 육아지원정책 환경 예측
사회(society)	인구 및 가족	- 저출산 현상 심화되다가 출산율은 2030년 이후 다소 반등 - 전체적인 인구수는 감소 예상 - 다양한 가족형태의 모습 확산: 1인가구 증가, 한부모 가족의 증가 예상
	가치관 및 생활방식	- 결혼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 - 청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여가 활용 시간이 적음 - 양성평등 인식이 다른 국가보다 낮은 수준
	보육 및 교육	- 영유아 기관 재원생 수 및 초등학교 학생 수 급감
정치(politic)	정치	- 20대, 30대 정치 참여 저조 현상 강화 혹은 약화(정확한 예측 불가능)
경제(economy)	노동 및 경제	- 일자리 다양화 - 여성 경제활동 참가 증가 예상 - 저성장 유지 - 근로시간 축소
환경과 자원(ecology)	에너지 및 환경	- 원자력 증대, 석탄 에너지 개발 감소 - 미세먼지 증가로 감소 대책 강화
기술(technology)	과학기술	- 다양한 기술의 진보로 직업군이 다양해짐 - 육아 방식에 있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

3.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주요 영향요인

가. 선행연구 분석

1) 미래 사회의 변화와 육아지원정책 수립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는 미래 사회 연구들(KDI, 2010)에서는 향후 사회의 변화에 대해 인구구조의 고령화, 가족유형의 변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온난화와 자원고갈, 세계경제의 지형변화, 정치환경 다원화, 여가문화의 가치 증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창환(2014)은 미래 사회에서 유아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변화, 글로벌화, 사회양극화, 과학 및 정보기술 발달의 가속화 등을 제시하면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에 있어 역량 강화를 중심적 개념으로 끌어올릴 것을 역설한 바 있다.

한편 미래 연구는 정책적으로 제대로 반영되거나 활용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진다는 연구가 존재한다(서용석, 2016). 그 이유는 미래 연구 자체의 한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활용의 어려움, 법적 제도화 작업의 어려움 등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단기적이고 분절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계획하고 나열하기에 미래 연구가 활용될 여지가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래 정책 비전의 제시가 구체적으로 활용된 예도 존재한다. 참여정부의 'vision 2030' 보고서(정부·민간합동작업단, 2006)는 현재까지 그 이후의 정권의 미래 정책 방향성을 설계함에 있어 중심축의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본 보고서에서 그간 한국의 대내적 환경 변화, 국내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봄과 동시에 정책 수요자의 미래 사회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후 정책 대상별로, 정책별로 2030년의 비전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 설정에 큰 기여를 하였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 의하면 미래 사회 변화 중 복지 영역, 특히 아동 영역은 사회투자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불평등 해소, 출발선이 동일한 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육아지원분야와 교육 분야를 아우른다. 비전 2030이 제시된 이후 현재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아동 중심의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실현되고 있는지, 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수립은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 모색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인구 사회의 거시적 변화와 미래 대응

사회 변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은 쉽지 않지만, 그 변화의 방향성과 흐름을 예측하고, 향후 영유아 양육 가구의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이 분명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하는 현 상황에서 특히 육아지원정책은 국정 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040년 젊은이들이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을 자신 삶의 계획안에 실현할 수 있도록, 인구와 사회의 변화 흐름을 반영한 육아지원의 방향 설정과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저출산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하는 현 상황에서 특히

육아지원정책은 국정 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의 사회·경제적 과제에 효과적 대응하려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필수적이다(KDI, 2010)이다.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은 저출산 극복에 왜 국가 정책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지점임과 동시에 목표 지점이기 때문이다.

최윤경 외(2013)의 연구는 육아정책 및 미래예측 연구들이 제시한 제언과 연구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재가 아닌 10년 후 영유아기 부모 및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예측을 중심으로 한 기초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육아와 출산에 대한 조사 및 국내외 미래 예측 연구 비교,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10년 후 미래의 육아지원정책 수요 분석과 예측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인구의 총량보다는 인구의 질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결국 육아지원정책의 질적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조기투자의 일환으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일찌감치 설정하고 가족 형태의 변화 등에 따라 유동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래의 인구 구조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도 유의하여야 한다. 육아지원정책 역시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영역이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 규모 증가를 예측하면서 재정 추계 기반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3) 가족 정책 및 여성정책의 변화

가족정책의 변화는 육아지원정책의 변화를 살펴봄에 있어 전제조건이 되는 영역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육아지원정책이 광의의 가족정책에 포함된다면 근거는 더욱 명확해진다. 여성정책은 육아지원정책과는 다소 상이하지만 육아정책의 방향이 여성이 갖는 의미를 제외하고는 설정되기 어렵기에 가족정책과 함께 살펴볼 의의를 가진다.

이삼식 외(2012)의 연구는 저출산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아동수당 도입, 부모보험, 인력대체개발원 설립 등의 방법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박종서 외(2017)의 연구 역시 미래 가족 변화에 대하여 분

석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 대응 방법으로 지역간 불균형 해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활용, 공공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모델 등을 제안하였다.

문무경 외(2016)의 연구는 한국인의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과거와 현재 가치변화양상을 분석하여 육아지원정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결혼, 출산과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하여 향후 육아정책 방향 수립에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엄밀한 의미의 미래 연구는 아니지만 가족 정책의 변화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자녀에 대한 가치관 조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결과를 내포한다.

김은지 외(2018)의 연구는 가족정책의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향후 아동돌봄 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차 자료 분석과 문헌 연구를 통하여 돌봄 정책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아동 돌봄의 영역은 계층별 분절화가 심화되었고 향후 새로운 공공성 모델이 확립될 때 돌봄 정책이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장혜경(2016)은 2030년 한국의 가족은 인구, 경제, 정치,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환경 변화로 인하여 돌봄 공백 증가, 젠더 역할의 변화, 느슨한 가족관계 등이 특징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섯 가지 가족의 미래 모습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소득보장정책과의 연계, 자녀 돌봄 환경의 지속적 구축, 사회적 돌봄의 실현, 혈연중심 가족 구조에 대한 인식 탈피 등이 미래 가족의 모습으로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수연 외(2017)의 연구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이해와 향후 미래에 대한 전망을 위해 세대별 가치관의 다양성을 탐색하여 미래 추이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미래 세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이 당위적인 것으로 미래 세대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상 저출산 현상도 지속되리라 예상하지만 양보다 질을 선택하여 노동시장과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출산에 대한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명진 외(2011)의 연구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복지 부담과 함께 ‘결혼긴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시나리오 분석방법을 통하여 미래 가족 구성의 변화에 가장 큰 요인은 인구구조의 변화임을 확인한 바 있다.

Daniel & Marcia (2012) 은 미래 가족 변화의 역동적인 모습을 제시하면서 가족의 다양성에 집중하여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하여 다양성의 인정을 전제한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4) 노동시장의 및 교육 환경 변화와 육아지원정책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의 1인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 2인 생계부양자 모델로 복지국가 모델이 변화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인한 공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고 국가의 보육 책임이 전세계적인 흐름이 된 것과는 맥을 함께한다.

2019년 다보스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에 대비하여 일자리 소멸, 새로운 직업군 대비, 소득격차에 대응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정민 외, 2019). 해당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일가정 양립이라는 노동시장의 과제 또한 육아지원정책 변화와 연관성을 가진다. 장선화(2018) 는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 모델이 여성고용률 증가와 저출산 극복에는 성공하였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젠더간 격차가 확대되어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여성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고려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서 나아가 생활시간의 개념을 강조한 일가정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교육의 변화 또한 미래 사회 변화의 중요 의제로 대두된다. 국가 미래전략 수립(KDI, 2010)과 유현숙 외(2011, KEDI) 의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끄는 교육의 방향에서 남북한 통합, 삶의 질 양극화 심화 등에 대응하여야 함을 골자로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자연환경의 개선, 기회의 평등 확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국 육아지원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사회의 양극화 및 기회 불균형 현상은 아동의 애초 출발선에서부터 보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이러한 흐름이 고등 교육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유아, 아동의 시기를 지나 고등교육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아동 시기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육아지원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의 변화 흐름에 부합하

는 양육환경 예측과 지원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최명희(2017)의 연구는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에서 영유아 교사가 지향하여야 할 바를 제시하였다. 한국의 특수한 환경에서 아동 보육과 교육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4차 산업혁명과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이제는 기술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닌 사람과의 융합이 전제되는 사회에서 영유아의 개별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인적 교육으로의 실질적 제안을 제안하였다.

5) 기타 사회 변화와 육아지원정책 변화

우선 주요한 사회 변화로 과학기술의 변화를 손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과 육아라는 양자간의 연결고리는 저출산 현상의 과학기술을 통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육아의 형태 변화가 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과학기술의 변화로 인한 육아지원 정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상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미래 사회 환경 변화와 복지국가의 변화를 논의한 일부 연구에 따르면 기술 혁명은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사회보장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영준 외, 2018). 동 연구는 기술 변화에 따라 사회투자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것과 동시에 사회보호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박창현 외(2018)의 연구는 직접적인 과학기술의 변화와 관련한 연구는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출산 및 양육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이슈 파악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였다. 본 연구는 주거, 교육 환경의 개선을 통해 육아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외에도 노동 형태와 방식의 변화는 육아 방식의 변화를 전인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 외 기타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내외적 요인이 결합된 이슈인 '남북한 통일'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영준 외(2016)의 연구는 2020년 독일식 통일을 가정하여 돌봄서비스의 역할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돌봄서비스가 통일 이후 매우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미래 사회변화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육아지원 정책의 유관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선결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관련 이론적 배경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어 활

용하고자 한다.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한 대표적 연구와 기타 유관 연구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추출한 핵심 동인은 다음과 같다.

〈표 II-3-1〉 육아지원정책 핵심 요인으로 예상되는 지점

구분	예측되는 2040년 변화 모습	2040 육아지원 정책 변화의 주요 동인(영향요인)으로 예상되는 지점
최윤경 외(2013)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경제활동 참가 증가 - 온라인 상담 및 온라인 교육 지원 활용 - 다문화/외국인 유입과 정착 - 인공지능과 로봇 증가 - 가정문화 배려한 근로문화 정착 - 공동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중요하고 증대 될 것임 -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줄어들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 - 가족의 고유성 고려하여야 할 것 <p>* 즉, 출산율과 복지 수준</p>
박창현 외(2018)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위기 증대 - 다양한 교육과정 - 스마트 육아공동체 구축 가능 	교육, 젠더, 주택, 일자리, 노동
기타 육아정책 유관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감소 - 남한중심의 남북한 통일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교육환경의 변화 - 과학기술의 변화와 다양한 일자리 생산 - 느슨한 가족관계 	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화, 저출산, 가족관계의 변화, 통일 등

나. 본 연구에서의 육아지원정책의 범주

일반적으로 육아지원은 자녀 양육을 위한 1) 비용, 2) 서비스, 3) 시간에 대한 지원으로 개념화된다(Lewis J., 2009: 83; 유해미 외, 2015 재인용). 즉, 본 연구는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모습을 도출하기 전에 유해미 외(2015)의 연구를 활용하여 육아지원정책의 범주를 1) 시간지원정책, 2) 비용지원정책, 3) 서비스 정책 4) 기타 정책의 네 가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육아 지원은 양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 부모가 제 1의 양육권자이지만 부모가 돌보지 못할 경우 자녀 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노동의 단절 없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를 위한 시간 지원을 의미함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육 비용 지원은 현금 지원 이외에도 세제혜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이러한 구분은 앞의 미래 환경 변화를 무한히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근거한다. 앞 절에서 도출한 미래의 환경 변화 모습을 바탕으로 이러한 세 가지의 범주로 구

분하여 미래 변화 모습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영유아를 중심으로 2040년 육아 지원정책 모습을 도출하고 일부 정책 과제 도출에 있어서는 초등 저학년을 포함하고자 한다. 세 분야 공통으로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표 II-3-2〉 육아지원정책의 범주

구분	세부내용
현금 지원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제도와 자녀세액공제 등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가정 내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 등)
시간 지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시간,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 등
기타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주: 유해미 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과제. 육아정책연구소, P. 21 내용 중 연구진이 수정함.

III

육아지원정책의 현황 및 주요 계획

01 육아지원정책 현황 및 진단

02 육아지원 관련 주요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핵심 과제

Ⅲ. 육아지원정책의 현황 및 주요 계획

제3장에서는 미래 육아지원정책을 예측하기 위해,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과를 진단한 후, 육아지원 관련 주요 계획의 기본 방향과 세부 정책 과제들을 검토하였다.

1. 육아지원정책 현황 및 진단

육아지원은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 서비스, 자녀돌봄의 시간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1) 현금 및 세제지원, 2) 보육 및 교육 등 서비스 지원, 2) 자녀돌봄 시간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그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가. 현금 및 세제지원

1) 현금지원: 아동관련 수당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6. 10 인출).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도입 이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 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2009년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되며, 특별한 요구를 지닌 아동 및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의 추가적 지원 차원에서 추가 양육비가 지원된다.

가)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85). 지원대상은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모든 아동이며,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으며,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복지로 <http://bokjiro.go.kr>, 2019. 6. 10 인출).

나)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의 도입은 기관보육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 즉 제도 도입 당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차등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기관 미이용 아동의 경우는 지원이 부재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이 더욱 크다는 점에서 추진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8: 66).

지원대상 아동연령은 2009년 도입 당시에는 0~1세 였으나, 2011년에는 2세, 2013년에 3~5세(만 84개월 미만)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소득기준은 제도 도입 당시 차상위계층에서 2013년에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지원액은 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19b: 23).

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급여이다(보건복지부, 2019a: 220).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2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매월 15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7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경증장애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10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10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매월 2만원을 지원한다.

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6. 10. 인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이 지원되며,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하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의 추가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는 자녀 1인당 연 5

만 4,100원의 학용품비가 지원되고, 이와 달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

2) 세제지원

다자녀에 대한 사회적 우대는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2009년부터 다자녀가정에 유리한 소득공제 체계 개편을 거쳐, 2011년부터 다자녀 추가공제가 이루어졌으며, 2014년부터는 이들 추가공제가 기본공제와 통합되어 자녀세액공제제도로 개편되었다(유해미 외, 2015: 83).

가) 자녀세액공제

2014년부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자녀세액공제를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공제대상 자녀”라 함)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을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즉 자녀 1명인 경우는 연 15만원, 2명인 경우는 연 30만원, 3명인 경우는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는 연 30만원, 둘째인 경우는 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는 연 70만원이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나) 자녀장려세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국세청 <https://www.nts.go.kr/> 2019. 6. 14. 인출). 2019년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정부24 <http://www.gov.kr>, 2019. 6. 14. 인출).

〈표 III-1-1〉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2019)

구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홀벌이 가구	2천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수 × 70만원
	2천1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100만 원)×1천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
	2천500만 원 이상 ~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70만 원-(총급여액 등-2천500만 원)×1천500분의 20]

자료: 국세청홈페이지 <https://www.nts.go.kr> (검색일자: 2019년 6월 14일)

단,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의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국세청, 2019a: 13).

다)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지급한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소득세법 시행령」제118조의6제4항)에 지급한 교육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소득세법」제59조의4제3항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법제처 <http://www.easylaw.go.kr>, 2019. 6. 14. 인출).

〈표 III-1-2〉 교육비 세액공제내용(2019)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천세과-245, 2011.4.2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경우만 해당)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자료: 법제처(<http://www.easylaw.go.kr>)(검색일자: 2019년 6월 14일)

교육비 유형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2019)

세액공제		공제 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교육비	본인	대학원, 대학, 시간제과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	전 액	15%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	1명당 연 300만원	
	초·중·고등학생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연 30만원), 교복 구입비(중·고등학생 연50만원)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	등록금, 입학금	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 액	

자료: 국세청(2018). 2018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p. 142.

라) 기타 세제지원

기타 세제지원으로는 대표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취득세와 전기요금을 감액해주고 있다. 다자녀가족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다자녀 가족(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서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을 감액해준다(법제처 <http://www.easylaw.go.kr>, 2019. 6. 14. 인출).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한도는 200만원이다(국세청, 2019b: 74).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는 근로자의 충분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남성 포함)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 시(아이 1명당 1번만 적용, 기업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근로자 인건비를 세액공제할 수 있다. 단, 복귀 후 1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추정되며 적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국세청, 2019b: 329).

출산·보육수당의 경우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비과세된다(「소득세법」제12조 제3호)(법제처 <http://www.easylaw.go.kr>, 2019. 6. 14. 인출).

나. 서비스 지원

1)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며, 2016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보육서비스(종일반, 맞춤형)를 이용할 수 있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6. 인출).

〈표 III-1-4〉 만 0~5세 보육료 지원단가(2019)

단위: 원

자격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단가			
				종일반	맞춤반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454,000	354,000	454,000	681,000
			만1세반	400,000	311,000	400,000	600,000
			만2세반	331,000	258,000	331,000	496,500
			만3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4세반	220,000	-	220,000	330,000
			만5세반	220,000	-	220,000	330,000

자료: 보건복지부(2019c). 2019년 보육사업안내. p. 89.

2)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유아학비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복지

로, 2019. 6. 10 인출). 지원대상은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로서(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6. 10 인출). 지원금액은 어린이집은 22만원, 국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 22만원이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6. 10 인출).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방과후과정 지원금으로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 7만원이 지원된다(e-유치원, <https://www.childschool.go.kr>, 2019. 6. 10 인출).

3)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다(복지로, 2019. 4. 22 인출). 지원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6. 10 인출).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제공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4. 22 인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6. 10 인출). 시간제 아이돌봄은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6. 10 인출).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 확인을 한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소득기준을 초과하

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희귀난치성질환·장애인·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다. 돌봄시간 지원

1)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육아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이다(「근로기준법」 제75조)(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2019. 5. 14. 인출).

2) 휴가/휴직제도

가)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9. 5. 14. 인출).

지원대상은 배우자(아내)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남편)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3~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의무이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출산전후 휴가(급여)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 시에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9. 5. 14. 인출). 이때 사업주는 총 90일의 휴가 기간 중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사용 가능하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고,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유급기간(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도 고용센터에서 월 1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한 금액만큼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유급 기간(60일/다태아 75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한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상한액은 종전 160만 원이었으나, 2019년부터 18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19: 197).

다) 육아휴직제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9. 5. 14. 인출).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서, 연속적으로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휴직기간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기금)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로 한다.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단,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한다.

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을 사용할 시에 지급된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9. 5. 14. 인출).

지원대상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주로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순서는 상관없다.

마)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돌봄 휴직제도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9. 5. 14. 인출).

가족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를 해야 하는 근로자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일부 단축하고 단축한 시간의 급여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일부 보전받을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존재한다. 이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9. 5. 14. 인출).

〈표 III-1-5〉 육아휴직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비교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기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년(분할 및 혼합 사용 가능)	
급여	월 통상임금의 40% (하한 50만 원, 상한 100만 원)	월 통상임금의 60%, 단축기간에 비례
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지급, 신규대체인력 채용 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구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거부시	5백만 원 이하 벌금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보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종료 후 원직 복귀(5백만 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리한 처우 및 해고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종료후 원직 복귀(5백만 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 - 근로조건 서면규정(5백만 원 이하 과태료) - 연장근로 제한(천만 원 이하 벌금)

자료: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검색일자: 2019년 5월 15일)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육아휴직과 동일)를 대상으로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해지므로, 임금, 연차휴가 등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즉, 비례 적용만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사업주는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육아휴직과 동일)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으며(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1년), 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단,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라. 성과 진단

이상에서 살펴본 영유아 대상의 육아지원정책은 그 성과 측면에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이 강화되고, 서비스 부문에서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보육 인프라 확충 목표가 제시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정책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서비스 형평성과 서비스 질적 수준의 개선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대표적으로 누리과정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권 보장 강화 측면에서 돌봄시간 지원 제도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낮고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1) 아동관련 현금지원

자녀를 둔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을 지니며, 다음으로 다른 공적 보육지원은 3세부터 5세아 위주인 반면, 현금수당과 세제혜택은 2세 미만 자녀의 양육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무상보육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출산 포기 또는 지연의 주된 사유가 양육비 부담이 출산 기피 및 지연의 주된 이유로 지적되므로, 양육비 부담 완화 이외에도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기관 이용과 무관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런 점에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은 주목할만한 성과로 보여진다. 향후 지원대상 아동연령의 확대, 자녀수와 소득기준의 적용 등 효과성 제고를 제도 발전 노력과 더불어 가정양육수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개편이 요구된다.

그 밖에도 다양한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의 측면에서 한부모 가족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도 주요 성과로 들 수 있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2017년 13세 미만, 연간 144만원에서 2018년 14세 미만, 연간 156만원으로 확대되었다(보건복지부, 2019: 9). 그 밖에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2%에서 60%로 상향조정하여 비급여성 지원을 강화하였다.

2) 돌봄서비스 지원

돌봄서비스 분야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등으로 양육환경의 변화로 질 높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여 돌봄의 공공성 강화가 요구되나, 공보육 인프라 비율이 OECD 국가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진단된다(관계부처합동, 2018: 16). 또한 공공아이돌봄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은 소홀한 실정이라고 진단한다. 긴급돌봄 요구 시에 친인척의 도움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므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지속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 돌봄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관계부처합동, 2018: 18).

한편 영유아 돌봄 분야의 성과를 평가한 최효미 외(2018) 연구에 의하면, 해당 연령대는 이외 연령대에 비해 재정투자 수준이 높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지원금, 가정양육수당 등 기관보육 지원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가정양육지원과 취약계층 지원이 제한된다고 지적하였다(최효미 외, 2018: 136). 특히 가정내 양육지원의 지역적 격차가 두드러지고 기관보육의 경우에도 질적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가정내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영아기의 경우는 시간제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된다(최효미 외, 2018: 296-297). 또한 지역사회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에 보다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최효미 외, 299). 즉 영유아 대상 보육 및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외에도 지역내 실내외놀이터, 도서관, 체험학습관, 아동 전용체육시설, 등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를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된다(최효미외, 2019: 301).

2018년도 국정과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율 40% 달성을 위한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신축지원단가 2배 이상 인상과 설치기준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을 추진 성과로서 진단하고 있다⁴⁾.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와 표준보육비용 재계측을 통한 보육료 현실화 방안,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시간제보육 확대 등도 주요 성과로 거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5). 보조교사의 경우는 2017년에 4천명에서 2018년에 6천명에 이어, 2019년에는 15,000명의 보조교사를 투입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18a: 5).

이와 더불어 선택권 보장의 측면에서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내실화로 주목할 만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19년에 정부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50%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연간 620시간에서 800시간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 수당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법정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 노력을 추진해왔다(보건복지부, 2018a: 7).

4)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의무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법적 근거 마련 등 추진(보건복지부, 2018: 3).

그러나 다른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간 격차 완화의 경우는 관련 정책 연구 등만 추진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어 시급한 과제로 남겨져 있다. 즉 제3차 중장기보육계획에서는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유치원과의 설치 기준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보건복지부, 2017: 30). 3~5세아 공통적용 누리과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기관유형간의 서비스 질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사 부문의 격차 완화 노력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유해미, 2019: 24). 다시말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좌우되나,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자격, 학력, 경력 등이 다양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가 존재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양성과정의 통합 및 가격체계 일원화를 위한 단계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김은영 외, 2018: 282-284), 양성과정 통합 이전에는 우선적으로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과 재교육 체계의 일원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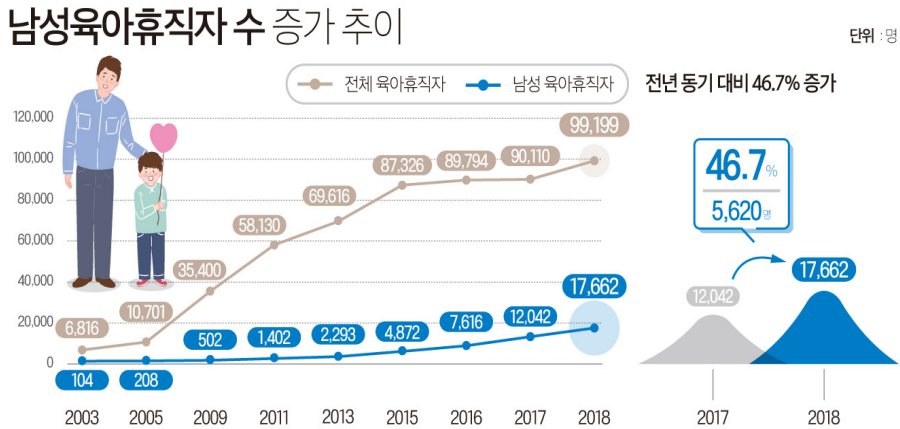
3) 돌봄시간 지원

출산 및 육아휴직 이용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기업의 제도 도입율과 인지도가 낮아 가족친화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된다(관계부처합동, 2018: 35). 즉 중소기업은 인력 운영상 부담이 크고, 비정규직은 재고용 등으로 제도 사용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관계부처합동, 2018: 35).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 노동자 비율은 2014년 46.5%에서 2015년 46.6%, 2016년에는 46.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관계부처합동, 2018: 35).

또한 돌봄시간 지원이 여성고용의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 위주의 제도 이용은 기업 부문에서 여성고용의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완에 따른 남성 이용율 제고 효과에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유해미, 2019: 27). 2017년 기준 육아휴직자는 90,110명이고, 이들 중 남성 육아휴직자 12,042명(13.4%)으로 나타난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남성 육아휴직 이용율 46.7% 증가되었으나, 대기업 위주 제도 이용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2019: 1). 즉 2018년 기준으로 민간부문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는 99,199 명으로 작년 대비 10.1%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7,662명으로 작년 대비 46.7%(5,620명)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의 17.8% 차지한다(고용노동부, 2019: 1).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에서 59.5% 증가하였으나,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대기업 위주 제도 이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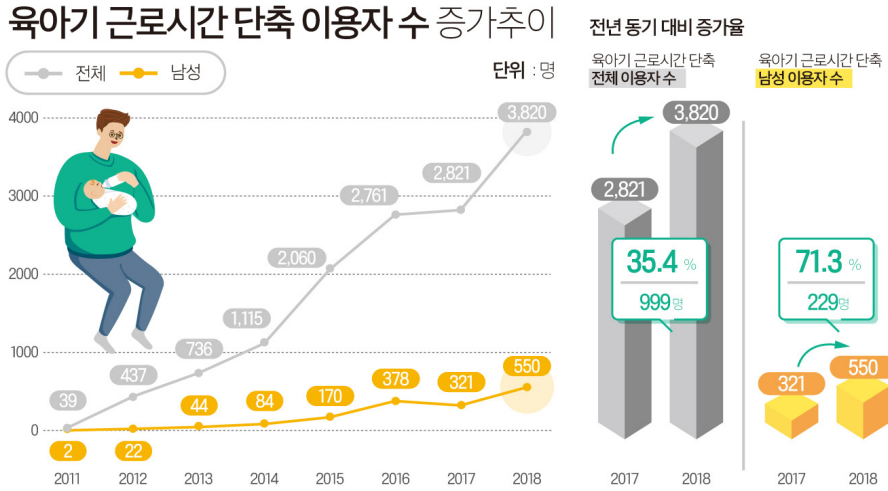
[그림 III-1-1]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2003~2018)



자료: 고용노동부(2019). 보도자료: 소중한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명 돌파(2019. 1. 23). p. 1.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의 경우도 민간부문에서 3,820명으로 작년 대비 35.4%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남성은 14.4%(550명) 차지하여 작년 대비 71.3% 상승하였다. 그러나 기업규모별로 남성 이용자 수는 작년 대비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89.7%,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에서 86.5% 증가하였으나, 대기업 위주 이용 현상 지속되고 있다.

[그림 III-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수 증가 추이(2011~2018)



자료: 고용노동부(2019). 보도자료: 소중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명 돌파(2019. 1. 23). p. 3.

이처럼 돌봄시간 지원 정책의 경우는 보편적 제도 활용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니므로 부모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특히 영아를 둔 가구의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동시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제도 이용에 따른 가구소득 감소로 인해 보편적인 제도 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 등으로 모든 기업 및 직종에 걸친 보편적 활용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들 가구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선택권 보장 노력이 동시에 요구된다(유해미, 2019: 27).

2. 육아지원 관련 주요 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핵심 과제

미래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및 전략의 수립 시에 중단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가장 최근의 주요 계획을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방향 및 전략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세부 추진 과제들을 다루었다.

가. 육아지원의 패러다임 전환과 그 배경

1)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년에 발표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과 비교하여 사회보장의 포괄성·보편성 강화,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서비스 이용체계 연계·조정을 통한 효과성과 체감도 제고를 추구한다고 표명하였다(보건복지부, 2019: 2).

이에 따라 동 계획의 주요 전략으로는 1)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 2)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 3)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제시된다(보건복지부, 2019: 13-14). 즉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하고,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서비스 도입 및 강화*로 보편적 서비스 이용 확대하며, 고용·교육·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체계 강화하고, 부처간 사업 조정·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한다.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연계된 통합적 이용체계로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므로, 돌봄서비스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8년 말에 확정,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에서는 저출산 대응의 패러다임이 출산 장려 위주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b: 3). 기존의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설정한 출산율 목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 주도의 출산장려정책으로 비판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평등을 구현하여 인구변화에 적극대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고 표명하였다.

2019년 2월에 발표된 제3차(2016~2020)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판에서는 저출산 대응의 전략으로 삶의 질의 개선과 성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4). 저출산 대응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해 출산 및 양육비용을 낮추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로 늘리며,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5-6). 또한 혼인, 출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차별없이 보호받는 여건을 확립하고,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며, 일자리와 주거지원을 통해 청년과 여성이 안정된 삶을 누리며 태어난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보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7).

[그림 III-2-1]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안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p. 4.

3) 아동정책기본계획/포용국가 아동정책

2015년에 수립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기 위해, 10년내에 아동 행복도를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 실현기반 조성을 그 목표로 제시한다(관계부처합동, 2015: 18). 이를 위해 아동의 놀이권과 참여권 보장, 건강권 보장, 아동안전, 그리고 차별금지과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의 마련 등을 추진하고, 그 기반으로 아동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그 실행기반으로 제시한다(그림 III-2-2 참조).

[그림 III-2-2]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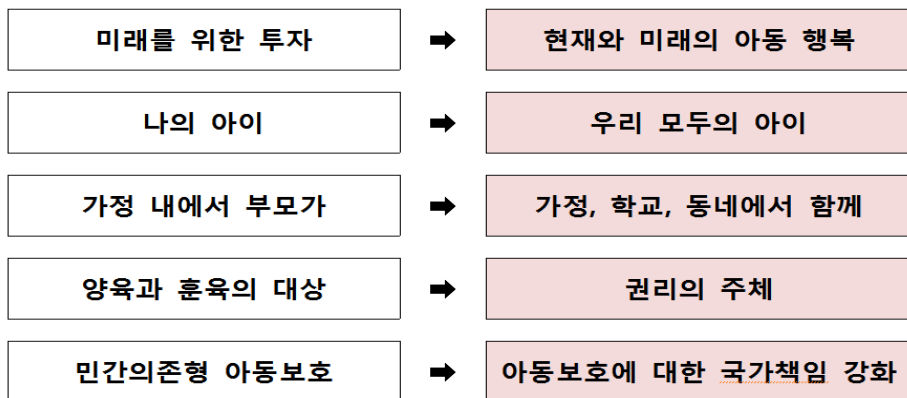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5).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 p. 17.

한편 2019년에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아동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다음의 새로운 접근을 강조한다(관계부처합동, 2019: 12)(그림 III-2-3 참조).

첫째,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체계 구축한다. 둘째, 권리 주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주체적 참여기반 확대한다. 셋째, 아동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치료를 위한 국가와 사회적 자원의 집중 투자한다. 넷째,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노력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기존의 양육부담 완화, 돌봄, 의료비 경감 등 보편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9: 12).

[그림 III-2-3]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향후 방향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p. 12.

4) 건강가정기본계획

2018년 8월에 발표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에 의하면, 가족형태의 변화와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는 점을 들고, 그 변화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8: 5).

[그림 III-2-4]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중점사항

구분	기 존	보 안
비전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교육 작은결혼, 육아문화개선 등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및 가족문화 확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개선 돌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및 체계적인 전달 체계 구축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 p. 7.

5)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18부터 시행되는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서는 한계 및 필요사항으로 무상보육 하에서 맞춤형보육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어린이집 적정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투자와 공공성이 미흡하였으며,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보건복지부, 2017: 8~11). 이에 따라 [그림 III-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지원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질 제고, 부모 양육지원의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8).

[그림 III-2-5] 제3차(2018~2022)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과제



자료: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p. 14.

6)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2018년에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사립유치원의 비상식적인 예산 사용의 개선과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반적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교육부, 2018). 즉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설립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유치원 회계와 개인 생활간의 구분이 미흡하고, 이 경우에도 제재규정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교육부, 2018: 3). 이에 따라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로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림 III-2-6]의 정책 과제 및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8: 4).

[그림 III-2-6] 유아교육 공공성 제고의 추진 방향 및 과제

		< 주요 과제 >	
		과제	추진방안
촉 각 추 진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 운영개시 명령 등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 온라인 입학시스템 안착 	
	국·공립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 ▪ 매입형·장기임대형 등 국공립 형태 다양화 ▪ 공립유치원 신설 원칙 확립 ▪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관리·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 ▪ 고액·대형유치원 우선 감사 추진 ▪ 교육부·교육청 전담팀 운영 	
제 도 개 선	학부모 참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정보공시 내실화 ▪ 학부모 안심유치원 등 확대 	
	투명한 회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 예산의 목적외 사용 시 처벌 강화 ▪ 회계기준 준수 의무화 ▪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사립유치원 교육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자 및 원장 자격 기준 강화 ▪ 설립자 변경 시 질 관리 강화 ▪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및 교원 처우개선 	

자료: 교육부(2018).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p. 4.

세부 추진과제로는 1) 유아의 학습권 보장, 2)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 감독 강화, 4) 학부모 참여 강화, 5) 투명한 회계 운영, 6)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이 제시된다. 유치원 입학원서 접수·추첨·등록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윈스 톱 지원하는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참여 독려하여 학부모들의 입학 편의성 및 입학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한다(교육부, 2018: 7). 또한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고(교육부, 2018: 8),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등을 추진한다(교육부, 2018: 8-11). 또한 유치원 학부모운영위원회와 유치원 정보공시를 내실화하며(교육부, 2018: 12), 유치원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한 후 의무화하고(교육부, 2018: 16), 설립자 및 원장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한다(교육부, 2018: 17).

또한 2018년 발표된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에서는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여 유아 교육 및 실질적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유아 중심의 교육, 사립유치원 행정지원 체계 정비 등의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교육복지정책국, 2018: 8).

[그림 III-2-7]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18~2022)의 비전, 목표, 추진과제



자료: 교육복지정책국(2018).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18~2022). p. 8.

나. 세부 정책과제

1) 돌봄서비스 지원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_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의료비 제로화,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다자녀 지원, 교육비 경감 등이 제기된다. 또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정착하고, 영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시설과 가정내 돌봄의 기반을 확충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19: 5-6).

〈표 III-1-6〉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안)

주요내용 1.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비용)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의료비 제로화,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초등 입학기 전까지 의료비 경감 방안 마련, 건강관리, 다자녀 지원, 출산 및 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 출산친화적 국민연금 및 세제개편 등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성 육아 참여 확대,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지원 확대, 육아휴직 개편 등	(돌봄)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보육의 공공성 강화(종일보육 내실화, 보육품질 향상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온종일 돌봄, 가정내 돌봄 지원, 지역협력체계 구축(지역 단위 양육·돌봄 종합 플랫폼 구축), 아동이 안전한 환경 등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안). pp. 5-7.

나) 건강가정기본계획_돌봄지원

2016년 수립된 당초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지원”이 주요 과제였으나, 2018년 보완계획에 해당과제는 “함께 돌봄체계 구축”으로 변경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과 가족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세부과제로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 16).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1)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확대하고, 2)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가정내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며, 3)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해 함께 돌보는 돌봄공동체를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

다5).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22년까지 매년 450개소를 확충하고, 2022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5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을 매년 500개 학급을 확충하여 이용율 40%를 달성하고자 한다(관계부처합동, 2018: 19)⁶⁾. 또한 당초 수립된 바와 같이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를 통해 부모 대상 종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18: 20).

2018년의 보완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확대하고, 공통평가 항목 적용 등 유치원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보육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가정내돌봄의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실시간 대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가정 내 양육가구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을 추구한다(관계부처합동, 2018: 20-21). 다음으로 돌봄공동체 구축을 위해 읍면동 마을생활단위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지역돌봄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18: 21).

다음으로 가족돌봄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돌봄수당 인상 등을 통한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노력도 추진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22).

한편 모든 아동과 가족을 평등하게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강화 노력이 추진될 계획이다. 즉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상향조정 등을 통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며,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는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산하고자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30).

다) 포용국가 아동정책_민을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는 아동의 돌봄을 위해 1)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보육 서비스 질 제고가 강조되며, 구체적으로는 1) 시간제보육 확대, 2) 공동육아 활성화, 3) 기관 보육서비스 질 제고, 4) 국공립 확충이 세부과제로 제시된다(관계부처 합동, 2019: 25). 즉 가정양육 가구의 긴급·일시적 보육수요 대응을 위해 시간제보

5) 이외에도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서비스 제공이 제시되나, 이 연구는 영유아에 한정하여 논의에서 제외함(관계부처합동, 2018: 19).

6) 2017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2.9%,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은 24.8%(관계부처합동, 2018: 19).

육 시설을 2018년 443개반에서 22년까지 603개반까지 확대한다. 주거지 인근의 돌봄공간에서 이웃들이 함께하는 자녀양육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마을 단위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한다. 기관보육의 경우는 12시간 운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육 과정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공립유치원 조속한 확충으로 공공보육 및 국공립유치원 이용률 40% 목표는 당초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조기에 달성한다.

2) 자녀돌봄 시간 지원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력단절 없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남성의 제도 이용율을 제고하며, 가족친화인증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관계부처합동, 2018: 38-39). 우선 출산·육아기 부모 지원 강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기준 40%에서 50%까지 인상하고, 상한액은 기존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육아기 임금 삭감없는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추진하여 현재 일 2~5시간(주 10~25시간) 단축,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최장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허용도 추진한다(관계부처합동, 2018: 3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고용부 / 신규 임신 전(초)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모색한다. 이들 사업과 더불어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 방안(직종별 대체인력 지원방안). 또한 남성의 휴직휴가제도 확산을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라고 밝히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8: 37). 이들 계획의 추진 여건으로서 중소기업의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족친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사전사후컨설팅 지원 등을 강화한다(관계부처합동, 2018: 39).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주요 계획의 육아지원 관련 방향성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아동의 입장에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안전 등 생존권 보장에서 놀이권

과 참여권 보장에 이르기까지 아동중심성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성평등한 돌봄과 노동이 강조되며, 이를 위한 사회환경의 조성이 강조된다, 즉 일하는 부모의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촘촘한 돌봄서비스의 지원, 양육비용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현금지원의 확대와 보육 교육 이외에도 의료비를 포괄한 비용지원, 그리고 자녀와의 시간을 보장하는 육아휴직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 등이 강조된다. 또한 기관 이용가구 이외에도 가정내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양육지원과 돌봄지원에서 초등학생이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과제로는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의료비를 만 1세 미만 → 조산아 미숙아 중증아동 → 초등입학 전(前) 순으로 확대하고, 영유아의 경우는 공보육 인프라의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고, 초등 방과후 돌봄의 접근성 제고가 제시된다. 또한 성평등한 부모권과 노동권의 보장을 위해 1단계로 육아휴직의 급여 상향 조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1년→2년),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2단계로 남성 육아휴직 사용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제시된다.

결국, 육아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1) 부모권과 노동권의 조화, 2) 지역사회 내 돌봄 생태계 구축, 3) 아동 권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방향 탐색

- 01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영향 요인
- 02 시기별 육아지원 정책환경의 개선 정도와 목표 수준
- 03 2040 육아지원정책의 예상 및 바람직한 방향
- 04 소결: 육아지원정책 영향 요인의 영향력 변화 예측

IV. 육아지원정책의 변화 방향 탐색 : 전문가 조사를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2040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과 세부과제의 도출을 위해 육아지원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변화 요인의 영향력 정도 및 그 세부내용, 주요 영역별 2040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및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1. 육아지원정책 변화의 영향 요인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적 요인을 1) 2019년 현재를 기준으로 미치는 영향력, 2) 2040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3)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와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가장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사유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및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의견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아동 인구가 감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4점 대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40년에 미칠 영향력은 4.6점으로 ’19년에 미칠 영향력(4.3점)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

‘보육기관 및 초등학교 폐업과 폐교 급증’에 대해서는 아동 인구 감소의 영향력 보다는 평가가 다소 낮았다. ‘40년에 일어날 가능성도 아동인구 감소는 4.4점인 반면, 보육기관 및 학교의 폐교는 그보다 낮은 3.5점으로 평가하였다. ‘40년에 미칠 영향력도 아동감소는 4.6점, 보육기관 및 학교의 폐교는 4.0점으로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지역사회 소멸과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는 아동인구 감소나 보육기관 및 학교의

폐교보다는 영향력이 다소 낮게 평가되었는데, '40년에 미칠 영향력은 평균 3.4점이었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 인구 감소의 가능성과 영향력은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보육기관 및 학교 폐교와 지역사회 소멸 및 공동화 영향은 아동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물이므로 아동인구 감소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1〉 저출산 현상

단위: 점, (명)

구분	'40년에 일어날 가능성	'19년에 미칠 영향력	'40년에 미칠 영향력	사례수 (명)
저출산 현상 심화로 아동 인구 감소	4.4	4.3	4.6	(30)
보육기관 및 초등학교 폐업 및 폐교 급증	3.5	3.3	4.0	
지역 소멸과 공동화	3.4	3.0	3.4	(30)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결혼 및 가족구조 변화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19년에 미칠 영향력은 가족유형 다변화가 5점 만점에 4.3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 가족해체 가속화도 4.0점으로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그에 비해 결혼개념 소실은 2.9점으로 영향력 평가가 낮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지 않고 지배적인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부분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40년에는 평균 3.6점으로 결혼 개념이 소실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으며, '40년에 일어날 가능성도 3.4점으로 높아지는 변화로 보고 있었다.

'40년에 일어날 가능성은 가족유형 다변화가 4.4점으로 발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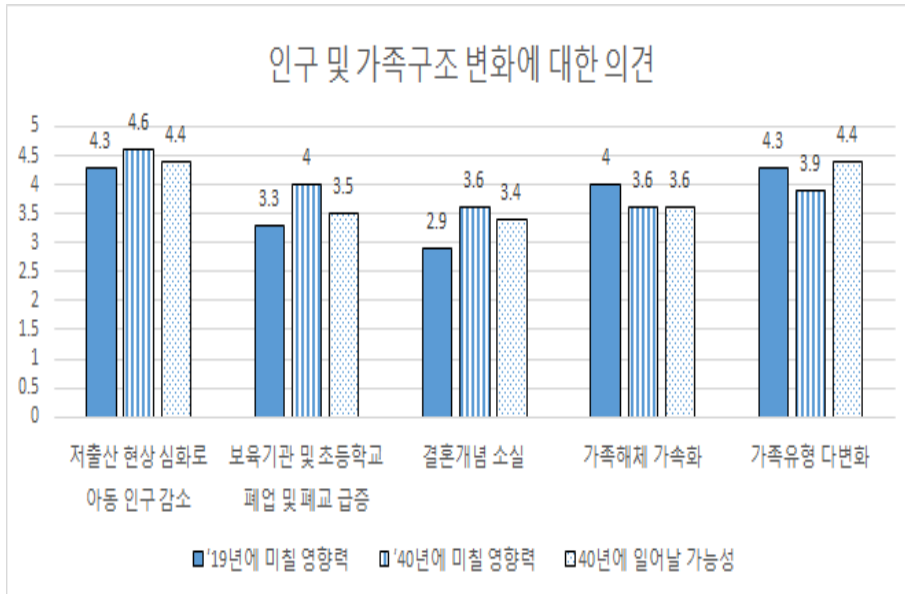
〈표 IV-1-2〉 결혼 및 가족구조 변화

단위: 점, (명)

구분	'40년에 일어날 가능성	'19년에 미칠 영향력	'40년에 미칠 영향력	사례수 (명)
결혼개념 소실	3.4	2.9	3.6	
가족해체 가속화	3.6	4.0	3.6	(30)
가족유형 다변화	4.4	4.3	3.9	(30)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그림 IV-1-1〉 결혼 및 가족구조 변화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라고 응답한 비율은 66.7%,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폐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3.9%로 나타난다.

우선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육아지원정책 적용대상 규모의 감소를 의미하며, 나아가 그 목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원대상의 다양화로 인한 시각지대 발생 등 위험요소의 증대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이 같은 정책규모의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는 양적 확대에서 나아가

서비스 질적 수준을 제고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보육시설의 경우는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해 폐업의 증가는 해당 소요재정의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서비스 질의 제고를 위한 계기로 삼아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축소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도 제기된다. 또한 보육교사 등 돌봄인력 측면에서는 보육시설의 감소가 고용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

지역소멸과 공동화 현상은 아동인구의 감소와 직결되어 있으며, 아동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지역의 경우는 서비스의 지리적 접근성 등의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표 IV-1-3〉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주된 요인 및 그 사유: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 감소

구분	비율(수)
〈저출산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 육아지원 대상(정책대상)의 감소 - 수혜대상 감소로 인한 예산 부담 경감 - 보육시설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인프라 공급 구조 전환 필요성 증대 - 아동인구 감소에 따른 서비스 질 개선 강화 - 대상 감소에 따른 아동 및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강화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서비스와 현금지원 수준 상향 조정 가능성 증대	66.7(18)
〈보육시설 감소와 초등학교 폐교 증가〉 - 보육기관 폐업 및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아동인구 감소에 따라 보육기관 및 초등학교 수요 규모 감소로 관련 예산의 감소와, 그로인한 육아지원정책 영역과 규모의 대폭 축소 가능성 예상 - 유·아동 인구 감소로 인한 폐업 및 폐교 증가를 보육 및 교육의 질 제고(학급당, 보육교사당 돌봄아동 수 감소에 따른 서비스 질 개선)의 계기 마련 필요성 - 육아지원 분야 고용전망이 나빠지면서 보육인력의 공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저하될 가능성 우려 제기 - 인구감소에 따른 경과로서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	23.3(7)
〈지역 소멸과 공동화〉 - 소규모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면, 커뮤니티별로 기관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기관화, 송영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서비스 등 새로운 정책 수요 증대 예상 - 지역소멸은 해당 지역의 아동 인구 감소를 야기하므로 육아지원정책과의 연관성 내포	10.0(3)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음으로 결혼제도는 법률에 기반한 혼인 이외에도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이 제고됨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지원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유형의 다양화와 가족해체의 증대는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돌봄 위기 등이 야기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지원의 다각화의 필요성이 증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표 IV-1-4〉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결혼 및 가족구조의 변화

구분	단위: %(명) 비율(수)
〈결혼 개념 소실〉 - 가족개념의 변화로 육아지원정책 대상의 기준과 범위 확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혼인율 감소 및 그로 인한 출산율 감소 - 다양한 파트너십에 대한 인정범위의 확대로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부부 사이에 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육아지원 수요 증가 전망	6.7(4)
〈가족유형의 다변화〉 - dual-earner families의 증가, 워킹맘 증가에 따른 일·가정 양립 욕구 증가 -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여 혈연 이외(애완동물, 로봇)의 개체들도 가족구성원으로 포함됨에 따라 육아지원정책 개념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증가와 해당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육아지원의 수요 변화 및 정책 틀의 변화 필요성 증대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출현으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 요구 증가 - 육아지원정책의 대상 확대와 내용 다변화에 영향 예상 -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미혼유자녀 가족 등의 증가 및 그에 따른 지원 확대 필요성 증대	36.7(11)
〈가족해체의 가속화〉 - 가족해체와 1인 부모의 자녀돌봄 수요 증대 - 이혼과 핵가족 증가는 자녀양육에 시간적, 경제적 자원의 고갈 및 불안정 초래 - 정성가족 축소 및 가족해체 확대로, 친부친모의 역할을 중심에 둔 여러가지 정책이 많이 흔들리게 될 것이며, 한부모가구, 조손가구, 재혼가구, 결혼이민가구, 노동이민가구 등 수요 다변화에 따른 정책대응 필요성 증대	10.0(3)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나. 경제적 여건 및 사회안전망 수준의 변화

다음으로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19년에 미칠 영향력보다는 '40년에 미칠 영향력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였다. '40년에 일어날 가능성도 5점 만점에 평균 3.4점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주 52시간 정책 시행으로 인해 근로시간 축소가 현실화 되는 시점에서 제도가 정착화될 '40년에 미칠 영향력이 '19년보다 높게 평가된 점은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V-1-5〉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현실화

단위: 점, (명)

구분	'40년에 일어날 가능성	'19년에 미칠 영향력	'40년에 미칠 영향력	사례수 (명)
근로시간 축소에 일·가정 양립 현실화	3.4	3.2	3.9	(30)

소득 양극화 심화는 다소 높게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19년에 미칠 영향력은 평균 3.7점인 반면, '40년에는 4.0점으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았으며, '40년에 발생 가능성도 4.1점으로 소득 양극화의 심화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 실업 증가에 대해서는 소득 양극화 심화보다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가 다소 낮았다.

현금성 사회보장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19년에 미칠 영향력과 '40년에 미칠 영향력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19년에 미칠 영향력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 '40년에 발생 가능성도 평균 3.6점으로 소득 양극화 심화보다는 낮게 평가하였다.

〈표 IV-1-6〉 경제적 여건 및 사회보장 수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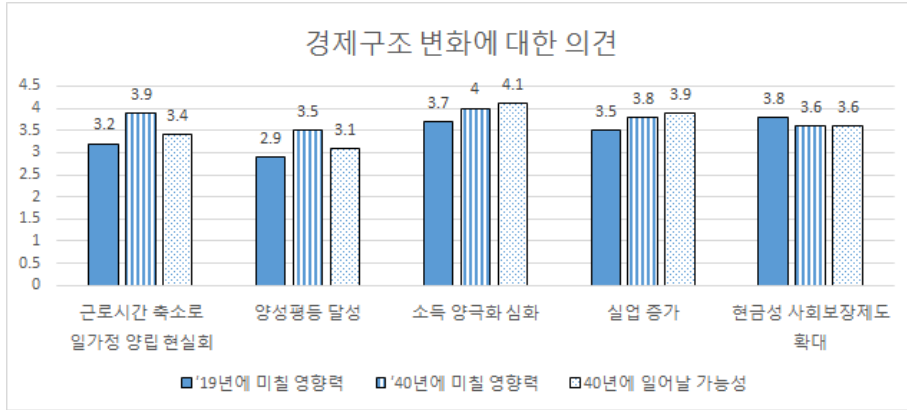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40년에 일어날 가능성	'19년에 미칠 영향력	'40년에 미칠 영향력	사례수 (명)
소득 양극화 심화	4.1	3.7	4.0	(30)
실업 증가	3.9	3.5	3.8	(30)
현금성 사회보장제도 확대	3.6	3.8	3.6	(30)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그림 IV-1-2] 경제구조 변화에 대한 의견

단위: 점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생활 양립의 현실화와 소득보장과 실업 증가에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근로시간이 감소하여 가족시간이 증대하고, 남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사회가 도래하여 가족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족내 돌봄을 지원하는 등과 사교육 등에 의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현상이 감소함에 따라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고 지적된다. 또한 단시간 근로가구의 증대에 따라 현행 12시간 종일제보육의 보편화의 필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득양극화는 돌봄서비스 등 이용 형태에서 계층간 차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육아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추가지원이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한다고 예측된다.



〈표 IV-1-7〉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현실화〉 - 시가 전반적인 근로시간 축소를 야기하여 일·가정 양립 현실화가 가속화 될 것이고 가족내 돌봄 기능을 대체하는 육아지원정책 방향의 변화 예상 - 근로시간 자치가 줄어들면 육아를 하는 방식 자체가 줄어들고, 학원, 사교육 의존 등에 변화 가능성 예상 - 남녀 모두 일하고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에서 육아지원정책의 성격 변화 - 일 가정 양립과 가족시간의 확대 - 초단시간 노동이 편면화되어 장시간 시설보육의 필요성 감소 가능성 예측	23.3(7)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표 IV-1-8〉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제 여건과 사회보장 수준

단위: %(명)	
구분	비율(수)
〈소득양극화 심화〉 - (줄어든) 모든 아동들이 동등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할 것임. 하지만, 소득 양극화는 정책에 새로운 영향 요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 - 소득양극화 심화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 증가 - 소득계층별로 다른 맞춤형 정책이 요구됨.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 소득계층간 자녀돌봄 및 투자의 격차, 소득계층에 따른 양육형태의 계층화 등으로 계층별 접근의 필요성 증대 - 소득양극화는 평균적 성장과 평균적 삶의 질을 해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므로, 양육을 기피하거나 지나치게 투자하여 상위층에 들어가려는 사회적으로 효율이 낮은 무한경쟁을 부추기며, 육아비용의 고지출 환경 발생 우려 저소득층의 양육비용 부담 증가	33.3(10)
〈실업 증가〉 - 일자리 부족은 소득 감소와 불안정으로 가족 단위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환경 구축을 뒷받침하지 못하게 될 것임	3.3(1)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 에너지 및 대기환경의 변화

에너지 및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악화는 '19년의 영향력과 '40년의 영향력은 비슷하게 예측하였다. '40년에 일어날 가능성은 평균 3.9점으로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그에 비해 에너지원 부족으로 인한 생활

어려움에 대해서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이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악화보다는 다소 낮게 보고 있었다. 이는 최근에 급증한 미세먼지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당면한 현실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에너지원 부족은 아직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슈로 파악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1-9〉 환경변화

단위: 점, (명)

구분	'40년에 일어날 가능성	'19년에 미칠 영향력	'40년에 미칠 영향력	사례수 (명)
미세먼지 급증으로 환경 악화	3.9	3.2	3.3	(30)
에너지원 부족으로 생활 어려움	2.9	2.3	2.7	(30)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라. 과학기술의 변화

과학기술의 변화도 다른 영역에 비해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5점 만점에 평균 2점대로 로봇출현에 대해서는 아직 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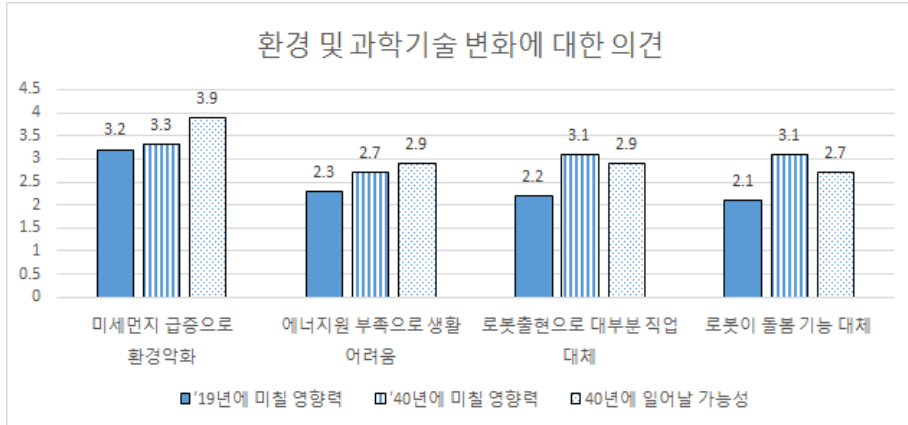
〈표 IV-1-10〉 과학기술

단위: 점, (명)

구분	'40년에 일어날 가능성	'19년에 미칠 영향력	'40년에 미칠 영향력	사례수 (명)
로봇출현으로 대부분 직업 대체	2.9	2.2	3.1	(30)
로봇이 돌봄 기능 대체	2.7	2.1	3.1	(30)

[그림 IV-1-3] 환경 및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의견

단위: 점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과학기술의 변화를 응답한 경우는 해당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로봇의 증가로 인해 직업군이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변화가 야기되어 육아지원 수요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로봇이 돌봄서비스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이 증대하여 돌봄인력에 대한 수요 변화 등과 육아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표 IV-1-11>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의 변화

단위: %(명)

구분	비율(수)
<로봇 보급 증대에 따른 직업군 감소> - 노동시장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동시에 육아지원정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3.3(1)
<로봇의 돌봄 기능 대체>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돌봄의 개념이 바뀔 것으로 판단됨 이는 육아정책에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 로봇이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면 육아교사 수요 등에 큰 영향 - 로봇이나 시가 얼마나 돌봄에서 사람의 직무를 대체할 것인지가 지원정책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 - 시장과 공공의 돌봄노동의 공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20.0(6)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마. 정치적 대내외환경의 변화

20-30대의 정치적 무관심은 '19년과 '40년에 미칠 영향력은 평균 2점대 중후반으로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현재에도 정치적 무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40년에도 큰 변화 없이 무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40년에 일어날 가능성은 평균 3.1점으로 영향력보다는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

〈표 IV-1-12〉 정치적 관심

단위: 점, (명)

구분	'40년에 일어날 가능성	'19년에 미칠 영향력	'40년에 미칠 영향력	사례수 (명)
20-30대 정치 참여 무관심	3.1	2.5	2.7	(30)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통일에 대해서는 영향력과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40년에 발생 가능성도 평균 2.9점, '40년에 미칠 영향력도 평균 2.8점으로 낮게 예측되었다. 그에 비해 이주민 대량 유입을 인한 노동력 구조 변화, 다문화 가정 증가는 영향력과 발생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였다. '19년에 미칠 영향력보다 '40년에 미칠 영향력과 '40년에 발생 가능성을 약간 더 높게 평가하여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남북통일보다 대내외 환경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IV-1-13〉 대내외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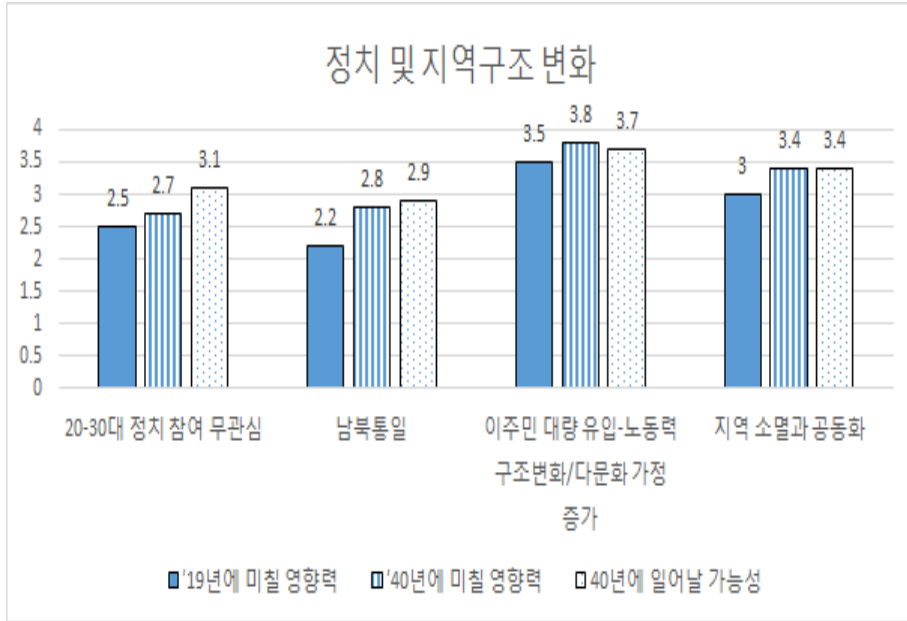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40년에 일어날 가능성	'19년에 미칠 영향력	'40년에 미칠 영향력	사례수 (명)
남북통일	2.9	2.2	2.8	(30)
이주민 대량 유입-노동력 구조변화/다문화 가정 증가	3.7	3.5	3.8	(30)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그림 IV-1-4] 정치 및 지역구조 변화

단위: 점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북 통일을 지목한 경우는 북한 지역의 육아지원정책과의 통합 추진 등에 따라 육아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와 인력 공급의 확대 등을 예상하였다.

<표 IV-1-14>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

단위: %(명)

구분	비율(수)
<남북 통일> - 통일 방식과 사회보장 통합 방식에 따라 북한 지역 육아지원제도 재편이나 남한 제도의 통합 등 정책 변화와 관련 전달체계 및 인력 확대가 예상됨 - 통일 후 한반도는 격변기여서 큰 영향	6.7(2)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6) 성평등 여건 및 인식의 변화

성평등 목표 달성을 통한 성평등 여건 변화는 '19년에 미칠 영향력은 2.9점인 반면, '40년에 미칠 영향력은 3.5점으로 성평등의 목표 달성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40년에 발생 가능성도 3.1점으로 '19년에 미칠 영향력보다 높게 평가하여 성평등이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IV-1-15〉 성평등 목표 달성 가능성

단위: %(명)

구분	'40년에 일어날 가능성	'19년에 미칠 영향력	'40년에 미칠 영향력	사례수 (명)
성평등 목표 달성	3.1	2.9	3.5	(30)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지목한 경우는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이 정책적으로 보다 강조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IV-1-16〉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 성평등 목표 달성

단위: %(명)

구분	비율(수)
〈성평등 달성〉 - 실제 실현과는 무관하게, 양성평등 지향성은 이미 거대한 트렌드가 되었기 때문에, 모성에 기대는 정책 설계 변화 예상 . - 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따라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정, 직장,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	10.0(3)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2. 시기별 육아지원 정책환경의 개선 정도와 목표 수준

2019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초저출산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40년에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에 대해 예상해 보도록 질문한 결과, 평균 1.1명으로 현재 시점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저출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균 2044년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IV-2-1〉 저출산 현상 지속 예상 시점

단위: 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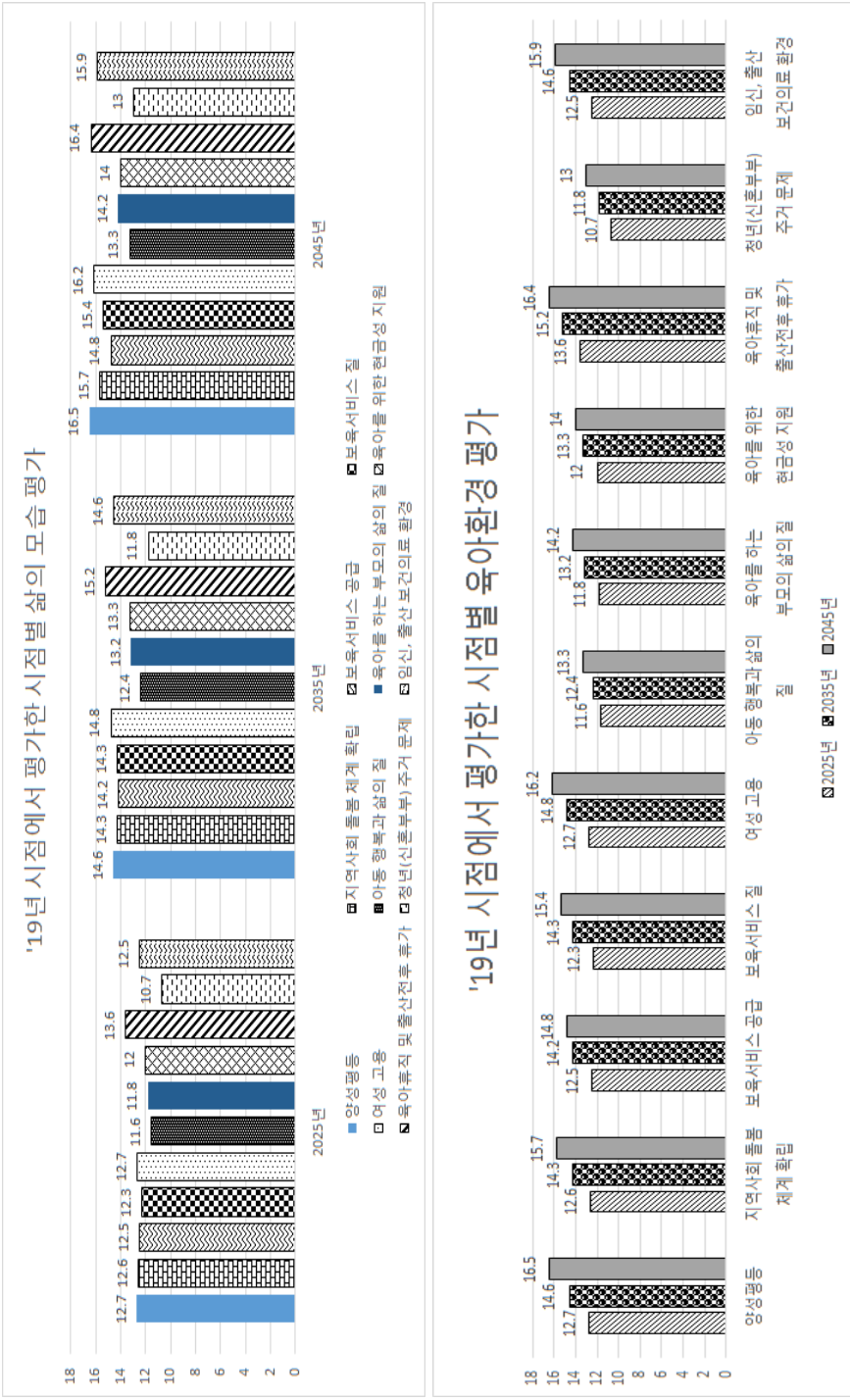
구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예상 시점(평균)	2040년 예상 합계 출산율(평균)	2019년 현재 합계출산율
저출산 현상 지속 예상시점	2044년	1.1명	0.98명

2019년 시점에서 육아환경 관련 항목별 점수가 10점이라고 가정하고, 육아환경을 시점별로 0-20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항목에 대한 육아환경은 좋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2025년에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항목이 13.6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현재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지원 제도의 의무화 확대 등의 정책적 변화가 보이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반면,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2025년에도 가장 개선된 덜 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2035년에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지만, 다른 항목별 점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여성고용 환경에 대한 환경, 양성평등 점수는 상승하여,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아동 행복과 삶의 질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45년에는 양성평등 정책 환경의 개선이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여성고용,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관련 육아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육아환경은 '19년 현재(10점 기준)보다 시점이 지날수록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림 IV-2-1] 2019년 시점에서 평가한 시점별 삶의 모습/육아환경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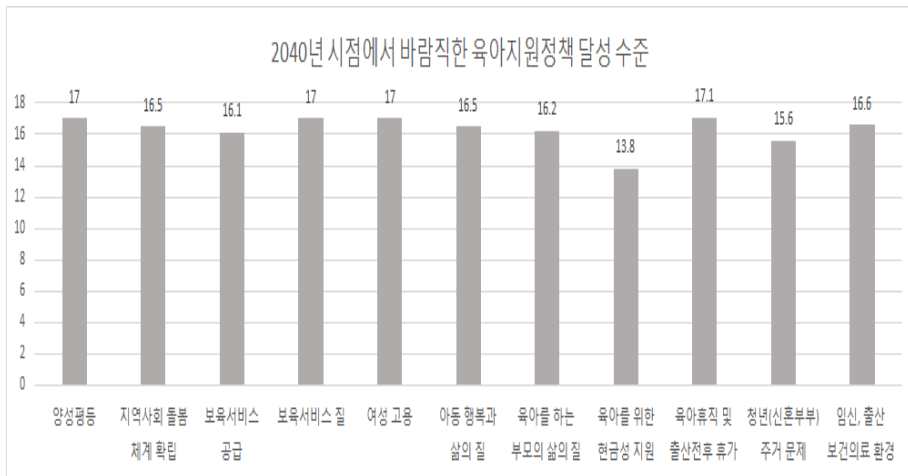


3. 2040 육아지원정책의 예상 및 바람직한 방향

가. 돌봄서비스

2019년 시점에서 각 항목별 육아지원정책이 10점이라고 가정하고, 2040년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성되면 바람직할지에 대해 0-20점 사이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양성평등, 보육서비스 질, 여성고용,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가 20점 만점에 17점대가 바람직한 적정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 다음은 임신, 출산 보건의료 환경,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립, 아동행복과 삶의 질이 16점 후반대가 바람직한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육아지원을 위한 현금성 지원은 13.8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바람직한 달성 수준을 낮게 평가하였다.

[그림 IV-3-1] 2040년 시점에서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 달성수준



2040년에 예상되는 아동 대상의 돌봄서비스의 양상으로는 대상규모의 축소로 재정 측면에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 격차와 기관 수의 감소에 따른 지리적 접근성 저하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보육과 유아교육과의 통합이 추진되어 통합된 체계 하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가족의 다양화 등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다양화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근로시간의 감소로 자녀돌봄 시간이 확보됨에 따라 장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서비스 이용은 보다 다양화된 근로형태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며,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대도 제기된다. 반면에 서비스의 계층별 이용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된다. 즉 계층별로 그 밖에도 남북통일에 따른 북한의 육아지원제도와와의 통합 추진도 예견되었다.

다음으로 2040년에 바람직한 아동 대상의 돌봄서비스로는 영유아 전반을 종합적인 틀에서 설계하되, 아동연령별로 차별화된 욕구가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이 강조된다. 즉 0~1세, 2세, 3~5세아의 육아지원의 방향성을 명료화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업간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확대에 앞서 자녀돌봄이 가능한 노동환경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근로형태에 부합하여 양육방식을 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서비스 다양화 노력도 강조된다. 또한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제도와 질 제고는 지속적인 과제로서 언급된다.

〈표 IV-3-1〉 2040년 예상되는 아동돌봄서비스

2040년 예상되는 아동돌봄서비스 모습
<p>〈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년에는 아동인구 감소, 공공보육시설 및 담당인력의 증가로 인해 지금보다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질 높은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만 남게 될 것으로 예상 - 2040년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로 부모, 아동 만족도 제고될 것 - 다수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의식이 높아져서 돌봄의 사회화가 확대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져 다수 아동이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 아동수가 적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나, 기관의 안정적인 접근성은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 -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육의 질 제고 및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역에 따른 격차는 존재
<p>〈보육과 유아교육과의 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이 강화되어 국공립기관의 비율이 증가하고 교육부 소관으로 통합된 형태의 돌봄과 교육을 제공 - 만약 2019~2040년의 아동 돌봄 정책이 서비스 질 강화와 제공자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돌봄 서비스와 기술이 교육기능과 결합하여 고도화 될 것 - 보육기관이 감소가 보육의 질적 제고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2040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고도화 되어 감시와 감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p>〈돌봄서비스의 다각화〉</p>

2040년 예상되는 아동돌봄서비스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라 어린이집과 가정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것 - 기술혁신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제공 주체의 안전관리 업무가 줄어들 것이며 교육 관련 서비스는 이용자와 제공자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 가능할 것 - 서비스 제공자 노동에서 교육, 돌봄 및 상담 비중이 증가할 것 - 고용형태의 비정형화가 가속화되어 돌봄 제공자는 2019년의 정규직 형태가 아닌 유연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할 것 - 가족 개념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가족 구성(동거부부의 자녀, 동성부부의 자녀, 동반자 가구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등) 맞춘 개별화 된 돌봄서비스가 발전할 것
<p>〈장시간 보육의 축소 및 자녀와의 시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년 소수의 아동에게 다수의 어린이집이 질 높은 서비스를 일정 시간 제공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부모들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될 것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시간은 더 유연화 될 것이고, 가정 내 돌봄 서비스가 증가, 서비스 내용이 다양화될 것
<p>〈지역사회 돌봄 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인해 정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아동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소자녀화의 고착, 노동시간 유연화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돌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아동간의 교류를 위한 지역사회 여건 조성될 것으로 예상
<p>〈서비스의 양극화 및 격차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0년에 만0~2세에겐 전문성이 보장된 아이돌보미가 개별화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만 3~5세에겐 접근성 좋고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소수정에 어린이집과 연령별 발달에 맞춘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교육센터로 양분될 것 - 민간어린이집 또한 확대되어 어린이집에서의 교육, 보육 등의 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 - 다양한 형태의 돌봄이 돌봄 방식의 계층화 문제와 연관 되면서 돌봄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 2019~2040년의 아동돌봄정책이 돌봄 시장의 노동조건 강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돌봄 서비스 시장에 고급화된 민간서비스와 낮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로 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p>〈남북한 돌봄서비스 통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2019~2030년 내에 북한과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2030~2040년까지 서로 다른 두 체계의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과정이 전개될 것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표 IV-3-2〉 2040년 아동돌봄서비스의 바람직한 모습

2040년 예상되는 아동돌봄서비스 모습
<p>〈영유아 돌봄의 통합 추진과 공공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세 통합운영, 소규모로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 제공 등 - 0~5세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할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0~5세까지의 돌봄서비스는 시민의 권리로 인식되며 공공이 제공하는 질 높은 통합서비스로 구성되어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것 - 돌봄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함. 무상 서비스보다 접근성이 보다 중요함.

2040년 예상되는 아동돌봄서비스 모습

- 영유아기의 보육과 교육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의 서비스 공급을 현재보다 확대
- 양질의 공적 돌봄이 충분히 제공되고, 공적 돌봄과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비영리 민간 돌봄 기관이 정립되는 모습

〈아동연령별 육아지원의 체계화〉

- 0~2세는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가정양육지원이 커져야하고 3~5세는 어린이집중심으로 돌봄이 이루어지되 지역 돌봄 공동체 형성되어야
- 0~1세는 육아휴직 받은 부모가 직접 돌봄, 1~3세는 어린이집, 4~6세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 교육
- 0~2세 자녀에 대해 부모가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직장 및 사회서비스 환경이 마련되고, 3~5세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 0~2세는 부모, 조부모 등이 돌봄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3~5세는 마을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집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
- 0세아는 육아휴직 중심(어린이집 이용가능성은 보장) 나머지 연령에 대해서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중간계급이 만족할만한 수준)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국가 보장
- 2세까지는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되, 돌봄 로봇이 부모의 돌봄 노동을 상당부분 보조해주며, 3세 이후는 공적 돌봄제공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다. 돌봄제공자인 인간은 로봇과 협업으로 돌봄서비스의 질 개선

〈근로여건 개선을 토대로 한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강화〉

-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시설)이 확대되고, 일하는 부모는 자녀가 돌봄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로여건(유연적, 탄력적 근무)이 조성되어야
- 개별 아동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돌봄서비스 즉 아동연령, 부모의 돌봄 가능시간, 기관/시설의 접근성, 가족의 개별 욕구에 따라 아이돌보미,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아동의 연령과 무관하게 아동과 부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비용은 경제적 인 능력에 따라 상이하게 부담
- 0~2세는 공공 아이돌보미는 축소하고 소규모 그룹 돌봄서비스가 비용 효과적이고 아동 학대 방지 측면에서 좋음. 3~5세는 부모의 취업상태나 소득상태와 상관없이 일일 일정시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양성평등이 확산되고 육아휴직이 모든 직장에 적용 확대, 0~2세는 가정에서 부모와 공공아이돌보미가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3~5세는 공공어린이집을 통해 질 높은 보육을 제공, 0~5세의 서비스는 국가가 세금을 통해 제공
- 실수요자 중심의 품질 높은 책임보육이 정착하고, 시간제 이용자나 간헐적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는 어린이집 운영이 이루어지며, 가정에 파견되는 서비스는 최소화되고, 학령 전 서비스와 학령기 서비스의 연계 강화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와 공공성 제고〉

- 취업모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 양질의 공적 돌봄이 충분히 제공되고, 공적 돌봄과 경쟁할 수 있는 양질의 비영리 민간 돌봄기관이 공존
- 보육교사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서비스의 질 역시 제고해야 함.
- 적정 비용부담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함
- 돌봄 인력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적정 업무량을 부여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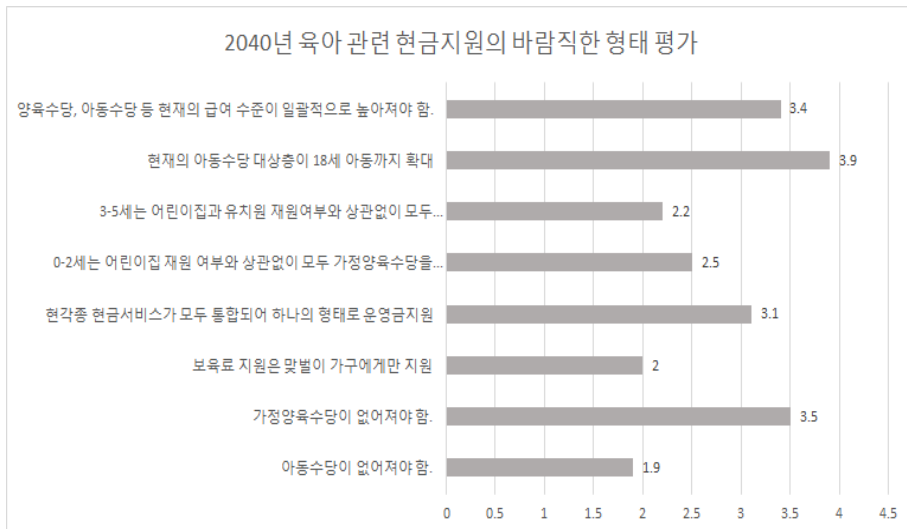


나. 현금지원

2040년에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육아를 위한 현금지원이 어떤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높은 항목은 5점 만점에 3.9점으로 ‘현재의 아동수당 대상층을 18세 아동까지 확대’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은 ‘가정 양육수당이 없어야 한다’는 부분이 3.5점,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현재의 급여 수준이 높아져야 함’ 부분이 3.4점, ‘각종 현금서비스가 통합되어 하나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3.1점으로 응답되었다.

[그림 IV-3-2] 2040년 육아 관련 현금지원의 바람직한 형태 평가



2040년에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의 양상으로는 통합급여체계로의 전환과 양육수당제도의 폐지 등 개편이 주로 지목되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아동수당과 기관미용아동 대상의 가정양육수당, 그리고 한부모가족 등에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전반을 통합하여 설계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가정양육수당제도는 아동수당제도와 통합되어 폐지될 것으로 주로 예상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비스 지원과의 정합성 제고 노력이 강조된다. 즉 육아지원 전반에서 현금지원 보다는 서비스 지원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

견되었다. 또한 아동수당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의 확대가 예상된다. 즉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아동수당 지원대상을 18세까지 확대하고, 현행 10만원에 그치는 급여수준도 상향조정되며,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도 고려될 것으로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2040년에 바람직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는 기본 방향의 측면에서 수당과는 차별화된 목표를 지닌 서비스 지원과의 균형이 필요하며, 양육수당제도의 폐지를 통합급여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효과성 제고를 위해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된다. 또한 지원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함과 동시에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표 IV-3-3〉 2040년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2040년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p>〈통합급여체계로의 개편 및 서비스 지원과의 정합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현금지원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되고 전반적인 지원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음. - 0~18세 아동의 생애주기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 수당의 체계를 갖춰보는 건 어떻게 생각한다. - 양육수당, 아동수당, 현금지원을 통합한 급여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해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지원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이는 반드시 필요, 단, 다양한 형태의 수당들에 대한 일원화된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 - 아동수당은 기초part와 추가part로 나뉘어, 장애아를 돌보는 가구(추가비용발생), 한부모 가구(시간 부족으로 추가 서비스 필요), 영아 가구(영양, 안전 등 초기투자 필수)등에 추가급여가 보충되어야 하며, 양육수당은 폐지되고, 여성의 노동권, 취업 등이 훨씬 국가 정책 전면에 배치되어야 하며,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한 가치인정은 연금credit제도로 흡수하여, 노후 소득보장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 지원 안에 통합되어야 하고, 아동수당은 현금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원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함. 양육수당을 보육 서비스 지원안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는 0~2세 영아 양육, 비취업모의 보육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 - 아동에 대한 현금수당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하고, 양육에 대한 비용은 서비스 형태로 제공 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현금급여(예. 아동수당에 더해지는 positive discrimination 형태의 부가급여나 현재의 자녀장려세제 강화)가 제공될 필요가 있음. - 수당보다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현금을 지원하는 수당형식은 효과성 면에서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p>〈양육수당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은 폐지하여 아동수당으로 통합되고, 양육수당 대신 가정 내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양육수당 폐지, 아동수당을 통해 아동이있는가구에 대한 지원



2040년 예상되는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이 확대될 것이나 여전히 분절화되고 복잡한 지급체계가 유지될 것 -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
<p>〈자녀수에 따른 급여체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등 고려
<p>〈적용대상 아동연령과 지원수준의 상향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아동까지 아동수당 확대 - 현재보다 지원 금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함. 이는 양육사당, 아동수당의 주 수혜대상인 30대의 복지체감을 제고하여 증세에 대한 저항을 낮추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보편적 현금수당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출산율 문제가 지속되고 아동의 삶의 질이 강조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대상이 확대되고 수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표 IV-3-4〉 2040년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2040년 바람직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p>〈서비스 지원과의 정합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되기 보다 균형있게 제공되어야 -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급여수준을 둘 다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무상보육은 저소득을 제외하고 줄이고, 아동수당으로 비용을 낼 수 있도록 함 -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은 현금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가정 내 양육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아동돌봄미, 양육자휴가, 공동육아지원, 양육외 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가정 내 양육에 대한 수당은 축소되어야 함. 돌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개인별 정해진 지원한도(금액 등) 내에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p>〈현금수당의 용도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지원의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운영 - 다양한 서비스와 물품 구매가 가능한 현금카드 형식
<p>〈지원자격 및 대상의 적절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은 부모의 특성(어머니의 경제활동 등)과는 무관하게 제공될 필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 현금지원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을 선별해서 지급해야 - 아동수당 급여 수준을 20만원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차원에서 범위를 만 18세 이하까지 확대하고 수준 또한 확대해야 -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급여수준을 둘 다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현금 지원
<p>〈현금지원의 통합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정책 현금지원(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지원,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의 전달체계는 하나로 통합하고 육구에 따른 급여 수준의 차등화 필요. - 아동수당 이외의 현금지원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급여만 현금지원으로 하는 원칙 고수

2040년 바람직한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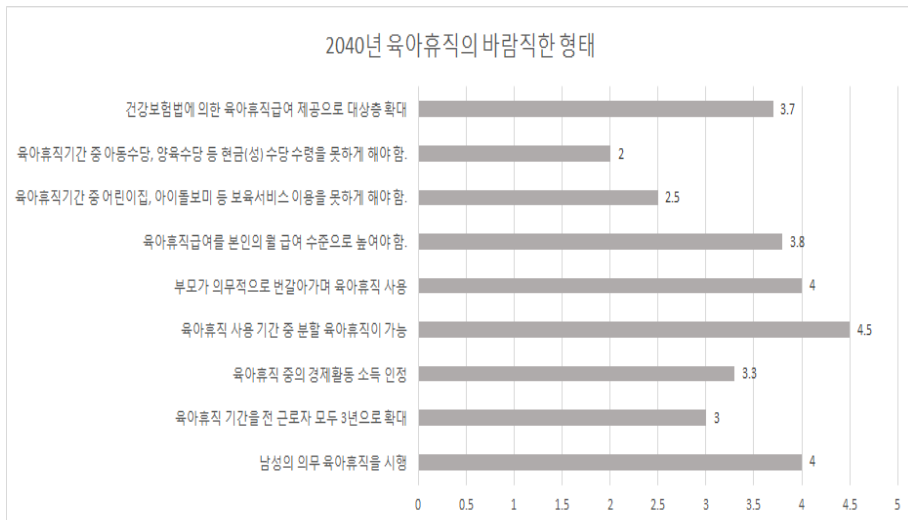
- 현금지원은 아동수당제도 만으로 운영, 양육수당의 폐지, 아동수당의 확대
- 자녀장려세제 형태보다는 보편적 아동수당 + 저소득 가정에 대한 부가급여 형태가 바람직
- 보편적 방식의 수당 방식을 지향하되 세금공제와 수당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 복지육구 측면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현금지원이 이루어져야
- 보편적 아동수당은 더 넓고 균일하게 보편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양육수당은 아동수당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만큼 서서히 폐지될 필요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다. 자녀 돌봄시간 지원

2040년에 육아휴직에 대한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육아휴직 사용 기간 중 분할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형태가 5점 만점에 4.5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은 ‘부모가 의무적으로 번갈아가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는 형태에 대해서 4점으로 평가되었다. ‘육아휴직급여를 본인의 월 급여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3.8점, ‘건강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 제공으로 대상층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3.7점 순이었다.

[그림 IV-3-3] 2040년 육아휴직의 바람직한 형태



2040년에 예상되는 육아휴직제도의 양상으로는 지원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어 보편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견된다. 즉 현재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부모의 권리로서 제도 이용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남성의 제도 이용을 제고도 예상된다. 남성이 여성과 공평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성의 제도 이용을 의무화하고,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된다.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상반된 예측이 제기되었다. 즉 현재보다 이용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이와는 반대로 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자녀 돌봄시간이 확보됨에 따라 휴직제도에 대한 수요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 강화의 필요성은 공통적으로 제기된다.

다음으로 2040년에 바람직한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 이용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남성의 이용을 제고 노력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사회환경의 조성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자녀 돌봄시간이 확보될 경우는 휴직제도를 장시간 이용하지 보다는 자녀돌봄을 위한 휴가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휴직제도를 영아기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도록 재설계하는 등의 개편 방안도 제기되었다.

〈표 IV-3-5〉 2040년 예상되는 육아휴직제도

2040년 예상되는 육아휴직제도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유연제 등을 활용해서 휴직 시 일을 어느정도 할 수 있게 함 -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영업 특수고용 포함. 기간을 늘리는 것보다 대상층이 확보되는 것이 당장 더 중요 -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반영하여 고용보험의 가입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민들을 포괄 범위가 넓은 별도의 보장제도에 포함시키고 육아휴직을 제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가족형태 변화에 따라 육아휴직의 대상에 결혼 여부, 비결혼 파트너가 모두 포함되고, 남성육아휴직 의무화와 같은 제도가 강화 필요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계층, 한부모 가구처럼 연달아 휴직을 할 수 없는 가구 에 대한 포용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함(아동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총사상 지위와 무관하게, “부모와 함께 있을 권리”는 동일해야 함) - 다양한 필요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경직되어 있고 사각지대가 존재함. 대기업, 공공기관 위주의 혜택은 상대적 박탈감과 장래 아동복지와 건강의 불평등을 야기함. 확대는 강제적으로 하되 수

2040년 예상되는 육아휴직제도

요자인 부모들에게는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수혜적인 정책으로 인정을 받고 가족 계획시 육아로 인한 장래불확실성을 경감 시켜줄 필요가 있음

- 고용보험의 보편성이 확대되거나, 별도의 보편적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이용과 관련해 계층 간 불평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고용보험 가입자에서 전체 일하는 부모로 확대할 필요
- 고용보험의 보편성이 확대되거나, 별도의 보편적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이용과 관련해 계층 간 불평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육아 필요를 가진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남성의 이용율 제고〉

- 남성이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급여대체 수준이 적절해야 함
-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 남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기간은 자유)
- 남성과 여성이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양성평등적 성격으로 나아가야 하며, 기간과 급여수준도 충분히 높여주어야 함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강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nudging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
- 남성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 남성육아 휴직을 독려, 미사용시는 손해라는 담론을 확장해야

〈급여대체율 상향 조정〉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상향,
- 최대 3년까지 부모가 모두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하고, 급여수준은 월평균소득의 최대 90%까지 지급해야

〈휴직 기간 연장〉

- 현행보다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어야
-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육아휴직 기간 1년 이상 연장은 직장복귀 확률을 낮출 수 있음. 남녀 모두 이용하고, 신축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궁극적으로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
- 육아휴직의 기간은 현재 수준이 바람직하지만, 육아휴직기간의 급여 수준은 본인 이전소득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바람직함

〈대체인력 지원 강화〉

- 인력대체 문제 해결 가능 사회 실현
- 기업 규모가 작은 경우 직장 안에서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인력 채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이용자 규모 감소〉

- 근로시간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표 IV-3-6〉 2040년 바람직한 육아휴직제도

2040년 바람직한 육아휴직제도
〈제도 이용의 형평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규모별 격차가 없어지고, 불안정노동자들도 육아휴직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자영업 특수고용 포함, 휴직간을 늘리는 것보다 대상층 확대가 보다 중요함
〈남녀의 평등한 제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세 자녀의 경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아버지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수준을 확대해야- 배우자로서의 남자, 여자가 반반씩 육아휴직 사용- 남녀 모두,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적정기간동안 복귀 걱정 없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번갈아 1~2년간 아이를 돌보는 휴가를 갖는 것이 사회적 규범이 되어야- 남성에게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적 관점에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체인력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대체 가능 제도 강화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대체율 높이기, 대체근로인력 지원-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수준은 본인 이전 소득의 대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바람직함
〈제도 효과성 제도를 위한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기에 집중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기간을 좁히고, 초등학교 운영시간을 늘려, 현재와 같이 학령 초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줄여 나가야함. 오랜 휴직기간은 임금, 승진, 연금 등에 penalty를 가져오므로, 짧게 모두가 활용하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함- 모든 육아 휴직정책은 근로적 관점과 양성 평등적 관점이 투여되어야 함. 만약 부부가 맞벌이라면 이들에게 휴벌이 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제공해야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유연근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육아휴직 자체가 필요없을 정도가 되어야- 육아휴직 보다는 육아휴가의 형태로 분할해서 사용할수있도록 조정-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도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직장이 자녀양육친화적이 되어야 할 것임-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시간사용이 유연해지는 노동이 되어야 함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라. 기타

이외에 2040년에 바람직한 육아지원제도는 남성의 육아참여와 지역사회 돌봄 기반의 조성을 위한 제도를 확대하고,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지원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돌봄서비스는 부모 여건과 아동 특성에 따라 보다 다양화되어야 하며,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자녀돌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동정책 등과의 연계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된다.

〈표 IV-3-7〉 2040년 바람직한 기타 육아지원제도

2040년 바람직한 기타 육아지원제도
<p>〈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직장문화, 남성의 가치관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들 확대 - 성평등한 양육 및 육아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 이를 위해서는(남성의 양육참여도 중요하지만) 현재보다 육아의 사회화가 더 이루어져야하고 공동체적 양육문화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젠더불평 등 뿐 아니라 계급불평등의 측면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 불평등한 어린 시절이 사회이동성을 낮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이 필요
<p>〈지역사회 돌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에서 육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p>〈유관 제도와의 연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정책과 타 정책간 유기적 연계성 강화 필요 - 여성이 경험하는 출산과 양육,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가 없는 한, 그리고 육아휴직이 승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육아지원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해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육아지원정책의 효과가 예상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 국민연금에 내재된 여성 불평등적인 문제 개선과 병행해 나가야 할 것
<p>〈아동을 둔 가구의 주거지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층 주거안정 필요 - 저출산 문제를 고려할 때 육아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은 양육자의 고용유지와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거안정이 중요
<p>〈근로시간 단축으로 자녀돌봄 시간의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이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고, 노동자의 일에 대한 프레셔가 줄어드는 것이 좋은 육아에 핵심적인 사안일 것임. 그것을 위해 노력하면서 공보육을 무제한 확대하고 인력을 확장하는 것보다 육아의 정상화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미래를 고민할 필요
<p>〈육아지원 욕구의 다양화의 적극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하는 가족 개념을 반영하고 이용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서비스는 어린 이집, 아이돌보미 등의 방문서비스, 공동양육지원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 개인별 맞춤형 정책을 충분히

자료: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임.

4. 소결: 육아지원정책 영향 요인의 영향력 변화 예측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육아지원정책의 영향 요인 및 중요도와 2040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19년 현재 대비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영향 요인으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예측되었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인구의 감소와 가족유형의 다변화가 공히 평균 4.3점으로 가장 주된 영향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이혼 등 가족해체의 증가가 4.0점, 현금성 사회보장제도 확대 3.8점, 소득양극화 심화 3.7점, 이주민 대량 유입과 실업 증가가 공히 3.5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즉 아동인구의 감소는 지속적으로 가장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어 평균 4.6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보육시설 감소와 초등학교의 폐교 4.0점,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은 평균 3.9점, 이주민의 대량 유입은 평균 3.8점으로 그 영향력이 현재 대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로봇의 보급 확대는 현재 대비 그 영향력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도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성평등 목표 달성은 2040년에 그 중요도가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소득양극화와 실업 증가 등은 각각 평균 4.0점과 3.8점으로 현재와 2040년 모두에서 높은 영향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른 한편 가족해체의 가족화와 가족구조의 다변화, 그리고 현금성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현재 주된 영향 요인으로 인식되나, 2040년에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들 요인 중 아동인구 감소, 가족유형의 다변화,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이 평균 4.0점 이상으로 2040년에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들 영향 요인들 중 2040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요인으로는 아동인구 감소 66.7%, 가족유형의 다변화 36.7%, 소득양극화 33.3%,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일-생활 균형 여건 조성 23.3%, 보육시설 폐원과 초등학교 폐교 증가 20.0% 순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2040년 육아지원정책은 정책대상 인구의 감소, 가족구조의 변화 그리고 소득양극화와 실업 증대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해 일차적으로 주목하고, 성평등 여건과 노동시간 감소, 이주민 유입으로 인한 육구의 다양화, 로봇의 돌봄 기능 확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2040 주요 부문별 바람직한 육아지원정책으로는 다음이 고려될 수 있다. 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 제고 노력이 강조되어 지리적 접근성과 계층별 격차 완화가 주된 과제로 제시된다. 또한 가족유형과 근로형태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 다양화 노력과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합 체계의 모색도 요구된다. 다음으로 현금지원의 경우는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제도의 통합체계 구축을 토대로 아동수당제도의 지원대상 연령확대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부가급여 체계의 모색이 제기된다. 또한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적인 급여체계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녀돌봄 시간 지원의 경우는 일차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상향 조정과

더불어 남성의 제도 이용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제도를 영아기에 보다 집중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밖에도 가정내 양육가구를 위한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보육서비스와 자녀돌봄 시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동정책과의 연계 강화 노력도 보다 구체화해야 것으로 본다.

〈표 IV-3-8〉 전문가 조사 결과 요약

순위	2019년예의 영향력	2040년 일어날 가능성	2040년예의 영향력
1순위	아동인구 감소/가족유형다변화	아동인구 감소/가족유형 다변화	아동인구 감소
2순위	가족해체 가속화	소득양극화 심화	가족유형 다변화
3순위	현금성 사회보장제도 강화	실업증가/미세먼지 증가	소득양극화 심화

V

정책수요자 욕구 분석

- 01 정책수요자 설문조사
- 02 2040 육아지원정책 속의 토론: 정책 연구에서의 공론화 필요성
- 03 2040 육아지원정책의 시나리오 구성과 평가

V. 정책수요자 욕구 분석: 설문조사 및 숙의토론

1. 정책수요자 설문조사

본 절에서는 파일럿 조사를 통해 선정한 항목을 바탕으로 2040년을 전망하고 2040년의 육아지원정책의 모습과 욕구에 대하여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가 조사와 달리 정책의 실질적 수요자들이 생각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모습을 탐색함에 의미를 가진다.

참여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미혼인 경우는 36%, 기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26.6%,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7.4% 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인 18세 이상부터 셋째 자녀 출산 평균연령인 38세까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구 월소득은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가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취업자가 65.2%로 절반 이상이 취업중이었고 저출산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는가? 라고 묻은 질문에서 응답자의 92.8%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 V-1-1〉 조사대상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비율 (수)
전체		100.0(503)
성별	여자	70.4(354)
	남자	29.6(149)
연령	만18~28세	42.3(213)
	만29~38세	57.7(290)
지역규모	대도시	55.5(279)
	중소도시	39.2(197)
	읍면 지역	5.4(27)
학력	고졸 이하	8.5(43)

구분		비율 (수)
	대학교 졸업 이하	77.7(391)
	대학원 재학 이상	13.7(69)
혼인상태	미혼	36.0(181)
	기혼 무자녀	26.6(134)
	기혼 유자녀	37.4(188)
취업여부	취업자	65.2(328)
	학생	7.2(36)
	전업주부	15.7(79)
	현재 구직중	10.3(52)
	기타	1.6(8)
가구월소득	없음	1.4(7)
	200만원 미만	6.6(33)
	200만원~300만원 미만	21.7(109)
	300만원~500만원 미만	35.0(176)
	500만원~600만원 미만	18.9(95)
	600만원~700만원 미만	6.0(30)
	700만원 이상	8.0(40)
모름/무응답	2.6(13)	
저출산 영향력 인식	있음	92.8(467)
	없음	7.2(36)

가. 현재 삶에 대한 진단과 2040년 사회에 대한 전망

1) 삶의 만족도 및 삶의 질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의 삶에 대하여 낙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점 척도로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게 하였는데 현재에 비하여 미래 삶에 대하여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 비중을 통해서 살펴볼 때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삶에 대하여 만족한다는 비중은 33.4%, 만족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4.9%이었고, 미래 삶에 대하여 만족할 것이라는 비중은 51.5%,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중은 16.7%로 미래에 대해 낙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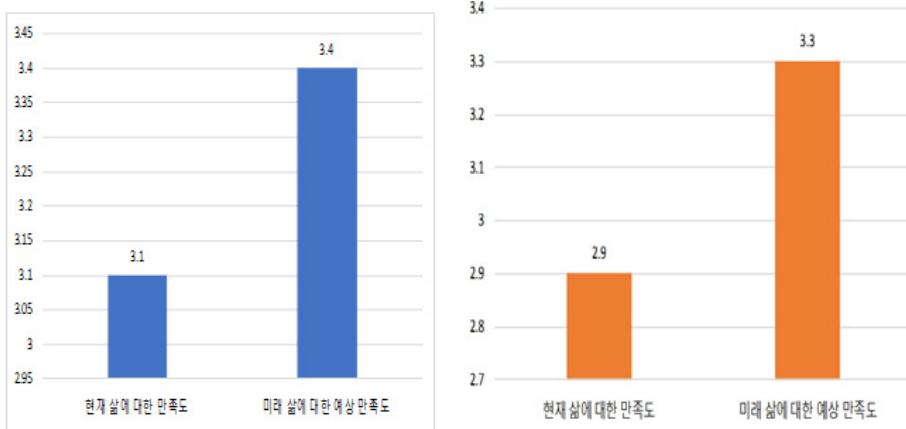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약간 만족 한다	매우 만족 한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03)	4.0	20.9	41.7	28.6	4.8	100.0	3.1	0.9	
성별	여자	(354)	3.7	20.3	41.5	29.1	5.4	100.0	3.1	0.9	
	남자	(149)	4.7	22.1	42.3	27.5	3.4	100.0	3.0	0.9	
X ² (df)/t			1.437(4)							1.1	
연령	만18~28세	(213)	4.7	21.1	38.0	29.6	6.6	100.0	3.1	1.0	
	만29~38세	(290)	3.4	20.7	44.5	27.9	3.4	100.0	3.1	0.9	
X ² (df)/t			4.346(4)							0.6	
지역 규모	대도시	(279)	4.3	20.4	41.2	29.0	5.0	100.0	3.1	0.9	
	중소도시	(197)	3.6	21.3	43.7	26.9	4.6	100.0	3.1	0.9	
	읍면 지역	(27)	3.7	22.2	33.3	37.0	3.7	100.0	3.1	0.9	
X ² (df)/F			1.889(8)							0.1	
학력	고졸 이하	(43)	9.3	23.3	53.5	9.3	4.7	100.0	2.8	0.9	
	대학교	(391)	3.6	21.5	40.9	29.9	4.1	100.0	3.1	0.9	
	졸업 이하										
	대학원 재학 이상	(69)	2.9	15.9	39.1	33.3	8.7	100.0	3.3	0.9	
X ² (df)/F			14.990(8)							4.4*	
혼인 상태	미혼	(181)	6.6	23.8	42.0	25.4	2.2	100.0	2.9	0.9	
	기혼 무자녀	(134)	2.2	15.7	41.0	29.9	11.2	100.0	3.3	0.9	
	기혼 유자녀	(188)	2.7	21.8	42.0	30.9	2.7	100.0	3.1	0.9	
X ² (df)/F			24.479(8)**							7.3***	
취업 여부	취업자	(328)	3.4	19.5	39.9	31.4	5.8	100.0	3.2	0.9	
	학생	(36)	0.0	19.4	44.4	33.3	2.8	100.0	3.2	0.8	
	전업주부	(79)	2.5	22.8	44.3	25.3	5.1	100.0	3.1	0.9	
	현재 구직중	(52)	11.5	28.8	46.2	13.5	0.0	100.0	2.6	0.9	
	기타	(8)	12.5	12.5	50.0	25.0	0.0	100.0	2.9	1.0	
X ² (df)/F			23.811(16)							4.4**	
가 구 월소득	없음	(7)	14.3	14.3	71.4	0.0	0.0	100.0	2.6	0.8	
	200만원 미만	(33)	12.1	30.3	33.3	18.2	6.1	100.0	2.8	1.1	
	200만원 ~300만원 미만	(109)	1.8	29.4	39.4	22.0	7.3	100.0	3.0	0.9	
	300만원 ~500만원 미만	(176)	2.8	21.0	46.0	28.4	1.7	100.0	3.1	0.8	
	500만원 ~600만원 미만	(95)	4.2	12.6	38.9	40.0	4.2	100.0	3.3	0.9	
	600만원 ~700만원 미만	(30)	3.3	10.0	53.3	23.3	10.0	100.0	3.3	0.9	
	700만원 이상	(40)	5.0	15.0	30.0	40.0	10.0	100.0	3.4	1.0	
	모름/무응답	(13)	7.7	30.8	38.5	23.1	0.0	100.0	2.8	0.9	
	X ² (df)/F			48.202(28)*							2.5*
저출산 영향력 인식	있음	(467)	3.9	21.0	41.8	28.9	4.5	100.0	3.1	0.9	
	없음	(36)	5.6	19.4	41.7	25.0	8.3	100.0	3.1	1.0	
X ² (df)/t			1.491(4)							-0.1	

〈표 V-1-3〉 미래 삶에 대한 예상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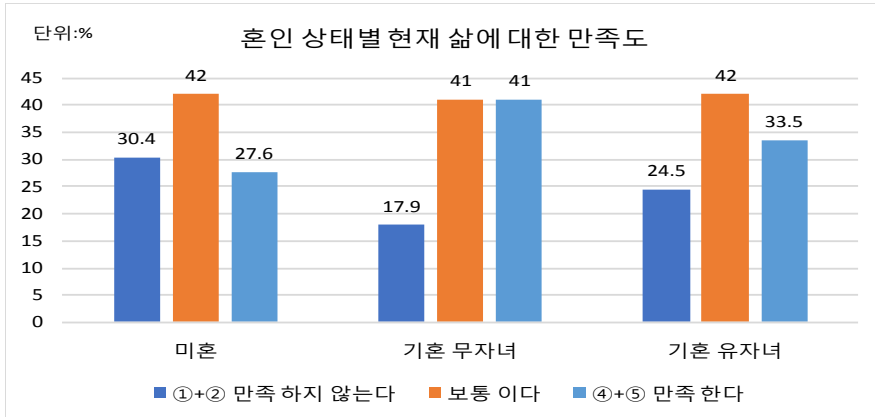
		사례수 (명)	전혀 만족 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만족 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일 것이다	약간 만족 하는 수준일 것이다	매우 만족 하는 수준일 것이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03)	2.8	13.9	31.8	40.8	10.7	100.0	3.4	1.0	
성별	여자	(354)	2.5	12.7	32.5	42.1	10.2	100.0	3.4	0.9	
	남자	(149)	3.4	16.8	30.2	37.6	12.1	100.0	3.4	1.0	
χ^2 (df)/t			2.547(4)							0.7	
연령	만18~28세	(213)	1.9	12.7	30.0	42.7	12.7	100.0	3.5	0.9	
	만29~38세	(290)	3.4	14.8	33.1	39.3	9.3	100.0	3.4	1.0	
χ^2 (df)/t			3.504(4)							1.8	
지역규모	대도시	(279)	2.9	13.3	31.5	39.8	12.5	100.0	3.5	1.0	
	중소도시	(197)	2.0	15.2	31.5	42.6	8.6	100.0	3.4	0.9	
	읍면 지역	(27)	7.4	11.1	37.0	37.0	7.4	100.0	3.3	1.0	
χ^2 (df)/F			5.481(8)							0.6	
학력	고졸 이하	(43)	2.3	25.6	34.9	27.9	9.3	100.0	3.2	1.0	
	대학교 졸업 이하	(391)	2.6	12.8	33.2	42.7	8.7	100.0	3.4	0.9	
	대학원 재학 이상	(69)	4.3	13.0	21.7	37.7	23.2	100.0	3.6	1.1	
χ^2 (df)/F			21.726(8)**							3.2*	
혼인 상태	미혼	(181)	3.3	16.0	34.3	35.4	11.0	100.0	3.3	1.0	
	기혼 무자녀	(134)	3.0	10.4	29.1	45.5	11.9	100.0	3.5	0.9	
	기혼 유자녀	(188)	2.1	14.4	31.4	42.6	9.6	100.0	3.4	0.9	
χ^2 (df)/F			5.538(8)							1.4	
취업 여부	취업자	(328)	2.7	14.3	29.3	40.5	13.1	100.0	3.5	1.0	
	학생	(36)	0.0	11.1	22.2	52.8	13.9	100.0	3.7	0.9	
	전업주부	(79)	5.1	13.9	34.2	44.3	2.5	100.0	3.3	0.9	
	현재 구직중	(52)	0.0	13.5	48.1	30.8	7.7	100.0	3.3	0.8	
	기타	(8)	12.5	12.5	50.0	25.0	0.0	100.0	2.9	1.0	
χ^2 (df)/F			25.507(16)							2.4	
가구 월소득	없음	(7)	0.0	28.6	57.1	14.3	0.0	100.0	2.9	0.7	
	200만원 미만	(33)	6.1	18.2	36.4	30.3	9.1	100.0	3.2	1.0	
	200만원~ 300만원 미만	(109)	1.8	14.7	32.1	39.4	11.9	100.0	3.4	0.9	
	300만원~ 500만원 미만	(176)	2.3	12.5	35.8	42.6	6.8	100.0	3.4	0.9	
	500만원~ 600만원 미만	(95)	2.1	14.7	22.1	49.5	11.6	100.0	3.5	1.0	
	600만원~ 700만원 미만	(30)	6.7	10.0	33.3	36.7	13.3	100.0	3.4	1.1	
	700만원 이상	(40)	2.5	10.0	25.0	35.0	27.5	100.0	3.8	1.1	
	모름/무응답	(13)	7.7	23.1	38.5	30.8	0.0	100.0	2.9	1.0	
χ^2 (df)/F			34.859(28)							2.1*	
저출산 영향력 인식	있음	(467)	2.6	13.1	32.5	41.5	10.3	100.0	3.4	0.9	
	없음	(36)	5.6	25.0	22.2	30.6	16.7	100.0	3.3	1.2	
χ^2 (df)/t			7.874(4)							0.8	

[그림 V-1-1]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만족도 (좌: 기+미혼, 우: 미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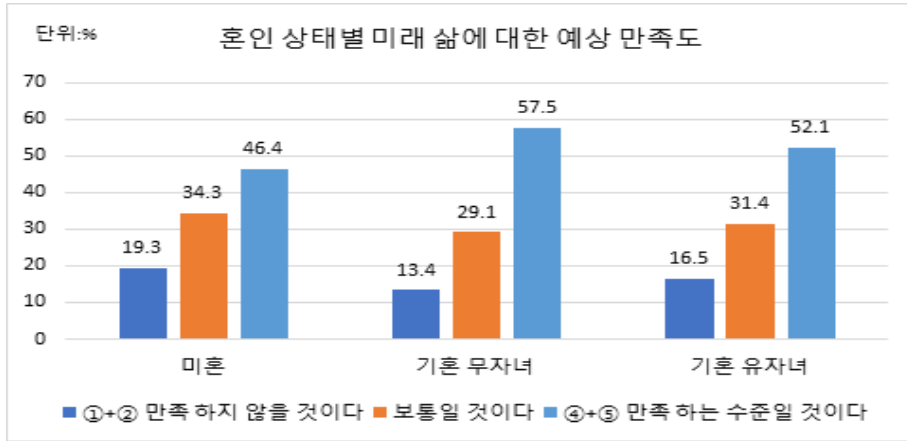
한편 미혼인 집단이 기혼인 집단에 비하여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비중이 가장 컸으며 기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인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1-2] 혼인 상태별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미래의 삶의 대하여 예상되는 만족도 역시 기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긍정적인 비중이 가장 컸고(41%), 미혼인 경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30.4%)

[그림 V-1-3] 혼인 상태별 미래 삶에 대한 만족도



한편, 현재의 삶의 질에 대한 생각과 미래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을 주요 영역별로 질문하였다. 미래의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현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단 가족공동체의 경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3.9점에서 3.8점으로 하락) 가족의 개념이 현재보다는 좀 더 느슨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시점의 삶의 질을 평가한 부분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공동체 영역에서의 삶의 질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 유의하게 나타나 미래의 가족 형태 모습을 추정할 수 있었다.

안전 영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현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미래의 안전 영역은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V-1-4〉 현재의 영역별 삶의 질

	시례수 (명)	교육		안전		소득/소비		주관적 웰빙		문화/여가		환경		시민참여		건강		주거		고용/임금		가족 공동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503)	4.1	1.3	4.2	1.5	3.7	1.3	3.9	1.3	4.3	1.3	3.8	1.3	4.0	1.3	4.2	1.2	3.6	1.4	3.3	1.3	3.9	1.3
성별																							
여자	(354)	4.2	1.3	4.2	1.4	3.7	1.3	4.0	1.2	4.3	1.3	3.8	1.3	4.0	1.2	4.2	1.2	3.7	1.4	3.3	1.3	3.9	1.2
남자	(149)	3.9	1.5	4.4	1.5	3.7	1.5	3.8	1.5	4.1	1.5	3.9	1.5	4.0	1.5	4.2	1.4	3.5	1.6	3.3	1.4	3.8	1.5
X ² (df)/t		1.7		-2.0*		0.6		1.5		1.9		-0.7		-0.4		0.1		1.1		-0.1		0.8	
연령																							
만18~28세	(213)	3.9	1.3	4.1	1.5	3.6	1.3	3.8	1.2	4.3	1.3	3.8	1.3	4.0	1.2	4.1	1.2	3.6	1.3	3.1	1.2	3.7	1.2
만29~38세	(290)	4.2	1.3	4.4	1.5	3.8	1.4	4.0	1.3	4.2	1.3	3.8	1.4	4.0	1.3	4.3	1.3	3.7	1.5	3.4	1.4	4.0	1.4
X ² (df)/t		-3.0*		-2.2*		-2.2*		-1.4		0.8		-0.4		-0.5		-1.6		-0.8		-2.6*		-2.5*	
지역																							
대도시	(279)	4.1	1.4	4.3	1.6	3.7	1.4	3.9	1.3	4.3	1.3	3.8	1.4	4.0	1.3	4.3	1.3	3.5	1.5	3.3	1.4	4.0	1.3
중소도시	(197)	4.1	1.3	4.2	1.4	3.7	1.3	4.0	1.3	4.2	1.4	3.8	1.3	4.0	1.3	4.2	1.2	3.8	1.3	3.3	1.3	3.9	1.3
읍면 지역	(27)	4.3	1.0	4.2	1.1	3.6	1.0	3.8	1.1	4.1	1.2	3.7	1.3	3.8	1.3	4.0	1.0	3.7	1.1	3.3	1.2	3.9	1.2
X ² (df)/F		0.4(4)		0.2(4)		0.3(4)		0.2		1.2		0.0		0.5		0.6		1.4(4)		0.1		0.3	
학력																							
고졸 이하	(43)	4.1	1.4	3.7	1.5	3.4	1.5	3.7	1.3	4.1	1.3	3.3	1.4	3.9	1.3	4.0	1.5	3.3	1.5	3.1	1.4	3.6	1.4
대학교 졸업 이하	(391)	4.2	1.3	4.3	1.4	3.8	1.3	4.0	1.2	4.3	1.3	3.9	1.3	4.0	1.3	4.2	1.2	3.7	1.4	3.3	1.3	4.0	1.3
대학교원 재학 이상	(69)	3.7	1.6	4.3	1.6	3.5	1.4	4.0	1.5	4.4	1.4	3.8	1.3	4.2	1.4	4.3	1.4	3.3	1.6	3.2	1.3	3.9	1.4
X ² (df)/F		3.4(4)		3.0*		2.0		0.7		0.6		3.3*		1.6		0.7		3.5*		0.5		1.9	
혼인 상태																							
미혼	(181)	4.0	1.3	4.1	1.5	3.6	1.3	3.8	1.2	4.2	1.3	3.8	1.4	4.0	1.4	4.1	1.3	3.6	1.4	3.3	1.3	3.8	1.3
기혼 무자녀	(134)	4.0	1.4	4.2	1.6	3.6	1.4	4.0	1.3	4.4	1.3	3.7	1.3	3.9	1.2	4.2	1.2	3.5	1.4	3.1	1.3	3.8	1.2
기혼 유자녀	(188)	4.3	1.3	4.4	1.4	3.8	1.3	4.0	1.3	4.2	1.3	3.8	1.3	4.1	1.3	4.3	1.2	3.8	1.5	3.5	1.4	4.1	1.3
X ² (df)/F		2.5		1.4		1.4		2.3		1.8		0.3		0.5		0.5		1.0		2.6		2.9	
취업 여부																							
취업자	(328)	4.1	1.4	4.3	1.5	3.7	1.4	4.0	1.3	4.3	1.3	3.8	1.4	4.0	1.3	4.2	1.2	3.6	1.4	3.3	1.3	3.9	1.3

	사례수 (명)	교육		안전		소득/소비		주관적 웰빙	문화/여가		환경	시민참여	건강		주거	고용/임금	가족 공동체						
학생	(36)	3.9	1.2	4.2	1.6	3.7	1.3	3.9	1.3	4.6	1.5	3.9	1.4	4.5	1.5	4.3	1.4	3.7	1.5	3.4	1.3	3.9	1.3
전업주부	(79)	4.4	1.2	4.4	1.3	4.0	1.2	4.2	1.1	4.5	1.3	3.8	1.3	3.9	1.2	4.3	1.1	3.9	1.4	3.5	1.3	4.1	1.1
현재 구직중	(52)	3.9	1.2	4.0	1.3	3.5	1.2	3.5	1.2	3.8	1.3	3.7	1.3	3.7	1.1	4.0	1.3	3.6	1.4	3.2	1.2	3.7	1.3
기타	(8)	3.9	2.2	3.9	1.8	2.9	2.0	3.3	2.3	3.4	1.9	2.8	1.6	3.4	1.7	3.5	1.8	3.1	2.0	3.0	1.8	3.0	1.9
X ² (df)/F		1.7		0.8		2.0		3.0(4)		4.2**		1.4		2.8*		1.4		0.9		0.9		1.6(4)	
없음	(7)	4.0	1.5	4.7	1.5	3.6	1.3	3.9	1.2	3.7	1.4	3.6	1.5	3.6	1.1	3.7	1.6	3.4	1.5	3.4	1.5	3.6	1.4
200만원 미만	(33)	4.0	1.4	4.0	1.6	3.6	1.4	3.7	1.5	4.2	1.4	4.1	1.5	4.1	1.6	4.0	1.3	3.4	1.6	3.2	1.4	3.6	1.5
200만원~	(109)	4.2	1.2	4.2	1.4	3.6	1.3	4.0	1.1	4.3	1.2	3.7	1.1	3.9	1.0	4.2	1.1	3.7	1.2	3.2	1.2	3.9	1.2
300만원 미만	(176)	4.0	1.3	4.1	1.3	3.7	1.3	3.8	1.2	4.2	1.3	3.7	1.3	3.9	1.2	4.2	1.2	3.5	1.5	3.3	1.3	4.0	1.2
300만원~	(95)	4.0	1.4	4.3	1.6	3.7	1.4	4.1	1.3	4.4	1.4	3.9	1.4	4.2	1.4	4.3	1.3	3.7	1.6	3.4	1.3	4.0	1.4
500만원~	(30)	4.1	1.3	4.3	1.7	4.0	1.4	4.0	1.4	4.2	1.2	3.6	1.3	4.0	1.2	4.0	1.4	3.6	1.6	3.2	1.4	3.6	1.3
600만원~	(40)	4.6	1.5	4.7	1.5	4.1	1.4	4.2	1.3	4.5	1.3	3.9	1.6	4.2	1.7	4.5	1.2	3.9	1.5	3.6	1.4	4.0	1.4
700만원 미만	(13)	3.8	1.7	4.0	1.3	3.5	1.5	3.3	1.6	3.8	1.6	3.4	1.5	4.0	1.4	3.9	1.5	3.8	1.5	3.2	1.6	3.8	1.4
모름/무응답		1.0		1.0		0.8		1.4		0.8		0.8		0.7(4)		0.8		0.5		0.6		0.8	
X ² (df)/F		4.1		4.2		3.7		3.9		4.2		3.8		4.0		4.2		3.6		3.3		3.9	
저출산 영향력 인식 없음	(36)	4.2	1.5	4.5	1.7	4.1	1.7	4.1	1.5	4.6	1.5	4.0	1.7	4.2	1.6	4.5	1.6	4.1	1.7	3.4	1.7	4.0	1.7
X ² (df)/t		-0.3		-1.0		-1.4		-0.7		-1.6		-0.9		-0.9		-1.2		-1.9		-0.5		-0.4	

주: na는 X² 검정 부적절함을 의미함
* p<.05, ** p<.01, *** p<.001

〈표 V-1-5〉 20-30년 후로 예상하는 각 영역의 삶의 질 전망

	시례수 (명)	교육		안전		소득/소비		주관적 행빙		문화/여가		환경		시민참여		건강		주거		고용/임금		가족 공동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성별		4.3	1.4	4.4	1.4	4.0	1.4	4.4	1.4	4.7	1.4	3.8	1.5	4.2	1.4	4.3	1.4	3.9	1.5	3.7	1.4	3.8	1.5
	(503)																						
	(354)	4.4	1.4	4.3	1.4	4.0	1.4	4.4	1.3	4.7	1.4	3.7	1.5	4.2	1.4	4.3	1.3	4.0	1.4	3.7	1.4	3.8	1.4
	(149)	4.3	1.5	4.6	1.5	3.9	1.6	4.3	1.5	4.6	1.6	3.8	1.6	4.3	1.6	4.4	1.5	3.9	1.6	3.7	1.6	3.8	1.6
X ² (df)/t		0.6	-2.0*			0.8		0.8		0.9		-0.7		-0.3		-0.9		0.5		0.3		-0.2	
연령		4.2	1.4	4.3	1.4	3.8	1.4	4.4	1.3	4.7	1.5	3.7	1.5	4.3	1.4	4.3	1.4	3.9	1.4	3.7	1.4	3.7	1.3
	(213)																						
	(290)	4.4	1.4	4.5	1.4	4.1	1.5	4.4	1.4	4.6	1.4	3.8	1.5	4.2	1.4	4.4	1.4	4.0	1.5	3.8	1.5	3.9	1.5
X ² (df)/t		-1.8	-1.4			-1.9		0.0		0.8		-0.5		0.3		-0.8		-0.7		-0.7		-1.7	
지역		4.3	1.5	4.5	1.5	4.0	1.5	4.4	1.4	4.7	1.5	3.8	1.5	4.2	1.5	4.4	1.4	3.9	1.5	3.7	1.5	3.8	1.5
	(279)																						
	(197)	4.3	1.3	4.4	1.3	3.9	1.4	4.4	1.3	4.6	1.4	3.8	1.5	4.3	1.4	4.3	1.4	4.1	1.4	3.8	1.4	3.8	1.4
규모		4.7	1.4	4.2	1.3	4.0	1.3	4.3	1.4	4.6	1.2	3.4	1.2	4.1	1.4	4.0	1.2	3.8	1.1	3.7	1.3	3.6	1.1
	(27)																						
X ² (df)/F		0.7	0.4(a)			0.5		0.1		0.2		1.0		0.2		0.6		1.2(a)		0.1		0.4	
학력		4.1	1.6	3.7	1.4	3.4	1.5	4.0	1.4	4.1	1.6	3.2	1.4	3.8	1.4	3.9	1.3	3.6	1.7	3.6	1.6	3.3	1.4
	(43)																						
	(391)	4.4	1.3	4.5	1.4	4.0	1.4	4.4	1.3	4.7	1.4	3.8	1.5	4.3	1.4	4.3	1.4	4.0	1.4	3.8	1.4	3.8	1.4
X ² (df)/F		1.8	5.8**			3.4*		3.0		3.1*		3.2*		2.0		2.4		1.8(a)		0.3(a)		3.4*	
혼인 상태		4.2	1.5	4.3	1.5	3.9	1.4	4.3	1.4	4.6	1.5	3.7	1.5	4.3	1.4	4.3	1.5	3.8	1.5	3.7	1.4	3.8	1.4
	(181)																						
	(134)	4.3	1.5	4.4	1.4	3.9	1.5	4.4	1.4	4.8	1.5	3.7	1.5	4.2	1.4	4.4	1.3	3.9	1.4	3.7	1.4	3.6	1.4
X ² (df)/F		4.6	1.3	4.5	1.4	4.1	1.5	4.4	1.3	4.6	1.4	3.8	1.4	4.2	1.5	4.3	1.3	4.1	1.5	3.8	1.5	3.9	1.5
	(188)																						
	(328)	3.3*	0.9			1.1		0.3		1.0		0.0		0.2		0.2		1.2		0.8		1.4	
취업 여부		4.3	1.4	4.5	1.4	3.9	1.5	4.4	1.4	4.7	1.4	3.8	1.5	4.3	1.4	4.4	1.4	3.9	1.5	3.7	1.4	3.8	1.5
	(36)																						
	(36)	4.2	1.6	4.6	1.6	4.1	1.5	4.6	1.3	5.0	1.4	4.0	1.6	4.4	1.5	4.4	1.6	4.2	1.6	3.9	1.6	4.0	1.4



	시례수 (명)	교육	안전	소득/소비	주관적 웰빙	문화/여가	환경	시민참여	건강	주거	고용/임금	가족 공동체											
전업주부	(79)	4.7	4.5	1.2	4.3	1.3	4.4	1.2	4.6	1.4	3.7	1.4	4.1	4.3	1.3	4.1	1.3	3.9	1.4	3.8	1.3		
현재 귀직중	(52)	4.2	4.2	1.3	3.9	1.3	4.4	1.4	4.4	1.4	3.7	1.4	4.1	4.0	1.3	3.7	1.3	3.6	1.2	3.8	1.3		
기타	(8)	3.9	2.4	3.4	1.9	3.6	1.9	3.6	2.0	3.5	2.3	3.5	1.8	3.0	1.5	3.6	1.8	3.6	2.0	3.6	1.9	3.6	1.8
χ^2 (df)/F		1.8(a)	1.7(a)	1.2	0.8	2.3	0.4	2.4*	1.3	1.0	0.6	0.3(a)											
없음	(7)	4.3	1.7	4.7	1.5	3.9	1.2	4.3	1.3	4.4	1.0	3.3	1.5	3.9	1.6	3.7	1.5	4.1	1.5	3.4	1.7		
200만원 미만	(33)	4.2	1.6	4.4	1.7	3.9	1.6	4.2	1.5	4.5	1.6	3.7	1.8	4.5	1.5	4.0	1.5	3.7	1.5	3.5	1.5	3.4	1.5
200만원~ 300만원 미만	(109)	4.5	1.2	4.5	1.2	3.9	1.3	4.4	1.2	4.6	1.3	3.7	1.4	4.2	1.3	4.3	1.3	3.9	1.3	3.7	1.3	3.7	1.4
300만원~ 500만원 미만	(176)	4.4	1.4	4.4	1.4	4.0	1.5	4.3	1.4	4.6	1.5	3.9	1.5	4.2	1.4	4.4	1.3	4.0	1.5	3.7	1.5	3.9	1.4
500만원~ 600만원 미만	(95)	4.3	1.5	4.5	1.5	4.1	1.4	4.5	1.3	4.8	1.4	3.8	1.5	4.3	1.4	4.3	1.4	4.1	1.5	3.9	1.5	4.0	1.5
600만원~ 700만원 미만	(30)	4.2	1.5	4.5	1.5	3.9	1.4	4.3	1.6	4.6	1.5	3.6	1.6	4.0	1.2	4.1	1.6	3.5	1.5	3.6	1.5	3.4	1.3
700만원 이상	(40)	4.5	1.6	4.6	1.6	4.0	1.6	4.6	1.4	4.9	1.4	3.8	1.6	4.4	1.7	4.7	1.5	4.2	1.4	3.8	1.4	3.6	1.7
모름/무응답	(13)	3.8	1.8	3.8	1.3	3.8	1.6	3.9	1.7	4.5	1.8	3.5	1.5	4.5	1.6	4.0	1.8	3.8	1.7	3.8	1.6	3.9	1.4
χ^2 (df)/F		0.7	0.6	0.2	0.7	0.5	0.3	0.5	1.0	1.0	0.4	1.4											
지출산 영양력 인식	(467)	4.3	1.4	4.4	1.4	4.0	1.4	4.4	1.3	4.7	1.4	3.8	1.5	4.2	1.4	4.3	1.4	3.9	1.4	3.7	1.4	3.8	1.4
없음	(36)	4.5	1.5	4.7	1.8	4.4	1.7	4.6	1.5	4.8	1.7	3.9	1.8	4.5	1.6	4.5	1.7	4.2	2.0	4.1	2.0	4.1	1.8
χ^2 (df)/t		-0.7	-1.0	-1.4	-1.2	-0.5	-0.3	-1.1	-0.7	-0.9	-1.0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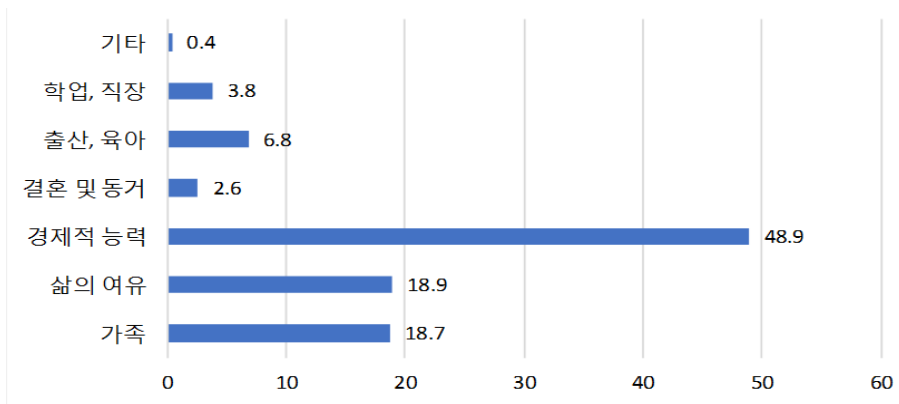
주: na는 χ^2 검정 부적절을 의미함
* p<.05, ** p<.01, *** p<.001

2) 내 삶에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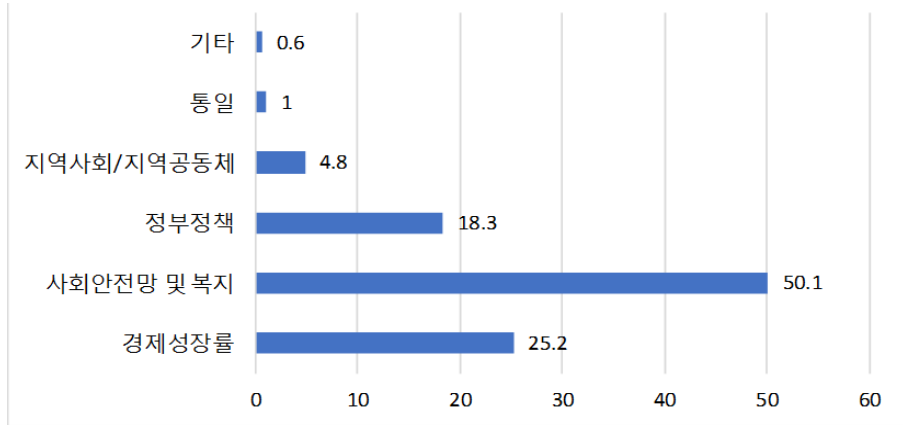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개인적 차원, 국내적 차원, 국제적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곧 육아지원정책의 경우 가장 수요가 높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하였다. 개인적으로는 경제적인 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48.9%)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사회안전망 및 복지(50.1%), 국제적인 요인으로는 환경 및 기후(43.5%)가 삶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본인의 경제적 생활 상태 및 경제적 지원의 정도와 여부, 복지제도 수혜 정도와 여부, 환경 및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움에 앞서 국민의 욕구를 철저히 분석하여 1) 경제적 지원과 활성화 정책, 2) 사회안전망 강화, 3) 환경 개선 정책 등의 거시적인 정책적 방향성의 틀을 잡은 후 세부적인 정책적 순위와 수준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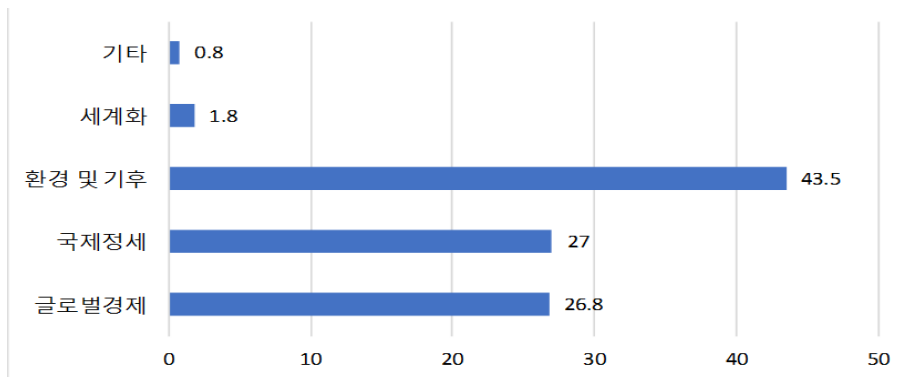
[그림 V-1-4] 개인적 차원



[그림 V-1-5] 국내적 차원



[그림 V-1-6] 국제적 차원



나. 2040년 한국 사회에 대한 전망

1)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본 절에서는 일반인들이 전망한 2040년 한국사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인 및 가족과 관련하여 2040년 미래에 대한 전망은 1) 개인의 삶의 질, 2) 인구성장률, 3) 결혼율, 이혼율, 재혼율, 4) 1인 가구, 5) 가족과의 시간, 6) 여가 시간, 7) 동기 및 비혼가구, 8) 아버지의 육아참여, 9) 어머니(여성)의 경제활동의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해당 항목은 전문가 델파이 및 전문가 FGI 결과

를 통해 항목을 선정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40년도에 예상되는 개인의 삶의 질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하지만 높아질 것이라도 보는 비율은 같게 나타나서 현재와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예상하는 비율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출산 현상의 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미래의 삶의 질에 대하여 유의한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구성장률에 대하여는 전체의 73.2%가 매우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의한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증가할 것이라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저출산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는 집단(6.6%) 이 그렇게 않은 집단(13.9%) 보다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작았고, 저출산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2040년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73.9%가 응답하여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유의한 수준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에 대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는 집단일수록 저출산이 향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율은 응답자의 75.7%가 2040년에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이혼율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68.4%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학력이 높을수록 이혼율이 증가할 것으로 유의한 범위 내에서 응답하였다. 재혼율과 관련하여는 응답자의 44.7%가 현재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39.2%가 근소한 차이로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2040년에는 현재의 결혼제도를 통한 결혼 건수가 양적으로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1인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자의 87.9%가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의 가족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동거 및 비혼가구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8.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그 비중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 별로는 기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86.6%).

가족 간의 시간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49.9%가 가족과의 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14.5%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 35.6%가 현재의 수준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령이 어린 집단(만 18세-28세)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29세-38세) 보다 2040년에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유의한 범위내에서 응답하였다. 이는 연령별로 가족과의 시간을 지내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름을 알 수 있어 향후 가족과의 연대, 가족 내에서의 활동 등의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가시간에 대한 선호도는 전체 응답자의 75.3%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2040년에는 일생활 균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특히 유의한 수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이는 본인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가 시간에 대한 충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고학력 집단일수록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취업자와 학생의 경우가 구직중이거나 전업주부보다 여가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유의한 수준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현재의 정책이 2040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강화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육아참여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73.6%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지역규모별로 볼 때 대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아버지 육아참여의 증가를 더욱 큰 비중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예상하였다. 한편 유의한 수준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아버지 육아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전체 응답자의 79.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컸으며 대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6〉 2040 미래 예상

단위: %, n=503

구분	매우 감소하거나 감소	현재 수준	매우 증가하거나 증가	비고
개인의 삶의 질	15.5	19.7	48.3	개인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낙관
인구성장률	73.2	19.7	7.2	인구 성장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구분	매우 감소하거나 감소	현재 수준	매우 증가하거나 증가	비고
결혼율	75.7	17.5	6.8	결혼율은 낮아지고 이혼율을 높아질 것으로 예상. 결혼 제도의 변화가 예상됨
이혼율	7.6	24.1	68.4	
재혼율	16.1	44.7	39.2	
1인가구	3.8	8.3	87.9	1인가구의 증가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복지시스템(육아지원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가족과의 시간	49.9	35.6	14.5	가족과의 시간은 현재와 같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족의 연대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여가시간에 대한 선호도	6.0	18.7	75.3	여가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큰 것은 일상 활균형에 대한 정책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임
동거 및 비혼가구	3.4	17.7	78.9	동거 및 비혼가구의 증가를 예상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볼 때 아동 중심의 양육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아버지의 육아참여	4.2	22.3	73.6	아버지의 육아참여는 증가하고, 어머니의 경제활동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젠더적 관점에서 성평등이 가정과 직장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과제임을 도출이 가능
어머니의 경제활동	3.0	17.1	79.9	

주: 비고란은 응답의 비중이 큰 항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예상하는 미래를 기술한 것임

2) 사회/문화/경제 분야 관련 전망

다음으로 일반인들이 전망하는 2040년의 사회, 문화, 경제 분야 관련 전망을 조사하였다. 각 항목은 앞 절과 마찬가지로 전문가 조사 및 최윤경 외(2013)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고 세부 항목은 1) 소득양극화, 2) 복지, 3)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4) 경제성장률, 5) 양성평등, 6) 시민의 정치참여, 7) 일생활 균형, 8) 에너지 부족, 9) AI 및 로봇 증가, 10) 20-30대 정치참여, 11) 남북통일, 12) 인구구성 다양화 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우선 소득양극화 이슈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72.8%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증가할 것이라고 유의한 수준에서 예상하였고, 대학교 졸업 이하의 집단이 소득양극화 현상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장 큰 비중으로 응답하였다(75.7%).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가 지속될 것인가와 관련한 항목에서는 전체의 56.3%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전체의 32.6%가 현재와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학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복지 지향 사회는 강화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내는 아니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한 전체의 76.1%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연령이 어린 집단이 많은 집단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비율이 컸고, 학력이 높을수록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이거나 기혼이고 무자녀인 집단이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집단에 비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현재 학생인 경우가 취업중이거나 구직중이거나 전업주부인 경우에 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예상하였는데 전업주부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대하여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현재 본인의 직업과 경제활동 상태가 미래 예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율은 전체의 23.7%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현재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48.9%로 가장 비중이 컸다.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중도 27.4%에 달하였다. 여성에 비하여 남성이 유의한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양성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2040년에 현재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보는 비율이 전체의 40.4%, 현재보다 긍정적으로 구현될 것이라는 비중이 51.5%로 성평등 문화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5점 만점 중 3.5점)이 남성(5점 만점 중 3.4점)에 비하여 이런 긍정적 예상을 더욱 많이 하고 있었다.

일반 시민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54.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36.4%가 현재와 같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유의한 범위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일생활 균형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준일 것으로 응답한 자들은 41.6%,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비중은 48.3%로 현재의 상황에 그대로 유지되거나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 비중이 유의한 수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 부족 현상이 2040년에도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52.9%에 달하였다. 현재의 수준과 동일할 것으로 보는 응답한 자들은 전체의 37.8%였다. 젊은 연령층의 집단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집단보다 에너지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예상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및 로봇이 증가한다고 보는 견해가 전체의 85.3%를 차지하였다. 더욱이 학생의 경우 91.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2030 세대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35%,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이 전체의 56.9%로 2030세대는 육아의 주행위자로 주목할만하다.

남북통일에 대하여는 전체의 48.9%가 현재와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하여 미래에 통일을 기대하거나 부정하는 비중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경우 현재와 같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이주민 등의 증가로 인한 인구 구성의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72.8%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증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더욱 예상하였고, 저출산에 의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인구 구성이 다양화가 증가할 것이라고 유의한 범위 내에서 응답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1-7〉 2040 사회/경제적 측면 미래예상

단위: %, n=503

구분	매우 감소하거나 감소	현재 수준	매우 증가하거나 증가	비고
소득양극화	4.6	22.7	72.8	소득양극화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다수가 예상하여 육아의 형평성을 지향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복지 지향사회	11.1	32.6	56.3	복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육아 지원 관련 분야도 확대될 것으로 추정 가능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3.6	20.3	76.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현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여성의 육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현재보다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구분	매우 감소하거나 감소	현재 수준	매우 증가하거나 증가	비고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3.7	48.9	27.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현재와 같은 수준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양성평등 사회	8.2	40.4	51.5	양성평등한 사회가 현재보다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여 육아 행위자의 평등 실현도 현재보다 이슈화 될 것으로 예상됨
일반 시민 정치 참여	8.9	36.4	54.7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일생활 균형 가능한 노동 문화	10.1	41.6	48.3	일과 생활의 균형이 더욱 달성되거나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
에너지 부족	9.3	37.8	52.9	에너지 부족 문제는 현재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
AI/로봇 증가	2.6	12.1	85.3	AI 및 로봇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육아 형태의 변화를 고려해볼 볼 수 있음
20-30대 정치 참여	8.2	35.0	56.9	2030세대의 정치 참여 증가는 육아의 주 행위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함
남북통일	24.1	48.9	27.0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현재와 같다고 대다수가 보아 그리 큰 영향요인은 아닐 것으로 예상
인구 구성 다양화	4.0	23.3	72.8	인구 구성의 다양화는 육아 지원에 있어 고려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음

주: 비고란은 상대적으로 큰 응답 비중 항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추정한 결과를 기입한 것임

다. 소결: 2040년, 40살 황미래씨의 일상

이상 2040년의 미래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전망한 사회를 설문조사 문항을 통하여 항목을 추출한 후 2040년 미래의 일상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2040년의 내 삶은 2019년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였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2019년보다는 줄어들었다. 이혼율 역시 증가하여 예전보다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사회 환경이 낫설지 않다.

1인가구가 2019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여 1인이 생활하는 것을 보조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상당히 발달하였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형태, 음식점, 각종 사회복지 시스템이 생겨났고 혼자 아이를 입양하여 키우거나 한부모가정에서 키우는 비중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들을 위한 육아 지원이 매우 활성화되어 반드시 결혼을 전제로 한 자녀 출생이나 육아의 형태를 일률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사회로 바뀌었다. 하지만 1인가구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혼자 나와 살게 되면서 아무래도 부모님들을 찾아뵙거나 형제자매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기존의 가족 제도 내에서가 아닌 사회적 지원을 받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현상과 관련이 있을테다. 더욱이 동거를 하거나 비혼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남성 혹은 여성 혼자 육아를 하는 가구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변을 보면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가구가 예전에 비하여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머니(여성)가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가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한 것보다도 그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여성이 일과 육아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게 된 것 같다. 또한 2019년과 비교할 때 여가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따라서 일 생활 균형을 지키는 직장이 많아져 줄어드는 근무 시간을 대신하여 본인의 취미 활동을 하는 회사 내 동호회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예전보다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 것 같다. 예전처럼 복지 시스템이 가동되거나 더욱 강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소득 양극화는 줄어들지 않고 2019년보다 더욱 증대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율은 2019년과 비슷한 데 비하여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어 복지시스템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 듯하다. 이는 육아의 형태나 모습에도 영향을 미쳐 저출산 현상이 그리 개선되고 있지 않고 경제적으로 상위에 위치한 계층의 육아와 하위에 속한 계층의 육아는 그 문화도, 방식도 점차 달라지는 것 같다. 이에 대한 복지제도의 보완과 지원이 절실하다. 에너지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 이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뉴스가 매일 보도되기도 한다.

양성이 평등한 사회는 예전보다 달성되어, 여성이 눈치를 보며 직장에서 진급이나 임금에 불평등을 인지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준 것도 사실이다. 일생활의 균형 또한 2019년에 비하여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AI 와 로봇 기술이 발달되어 일상 생활의 대부분을 이들 기계가 해결한다. 육체 노동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 이유다. 육아를 로봇 도우미가 대체하는 부분도 생겨나고 있다. 낮잠 재우기, 책 읽어주기 등을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분위기는 이미 확고해진 듯 하다.

또한 2019년과 달리 다문화 가정의 비중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예전에는 지역별로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과 아닌 지역이 나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구분이 사라져 사회 통합이 더욱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들과 2030세대의 정치 참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사회 이슈가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2019년에 비하여 확산되었다. 따라서 법안 하나가 발의되고 통과되는 데 시민의 힘이 더욱 커진 상황을 체감할 수 있다.

한편, 남북통일은 아직도 요원한 것 같다.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다가도 여러 국제 관계의 변화 속에 통일은 지난한 우리나라의 숙제로 남아 있다.

라. 2040년 육아지원정책 욕구 분석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설문조사에 앞서 2040년의 육아정책, 육아, 영유아를 생각하였을 때 떠오르는 키워드를 오픈응답으로 조사하였다. 503명의 응답자들은 다양한 키워드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범주화 한 결과 1) 육아를 지원하는 현금서비스(복지), 2) 육아를 지원하는 돌봄서비스, 3) 저출산 정책의 강화, 4) 공동체 의식의 강화, 5) 경제적 지원의 강화(예: 소득보장), 6) 육아휴직 등 시간 지원, 7) 다양한 형태 가족 지원, 8) 행복 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2040년의 육아정책'을 떠올렸을 때 일반 시민들은 복지적 차원에서 경제적 지원의 강화를 가장 많이 생각(304케이스, 60.4%) 하였고 돌봄에 대한 강화와 육아에 대한 공동체(98케이스, 20%) 등을 그 다음으로 떠올렸다. 그 이

외에는 저출산 정책의 강화, 행복한 아동과 육아 등의 모습을 떠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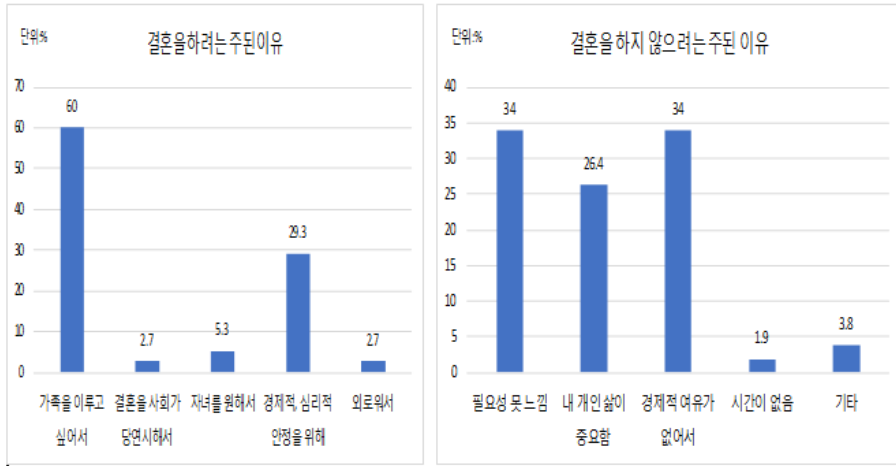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일률적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첫째, 현재의 육아 정책 중 현금지원정책이 가장 인상적이고 아직도 경제적 생활 상태가 육아를 하기에 버거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를 통하여 미래를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돌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육아 행복을 떠올리는 것으로 볼 때 ‘함께하는 육아, 행복한 육아’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육아 정책을 수립할 때 지역사회의 역할, 공동체의 역할을 통해 반영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세부적 항목 별로 2040년 육아지원정책 욕구 분석을 서술하도록 한다.

1) 결혼과 육아정책

전체 응답자 중 미혼인 경우는 181케이스를 차지하였다. 이 중 75명이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하려는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결혼을 하려는 주된 이유 중 가장 큰 항목은 가족을 이루고 싶어서(60%) 인 것으로 나타났다. 106명을 대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34%가 결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34%), 내 개인의 삶이 보다 중요해서(26.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점차 줄고 나의 삶, 경제적인 현실적 여건의 고려 등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7] 결혼여부 이유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가 동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3.5점이 평균이었고 동의한다는 비율은 57.5%, 보통이라는 비율은 26%를 차지하여 향후 결혼 제도를 통한 가정을 이루지 않더라도 동거를 통해 자녀를 형성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볼 수 있음을 추정 가능하다.

다음으로, 혈연관계로 형성된 가족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의미로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의향을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보통이다라는 비중이 38.1%, 동의한다는 비중이 49.2%로 공동체로서의 가족이라는 형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과 관련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중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1-8> 미혼 남녀 동거에 대한 생각 / 공동체 의미의 가족 형성에 대한 생각 / 국제결혼 고려 경험 유무

n = 181명

	전체 평균 (점/5점 만점)	동의/고려한다 (%(명))
미혼 남녀 동거에 대한 생각	3.5	57.5(104)
혈연관계가 아닌 공동체 의미의 가족 형성	3.5	49.2(89)
국제결혼 고려 경험 유무	2.6	27.6(50)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향후 결혼을 중심으로 한 자녀에 대한 육아정책이 아닌, ‘아동 그 자체’ 응 중심으로 한 육아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결국 모와 부에 대한 지원은 그 아동의 모와 부로서 지원 받을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고, 결혼제도를 통한 부부 사이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행해지면 안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혼자를 대상으로 자녀 출산 의향과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53.6%가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출산희망 자녀수는 1.9명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에서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출산 희망 자녀수 또한 다소 증가하였다.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자녀가 생기면 더욱 행복할 것 같아서’(86.6%) 라는 응답이 우세하였다.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자들(84명)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2.1%).

반면에 결혼과 무관한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는 전체의 87.3%가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보다 그 비중이 유의미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입양을 통한 자녀 양육 의향에 대해서도 전체의 76.2%가 없다고 응답하여 앞서 질문한 동거나 공동체로서의 가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 아직 법적인 의미의 결혼 상태가 아닌 경우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데 다소 부정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1-9〉 자녀 출산의향

n=181, 단위:%, 명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출산희망 자녀수 (평균)	출산희망 자녀수 (표준편차)
전체		(181)	53.6	46.4	100.0	1.9	0.6
성별	여자	(127)	48.0	52.0	100.0	1.8	0.5
	남자	(54)	66.7	33.3	100.0	2.1	0.7
X ² (df)/t			5.290(1)*			-2.6*	

〈표 V-1-10〉 결혼과 무관한 자녀 출산 의향

n=181, 단위:%, 명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출산희망 자녀수 (평균)	출산희망 자녀수 (표준편차)
전체		(181)	12.7	87.3	100.0	1.6	0.7
성별	여자	(127)	7.1	92.9	100.0	1.4	0.5
	남자	(54)	25.9	74.1	100.0	1.7	0.7
X ² (df)/t			12.123(1)***			-1.0	

〈표 V-1-11〉 입양등을 통한 자녀 양육 의향

n=181, 단위:%, 명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출산희망 자녀수 (평균)	출산희망 자녀수 (표준편차)
전체		(181)	23.8	76.2	100.0	1.4	0.6
성별	여자	(127)	23.6	76.4	100.0	1.4	0.6
	남자	(54)	24.1	75.9	100.0	1.6	0.7
X ² (df)/t			0.004(1)			-1.3	

다. 저출산과 육아정책

다음으로 기혼이고 무자녀인 자들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 (134명) 의 59.7%가 낳을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들은 자녀를 낳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40.0%), 형제자매간 우애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20.0%) 등의 순으로 그 이유를 응답하였다. 출산 희망 자녀수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희망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유의미한 범주에서 나타났다.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출산 의향 또한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낳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2.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47.9%가 자녀 양육비가 부담이 되어서 더 낳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V-1-12〉 출산 의향(무자녀 기준자)

		사례수 (명)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중이 다	계	출산희망 자녀수 (평균)	출산희망 자녀수 (표준편차)	
전체		(134)	59.7	14.9	25.4	100.0	1.7	0.7	
성별	여자	(104)	59.6	15.4	25.0	100.0	1.7	0.6	
	남자	(30)	60.0	13.3	26.7	100.0	1.8	0.9	
X ² (df)/t			0.092(2)					-0.6	
연령	만18~28세	(87)	60.9	12.6	26.4	100.0	1.8	0.7	
	만29~38세	(47)	57.4	19.1	23.4	100.0	1.6	0.6	
X ² (df)/t			1.037(2)					1.3	
지 역 규모	대도시	(75)	54.7	21.3	24.0	100.0	1.7	0.7	
	중소도시	(51)	66.7	7.8	25.5	100.0	1.7	0.6	
	읍면 지역	(8)	62.5	0.0	37.5	100.0	1.8	0.8	
X ² (df)/F			6.234(4)					0.1	
학력	고졸 이하	(9)	55.6	11.1	33.3	100.0	2.0	0.7	
	대학교 졸업 이하	(108)	58.3	15.7	25.9	100.0	1.7	0.7	
	대학원 재학 이상	(17)	70.6	11.8	17.6	100.0	1.6	0.5	
X ² (df)/F			1.285(4)					0.7	
혼인 상태	기혼 무자녀	(134)	59.7	14.9	25.4	100.0	1.7	0.7	
취 업 여부	취업자	(105)	62.9	11.4	25.7	100.0	1.7	0.7	
	전업주부	(20)	60.0	25.0	15.0	100.0	1.6	0.7	
	현재 구직중	(7)	14.3	42.9	42.9	100.0	2.0	-	
	기타	(2)	50.0	0.0	50.0	100.0	2.0	-	
X ² (df)/F			10.978(6)					0.2	
가 구 월 소 득	200만원 미만	(5)	40.0	20.0	40.0	100.0	3.0	0.0	
	200만원~ 300만원 미만	(29)	65.5	20.7	13.8	100.0	1.6	0.6	
	300만원~ 500만원 미만	(49)	55.1	10.2	34.7	100.0	1.9	0.6	
	500만원~ 600만원 미만	(32)	65.6	18.8	15.6	100.0	1.8	0.6	
	600만원~ 700만원 미만	(14)	64.3	14.3	21.4	100.0	1.0	0.0	
	700만원 이상	(5)	40.0	0.0	60.0	100.0	1.0	0.0	
	X ² (df)/F			11.032(10)					5.9***(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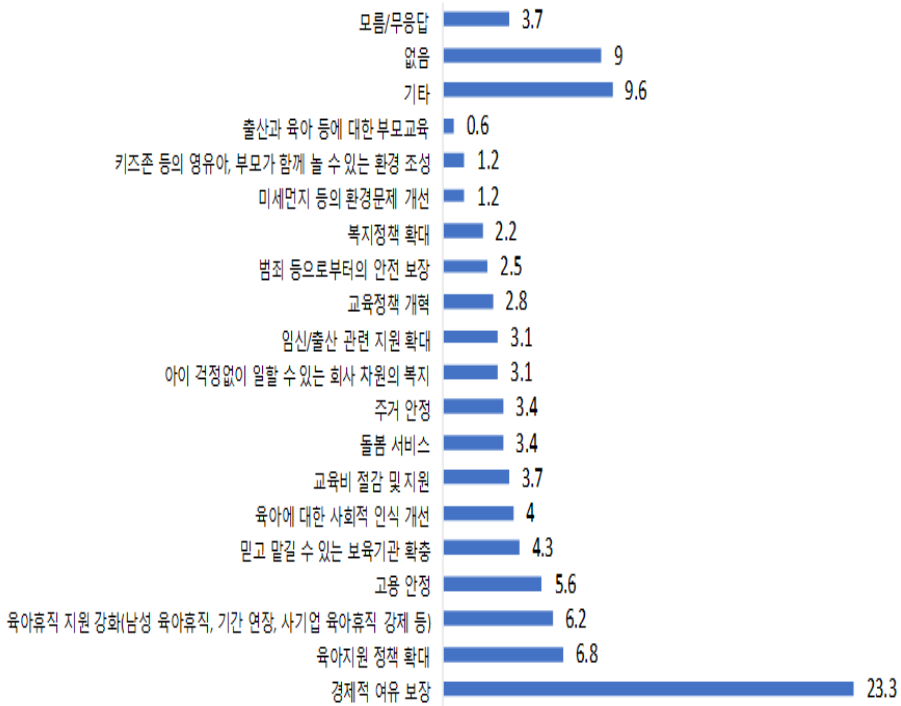
한편 기혼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요인이 자녀를 낳게 만드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1) 소득이 높아지거나 2) 자녀를 돌봐줄 기관과 사람이 확실하다면 낳겠다고 응답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곧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시작하는 육아에 대하여 경제적 활동 및 소득의 보장,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과 더불어 여전히 돌봄에 대한 이슈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는 단순히 어린 이집을 통한 보육이 아닌 지역 사회 내에서의 돌봄 역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1-13〉 자녀를 낳거나 더 낳을 생각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인(기혼자)

		사례수 (명)	1) 남녀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게 되면	2) 소득이 높아지면	3) 국가의 육아지원정책 이 많아지면	4) 자녀를 낳고도 직장 생활이 보장된다면	5) 자녀를 돌봐줄 기관/사람이 확실하다면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전체		(322)	3.3	4.0	3.9	3.9	4.0
성별	여자	(227)	3.5	4.0	3.9	4.0	4.1
	남자	(95)	3.0	4.0	3.9	3.7	3.9
X ² (df)/t			3.4***	0.0	0.1	2.0*	1.1
연령	만18~28세	(95)	3.7	4.3	4.2	4.3	4.3
	만29~38세	(227)	3.2	3.9	3.8	3.8	3.9
X ² (df)/t			4.0***	3.0**	3.0**	3.9***	3.1**
학력	고졸 이하	(27)	3.6	4.2	4.1	4.1	4.2
	대학교 졸업 이하	(246)	3.3	4.0	3.9	3.9	4.0
	대학원 재학 이상	(49)	3.3	4.0	3.8	3.9	4.0
X ² (df)/F			0.5	0.7	0.4	0.3	0.5
혼인 상태	기혼 무자녀	(134)	3.6	4.1	4.1	4.2	4.2
	기혼 유자녀	(188)	3.2	3.9	3.8	3.7	3.9
X ² (df)/F			10.6**	3.3	5.5*	11.3***	7.0**

그 이외에 자녀 출산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오픈 응답으로 조사하였는데, 경제적인 여유를 보장해주면 자녀를 낳겠다는 비중이 23.3%인 것으로 보아 시민들에게 자녀 출산은 경제적인 지원 및 상황과 가장 연관이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1-8] 자녀 출산을 위한 필요 조건(기타 응답)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하락한 사실은 전체 응답자의 92.8%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저출산에 대한 영향력을 응답자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지는 거의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40.4%가 관련성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이나 취업자가 전업주부와 구직자에 비하여, 월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유의한 수준에서 응답하였다.

〈표 V-1-14〉 본인의 삶에 저출산 현상이 미치는 영향

		사례수 (명)	①+② 관련이 있음	③+④ 관련이 없음	모르겠음
전체		(181)	51.9(94)	45.9(83)	2.2(4)
결혼의향	있음	(75)	68.0(51)	32.0(24)	0.0(0)
	없음	(44)	38.6(17)	56.8(25)	4.5(2)
	모름	(62)	41.9(26)	54.8(34)	3.2(2)
χ^2 (df)/F			16.564(8)*		
출산의향	있음	(97)	60.8(59)	37.1(36)	2.2(2)
	없음	(84)	41.7(35)	56.0(47)	2.4(2)
χ^2 (df)/t			11.644(4)*		
(결혼과 무관한) 출산의향	있음	(23)	69.6(16)	30.4(7)	0.0(0)
	없음	(158)	49.4(78)	48.1(76)	2.5(4)
χ^2 (df)/t			5.376(4)		

자녀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영유아 보육기관, 육아휴직의 보장, 자녀 양육을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 보장과 일생활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에 대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주거공간은 응답자의 89.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영유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기관은 93.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육서비스 기관 필요도와 관련해서는 전업주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필요도를 유의하게 크게 인지하고 있었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필요도를 유의하게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초등자녀 돌봄 공간도 전체 응답자의 90.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유아 보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업주부 집단의 경우 유의하게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돌봄 시 부부간 평등한 역할 분담은 전체의 86.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은 집단이 유의하게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할 수 있는 권리는 전체의 91.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학력이 낮을수록 유의하게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을 하는 동안 유연한 근로시간 보장은 전체의 91.8%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유의하게 필요하다는 비중이 컸고,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유의하게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현

금 지원에 대한 필요성,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 지원은 각 83.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체 항목 중에서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비중이 낮았다.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유의한 범위에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일생활 균형이 필요한 정시퇴근 보장은 전체의 90.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학령이 높을수록 유의한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보편적 아동정책의 필요성과 보편적 가족정책의 필요성은 각 전체의 87.5%, 8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 때, 자녀를 안심하고 나올 수 있는 사회 구현을 위한 필요성은 1)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2) 돌봄서비스 지원과 성평등한 돌봄 역할 분담, 3) 일생활균형과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유연화 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현금지원과 보편적인 아동 및 가족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느끼고 있었다.

〈표 V-1-15〉 안심출산이 가능한 사회 구현에 필요한 조건

시례수 (명)	1)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주거공간	2) 영유아 자녀를 민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기반(어린이집 등)	3) 초등 자녀를 민고 맡길 수 있는 법자후 돌봄서비스 기반(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4) 가정내 자녀돌봄의 역할을 부부가 평등하게 분담	5) 어린이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6)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7) 힘겹게 양육비 지원 (이동수당 등)	8)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 지원	9)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시퇴근 보장	10) 아동의 부모 배경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아동정책	11)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보편적 가족정책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전체	(503) 4.3	4.5	4.4	4.3	4.5	4.5	4.3	4.3	4.5	4.4	4.3
여자	(354) 4.4	4.6	4.5	4.5	4.6	4.6	4.4	4.3	4.6	4.4	4.4
남자	(149) 4.3	4.4	4.2	3.8	4.3	4.3	4.2	4.2	4.3	4.3	4.1
X ² (df)/t	1.4	3.2**	3.0**	8.5***	3.7***	3.2**	2.1*	1.7	4.0***	1.8	3.1**
연령	(213) 4.3	4.5	4.3	4.4	4.5	4.5	4.3	4.2	4.5	4.3	4.2
만18~28세	(290) 4.3	4.6	4.5	4.3	4.5	4.5	4.4	4.4	4.5	4.5	4.4
만29~38세	(93) -0.3	-1.2	-2.3*	2.5*	-0.2	-0.3	-1.0	-1.5	-0.2	-2.9**	-1.8
X ² (df)/t	4.3	4.6	4.6	4.4	4.5	4.5	4.5	4.3	4.5	4.5	4.5
고졸 이하	(43) 4.3	4.6	4.6	4.4	4.6	4.6	4.6	4.3	4.5	4.5	4.5
X ² (df)/F	4.3	4.6	4.4	4.4	4.6	4.5	4.3	4.3	4.5	4.4	4.3
대학졸업 이하	(391) 4.3	4.6	4.4	4.4	4.6	4.5	4.3	4.3	4.5	4.4	4.3
X ² (df)/F	(69) 4.3	4.4	4.3	4.1	4.4	4.4	4.5	4.3	4.4	4.4	4.3
대학원 재학 이상	0.3(a)	1.3(a)	2.4	3.5*	1.9	0.4	1.5	0.1	0.9	0.9	1.1
X ² (df)/F	(181) 4.2	4.4	4.2	4.3	4.5	4.3	4.1	4.1	4.4	4.2	4.2
미혼	(134) 4.4	4.7	4.5	4.4	4.6	4.5	4.5	4.4	4.5	4.3	4.2
혼인 상태	(188) 4.4	4.6	4.6	4.3	4.6	4.6	4.5	4.4	4.5	4.5	4.4
X ² (df)/F	(2.2) 2.2	10.9***	12.6***	0.1	1.2	6.6*(a)	11.0***	8.3***	1.8(a)	6.6**	5.2**
취업자	(328) 4.3	4.6	4.5	4.3	4.5	4.5	4.3	4.3	4.5	4.4	4.3
X ² (df)/F	(36) 4.3	4.5	4.2	4.3	4.5	4.4	4.3	4.3	4.5	4.2	4.2
학생	(79) 4.5	4.7	4.5	4.5	4.6	4.6	4.6	4.5	4.6	4.5	4.4
취업 여부	(52) 4.0	4.2	4.0	4.4	4.5	4.4	4.1	4.1	4.3	4.2	4.2
현재 구직중	(8) 4.5	4.4	4.4	4.3	4.5	4.0	4.4	4.4	4.4	4.3	4.3
X ² (df)/F	3.0*	4.6**	6.3***	1.4	0.5	2.4*(a)	2.7*(a)	2.5*	1.5(a)	1.3	0.9

2) 육아지원정책의 미래 예상

(1) 전망 일반

본 절에서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미래를 전망해보았다. 현재의 정책에 대하여 중요 항목을 제시하고 그 중요성이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전망하였다.

우선 여성의 육아휴직제도는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응답자의 73.4%, 현재의 수준일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응답자의 22.5%이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도 응답자의 74.6%를 차지, 현재와 같은 수준일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21.0%로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으나 미혼인 집단이 기혼인 집단보다, 저출산에 대한 영향력을 인식하는 집단이 그렇게 않은 집단보다 유의한 범위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육시설의 증가는 전체의 65.4%가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전체의 29.9%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현재 보육시설 수준에 대한 시급성이나 필요도보다 육아휴직의 강화를 더욱 크게 인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의 증가는 학력이 높을수록 필요성이 크다고 유의한 범주에서 응답하였다. 현금지원 중요성 대한 전망은 이보다 낮은 60.6%로 32.8%가 현재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응답하였다.

‘육아와 관련한 산업의 경제 활성화 지원이 중요해질 것인가?’에 대한 항목은 전체의 56.7%가 증가할 것이고, 35.2%가 현재 수준일 것으로 응답하여 저출산 시대에 육아관련 산업 지원은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부모와 아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인프라의 중요성은 전체의 61.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33.4%는 현재와 같을 것으로 보았다.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이 중요할 것인가 라는 항목도 전체의 44.1%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2040년에도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거나 여전히 힘든 육아라는 인식이 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고 본 응답은 전체의 34.8%였다. 한편 낮은 연령이 높은 연령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 2040년에 육아를

담당하게 될 당사자들(만 18세~28세) 일수록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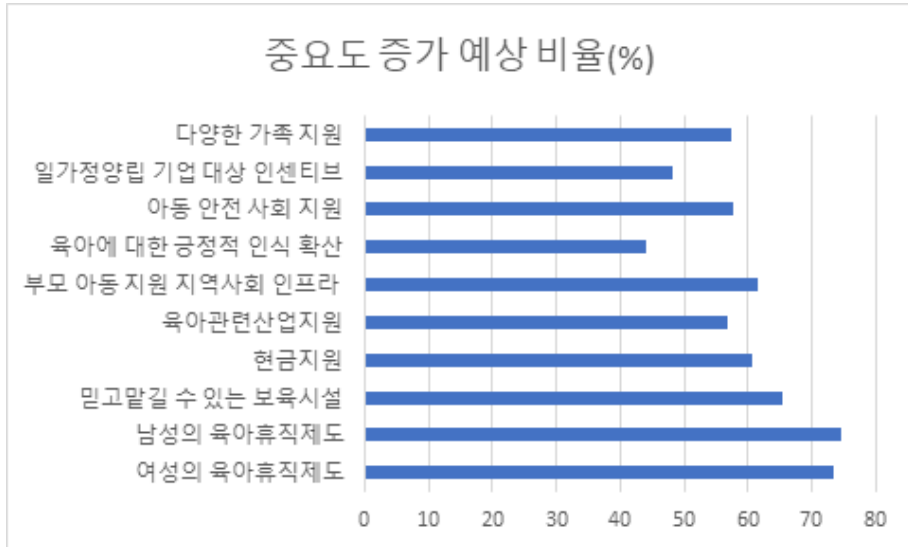
아동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에 대한 중요성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57.7%, 현재와 같을 것이라고 보는 비율은 35.8%로 50% 이상이 제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영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학력이 높을수록 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유의한 수준에서 응답하였다.

기업이 일가정양립 조성을 위해 인센티브의 중요성 항목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채 안되는 48.1%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에 달하였다. 이는 현재의 수준에 만족한다든지, 혹은 미래에도 이보다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 때문인지 유의해서 해석하여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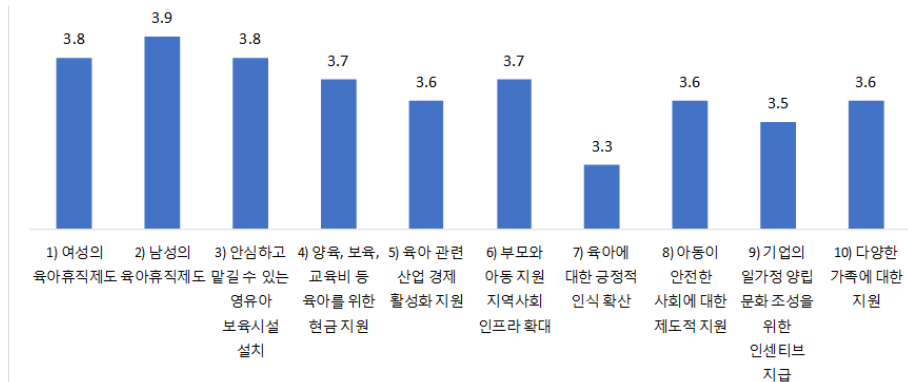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중요성은 전체의 57.5%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36.6%가 현재 수준과 같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증가할 것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전망하였다.

종합하면, 미래의 해당 정책에 대한 중요성 예상 내지 전망은 ‘현재의 제도가 2040년에는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2019년 현재에도 충분하기에 2040년에는 필요없다’는 생각, ‘2040년에는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등의 상반된 생각이 혼재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2040년에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정책의 중요도에 반영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본 설문 결과 해석하면 육아휴직제도 및 보육시설(상위 2개)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나 일가정 양립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하위 2개)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V-1-9] 현재와 비교한 2040년 예상되는 중요도 전망



주: 비율이 클수록 2040년에 그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 비율



주: 점수가 클수록 2040년에 그 중요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 비율

(2) 2040년 육아 형태 전망

다음으로 2040년 예상되는 영유아부모의 육아형태에 대하여 전망하였다. 우선 아버지 양육참여자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현재와 비교했을 때 75.5%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현재의 수준과 같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은 21.7%였다. 영유아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하여는 39.4%만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현재와 같은 수준(51.1%) 이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9.5%) 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인프라나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부모의 기능과 역할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낮은 연령 집단이 높은 연령 집단에 비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 역할이 증가할 것이라고 유의한 수준에서 응답하였는데 이는 부모 역할의 증대에 대한 예상이 곧 부모의 역할이 더욱 필요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해볼 때 부모 역할 강화에 대한 지원 정책을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녀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중요도는 7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연령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 증가를 더욱 크게 예상하였다. 가사노동에 있어 성평등한 관점에 대한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여성이나 연령이 낮은 집단이 더욱 절실하게 느끼거나 2040년에는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 담겨져 있다고 보인다.

조부모의 손자녀돌봄은 전체의 54.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육아지원기관 이용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전체의 70.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비혈연 아이돌보미 이용 증가에 대한 가능성은 전체의 62.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육아지원기관 이용율과 비혈연 아이돌보미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전망하였다. 이는 2040년의 사회는 조부모에 의한 손자녀돌봄에 비하여 육아지원기관이나 비혈연 아이돌보미에게 육아를 분담하게 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관련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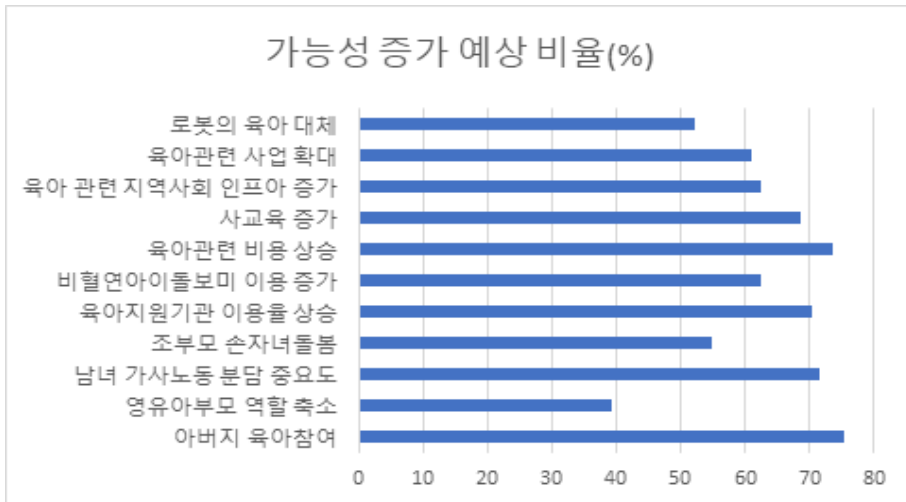
육아 관련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73.6%가 증가할 것으로 응답하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한 수준에서 높아질 것으로 응답하였다.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68.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는 관련 경제적 비용의 긍정 부정 유무가 아닌 2040년에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으로 각 항목에 대한 부정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육아관련 지역사회 인프라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전망은 전체의 62.6%였고, 육아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은 전체의 61.0%, 로봇이 육아를 대체

할 것으로 보는 전망은 전체의 52.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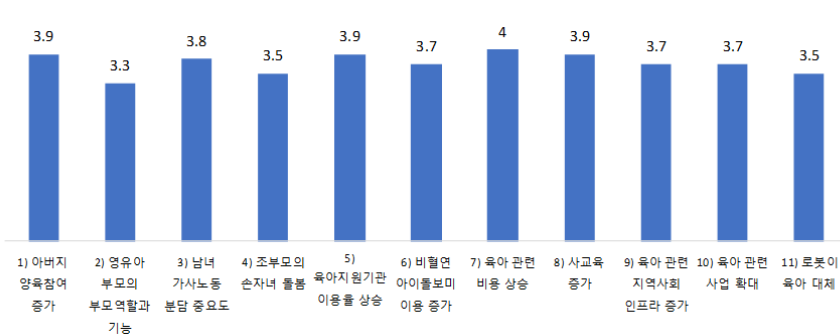
종합하면, 일반인들이 전망한 2040년의 육아형태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경우 이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에 관련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유아 부모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므로 부모의 권리와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그림 V-1-10] 2040년 영유아부모의 육아형태 전망



주: 비율이 클수록 2040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것

[그림 V-1-11] 영유아 부모 대상 2040년 육아형태 전망



주: 점수가 클수록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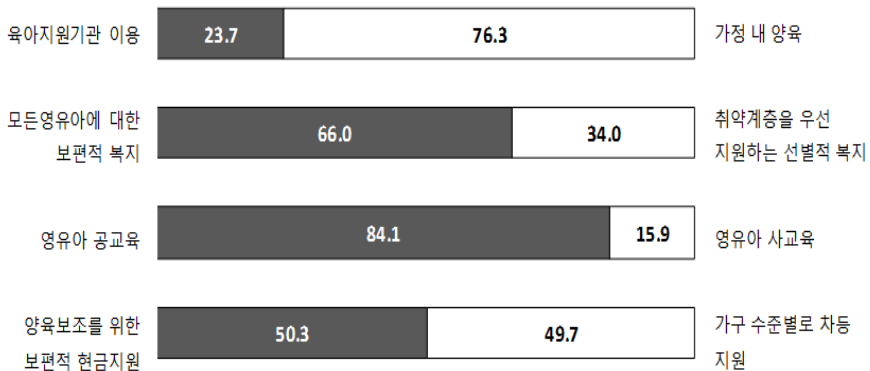
(3) 2040년 지향하여야 하는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다음으로 2040년에 우리 사회가 지향하여야 하는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항목은 육아지원분야 전반, 일가정 양립, 저출산 으로 구분하였고 각 항목별로 쌍대비교를 시행하였다.

가) 육아지원 전반

우선, 영아(만 0세-만 2세)의 양육방식에 대하여는 가정 내 양육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76.3%를 차지하였다. 2019년 현재 영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60%를 넘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보건복지부, 2019) 2040년에 개선 요구가 있는 분야라고 보여진다. 영유아 육아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66%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34%는 선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이 기혼 집단에 비하여 선별적 지원에 대한 선호도는 다소 높았다. 공보육체계에 대한 지향은 84.1%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현재 우리 사회가 공보육을 지향하는 것과 맥락이 같다고 보인다. 2040년에도 여전히 달성하여야 할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육 보조를 위한 현금 지원의 보편성 여부는 2040년에 보편적인 발향성을 지향하는 비율이 50.3%, 선별적인 지원을 지향하는 비율이 49.7%로 시설 및 인프라 지원에 비하여 보편적인 지원을 지향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2040년에 정책 설계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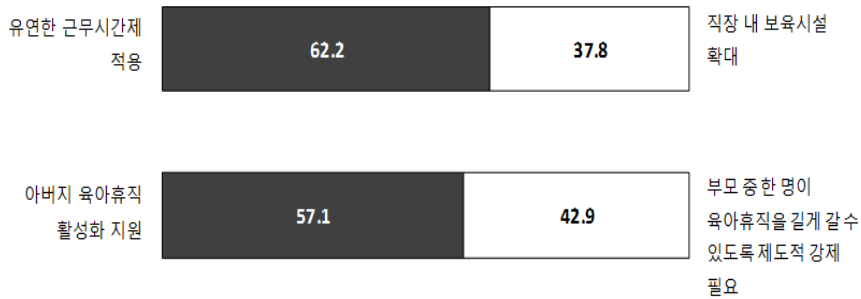
[그림 V-1-12] 2040년 육아지원정책 방향성



나) 일가정양립 분야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 분야의 2040년 지향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유연한 근로시간제와 직장내 보육시설 확대 중 유연한 근로시간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비율이 62.2%로 상대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아버지 육아휴직의 활성화 지원은 57.1%, 아버지나 어머니 중 반드시 육아휴직 강제 시행은 42.9%로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가 2040년에 상대적으로 더욱 지향하여야 할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V-1-13] 2040년 일가정 양립분야 정책의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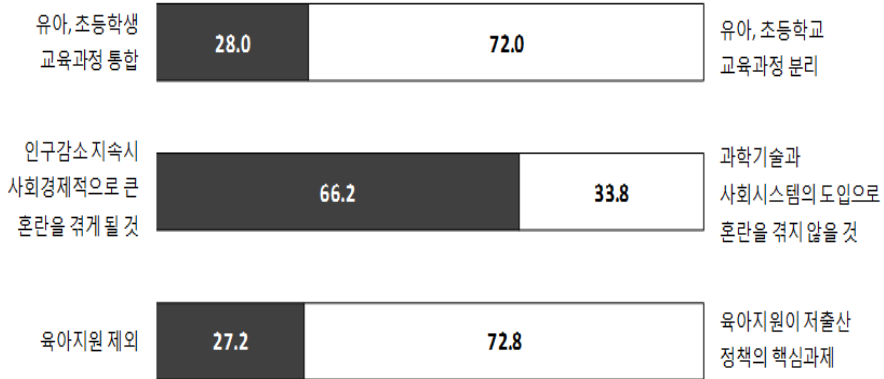


다) 저출산

저출산 문제와 2040년 육아정책의 발향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유아-초등학교 교육과정 통합과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2040년에도 현재와 같이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72%를 차지하였다. 인구 감소에 대한 2040년의 상황을 예상하게 하는 질문에서는 66.2%가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33.8%는 다양한 사회시스템의 도입으로 큰 혼란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 육아 지원을 저출산 정책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과 현재처럼 핵심 과제로 보는 것에 대한 쌍대비교를 시행하였다. 2040년에도 여전히 육아지원은 저출산 정책의 핵심과제라고 예상하는 비율이 전체의 72.8%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미혼의 경우 31.5%가 제외하는 것이 낫다고 유의한 수준에서 응답하여 기혼인 집단에 비하여 육아지원정책의 저출산 정책 편입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V-1-14] 2저출산 정책과 육아지원정책



(4) 2040년, 영유아부모에게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마지막으로 2040년에 20-30대 영유아 부모에게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하여 전망하도록 하였다.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 아동복지, 일가정양립, 기타로 항목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가)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보육 환경

좋은 보육 환경을 위한 여건을 질문하였다.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6.7%였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필요성을 더욱 크게 예상하고 있었다. 가정 내 양육지원 증가도 75.7%가 필요성을 예상하였고, 기관 미이용시 가정양육수당 지급 필요는 67.6%, 기관 이용시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증대 또한 73.6%를 차지하였다. 가정내 양육지원 증가에 대한 필요성은 미혼인 집단이 기혼인 집단에 비하여 필요도가 크다고 응답한 반면, 기관 미이용시 가정양육수당 지급 필요와 기관 이용 보육교육료 증대는 기혼인 집단이 미혼인 집단에 비하여 필요도가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수당 대상의 확대는 69.8%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현금 지원 증액은 70.0%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 질문 모두 기혼인 집단이 미혼인 집단에 비하여 필요도가 더 크게 조사되었다.

국공립 보육교육기관이 전체의 40%이상으로 확대될 필요성은 전체의 80.9%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부모교육은 전체의 84.5%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저출산에 대한

영향력을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더욱 필요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육아의 필요성은 전체의 7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2040년에도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IT 기술 발전은 아동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필요성을 전체의 74.8%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나) 아동 복지 정책 관련

다음으로 2040년 아동복지정책과 관련한 필요성을 설문하였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은 전체의 74.8%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역시 74.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다문화 및 외국인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은 전체의 49.3%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8.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2040년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리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및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88.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강화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내 아동 놀이 공간의 확대는 전체의 83.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돌봄공백에 대한 예방 및 지원강화도 85.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아동복지 정책이 2040년에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 일가정양립관련

마지막으로 2040년 일가정 양립 분야와 관련한 필요성을 설문하였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증가는 전체의 74.2%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기혼인 집단이 미혼인 집단에 비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저출산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집단이 그 필요성의 정도를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시간 선택 유연한 일자리는 이보다 다소 높은 84.7%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는데 이 역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그 필요성을 크게 예상하고 있었다. 고용의 안정성 보장 역시 전체의 89.5%가 필요하다고 예상하였고 일가정 양립의 사회분위기 확산은 전체의 87.5%가 필요하다고 예상하였다. 성평등 의식의 확대는 전체의 80.5%가 그 필요성을 예

상하였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한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모든 영역의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육아의 담당자가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을 남성에 비하여 더욱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상해본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일반인 설문조사를 통해 2040년 미래 한국 사회에 대한 전망, 2040년의 육아지원정책을 예상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은 총 503명이 참여하였다. 그 중 미혼인 집단은 전체의 36%, 기혼 무자녀의 비율은 26.6%였다. 전체의 65.2%는 취업자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삶보다 미래에 삶에 대한 만족도를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기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 현재와 미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가장 높았다. 경제적인 능력, 복지시스템, 환경 및 기후 등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답하였다.

2040년 한국 사회에 대한 전망은 1인가구가 증가하고 여가 시간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며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주로 예상하였다. 또한 소득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육아지원정책 욕구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인 경우에도 결혼을 하고자하는 의향을 가진 응답자는 50%에 미달하였는데, 동거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고려한다는 응답이 미혼자의 57.5%를 차지하여 향후 가족 형태의 다양화를 예상해볼 수 있다. 반면에 결혼과 무관한 자녀를 출산할 의향은 미혼인 응답자의 87.3%가 없다고 응답하여 출산이 아닌 다른 형태를 택하거나 결혼을 하여야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를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입양을 통한 자녀 양육 의향은 전체의 76.2%가 없다고 응답하여 결혼 문화를 형성하고 장려하는 것이 여전히 2040년에도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남긴다.

기혼인 자들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경제적 비용 때문에 출산, 혹은 추가 출산을 망설이는 경우의 비중이 컸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질 경우 자녀를 출산한다고 응답한 비중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성평등한 사회가 되면, 일생활 균형이 보장되면 출산

을 하겠다고 응답하였다.

2040년의 육아지원정책에 대하여 예상해보았다. 육아휴직제도의 중요도는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하였다. 2040년의 육아형태는 아버지 양육참여가 증가하고, 영유아부모의 역할은 유지되거나 증가하며, 비혈연 아이돌보미가 조부모 손자녀 돌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2040년에 지향하여야 하는 육아정책의 방향성과 필요성을 예상해보았다. 영아의 양육방식은 가정내 양육을 기관 양육보다 더욱 지향하였고, 양육보조를 위한 인프라 지원은 보편적일 것을 예상하였으나 현금지원은 선별적인 방향으로 가야할 것을 예상하였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해서는 유연한 근로시간 보장이 직장내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지향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아버지 육아휴직의 활성화 또한 지향하여야 할 정책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2040년에도 육아지원 정책은 여전히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2040년에 필요한 정책은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화, 국공립 보육교육기관 확대, 한부모 및 저소득 가구 지원 강화, 지역사회 놀이공간 확대,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보장 등으로 조사되었다.

2. 2040 육아지원정책 속의 토론: 정책 연구에서의 공론화 필요성⁷⁾

가. 개요

1) 정책숙의제 개념

정책숙의제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의 시행자와 수혜자들로 구성된 집담회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공론’을 형성하는 제도다.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이다.

7) 이하 2019년 10월 30일 시행한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숙의제 자료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2) 공론화의 개념

공론(公論)의 사전적 의미는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이다. 즉, 공론은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논을 거쳐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는 일정한 의견을 의미한다. 공론화란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여러 입장과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뜻한다.

3) 2040 미래육아정책 정책숙의제(숙의 토론) 배경 및 의의

‘2040 미래육아정책 숙의 토론’은 일반인과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된 2040년 미래육아정책과 이를 전제로 구성된 4개의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국민이 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육아미래, ② 선호하는 육아미래, ③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육아미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40 미래육아정책 정책숙의제’는 2040년을 기준으로 육아의 모습과 육아의 형태에 대해 그려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변화 요인은 무엇인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국민이 선호하는 미래육아가 실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나. 진행 과정

정책숙의제(공론화)에는 공청회, 시민배심제, 합의회의, 여론조사, 공론조사, 숙의토의조사 등 시민참여형 조사의 다양한 기법이 활용된다. 이번 ‘2040 미래육아정책’에 대한 정책숙의제는 ‘시민참여형 숙의토의조사’ 방식으로 수행된다. 시민참여형 숙의토의조사는 단답형 설문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시민참여단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정제된 여론을 도출한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을 ‘숙의(熟議)’라고 하는데, 숙의는 숙의토의조사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숙의토의조사는 일반적으로 사전 설문조사, 숙의과정(학습과 토론), 사후 설문조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정책숙의제의 경우에는 사전에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래육아정책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고, 이를 토대로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미래육아정책'과 이를 전제로 한 미래육아에 대한 4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하였다. 이후 속의과정으로 모집된 참여단을 대상으로 미래육아정책과 영향 요인,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최종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속의과정을 거친 뒤에 참여단의 견해가 사전조사(일반국민, 전문가조사 결과)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한다.

〈표 V-1-16〉 2040 미래육아정책 정책속의제 일정

시간	구분	내용
2:00~2:20 (20')	개회	개회인사
		정책속의제 취지, 목표, 진행방법 소개
		조별인사: 자기소개, 과정에 대한 기대나 관심사항(10')
2:20~2:40 (20')	주제 발표	1. 2019년 현재 육아(지원)정책과 한계 2. 2040년 미래 인구·사회적 변화 예측 3. 2040년 미래 육아(지원)정책 예측
2:40~3:35 (55')	모둠 및 전체	세션1. 주제발표 깊게 이해하기 (1) 전문가 발표 이해한 것과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나눔 (2) 질문하기: 2040년 미래 인구·사회적 변화와 육아정책을 상상하는데 더 필요한 정보구하기 휴식(15분)
3:35~5:00 (85')	모둠 및 전체	세션2. 2040년 미래 예측하기 (1) 2040년 한국사회 모습 상상하기 : 지금과 달라질 것, 새롭게 등장할 것, 없어질 것 상상하기, 그림 그려보기 (2) 미래 육아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 나누기 : 현실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3) 미래 육아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체와 공유 (사회적 요인 중심으로 발표 10분) 휴식(13분)
5:00~5:40 (40')	모둠 및 전체	세션3. 미래에 필요한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나눔 (1) 2040년 육아의 모습과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2) 이때 필요한 육아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와 비교해 강화되거나 신설,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 중심으로 나눔 전체와 공유(육아정책 중심으로 발표)
5:40~6:00 (20')	전체	세션4. 설문조사 및 마무리 (1) 미래육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칠 요소 (2) 미래육아지원정책 실효성 및 필요성 평가 조별 소감 나눔, 마무리

[그림 V-2-1] 현장 스케치 모습





분임별 토의내용 발표1



분임별 토의내용 발표2



분임별 토의내용 발표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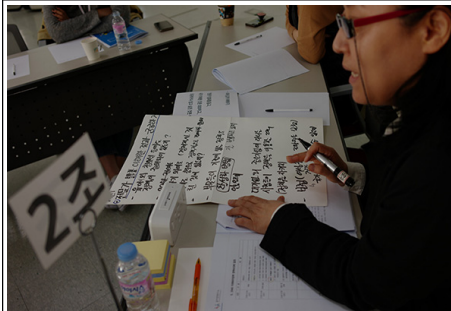
분임별 토의내용 발표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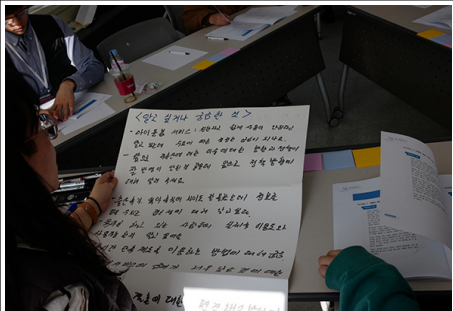
전문가 질의응답1



전문가 질의응답2



분임토의 정리1



분임토의 정리2

다. 2040년 한국사회 모습 상상

1) 2040년 한국사회 모습 상상: 지금과 달라질 것

① 교육 방식의 다변화 - 특성화 학교 증가, 대체 교육과정의 등장

“(1조)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한 반에 5명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폐교하는 학교도 늘어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특성화된 학교가 더 많이 생기거나 공교육이 더 다양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이 밀착마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조) 미래 산업화 되고 도시화될수록 녹지, 공원이나 어린이들이 자연과 점점 멀어지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자연친화적인 걸 더 많이 접근하게 하고 요즘 애들은 만나면 스마트폰 게임하잖아요. 오히려 그런 걸 더 부모님들이 경계해서 어릴 때부터 조기에 자연친화적으로 뛰어 노는 교육이 실행되고 왜냐하면 이게 되게 희귀해질 것 같거든요. 희귀한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실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조) 학교를 운영할만한 아동수가 굉장히 부족해질테니, 좀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원격교육을 실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 AR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교육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또 점점 기술기반 산업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점점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제가 프로그래밍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미래에 집에서 아이와 같이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고, 굳이 기관에 가지 않아도 가정 내에서 보육, 교육이 다 이뤄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② 국공립보육기관 증가

“(2조) 지금 어린이집도 사실 국공립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 30~40%밖에 안 되고 전부 다 가정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존 점점 늘리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가정형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기관도 좀 더 증가할 것 같아요.”

③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요 증가

“(1조) 집에서 아이 돌봄을 요청하는 가구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3조) 기술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도 돌봄서비스를 실시간으로 부를 수 있는 어플이 있다거나 아이를 재울 수 있는 흔들 침대로 최적화해서 재울 수 있는 기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40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육아가 육체로 느끼는 피로감을 덜어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들고요.”

“(2조) 아파트단지는 어린이집을 못 가더라도 비슷한 또래가 있으면 번갈아 가면서 어린이집처럼 비슷하게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게 많이 생기긴 했는데, 이걸 근처에 또래가 있어야 많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또래가 없어서 혼자 키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치구에서 지원이 되면 어린이집을 갔다가도 일반적으로 회사에 가면 6, 7시에 끝나니까 비는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맡겨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④ 아버지 양육참여 증가

“(2조)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같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좀 더 주로 엄마가 양육을 책임지던 것에서 부모가 같이 육아를 아빠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탄력근무제가 활성화 되어서 엄마가 바쁘면 아빠가 데려다 줄 수도 있고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식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럼 엄마도 회사를 다닐 수 있고 아빠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⑤ 유연화 된 노동환경에 따른 보육/교육방식의 변화

“(2조) 노동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나인투식스가 아니라 계약직, 프리랜서직이 많아질 것 같아서 오히려 학교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홈스쿨링이나 집에서 하는 교육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조) 저는 20년 후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아서 정식 보다는 불규칙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도 굳이 8시까지 등교해서 5시에 끝나는 게 아니고 학교 자체가 사라지고 홈스쿨링 개념인데 각 집마다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2) 2040년 한국사회 모습 상상: 새롭게 등장할 것

① VR/AR/홀로그램을 이용한 놀이

“(4조) 그냥 집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경적인 문제들이 커지다 보니까 창문도 다 없애고 홀로그램을 이용한 놀이가 많아질 거 같아요.”

② 마을 공동체 중심 통합 교육

“(2조) 저는 요즘 아파트에들 많이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테니 아파트 단지마다 1단지면 1단지, 2단지면 2단지마다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1단지는 1단지를 위한 학교 같이 전학년을 해서 다니는, 왜냐하면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면 엄마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애들 내보내야 될 것 같아서 거리도 가까우면서 사회생활도 같이 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다니면 어떤 애는 멀리 다닐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리상 그래도 단지마다 하나는 집, 학교가 될 수 있으니까요.”

③ 국가채용방식의 돌보미의 등장

“(1조) 학교가 줄어들면 선생님도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채용 자체를 다르게 하는 거죠. 학교 선생님이로 채용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한정적 일 거고 선생님들은 국가인증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도 돌보미들 자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그 사람들 국가 채용으로 돌보미로 다 넣어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싶거든요.”

④ 대형 공기청정기 타워

“(4조) 중국에서도 공기청정기를 크게 타워로 만들었잖아요. 실효성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런 걸 만들지 않을까”

⑤ 자율주행 자동차

“(4조) 자율주행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2040년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돼서 엄마가 영유아를 데리고 외출하기가 지금보다는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⑥ 가정용 인큐베이터 및 자동 목욕 장비

“(4조) 태어날 때부터 아픈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가정용 인큐베이터 그런 장비들도 생기고, 육아의 편리를 위해 아이들을 자동으로 목욕시켜주는 장비들이 나오지 않을까”

3) 2040년 한국사회 모습 상상: 없어질 것

① 학교

“(1조)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한 반에 5명?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폐교하는 학교도 늘어날 것 같아요.”

“(3조) 미래의 아이가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꼭 저희가 학교에 꼭 가야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원격 활성화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② 장난감

“(4조) 지금도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보다 미디어 매체를 많이 시청을 하는 것처럼 홀로그램이나 미디어 형태의 새로운 매개체들이 등장하면서 아이들 장난감이 없어질 것 같아요.”

③ 단순 노동 직업

“(3조) 지금의 추세로는 2040년에는 거의 100% 주문 받고 단순노동직업들이 전부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3) 미래 육아지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및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①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식

“(1조) 개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게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연장선상에서 노후 대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출산은 당장 낳아서 기르면 되는 문제긴 한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동안 나의 재산은 증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아이가 어른이 되고 독립하고 그때 내 소득이 없을 때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 멈칫거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무책임하다거나 내 삶이 더 중요하다기 보다 인생 자체를 놓고 생각하다 보면 고민을 크게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소득이나 주변사람들 인식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젠 개인이 가장 중요해진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공동 보다는 개인의 삶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3조) 전통적 가족관이 해체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가족을 생각하면, 부모와 그 부모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는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결핍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치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자녀를 안 낳는다고 그래도 네 선택이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통적인 가족관이 많이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예전에는 자녀를 꼭 낳아야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도 억지로 낳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내 경제력, 내 삶을 우선시하는 거죠.”

“(4조) 주요 요인에는 개인주의 심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율로족이 괜히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더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해도 내가 더 중요해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걸 중요시하고 아이를 안 낳게 되고 아이를 낳으면 내 시간이 줄어드니까 이것이 육아에 많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② 경제력

“(1조) 경제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나 혼자 살기에도 힘들다고 생각하는 와중에 1명을 더 낳아서 수입이 2명이었다가 심지어 1명으로 줄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자녀를 낳고 잘 기를 수 있을까? 그런 경제력 수준에서 내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하면 3명 이상 낳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에도 힘든 상황에서 자녀를 기르는데 있어서 아무리 정책이 잘 나오더라도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준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제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2조)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 그런 비율이 올라가고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 일하고 있는 여자들한테 물어보면 네가 만약에 돈이 많다면 지금 그래도 일 할래?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다였어요. 돈 많으면 아이 보면서 인터넷 쇼핑도 마음껏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교양과목도 많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일하는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냐고 그러면 인정을 하더라고요. 가장 영향이 있는 건 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조) 결국 경제적인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계속 4차 산업혁명과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래에도 심화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태어나서 해서 키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결국 불안정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직업 대체가 계속 일어나고 일자리 소멸이 일어나고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지만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불안정성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자녀가 결혼하고 출산하게 되면 양육을 위해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식으로도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여성은 계속 대체 인력으로 되는 산업예비군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③ 인식의 변화

“(1조) 일단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아무래도 세대 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이나 보육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제도도 계속 좋은 제도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2조) 가장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요인은 남녀 불평등 인식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문제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데 아직도 여성한테만 너무 많은 책임을 전가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여성이 겪게 함으로써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꺼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까지 저처럼 출산을 하게 되면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쉽진 않거든요. 출산이야 여성이 많이 짊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회사에선 아직까지는 그래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서 인식이 더 높아져야지 여성의 사회 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어지고 활성화 된다고 생각해요”

“(3조)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다름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가족 구성원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것에 대해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뒷얘기 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더불어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것도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고 여자는 주양육자가 되고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한 고정적인 생각 자체가 그렇지 않고 남자도 집에서 애를 볼 수 있고 여자도 밖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적인 인식이 기반이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④ 육아, 노동, 복지 정책 등의 관련 정책 마련

“(3조) 저는 미래육아 시나리오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 정책이나 법안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이 육아정책이고 소득 양극화에 대한 부분은 근로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법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국가가 거시적으로 변화를 주지 않으면 개인이 삶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생각했구요. 그것에 있어서 저희가 세금을 많이 내야 사실 국가에서도 그만큼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질 텐데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복지가 보장이 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반발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⑤ 인구 감소

“(3조) 저출산 심화로 인구 감소, 가족 해체를 통한 가족의 불안정성과 이주민 대량 유입으로 인해 노동력 구조 및 변화가 미래 육아 시나리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⑥ 기술 발전 및 환경 문제

“(4조) 기술이 발전해서 재택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것 같은데, 반대급부로 환경 문제가 악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사회, 미래에 더 악화될 추세인데 이런 환경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4조) 환경적인 부분도 저도 아이를 낳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아이의 선천적 장애가 혹시라도 있을지 이런 것도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요즘 워낙 저희 때보다 환경이 안 좋아지고 미세먼지나 중금속이나 부모가 섭취한 것들이 아이한테 가고,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과연 아이를 낳을 때 멀쩡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 아이가 후천적 장애가 생기지 않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건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주요인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아무래도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결혼, 출산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의 변화가 생겨났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환경적인 요인은 요즘 미세먼지, 황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 악화나 장애 요인이 생길 수 있어서 그것도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중요한 부분은 주거 불안정과 소득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주택이나 이런 정부지원사업이 있긴 하지만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일 뿐이죠. 내 집이라는 개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거 환경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째 아이까지는 괜찮지만 둘째나 셋째가 되었을 때 공간 확장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래 육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라. 미래에 필요한 육아정책에 대한 의견 나눔

1) 2040년 육아의 모습과 형태 상상

① 외동 자녀 집중 교육

“(4조) 2040년은 일단 한 가구에 1명의 아이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1명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모든 교육이 쏠릴 것 같아요.”

② 육아에 대한 남성의 역할 확대

“(1조) 기본적인 건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남성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 같아요. 흔히 말해서 여자들이 생각하는 남성이 누릴 수 있었던 권리나 혜택이 당연하게 내려오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성이 당연하게 애를 봐야 되고 당연히 집안일을 해야 되고요. 그게 남

편이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할 일이라는 인식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③ 육아 전문 로봇의 보편화

“(3조) 미래에는 육아전문 로봇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게 보편화 될 것 같고 지금도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양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 같습니다.”

④ 국공립 보육기관의 증가 및 보육 제공

“(2조) 아무래도 맞벌이 여성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전문적인 보육기관에서 케어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고 지금 어린이집도 사실 국공립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 3, 40%밖에 안 되고 전부 다 가정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준을 점점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가정형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공립 보육기관도 좀 더 증가할 것 같고요.”

“(3조) 출산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적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이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보다가 때리거나 하는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이것들이 보완되면서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돌봄 선생님들을 검증해서 뭔가 양질의 돌봄을 국가적으로 다 같이 나서서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아이들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3조) 자녀 양육과 보육이 어쨌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양육의 로드맵을 구축하는 거죠.

자녀 출산부터 보육까지 자녀를 어떤 식으로 어떤 지원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맵핑을 그려주고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서비스 품질 관리도 하고 그런 형태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사실 민간 서비스에 그런 걸 맡겨도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그런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차등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⑤ 육아 업무 분담을 할 수 있는 육아 시스템 및 대리육아

“(1조) 아이가 미래에 자라게 되면 예전에는 학교에서 집에 올 때 엄마가 있었다면, 이제는 선생님들이 집에 있거나, 돌보미 어머니가 집에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자랄 때는 친척도 많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 고모 2명, 삼촌이 3명이었는데 미래 아이들은 친인척이 없거나 줄어들 수도 있고 대신 부모님의 친구들 이모랄지 고모라고 부르면서 정말 부모와 친한 가족처럼 지내는 지인들이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를 한 구성원으로 아껴줄 수 있는 여러 모습의 가족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애기가 1명밖에 없으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케어를 받는 식으로 해서 아이 중심 보다는 엄마 위주로 엄마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형태의 육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조) 저는 2040년에는 공동육아가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건 남자, 여자가 같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여자 분도 돈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는 70%가 여자 분이신데 실질적으로 본인의 삶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결혼을 했지만 안 낳는 분들이 반 이상이고 4, 50대인 분들이 많아서 미래에 된다면 여자도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남자도 동일하게 활동할 수 있으면 공동체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그때는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4조) 대리육아, 아까 공동육아처럼 나에 대한 삶도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비시터나 대리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한 육아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때 필요한 육아 정책

(가) 강화되어야 하는 육아 정책

① 아이 돌봄 서비스

“(4조) 강화돼야 될 부분은 아이 돌봄 서비스 공급에 대한 충족을 시켜야 되고 그것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좀 더 올바르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무나 공급이 필요하다고 아무나 데리고 오면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②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강화

“(3조) 남편의 육아휴직제도에 인센티브를 주긴 하지만 3개월 남성이 100% 받게 되는 구조인데 같이 쓸 수 없어요. 그걸 쓰려고 해도 제약이 많이 있는 거죠. 사업체에서는 그런 걸 감안하고 싫으면 나가 이런 식이 많다 보니 제도가 있어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의무화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했어요.”

“(4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강화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강화 이전에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건 솔직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차라리 의무화

를 시켜서 감사를 강화해서 회사에서 출산한 사람이 있는데 휴직을 1년 이내에 쓴 기록이 없으면 회사에 벌금을 부여해서 회사에서도 어떻게든 육아휴직을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③ 육아휴직 급여 지원

“(1조) 회사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그 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소득을 메우는 부분이 좀 더 확대되고 강화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조)저도 육아휴직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급여 상한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300만 원 벌던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이렇게 줄어드는데 솔직히 부부가 다 일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적은 금액으로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좀 더 증가하면 좋겠고요.”

④ 첫째에 대한 장려금

“(1조) 저는 장려금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10만 원이 들어오는데 둘째를 낳으면 얼마 들어오죠? 저는 낳으면 낳을수록 더 많이 주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한 가정에 1명을 낳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파격적으로 첫째를 낳으면 70만 원을 주고 둘째를 낳으면 50만 원을 주고 1명은 꼭 받게 하게 역으로 가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조) 한 자녀만 낳는 시대이기 때문에 첫째 자녀에 대한 혜택도 추가적으로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⑤ 현 육아 수요에 대한 공급 완화

“(1조) 어린이집이나 이런 육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책들이 우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점점 어린이집도 서울권만 필수였는데 전국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시설적인 부분도 평준화 될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2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현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라면 자식한테 더 좋은,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고 더 좋은 교육에 맡기고 싶은데 공급이 한 없이 부족하니까 가격은 높아지고 그로 인해 점점 맞벌이를 유도하는 사회가 구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조) 국공립 유치원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수가 많아지기보다 인원 확충이요. 왜냐하면 국공립은 교육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사립 유치원들 어린이집은 선생님들이 임용을 패스한 유아교육 전문가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급식비를 냈을 때 투명하게 잘 쓰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가 보완되고 인원 확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 신설되어야 하는 육아 정책

① 신혼부부 주택 마련 지원

“(4조)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이것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신혼부부와 아이를 많이 낳은 가정에 한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뭔가 주면 어떨까 싶어요. 임대주택 말고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매매 주택을 주는데 기존 금액보다 많이 낮은 금액에 구매할 수 있게 하면 더 긍정적 효과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② 장애 아이 지원

“(3조) 둘째 자녀가 장애가 있다 보니 그런 소수자들의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한계를 많이 느껴요. 일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우기 훨씬 힘든 상태예요. 오전까지만 특수학교에서 케어를 하고 나머지 방과 후도 있긴 하지만 애들이 소수이기도 하고 치료도 가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지원정책도 나중에는 어쨌든 계속 장애 아동들이 태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는 것이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조) 환경 문제 얘기해 주시면서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게 됐을 경우 육아도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장애 학교 봉사활동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학교를 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확률을 뚫고 들어온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친구들도 불편함 없이 다른 일반인들처럼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장애교육시설이나 지원금이 이런 부분에서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③ 보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 변화

“(2조) 보육기관을 증설하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거기 소속된 구성원들이 기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육기관을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을 기계적으로 케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이고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양질의 인간을 어렸을 때부터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자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④ 육아 휴직 사용 의무화

“(2조) 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게 사용 제지 시 정책적으로 회사에 패널티를 줘서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해요.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괜찮아, 이런 식의 태도가 되도록요.”

⑤ 돌봄 전문가 양성 및 관리제도

“(2조) 실시되고 돌봄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 검증을 할 수 있는 더 정확한 시스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2조) 아이가 집에 있고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발달되지 않을까 전문 선생님이 와서 양육하는 시대요. 그렇게 되면서 전문가 양성 교육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조) 어린이는 어린이집에서 즐거운지 아닌지 제대로 배우는지 부모와 설문식으로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완전 영아는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좀 더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감시 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 폐지되어야 하는 육아 정책

① 맞벌이 부부만의 어린이집 종일반 신청 자격

“(2조) 애가 있는데 애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때 일을 해서 회사에 재직증명 같이 그런 서류가 있어야 하고 그걸 제출해야 아이를 종일반에 보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숨막히게 그러고

살아? 라고 했어요. 저는 종일반 신청이 엄마들이 그런 일의 여부와 상관없이도 신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엄마들이 동일한 이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지를 해야 하는 현재 신청할 때 일을 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 결과

우선 정책속의제에 참여한 자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전체 22명이 참가하였고 남성의 비율이 다소 많았다. 미혼인 경우가 9명, 기혼이고 무자녀인 경우가 6명, 기혼이고 유자녀인 경우가 7명으로 구성하였다. FGI 와 같은 집단 면접과 달리 모듬별로 오랜 속의 시간을 거친 후에 본인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을 주 특징으로 하므로 속의제를 통해 2040년의 육아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볼 수 있었다.

기존 설문조사에서는 단일화된 항목을 선택하는 한계가 있어 내용을 풍부하게 상상하여 2040년을 그려보지 못했다면, 정책속의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 집중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발현되었다.

〈표 V-1-17〉 정책속의제 참여자 인구학적 배경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비율
	(22)	100.0
성별		
여자	(8)	36.4
남자	(14)	63.6
연령		
만18~28세	(7)	31.8
만29~38세	(14)	63.6
만39세 이상	(1)	4.5
지역규모		
대도시	(14)	63.6
중소도시	(8)	36.4

구분	사례수 (명)	비율
학력		
고졸 이하	(1)	4.5
대학교 졸업 이하	(15)	68.2
대학원 재학 이상	(6)	27.3
혼인상태		
미혼	(9)	40.9
기혼 무자녀	(6)	27.3
기혼 유자녀	(7)	31.8
취업여부		
취업자	(9)	40.9
학생	(3)	13.6
전업주부	(3)	13.6
현재 구직중	(7)	31.8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2)	9.1
200만원~300만원 미만	(5)	22.7
300만원~500만원 미만	(10)	45.5
500만원~600만원 미만	(2)	9.1
600만원~700만원 미만	(3)	13.6

1) 2040년 미래 육아지원정책에의 영향요인

숙의제에 참가한 응답자들은 2040년을 상상했을 때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문화가구 및 이주민 증가(90.9%), 인구성장률의 감소(86.4%), 아버지 육아참여 증가(81.8%), 소득양극화 심화(77.3%), 어머니 경제활동 증가(68.2%), 동거 및 비혼가구 증가(68.2%), 복지 지향 증가(68.2%) 등을 높은 순위로 응답하였다.

이는 결국 2040년에는 인구의 감소로 소득이 양극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조화를 이루는 상황에서 살아가게 될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한다. 반면에 에너지의 감소, 남북통일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일반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으나 다문화 가구의 증가 등에 대한 현실적 여건은 숙의제를 통해 보다 심화되어 도출된 결론을 얻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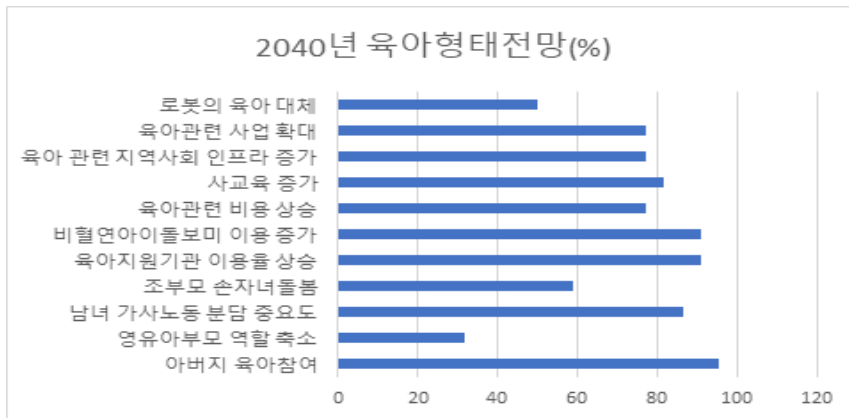
2) 2040년 미래 육아의 형태와 모습

다음으로 2040년의 육아 형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속의 결과 설문결과보다 비혈연 아이돌보미와 보육기관에 자녀 돌봄을 분담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이는 2040년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돌봄과 노동 시장 참여에의 양립 등이 여전히 이슈가 되면서 가족 내 돌봄 보다 기관이나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필요도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 결과라고 보인다.

속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들을 종합하면 1) 현재보다 여성이 일을 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2)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야 하는 문제는 이슈가 될 것이고 육아휴직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보육기관과 돌봄 자원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 내에서 아이 돌봄을 분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촘촘하게 만들어 질 것 같다. 등의 이야기가 도출되었다.

[그림 V-2-2] 2040 육아형태 전망



3) 2040년에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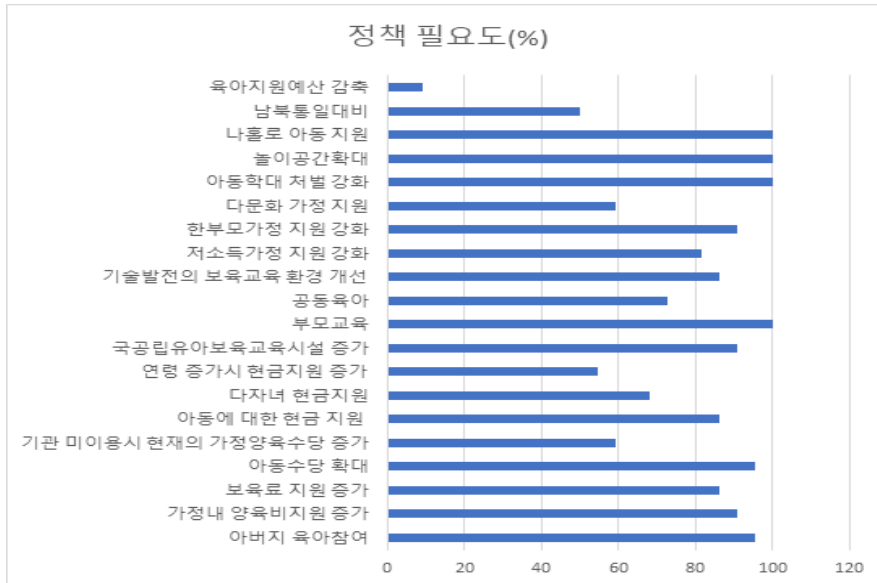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2040년에 필요한 육아지원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기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문항을 4시간 간의 속의 후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놀이공간 확대, 아동학대 처벌 강화, 나홀로 아동지원, 부모교육이 가장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동수당 확대, 아버지 육아참여, 가정 내 양육비 지원 등 역시 증가하여야 한다고 90% 이상이 응답하였다.

육아지원정책 자체가 축소할 것이라는 의견은 10% 미만이었으며, 한부모 가정이나 공동육아, 기관 미이용시 가정양육수당 증액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정리하면, 현금지원 정책으로는 아동수당 확대, 서비스 지원 정책으로는 국공립 영유아보육기관, 놀이공간 확대 및 부모 교육, 시간지원 정책으로는 아버지 육아휴직의 강화 등에 대한 정책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V-2-3] 정책 필요도



4) 양적 조사(설문조사) 와의 차이점

본 장에서는 일반인 설문조사(양적조사) 와 그 중 소수를 선별한 숙의토론(정책 숙의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저출산의 지속과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방향성이나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숙의 토론회를 통해 좀 더 세부적인 정책 과제들이 제시되었고 양적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필요도가 제시되었다.

특히 아버지 육아 참여에 대한 필요도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아동 보육에 대한 필요도도 2040년에 여전히 높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육아 형태 및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2040 육아지원정책의 시나리오 구성과 평가

이하에서는 앞 장의 전문가 조사와 일반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2040년 육아지원 정책에 가장 큰 영향요인 2개의 변인을 바탕으로 정책속의제에서 토의한 4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시나리오를 평가하고자 한다. 속의제가 참가한 사람들은 시나리오 1에 찬성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 2040년의 육아지원정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1: 저출산현상 지속-소득양극화 심화

현재는 2040년. 서울에 거주하는 유미래씨는 31세 여성으로 현재 기혼이다. 주변의 여느 가정처럼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나 경제활동이 쉽지 않아 하루 종일 일하여도 경제적 상태가 제자리인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다. 옆 집에 사는 자녀가 3명인 올라씨가 얼마 전 집을 마련하여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며 들떠있는 모습을 보고 “과연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회사에서는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더디고, 임금 수준도 남성에 비하여 낮다. 근로시간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든 것도 같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 희생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출산은 두려워만 진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은데 그 동안 회사를 그만두면 다시 복직을 쓸 수 있을지도 불안하다.

오늘도 업무를 마치고 집에서 남편과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며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자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향한다.

〈이유〉

(1조) 국가에서 없는 사람들이나 빈곤 취약자 계층들이나 아니면 중산층을 엄청나게 몰심양면으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솔직히 소득 양극화가 줄어들긴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으로 버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될 것 같고 더군다나 많이 개선되긴 했고, 20년 후에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아직까지 저처럼 출산을 하게 되면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가 쉽진 않거든요. 어쨌든 경력 단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재취업하려고 해도 쉽지 않기 때문에 외벌이가 많이 생기겠죠. 맞벌이더라도 여자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시작하더라도 남자에 비해서 승진이나 여러 가지 기회나 임금 자체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가 많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저출산도 부수적으로 따라 간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도 많이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금이나 여러 가지 많이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2조) 저출산 현상과 소득 양극화 현상은 선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득 양극화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득 양극화 현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더 심화됐지 한 번도 완화된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행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비관적인 생각을 바꿔야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 실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출산은 더욱더 안 하겠지 그냥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양극화만 더 심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3조) AI가 상용화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1번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금 상황에서 크게 변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득 불균형이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소득 양극화는 결국 해소될 수 없고 어쨌든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양극화가 완화되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저출산도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4조)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이는 그래도 1명은 낳아야지라는 생각이 깔려있고, 부모님의 의견이나 그래도 결혼해야지 친척들의 압박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 이 정도는 하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이러한 의견이 사회적인 인식으로 굳혀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 전반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정적인 사회가 지속이 되면 저는 남의 시선이나 이목을 신경 쓰면서 자기의 앞으로 미래 계획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서 출산율도 함께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시나리오 2. 저출산 현상 극복-소득양극화 완화

현재는 2040년. 서울에 거주하는 유미래씨는 31세로 자녀가 2명인 기혼 여성이다. 그동안 육아정책에 많은 돈을 들인 결과로 육아를 하기 좋은 사회가 된 것 같다.

옆 집에 사는 자녀가 3명인 올라씨가 얼마 전 집을 마련하여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며 들떠있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한 명 더 아이를 낳아볼까?” 싶은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요즘은 자녀를 낳을수록 혜택도 많고 각종 연금혜택, 소득공제 등이 파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다.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도 즐겁다. 이전과 달리 여성이라고 남성과 차별을 하였다가는 큰 과징금을 받게 된다. 임금 격차도 현격히 줄었고 여성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 유미래씨 역시 향후 5년 내에 임원 승진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북유럽 수준으로 향상되어 웬만큼 즐기면서 일을 하여도 옆에 사람들에 비하여 소득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별로 들지 않는다.

오늘도 업무를 마치고 집에서 남편과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며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자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향한다.

3) 시나리오 3. 저출산 현상 지속-소득양극화 완화

현재는 2040년. 서울에 거주하는 유미래씨는 31세 여성으로 현재 기혼이다. 주변의 여느 가정처럼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나 현재 웬만큼 벌고 남편과 즐겁게 사는 삶이 출산으로 인하여 방해받을까봐 아이를 낳고 싶지는 않다.

옆집에 사는 자녀가 3명인 올라씨가 얼마 전 집을 마련하여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며 들떠있는 모습을 보고 “굳이 아이를 낳아서 저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하였다.

회사에서는 여성이라고 남성과 차별을 하였다가는 큰 과징금을 받게 된다. 임금 격차도 현격히 줄었고 여성 임원으로 승진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 유미래씨 역시 향후 5년 내에 임원 승진을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북유럽 수준으로 향상되어 웬만큼 즐기면서 일을 하여도 옆에 사람들에 비하여 소득에 대

한 상대적 박탈감도 별로 들지 않는다.

오늘도 업무를 마치고 집에서 남편과 영화관을 가서 영화를 보며 둘 만의 시간을 즐기고자 계획을 세우고 집으로 향한다.

4) 시나리오 4. 저출산현상 극복-소득양극화 심화

현재는 2040년. 서울에 거주하는 유미래씨는 31세, 자녀가 1명인 기혼 여성이다. 1명까지는 대부분 낳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녀 1명을 키울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 하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 자녀를 낳아 주변에 대부분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유미래씨도 현재 본인의 자녀를 키우는 데는 가끔 만족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를 한명 더 낳아 4인 가구를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나 경제활동이 쉽지 않아 하루 종일 일하여도 경제적 상태가 제자리인 현실이 야속하기만 하다. 옆집에 사는 자녀가 3명인 올라씨가 얼마 전 집을 마련하여 강남으로 이사를 간다며 들떠있는 모습을 보고 “과연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회사에서는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이 더디고, 임금 수준도 남성에 비하여 낮다. 근로시간이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자녀의 이른 귀가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 사정이 생기면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할 상황이 생기거나, 아이가 아플 때면 회사에 결근하여야 할 일이 수 없이 생긴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든 것도 같지만 여전히 아이를 낳으면 여성이 희생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고 있는 모습에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둘째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다. 하는 생각에 둘째 출산은 두려워만 진다.

나아지지 않는 경제 상황과, 둘이 악착같이 벌어도 강남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부에 살아야 하는 내 아이가 뒤쳐지는 것을 아닐까 걱정이 태산이다.

나. 2040 육아지원정책의 시나리오 정리

이하 2040년의 육아지원정책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요약 및 정리할 수 있다.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추

출된 변수 2가지 축을 바탕으로 4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이에 각 4가지의 모습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시나리오 1’은 경제적 상황이 자녀 출산에 영향을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키울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여러 육아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출산과 육아는 요원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 활성화, 고용 및 취업 지원, 소득 보장 등의 사회보장정책의 다각화가 필요할 것이다.

‘시나리오 2’는 저출산 현상이 극복되고 소득양극화도 완화된 2040년의 모습이다. 거의 모든 기혼 여성은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여 키우고 있고 복지제도의 안정화와 성숙으로 소득양극화가 완화된 상황이다. 자녀가 2명있는 가구라도 한명 더 낳아볼까 고민을 하고 여성이 육아와 병행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데에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육아가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되지 않는다. 일가정양립에 대한 지원과 기타 복지제도의 확충이 그 전제가 된다.

‘시나리오 3’은 소득양극화는 완화되었으나 저출산현상이 지속된다. 경제적 원인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으나 개인주의의 확산, 개인의 자유 중시, 본인의 삶 중시라는 가치관이 확립되어 소득양극화가 완화되어도 저출산은 지속된다. 또한 다른 복지제도에 비하여 육아지원 관련 정책은 실패하였다. 본인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욕구가 커져 일생활균형이 확립되었어도 자녀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나리오 4’는 저출산현상은 극복하였으나 소득양극화는 심화된 상황이다. 각종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육아에 대한 부담은 현저히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어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강화되어야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동에 대한 지원도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선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일 것이다.

〈표 V-3-1〉 시나리오별 특징 및 변화방향

시나리오	특징	변화방향
저출산 현상 지속-소득양극화 심화	경제적 안정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는 요원	성차별 지속, 일가정양립정책의 미흡,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체계 미흡
저출산 현상 극복-소득양극화 완화	저출산 정책의 성공과 경제 활성화, 복지제도의 안착으로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이 갖춰짐	복지제도의 성숙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적극적 지원, 노동시장 구조의 개선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세상이라는 인식이 확산
저출산 현상 지속-소득양극화 완화	복지제도 확충과 경제 활성화로 소득양극화는 완화되었으나 저출산은 극복하지 못함	개인주의의 확산, 자녀와 함께하는 삶보다는 개인의 성취가 중요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육아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은 미흡
저출산현상 극복-소득양극화 심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 강화로 저출산은 극복하였으나 복지제도의 미성숙과 경제 성장의 미흡으로 소득양극화는 여전히 심화	다양한 복지 제도 중에 육아지원 및 출산지원에 예산을 투입한 결과 나머지 복지 예산에 투입이 한정적. 그러나 이러한 소득양극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출산율의 유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 있음

VI

결론

01 결론

02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과제

VI. 결론

1. 결론

이하에서는 앞 장에서 진행한 전문가조사, 설문조사, 정책숙의제를 바탕으로 도출한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시나리오들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가. 2040년 인구 사회적 변화

문헌 연구와 전문가조사, 일반인 조사를 통하여 추정된 2040년 인구 사회 변화 환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구 감소와 더불어 아동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사회 자원 활용과 교육 제도의 변화 등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일자리의 생성과 더불어 노동 시장 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시 출퇴근제를 기본으로 하는 일자리는 점차 소멸할 것이며 근로시간의 축소에서 나아가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이 활성화 될 것이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0%를 밑돌고 있는데 2040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여성의 노동 시장 진입과 활동 범위는 현재보다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과학기술의 발달이다. 이는 보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AI의 발달은 일상 생활에 있어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의 삶과는 현재 다른 일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국제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제 관계의 복잡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현재에도 글로벌한 삶이 진행되고 있으나 2040년에는 현재보다 더욱 국가간 장벽이 없어지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다. 인터넷과 SNS를 통한 교류에서 나아가 교통 통신의 발달은 국가간 거리를 더욱 좁힐 것으로 예상된다.

나. 2040년 인구사회변화와 육아지원정책 간 관계

위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2040년 인구사회 변화에서 범위를 축소하여 육아지원 정책과 관련한 예상되는 변화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 2040년 육아지원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인구사회적 변화 요인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와 경제적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2040년 인구사회변화와 육아지원정책 간 관계를 정리해본다.

1) 저출산 시대의 경제적 안정 보장과 육아지원정책

육아지원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부분으로 인구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한 아동수 감소 및 고령화는 육아지원정책의 대표적인 영향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2040년은 현재로부터 20년 후로 여러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 둔화, 소득양극화 심화 등은 개인의 경제적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경제적 생활은 육아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육아지원정책은 저출산 시대에서의 개인의 경제적 안정 보장을 전제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한 현금 지원을 통한 소득 보조와 같은 정책은 출산 유도 및 육아에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로 개인의 소득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는 실패한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다자녀 지원이랑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 하거나 가정양육수당을 통해 가정 내 육아를 지원하는 것은 경제적 생활 보장에 우선할 수 없고, 여러 사회보장제도간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재구조화를 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편 1)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 및 노동시장 내 이동의 유연화, 2) 정확히 타겟화 된 명목의 육아 지원을 위한 현금 지원, 3) 아동수당의 확대 등을 통한 소득 안정 기재를 보편적이되, 때로는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예상하는 바이고, 경제적 생활의

안정 보장은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육아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전제가 되어야 할 사회적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생활의 안정보장은 노동시장의 활성화 및 경제 성장이라는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이 개인의 생활에 스며들어 개인이 본인의 경제활동을 통해 '살만하다고 느낄 때' 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2) 복지제도의 성숙과 병행하는 육아지원정책

재차 반복하여 언급하지만 육아지원정책은 복지정책이자 사회정책이며 사회 문제의 여러 측면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성숙과 육아지원정책은 맞물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적인 상태에 대한 불안감은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고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은 본인의 노후 준비와의 상충 관계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성숙, 노동시장 이중적 구조의 완화 등이 전제될 때 개인의 경제적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과 세부적인 정책 목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40년에 변화될 복지 전달체계 및 시스템도 육아지원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정서비스 간소화 및 AI 활성화로 인한 무인시스템 강화,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은 현재의 육아 지원 행정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즉, 2040년의 과학기술 변화로 육아지원정책은 1) 찾아가는 서비스 및 지역 밀착형 서비스 강화, 2) 자동화 및 무인화 등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인터넷의 보급으로 다양한 육아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육아 상담을 받거나 육아를 하는 동질집단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향후에는 복지 전달체계의 성숙과 변화로 지역사회내에서의 밀착형 서비스가 강화됨과 동시에 AI, 무인서비스 등으로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간소화 되어 양 극단적인 측면이 육아지원정책에 모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급속한, 기존에는 없었던 복지제도와 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고려하여 육아지원정책의 증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정책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여성 사회 참여 보편화와 육아지원정책

2040년 미래를 예상하는 여러 지표, 그리고 수요자 및 전문가 욕구 조사를 통해 볼 때 여성의 사회 참여는 현재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육아지원정책의 방향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뿐 아니라 직장 내 육아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4) 과학기술 발달과 육아지원정책

과학기술의 발달은 2040년 사회 변화 중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를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육아지원 정책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 내 양육과 기관 내 육아 지원 환경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부분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육아지원 정책에의 활용도를 높일 것을 보인다. 다만 AI가 증가할 것이나 육아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5) 기타

애초에 영향요인의 큰 틀 중 하나로 전제된 미세먼지, 에너지 부족 등은 육아지원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요인으로 동일과 관련한 요인은 향후 한국 사회에 큰 변수로 작용할 사회 변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육아지원정책에 그리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조사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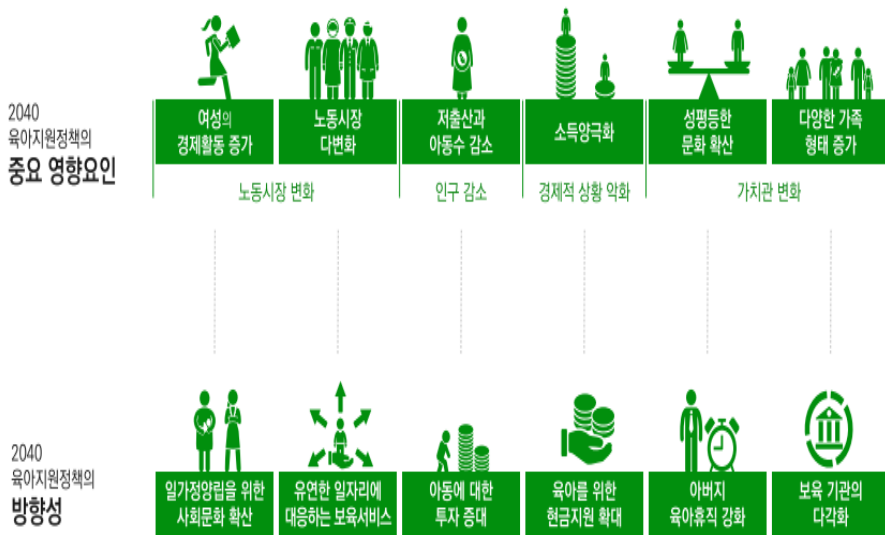
2.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과제

가.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

위의 영향요인을 바탕으로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일가정 양립 정책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유연한 일자리 등은 일과 가정의 양립의 필연적 귀결이 되고 현재의 정책이 보다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다양

한 가족의 형태의 출현으로 보육서비스 형태는 다양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달리 맞춤형 보육이라는 명목하게 시간제 보육, 지역사회 내 돌봄, 다양한 기관의 출현 등이 복합적인 형태로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연한 근로시간의 확대는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가정 내 육아 지원, 다양한 시간을 바탕으로 한 개개인별 육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에 대한 현금 지원 역시 아동을 위한 투자, 소득에 대한 보조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버지 육아휴직의 강화 또한 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요소로 보인다.

[그림 VI-2-1] 2040 육아지원정책 영향요인 및 방향성



위의 결론을 바탕으로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방향을 정리하면 ‘육아지원체계 내의 정합성 수립’을 기본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육아지원정책을 시간지원, 서비스지원, 현금지원으로 구분한다면 각 분야의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을 통해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의 체감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육아지원체계 내의 정합성을 재고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고 노동시장, 여가 생활, 일가정 양립 지원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또한 0-2세, 3-5세 보육 연령을 기준으로 한 아동연령별 체계 개편과 부모의

노동권과 아동의 권리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전제하고 정책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보육기관의 돌봄 강화는 부모의 노동권을 강화하지만 아동의 권리에 방점을 찍은 정책은 아닐 것이고, 육아 시간의 확보는 보다 아동의 권리에 다가간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해당 부문별로 이에 대한 정합성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시간 지원

2040년 육아지원정책 중 시간정책에서 최우선적 과제는 육아휴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육아휴직 강화는 기간에 대한 무조건적 확대보다 소득대체율의 향상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육아휴직의 강화는 기간의 확장과 소득대체율 강화라는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 중에 택일을 하여야 할 상황이 반드시 도래할 것인데, 한 방향을 선택한다면 남성의 육아휴직을 강화하는 방향도 소득대체율의 향상과 밀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서비스 지원

2040년 육아지원 정책의 서비스 지원은 다양한 노동시장 구조와 일자리의 변화, 근로시간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설치를 전제할 것은 물론이고 보육기관의 형태 다양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는 것 또한 보육기관의 형태와 지원 다각화로 이어진다.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위해 이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기관 보육 이외에 가정 내 서비스 지원 형태 또한 현재보다 구체화되고 다양화 되어야 할 것이다.

3) 현금 지원

현금지원정책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 저출산 현상 지속으로 아동수가 급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40년에는 아동 관련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아동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늘 것을 예상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의 연령 범위 확대와 금액 상향은 필수적인 방향이 되어야 하고 가정양육수당과의 통합 논의 역시 진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정양육수당이 가정 내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 지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이라고 하면, 이는 이제 아동 중심의 소득 지원 및 아동에 대한 투자라는 명목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VI-2-1〉 2019년 현재와 2040년의 정책 방향의 비교

구분	현재	2040년
시간지원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가 미미하여 늘리기 위한 방안 강구 중	육아휴직 기간의 무조건적 확대 보다는 소득대체율 향상에 실질적 방안 마련
서비스지원	공보육 체계 확립에 주력	보육기관 및 가정보육지원의 형태 다양화 예상
현금지원	아동수당 도입으로 아동 중심의 보편적 현금 지원 강화	보편적 현금지원에서 나아가 아동 1인당 현금 지원에서 나아가 질적인 현금 투자에 더욱 집중

2040 달라진 우리사회를 위한 육아지원정책




아동돌봄 서비스

1.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2. 장시간 보육의 축소 및 자녀와의 시간 확대
3. 지역사회 돌봄 여건 개선
4. 서비스의 양극화 및 격차 심화
5. 남북한 돌봄서비스 통합 추진

현금 지원제도

1. 통합급여체계로의 개편 및 서비스 지원과의 정합성 제고
2. 양육수당제도 개선
3. 자녀수에 따른 급여체계 마련
4. 적용대상 아동연령과 지원수준의 상향 조정






자녀 돌봄시간 지원

1.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2. 남성 이용률 제고
3. 급여대체율 상향 조정
4. 휴직 기간 연장

기타 지원제도

1.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지원
2. 지역사회 돌봄 지원
3. 유관 제도와의 연계 강화
4. 아동울퉁 가구의 주거지원 확대
5. 근로시간 단축으로 자녀돌봄 시간의 보장
6. 육아지원 육구의 다양화의 적극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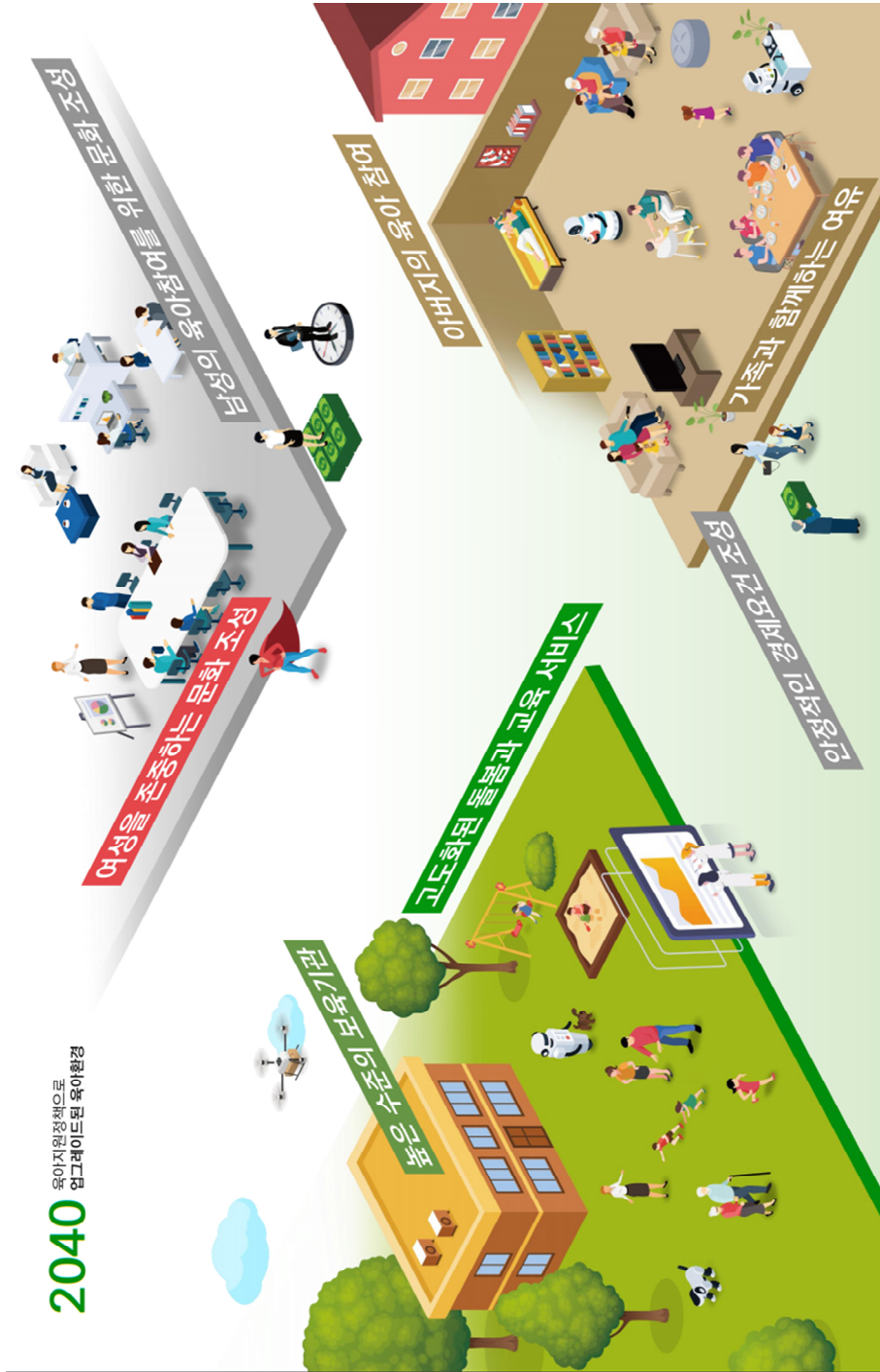
다. 2040년 육아지원정책 과제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40년 육아지원정책 중 강화되어야 할 것은 1) 보육기관의 다양화, 2) 아동에의 현금 투자 확대, 3) 부모의 노동권 보장과 부모권 보장의 조화를 위한 육아시간 강화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40년에 아동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육아지원정책에의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현재의 보육교육기관의 수급 조절과 중장기 공급 계획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된 기관으로의 변모를 요한다. 이러한 질적 강화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교육기관 출현과 교사의 수준 상향, 처우 향상 등을 전제한다.

또한 급감하는 아동수는 아동에의 집중적 투자로 해당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 투자의 수준이 현재보다 당연히 높아질 것을 요하고 소득 양극화로 인한 아동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선별적인 현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육아를 하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부모권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에 상응하여 육아를 하는 부모의 육아시간과 자녀와 함께 할 시간 등을 정책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기술적인 투자 이외에 질적인 투자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성과 궤를 함께 한다. 이하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과학 기술 발달을 바탕으로 한 안전 기능 강화

과학 기술의 발달은 육아지원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간의 애정이 수반되는 영역인 돌봄을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아동 돌봄에 부수적인 여러 일들을 대체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자동차에 ‘어린이안전구역’ 진입 시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어드는 장치를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단체 활동 시 로봇이나 AI를 활용하여 이탈 아동 방지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돌봄을 로봇이 대체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인간의 주 업무인 돌봄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과학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2) 스마트시티 활성화와 돌봄 공동체 강화

2020년 현재에도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도시 계획이 진행 중이다. 2040년에는 이러한 스마트시티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로 이루어낸 도시가 아닌 인간과 도시가 한데 어우러지는 사회를 지향하면서 탄생하게 된다. 이때 육아지원과 스마트시티의 결합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스마트시티 건설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육아를 하기 편안하고 편리한 환경인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편안한 환경을 위해서는 함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간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육아 교류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면 2040년에는 이러한 공간이 정해진 곳이 아니라 마을 어디를 가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을 요한다. AI를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도시마다 수요를 파악하여 도시 계획을 하여야 한다. 맞벌이 시간대에 맞는 육아지원공간과 놀이 공간, 연령별 놀이 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겠다.

3) 통일 대비 육아지원정책 구체화

전문가와 수요자 조사 결과에서는 통일이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

높게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은 한구 사회의 최고 변수로서 육아지원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40년에는 영유아 교사 교육, 민주 시민교육, 기관 통합을 대비한 수요 예측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4) 재정부담 현실화 방안 모색

현재 육아지원정책 중 보육 교육 기관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의 재정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040년에도 유사한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 분권의 가속화로 2040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 등을 예상하여 정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기술 발전과 육아에의 활용

돌봄 로봇의 진화,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는 과학기술의 발달 등은 보육 및 교육 현장, 육아 현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간의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애정, 사랑 등의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으나 분유타기, 우유 먹이기, 놀이 함께하기, 책 읽기 등의 양육 행동은 2040년 육아에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육아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업의 새로운 분야 개척, 육아 행위의 간소화, 돌봄 기능의 일부 대체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15). 제1차(’15~’19) 아동정책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 관계부처 합동(2018).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보완계획)(2016~2020).
- 고용노동부(2018). 휴식이 있는 삶,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 교육부(2018).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교육부 내부자료.
- 교육복지정책국(2018).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18~2022).
- 국세청(2018). 2018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 국세청(2019a).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 국세청(2019b). 2019년 개정세법 해설.
- 국회미래연구원(2018). 비지 보고서 2018 요약자료.
- 국회미래연구원(2018). 글로벌유럽 2030-2050은 요약자료.
- 김유빈·민보경·박성원·정영훈·송지은(2019). 정책미래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 국회미래연구원.
- 김은영·박창현·김혜진·김수정(2018).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한 로드맵 연구(I): 교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지·김소영·선보영·성경·양난주·김수정·김혜영(2018). 지속가능한 돌봄정책 재정립방안 연구: 여성가족 관점의 돌봄정책 추진 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형, 김대영, 유민환, 이동규(2013),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지역 미래예측 연구 : 해운대구의 동·서 지역 간의 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김창환(2014). 미래사회와 유아역량. 한국육아지원학회 학술대회지, 11-47.
- 대한민국정부(2019).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문무경·조숙인·김정민(2016). 한국인의 자녀 부모됨 인식과 자녀양육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미래기획위원회(2009). 미래예측 방법론.
- 박종서·이삼식·유삼현·전광희·염지혜·성명재·손일선·이희연·서지영·최효진·Noriko Tsuya·Marie-Thérese Letablie Norbert F. Schneider·Maria M. Bellinger(201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 가족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창현·김나영·이유진(2018). 4차 산업혁명시대 육아정책의 이슈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박형중(2009). 통일학과 시나리오 방법론 통일과 평화 창간호 한국리서치 자료, 2019. 육아정책연구소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 보건복지부(2008). 제1차 저출산기본계획(보완판)(새로마지플랜 2010).
-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 보건복지부(2018). '18년도 국정과제 평가보고서: 국정과제 48번.
- 보건복지부(2018a). 미래세대 투자를 위한 저출산 극복: '18년 국정과제 평가보고서_국정과제 48번.
- 보건복지부(2018b). 보도자료: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2018. 12.7).
- 보건복지부(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 보건복지부(2019a).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19b). 2019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9c). 2019년 보육사업안내.
- 산업통상자원부(201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
- 서용석·최호진·정다혜(2011). 미래환경스캐닝을 통해선 본 가족환경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용석·윤기영(2016). 미래연구의 정책활용도 제고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2019). 육아정책 분야 국정과제 추진 성과와 과제. 2019년 제1차 KICCE 육아정책의 성과와 과제.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pp. 9-29.
- 유현숙·최정윤·임후남·권기석·서영인·류장수(2011) 고등교육 미래비전 2040 수

립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유기운·김정옥·김지영(2017). 미래사회보고서. 라온북.

이명진·최슬기·안소영·박기태(201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환경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삼식·최효진·윤홍식·오상훈(2012).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연·김인순·김현정·김민정(2017).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시균·김수현·강민정·홍현균·정순기·방 글·공정승·이혜연·이진면·전병유·안주엽·성지미·홍성민·박세경·심정민·윤문희(2016).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 한국고용정보원.

이재준(2019).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한국교육개발원 KDI 정책포럼 제 273호.

이철희(2019). 2019년 1회 저출산 고령사회 포럼 내부 자료집

장선화(2018). 일-가정 균형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36(2), 155-185.

장혜경(2016) 가족의 미래 시나리오와 미래지향적 정책제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uture Horizon: Autumn 2014 제22호, 11-14.

장종인(2006). 미래연구 방법론: 사례를 통해 살펴본 시나리오 방법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9). 인구변화 전망에 기초한 미래사회 대응전략. 제16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자료집(2019. 4. 12일자)

정민·류승희(2019). 2019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정부·민간합동작업단(2006). 함께하는 미래한국, 비전 2030.

최명희(2017). 미래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사의 역할. 한국육아지원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2017. 11), 17-51.

- 최영준·황규성·최혜진(2016). 통일 이후 돌봄서비스의 사회통합 역할에 관한 연구- 미래 시나리오 분석. 한국사회정책 23(1), 61-93.
- 최영준·최정은·유정민(2018). 기술혁명과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논점- 다시 사회 투자와 사회보호로. 한국사회정책 25(1), 3-23.
- 최윤경·민정원·김기환·이세원(2013). 미래육아지원정책 수요전망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최향섭·강홍렬·장종인·음수연(2005). 미래시나리오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향섭·음수연·전미경(2006). 디지털 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효미·김동훈·김근진·이윤진·이삼식·정익중·김기현·김승연·조혜주·염혜경(2018). 사회보장제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돌봄 분야」 기본 평가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카이스트(2019).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0.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 연구센터. 김영사.
- 한국리서치(2019). 브라운백 세미나 발표 자료(2019. 5. 7일자)
- KDI(2010). 미래비전 2040.
- Daniel R. Meyer & Marcia J. Carlson(2012). Family Complexity: 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search,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 Ian, M. & Michael, K(2002). "Chapter1-BASIC CONCEPT". in Practical Guide to Regional Foresight in the UNITED KINGDOM, ed. FOREN project. Gunter Clar. Christian Svanfeldt. 430, *EUROPEAN COMMISSION*.
-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16

[웹사이트]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2019. 6. 14. 인출)
- 정부24 <http://www.gov.kr>, 2019. 6. 14. 인출)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사이트 <http://worklife.kr/website> (2019. 5. 14.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9. 6. 14 인출)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19. 6. 10 인출)

e-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 안내

<https://www.childschool.go.kr:40443/si/ifo/supportInfo002.do>

(2019. 4. 22 인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통계청 e-나라 지표(<http://www.index.go.kr/main.do>)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https://gsis.kwdi.re.kr/gsis/kr/main.html>)

미세먼지 관련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70215159600009>

[부처 보도/보고자료]

고용노동부(2018. 3. 8).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9. 1. 23).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 아빠 육아휴직 1만7천명 돌파”.

통계청 보도자료(2016. 4. 20).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1999-2014년)”.

The prediction of population and social change and 2040 Childcare Support Policy

Lee, yoon jin, Yoo, Hae Mi, Cho, Hye joo

This study predicted the demographic change in 2040 through the literature and predicted the state of childcare support policy in 204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various literatures and previous studies, 2040 expects 1) aging low birth rate, 2) strengthening gender equality, 3) diversifying family structure, 4) rapid change and progr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5) diversifying occupational groups. .

To date, various plans related to childcare support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but there are no policy plans that are expected 20 years after mid / long term. Of course, it would be impossible to accurately predict the situation in 2040 and set specific policy directions. Therefore, this study also has a limitation that it only draws and estimates the future direction loosely. In addition, there is a limit to including a critique of the current policy because it is expected to the future at the present time.

This study predicts future society and predicts childcare support policy by using scenario analysis, expert survey, and policy deliberation among future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of all, in 2040, both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have a low birth rate, aging population, various family types, decreased marriage rate, increased participation in women's economic activities, increased desire for family balance, increased income polar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I and robots. Expected. Next, the parental support policy of 2040, which is expected by the general public, is expected to increase the importance of parental leave for men due to the spread of gender equal culture, and the parental leave system for women due to the increase in women'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It was also expected to be more important. Experts anticipate parental support policies in 2040 focusing primarily on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such a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policy subjects, a change in family structure, and an increase in income polarization and unemployment. Diversification of needs and expansion of caring functions of robots should be consider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mportant factors affecting childcare support policy in 2040 were 1) increased participation in women's economic activities, 2) reduced number of children, and 3) diversified family types. The direction of child care support policy is as follows. Childcare support policie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role of local communities, build a safe parenting environment through the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diversify care forms by diversifying labor forms, and establish a childcare support environment for unification.

Keyword: childcare support, future policy, 2040 social policy

2040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만 활용되며, 본 연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진솔하게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하여 본 연구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여부	성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핸드폰 번호

※ ‘**개인정보 수집 동의여부**’는 조사참여 답례비 지급을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는 답례비 전송 후 자동 폐기됩니다.**

※ 문의처: 한국리서치 여론조사3부

2019년 6월 육아정책연구소

〈2040년 육아지원정책 환경〉

2040년은 현재로부터 20년 후이고, 지금과는 매우 다른 환경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가상증강현실의 활용 증가, 스마트시티 조성 활성화 등 과학기술 변화를 통한 사회 환경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활동인구 변화 등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산업 구조 변화, 교육 변화 등 각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하 문항에서는 이러한 2040년의 사회 환경을 감안하여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자유롭게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2. (현상 일반) 다음은 2040년 육아지원정책 전반에 미칠 주요 요인을 항목별로 제시한 것입니다. 실제로 각 요인들이 이렇게 전개될 것인지와 각 요인들의 중요성, 시급성 그리고 육아지원정책 전반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해당되는 숫자를 적어주십시오. 숫자가 클수록 실현가능성이 크고, 영향력이 크며, 중요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2019년 현재를 묻는 문항에서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2040년도를 기준으로 아래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①	②	③	④	⑤
---	---	---	---	---

구분	2040년 실제 일어날 가능성	2040년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2019년 현재 육아지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저출산 현상 심화로 아동 인구 감소			
가족 해체 가속화			
가족 유형 다변화			
20-30 대 정치 참여 무관심			
소득 양극화 심화			
실업 증가			
현금성 사회보장제도 확대			
미세먼지 등 급증으로 환경 악화			
에너지원 부족으로 생활 어려움			
로봇 출현으로 대부분의 직업 대체			
로봇이 돌봄의 기능 대체			
근로 시간 축소로 일가정 양립 현실화			
결혼의 개념 소실			
양성평등 달성			
보육기관 및 초등학교 폐업 및 폐교 급증			
남북 통일			
이주민 대량 유입으로 노동력 구조 변화 및 다문화 가정 등 증가			
지역 소멸과 공동화			

2. (영향 요인) 귀하는 2040년을 생각했을 때, 그 시점 육아지원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통계청의 추계결과에 의하면 2040년은 현재보다 합계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몇 년도까지 지속되실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2040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40년의 합계 출산율은 얼마가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참고로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입니다.)

1) _____ 년

2) _____

4. (정책) 현 시점에서 각 항목의 점수가 10점이라고 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점수를 0점-20점 사이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점수가 0점에 가까울수록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20점에 가까울수록 현재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2025년	2035년	2045년
양성평등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립			
보육서비스 공급			
보육서비스 질			
여성 고용			
아동 행복과 삶의 질			
육아를 하는 부모의 삶의 질			
육아를 위한 현금성 지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			
임신, 출산 보건의료 환경			

4. (목표) 현 시점에서 각 항목의 점수가 10점이라고 가정하고자 합니다. 2040년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달성하면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 0-20점 사이 점수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0점에 가까울수록 현재보다 악화되는 것이고, 20점에 가까울수록 현재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2040년 점수
양성평등	점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립	점
보육서비스 공급	점
보육서비스 질	점
여성 고용	점
아동 행복과 삶의 질	점
육아를 하는 부모의 삶의 질	점
육아를 위한 현금성 지원	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점
청년(신혼부부) 주거 문제	점
임신, 출산 보건 의료 환경	점

5. (서비스) 2040년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는 어떠한 형태,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나요? 1점에서 5점으로 갈수록 그 정도가 커지는 것입니다. 이때 대상 연령은 0세~초등저학년까지를 포함합니다.

① ▶ 전혀동의하지 않음	②	③	④	⑤ ▶ 매우 동의함
---------------------	---	---	---	------------------

(어린이집 및 유치원)

- 1) 0-5세 모든 아동에게 현재의 어린이집과 같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가 누구든지 원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부족함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 2) 0-2세는 어린이집, 3-5세는 유치원으로 양분화하여 돌봄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 3) 0-5세 공히 동일한 서비스를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미래의, 제3의) 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초등)

- 1) 초등저학년은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돌봄을 전담하여야 한다.
- 2) 초등저학년은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을 전담하여야 한다.

(인력, 시간 등)

- 1)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의 아이돌보미, 보육교직원 등 돌봄 인력을 대폭 확장하여야 한다.
- 2) 현재의 어린이집 서비스보다는 가정에서 돌봄을 담당하는 공공 인력(예: 아이돌보미) 을 통한 서비스가 늘어나야 한다.
- 3)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아동 비율은 점차적으로 축소되어야 한다.
- 4) 아이돌보미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준수, 사회보장 현황 등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 5)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현재보다 늘어나야 한다(현재: 기본 12시간 어린이집 보육)
- 6) 어린이집 보육 제공 시간이 현재보다 유연해지고, 수요자는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 7)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8) 반드시 공보육으로 갈 것이 아니라 민간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이 늘어나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1. 2040년에 예상되는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의 모습, 그리고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돌봄서비스의 모습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시하실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상되는 모습) 2040년 어린이집은 대다수가 문을 닫아 소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한 돌봄서비스의 모습은 0-2세와 3-5세를 분리하여 0-2세는 가정에서 공공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3-5세는 모두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6. (현금) 귀하께서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현금서비스를 전제할 때, 2040년에는 육아를 위한 현금지원이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시나요?

① ▶ 전혀동의하지 않음	②	③	④	⑤ ▶ 매우 동의함
---------------------	---	---	---	------------------

- 1) 아동수당이 없어져야 한다.
- 2) 가정양육수당이 없어져야 한다.
- 3) 보육료 지원은 맞벌이 가구에게만 지원되어야 한다.
- 4)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각종 현금서비스가 모두 통합되어 하나의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 5) 0-2세는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한다.

6) 3-5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가정양육수당을 받아야 한다.

7) 현재의 아동수당 대상층이 18세 아동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8)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현재의 급여 수준이 일괄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6-1. 2040년 예상되는 육아정책 현금지원의 모습, 2040년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육아정책 현금지원의 모습으로 귀하께서 제시하실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와 같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나, 바람직한 방향은 모든 현금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7. (시간) 귀하께서는 2040년 육아휴직의 모습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 전혀동의하지 않음	②	③	④	⑤ ▶ 매우 동의함
---------------------	---	---	---	------------------

- 1) 남성 의무 육아휴직 시행
- 2) 육아휴직 기간을 전 근로자 모두 3년으로 확대(현재 1년, 공무원만 3년)
- 3) 육아휴직 중의 경제활동 소득 인정
- 4) 기간 중 분할 육아휴직 가능
- 5) 부모가 의무적으로 번갈아가며 육아휴직 사용
- 6) 육아휴직급여를 본인의 월 급여 수준으로 상승(기업과 국가 공동 부담)

- 7) 육아휴직기간 중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등 보육서비스 이용 불가
- 8) 육아휴직기간 중 현금(성) 수당 수령 불가
- 9) 고용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제공이 아닌, 건강보험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제공으로 대상층 확대

7-1. 2040년 예상되는 육아휴직 및 시간정책의 모습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상되는 육아휴직을 비롯한 시간정책의 모습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귀하께서는 위에서 언급한 항목 이외에 2040년 육아지원정책의 모습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형태에 있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신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투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남성에게도 동일한 일수의 출산후 휴가가 확대되어야 한다 등 세부적인 내용부터 육아지원청을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언급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돌봄의 방식 (예: 돌봄공동체 확산으로 방식의 변화,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치는 영향으로 기술적 방식의 변화 등)

2) 여성 노동 시장 진입 및 유지 지원

3) 일가정 양립

4)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육아지원정책

5) 교육

6) 돌봄공동체

7) 기타

(끝)

2040 미래 육아지원정책 수요 전망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000는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 우리나라 육아정책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본 설문은 20~30년 이후의 인구·사회 변화에 따라 2040년에 요구되는 육아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설문조사결과는 미래의 육아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과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과 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 및 34조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이용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8월 육아정책연구소

[카테고리(SQ1~SQ4): 응답자 구분]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수]

1. 남자
2. 여자

SQ2.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이십니까?

1. 만 ()세 [로직: 만 18세 미만, 만 39세 이상 면접중단][쿼터]

SQ3. 귀하께서 현재 사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단수]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SQ4.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쿼터]

1. 기혼
2. 미혼

SQ5.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단수][쿼터]

1. 있음
2. 없음 -> SQ6

SQ5-1. 귀하의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1. 총 자녀 수 ()명 [로직: 0명 입력 불가]

//SQ3-1 응답만큼 자녀 수 생성//

//자녀 중 한명이라도 만0~5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 쿼터에 해당하도록 프로그래밍//

SQ5-2. 귀하의 자녀 연령은 각각 몇 세입니까? [쿼터]

	자녀 연령
1. 첫째 자녀	만 ()세
2. 둘째 자녀	만 ()세
3. 셋째 자녀	만 ()세

[로직: 연령 0 to 30, 첫째>=둘째>=셋째]

[로직: 막내 자녀 연령이 만 6세 이상인 경우, 면접중단]

SQ6. 귀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복수]

1. 취업자(임금근로자, 자영업자)
2. 학생
3. 전업주부
4. 현재 구직중
5. 기타 ()

[카테고리(Q1~Q6-3): II. 전체 응답자

※ 먼저 귀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Q1. 현재 귀하는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저소득층
2. 중하위층
3. 중상위층
4. 고소득층
5. 모르겠다
6. 기타 ()

Q2. 귀하의 부모님은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저소득층
2. 중하위층
3. 중상위층
4. 고소득층
5. 모르겠다
6. 기타 ()

Q3. 현재 귀하의 삶에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단일척도]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약간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Q4. 귀하의 20-30년 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일척도]

1. 전혀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2. 별로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3. 보통일 것이다
4. 약간 만족하는 수준일 것이다
5. 매우 만족하는 수준일 것이다

Q5. 우리사회의 현재 각 영역의 삶의 질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척도][stepbystep]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	2	3	4	5	6	7
1. 교육							
2. 안전							
3. 소득/소비							
4. 주관적 웰빙							
5. 문화/여가							
6. 환경							
7. 시민참여							
8. 건강							
9. 주거							
10. 고용/임금							
11. 가족공동체							

Q5-1. 우리사회 20-30년 후로 예상하는 각 영역의 삶의 질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척도][stepbystep]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1	2	3	4	5	6	7
1. 교육							
2. 안전							
3. 소득/소비							
4. 주관적 웰빙							
5. 문화/여가							
6. 환경							
7. 시민참여							
8. 건강							
9. 주거							
10. 고용/임금							
11. 가족공동체							

Q6-1. (개인적 차원) 귀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가족
2. 삶의 여유
3. 경제적 능력
4. 결혼 및 동거
5. 출산, 육아
6. 학업, 직장
7. 기타()

Q6-2. (국내차원) 귀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경제성장률
2. 사회안전망 및 복지
3. 정부정책
4. 지역사회/지역공동체
5. 통일
6. 기타(. .)

Q6-3. (국제차원) 귀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영역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글로벌경제
2. 국제정세
3. 환경 및 기후
4. 세계화
5. 기타(. .)

[로직: Q7번부터 Q17번까지는 SQ2=2 '미혼자'만 응답]

[카테고리(Q7~Q17): III. 미혼자만 응답]

Q7. 귀하는 앞으로 결혼을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단수]

1. 있다
2. 없다 -> Q9
3. 모르겠다 -> Q9

Q8. 결혼을 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가족을 이루고 싶어서
2. 결혼을 사회가 당연시해서
3. 자녀를 위해서
4.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5. 외로워서
6. 기타 (·)

[로직: Q7=2]

Q9.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필요성 못 느낌
2. 내 개인 삶이 중요함
3.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4. 자녀양육 부담
5. 시간이 없음
6. 기타 (·)

Q10. 미혼 남녀의 동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단일척도]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약간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Q11. 혈연관계로 형성된 가족이 아닌 공동체의 의미로 가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단일척도]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약간 동의한다
5. 매우 동의한다

Q12. 귀하께서는 국제결혼을 고려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단일척도]

1. 전혀 없었다
2. 별로 없었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있었다
5. 매우 있었다

Q13. 자녀를 낳으실 의향이 있습니까? [단수]

1. 있다 (희망 자녀 수: ()명) [로직: 숫자만 입력 되도록 프로그래밍]
2. 없다

Q14. 결혼과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습니까? [단수]

1. 있다 (희망 자녀 수: ()명) [로직: 숫자만 입력 되도록 프로그래밍]
2. 없다

Q15. 결혼을 하였더라도, 혹은 하지 않더라도 직접 출산하지 않고 입양 등으로 자녀를 키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단수]

1. 있다 (희망 자녀 수: ()명) [로직: 숫자만 입력 되도록 프로그래밍]
2. 없다

[로직: Q13=1 '있다' 응답자만]

Q16. 결혼 후 자녀를 낳으시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사회 관습적으로 낳아야 할 것 같아서
2. 자녀가 생기면 더욱 행복할 것 같아서
3. 우리나라 육아정책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4. 부모님이 원하셔서
5. 기타 (·)

[로직: Q13=2 '없다' 응답자만]

Q17.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1. 개인의 성공과 성취가 더 중요해서
2. 자녀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3.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4. 자녀 양육비용이 부담되어서
5.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사회여서
6. 기타 ()

[로직: Q18-1번부터 Q21번까지는 SQ2=1 '기혼자'만 응답]

[카테고리(Q18~Q21): III. 기혼자만 응답]

[로직: SQ3=2, 기혼이고 자녀가 없는 경우만 응답]

Q18-1. 귀하께서는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단수]

1. 낳을 생각이다 (()명) [로직: 숫자만 입력되게 프로그래밍 → Q19-2]
2. 낳지 않을 생각이다 → Q19-1
3. 생각중이다 → Q21

[로직: SQ3=1, 기혼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만 응답]

Q18-2. 귀하께서는 자녀를 추가로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단수]

1. 낳을 생각이다 (()명) [로직: 숫자만 입력되게 프로그래밍 → Q20-1]
2. 낳지 않을 생각이다 → Q20-2
3. 생각중이다 → Q21

[로직: Q18-1 = 2]

Q19-1. 결혼 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rank:2]

1. 자녀 양육비가 부담되어서
2.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4.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세상이어서
5. 본인이나 배우자 건강문제
6. 보다 많은 여가를 누리기 위해
7. 양육 자체가 힘들
8.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에 믿음이 안가서
9. 기타 ()

[로직: Q18-1=1]

Q19-2. 결혼 후 자녀를 낳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rank:2]

1. 우리나라 육아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2. 형제/자매 간 우애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3. 배우자가 원해서
4. 부모님이 원해서
5. 아들, 딸 고루 낳고 싶어서
6. 자녀가 많을수록 노후가 든든해서
7. 자녀를 (추가로) 낳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8. 기타 ()

[로직: Q18-2=2]

Q20-1. 결혼 후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rank:2]

1. 자녀 양육비가 부담되어서
2.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4. 아이가 행복하기 힘든 세상이어서

5. 본인이나 배우자 건강문제
6. 보다 많은 여가를 누리기 위해
7. 양육 자체가 힘들
8.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에 믿음이 안가서
9. 기타 ()
10.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를 이미 출산해서

[로직: Q18-2=1]

Q20-2. 앞으로 자녀를 더 낳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rank:2]

1. 우리나라 육아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2. 형제/자매 간 우애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3. 배우자가 원해서
4. 부모님이 원해서
5. 아들, 딸 고루 낳고 싶어서
6. 자녀가 많을수록 노후가 든든해서
7. 자녀를 더 낳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8. 기타 ()

Q21. 어떤 요인이 변화가 있다면 자녀를 낳거나 더 낳을 생각이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전혀 생각이 없다	별로 생각이 없다	보통 이다	어느정도 생각이 있다	매우 생각이 있다
	1	2	3	4	5
1. 남녀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게 되면					
2. 소득이 높아지면					
3. 국가의 육아정책지원이 많아지면					
4. 자녀를 낳고도 직장 생활이 보장된다면					
5. 자녀 돌보줄 기관/사람이 확실하다면					

Q21-1. 문 21번 이외에 자녀의 출산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있으면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1. ()

[카테고리(Q22~Q26): IV.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부 응답]

Q22.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수]

1. 안다
2. 모른다

Q23.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본인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매우 관련이 큼
2. 대체로 관련성이 있음
3. 별로 관련성이 없음
4. 전혀 관련이 없음
5. 모르겠음

Q26. 자녀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다음 조건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척도][stepbystep]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2	3	4	5
1.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 주거공간					
2. 영유아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기관(어린이집 등)					
3. 초등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기관(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4. 가정내 자녀돌봄의 역할을 부부가 평등하게 분담					
5. 어린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6. 자녀를 양육하는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7. 현금으로 양육비 지원(아동수당 등)					
8.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 지원					
9. 일 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정시퇴근 보장					
10. 아동의 부모 배경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보편적 아동정책					
11. 가족형태와 상관없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보편적 가족정책					

[카테고리(Q27~Q28-3): V. 미래 전망: 전부 응답]

Q27. 2040년 미래 한국사회를 그려볼 때 ‘영유아’, ‘육아’, ‘육아지원 정책’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응답해 주십시오.

1. ()

Q28-1. 다음은 개인이나 가족과 관련하여 2040년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입니다. 제시된 내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와 비교하여 증가(향상)할지 감소(하락)할지 예상하여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매우 감소	감소	현재 수준	증가	매우 증가
	1	2	3	4	5
1. 개인의 삶의 질					
2. 인구성장률					
3. 결혼율					
4. 이혼율					
5. 재혼율					
6. 1인 가구					
7. 가족과의 시간 부여					
8. 여가시간에 대한 선호도					
9. 동거/비혼 가구					
10. 아버지의 육아참여					
11. 어머니(여성)의 경제활동					

Q28-2. 다음은 사회·문화·경제 분야와 관련하여 2040년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것입니다. 제시된 내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현재와 비교하여 증가(향상)할지 감소(하락)할지 예상하여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매우 감소	감소	현재 수준	증가	매우 증가
	1	2	3	4	5
1. 소득양극화					
2.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연금, 의료보험 보장 등)					
3.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4.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5. 양성평등한 사회					
6. 일반 시민의 정치 참여					
7.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노동문화					
8. 에너지 부족					
9. AI/로봇의 증가					
10. 20-30대 정치 참여					
11. 남북통일 가능성					
12. 인구구성의 다양화(다문화, 이주민 증가)					

[카테고리(Q29-1~Q31-3): VI. 육아정책전반: 모든 응답자]

Q29-1. 다음은 2040년을 기준으로 영유아부모에 대한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 전망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육아지원 정책의 중요도가 현재와 비교하여 증가(향상)할지 감소(하락)할지에 대해 예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1	2	3	4	5
1. 여성의 육아휴직제도					
2.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3.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4. 양육, 보육, 교육비 등 육아를 위한 현금 지원					
5. 육아 관련 산업 (예: 육아용품) 경제 활성화 지원					
6. 부모와 아동 지원 지역사회 인프라 확대					
7.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8. 아동이 안전한 사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 (예: 먹거리, 통학, 아동학대 등)					
9.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10.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예: 한부모가정, 이주민 가정 등)					

Q29-2. 다음은 204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영유아부모의 육아형태에 대한 전망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내용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또는 현재와 비교하여 증가(향상)할지 감소(하락)할지에 대해 예상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매우 감소	다소 감소	현재 수준	다소 증가	매우 증가
	1	2	3	4	5
1. 아버지 양육참여 증가					
2. 영유아 부모의 부모역할과 기능 축소					
3. 남녀 가사노동 분담 중요도					
4.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5. 육아지원기관 이용율 상승					
6. 비혈연 아이돌보미 이용 증가					
7. 육아 관련 비용 상승					
8. 사교육 증가					
9. 육아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증가					
10. 육아 관련 사업 확대					
11. 로봇이 육아 대체					

// 두 개의 보기항목 쌍대비교 그리드 커스텀 //

Q30-1. 육아지원 분야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의 양쪽의 입장 중 2040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는 쪽에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A에 동의	B에 동의	
	1	2	
A1. 영아(만 0-2세)는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B1. 영아(만 0~2세)는 가정 내 양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A2.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			B2. 취약계층(예: 저소득계층, 조손가족 등)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다
A3. 영유아 공교육·보육 체계가 갖추어져야한다			B3. 영유아 사교육· 및 보육은 수요가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A4. 양육보조를 위한 현금지원은 국가가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B4. 양육보조를 위한 현금지원은 가구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

// 두 개의 보기항목 쌍대비교 그리드 커스텀 //

Q30-2. 일가정 양립 분야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의 양쪽의 입장 중 2040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는 쪽에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A에 동의	B에 동의	
	1	2	
A1. 일하는 직장인에게 일가정양립을 위해 유연한 근무시간제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B1. 일하는 직장인에게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A2. 아버지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B2.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명은 육아휴직을 길게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강제가 필요하다.

// 두 개의 보기항목 쌍대비교 그리드 커스텀 //

Q30-3. 저출산 문제에 대한 육아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각 항목의 양쪽의 입장 중 2040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한다고 동의하시는 쪽에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A에 동의	B에 동의	
	1	2	
A1. 유초등인구 감소로 인해 유아,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해야 한다.			B1. 유초등인구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유아,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분리해야 한다.
A2. 미래에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B2. 인구가 감소되더라도, 과학기술과 사회시스템의 도입으로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A3. 육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육아지원은 저출산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이 옳다.			B3. 육아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저출산 정책의 핵심과제이다.

Q31-1. 다음은 2040년 20~30대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보육 환경을 위한 정책)입니다.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매우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아버지가 일정기간을 반드시 휴직하도록 의무화한다					
2. 기관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영유아자녀 가구 대상 가정 내 양육비 지원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기관 이용 시 보육료·교육비 지원을 더욱 늘려야 한다.					
4.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현금지원(아동수당) 대상이 학령기 아동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7세 미만, 10만원)					
5.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시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증가해야 한다					
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하다(현재 10~20만원)					
7.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 금액이 현재보다 증액되어야 한다. (현재 0-2세의 경우 최대 30만원, 3-5세의 경우 최대 20만원 보편적 지원 중)					
8.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은 자녀가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많아야 한다					
9.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지원은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야 한다					
10. 국공립어린이집과 국공립유치원이 전체의 40%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11. 자녀출산과 함께 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교육: 자녀와의 관계, 양육에 대한 사항 등을 교육)					
12. 지역사회 부모공동체에 의한 공동육아(조합)참여가 증가되어야 한다					
13. IT 기술의 발전이 아동사고 예방 및 어린이집/유치원의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Q31-2. 다음은 2040년의 우리나라 20~30대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아동의 전반적인 복지가 향상되는 정책)입니다.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2.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3. 다문화/외국인 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아동학대/폭력 예방 및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한다					
5. 아동이 잘 뛰어놀 수 있는 지역내 공간 (지역내 놀이터, 공원, 체험시설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6. 나홀로 아동(돌봄공백)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Q31-3. 다음은 2040년의 우리나라 20~30대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일가정양립정책)입니다.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매우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이 증가되어야 한다.					
2. 시간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3.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육아 및 가족 친화적인(일·가정양립의) 사회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					
5. 성평등 의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Q31-3. 다음은 2040년의 우리나라 20~30대 영유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육아지원정책(기타)입니다. 다음의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척도][stepbystep]

	매우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음	보통임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2	3	4	5
1.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육아지원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					
2. 육아정책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므로 관련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카테고리(BQ1~SQ4): 응답자 특성]

BQ1. 귀하께서 현재 사시는 곳의 지역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BQ2.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대학교 졸업 이하(2~3년제, 4년제 포함)
3. 대학원 재학 이상

BQ3. (가구 월소득)귀하의 월 평균 가구 소득(세후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1. 없음
2. 200만원 미만
3. 200만원~300만원 미만
4. 300만원~500만원 미만
5. 500만원~600만원 미만
6. 600만원~700만원 미만
7. 700만원 이상
8. 모름/무응답

인구·사회 변화 예측을 통한
2040 육아지원정책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